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072-10



■ 정책보고서 2014-83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고경환 · 장영식 · 강지원 · 정영애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영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용자를 위하여

- 본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승인번호 제 11777호)입니다.
- 본 보고서에는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과 사회보험지출(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로 구성됩니다.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고용주의 법정급여(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됩니다.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민간기업(비법정복지와 사회공헌활동)과 제3섹터(사회복지시설, 공동체, 사회적기업, 모금기관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기관)의 모금 및 후원금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재원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을 뜻합니다.
 -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적 현금급여와 서비스 제공의 합으로 이루어진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혜택과 부담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조세 혜택, 사회적 급여에 대한 직접세, 이전소득자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에 제시한 2013년 통계는 OECD가 2015년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 본 통계는 보건복지부통계포털(<http://stat.mohw.go.kr>)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게시예정입니다.

□ 통계표의 수치는 소수점이 있는 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내용의 합과 총 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계표의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음을 의미하며, 「0.0」은 단위 미만을 의미합니다.

□ 본 보고서의 국민계정은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2008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국제통계에 수록된 일부 한국의 자료는 SNA 1993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SNA 2008 기준: 부표 28에서 부표 32까지

○ SNA 1993 기준: 부표 33부터 부표 38까지

○ 본 보고서에서 별도 언급이 없는 GDP는 '경상 GDP'를 뜻함.

□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전화 044-202-22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전화 044-287-8178

메일 socx@kihasa.re.kr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등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기초연금의 도입, 그리고 사회보험의 성숙 등으로 복지재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14년 역대 최초로 정부총지출의 30%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고,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을 유도하고, 긴급복지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담보로 한 이익집단의 단체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복지재정을 둘러싼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 기조에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노인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회 비용을 소진하는 블랙홀이다.

문제는 복지지출의 확대가 급증의 속도를 보여주는 데 반해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2014년 경제전망은 2%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세수기반마저도 밝지 않은 상태이다.

2013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지난 22년간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사회복지제도 설계와 정책의 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고경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장영식 초빙연구위원, 강지원 전문연구원, 정영애 전문원의 도움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다양한 조언을 주신 연세대 김진수 교수와 고려대 최영준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연구를 위해 데이터의 관리 및 자료의 수집 및 집적에 큰 도움을 준 염아림 전문원, 윤열매 전문원, 김진희 연구보조원과 민간모금기관의 모금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해준 배은총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또한 연구 자료 수집과 연구과

정에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신승일 과장과 심희진 사무관, 문승태 사무관, 박인순 주무관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민의 체감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추계기준	17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9
제2절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Education database)	44
제3절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	57
제4절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abor market policies, LMP database)	59
제3장 추계방법	73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75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14
제4장 추계결과	121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123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31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36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38
제5장 국제비교	141
참고문헌	153

부 록	157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59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198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204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23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261

표 목차

〈표 2- 1〉 소득세법에 따른 이전소득자의 비과세 항목	33
〈표 2- 2〉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34
〈표 2- 3〉 평균간접세율 산출산식	35
〈표 2- 4〉 우리나라 조세혜택 구조	37
〈표 2- 5〉 보건복지분야 조세지출 내역과 감면유형	42
〈표 2- 6〉 보육료 지원 기준: 2013년	54
〈표 2- 7〉 보육료 지원 아동 수: 2012~2013년	54
〈표 2- 8〉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및 금액(2013년)	56
〈표 2- 9〉 유치원 원아 수(2013년)	56
〈표 2-10〉 SHA의 보건의료 기능별 분류	58
〈표 2-11〉 OECD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분류기준	70
〈표 2-12〉 동일 Program에 대한 부처간 분류 기준의 차이(예시)	72
〈표 3- 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76
〈표 3- 2〉 d-Brain 결산자료 구조-예시	77
〈표 3- 3〉 사회복지 분야(080)가 아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78
〈표 3- 4〉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79
〈표 3- 5〉 사회복지분야 중 예외적으로 행정비용이 포함되는 사업-예시	80
〈표 3-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기능별)	80
〈표 3- 7〉 주택부문 추계범위	81
〈표 3- 8〉 ALMP와 중복계상으로 배제되는 항목 예시	82
〈표 3- 9〉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83
〈표 3-10〉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84
〈표 3-1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85
〈표 3-12〉 사회서비스 개관	86
〈표 3-13〉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88
〈표 3-14〉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	89
〈표 3-15〉 사회보험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89
〈표 3-16〉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90
〈표 3-17〉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	90
〈표 3-18〉 공기업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91

〈표 3-19〉 교통·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94
〈표 3-20〉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95
〈표 3-21〉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3년)	98
〈표 3-22〉 사회복지시설 모금액 및 배분액(2013년)	99
〈표 3-23〉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101
〈표 3-24〉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101
〈표 3-25〉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102
〈표 3-26〉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103
〈표 3-27〉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2013년말 기준)	103
〈표 3-28〉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105
〈표 3-29〉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자원 배분 구성 비중	106
〈표 3-30〉 민간모금기관의 배분자원 구성 비중	106
〈표 3-31〉 민간모금단체(기관)의 복지영역 후원금 규모추계	107
〈표 3-32〉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107
〈표 3-33〉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109
〈표 3-34〉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111
〈표 3-35〉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3)	112
〈표 3-36〉 추계를 위한 조세지출과 비과세감면 내역	113
〈표 3-37〉 2013년 기준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출	116
〈표 3-38〉 조정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변수	116
〈표 3-3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120
〈표 4- 1〉 일반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124
〈표 4- 2〉 분야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125
〈표 4- 3〉 공적연금 지출규모	126
〈표 4- 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126
〈표 4- 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127
〈표 4- 6〉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127
〈표 4- 7〉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8
〈표 4- 8〉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29
〈표 4- 9〉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9
〈표 4-10〉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0

〈표 4-11〉 제도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1
〈표 4-12〉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131
〈표 4-13〉 퇴직연금 지출규모	132
〈표 4-14〉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132
〈표 4-15〉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133
〈표 4-16〉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133
〈표 4-17〉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2-2013년)	134
〈표 4-18〉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5
〈표 4-19〉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135
〈표 4-20〉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36
〈표 4-21〉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7
〈표 4-22〉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38
〈표 4-23〉 직접세율 추계결과	139
〈표 4-24〉 간접세율 추계결과	139
〈표 4-25〉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140
〈표 4-26〉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0
〈표 5- 1〉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 추계치	147
〈표 5- 2〉 OECD 국가의 2035년 노인부양비와 2015년 노인부양비의 차이	148
〈표 5- 3〉 2012년 중위균등화가구소득 50%의 빈곤선 기준 빈곤율	149
〈표 5- 4〉 OECD 국가의 2012년 균등화가구소득의 지니계수	151

부표 목차

〈부표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159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160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61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162
〈부표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163
〈부표 6〉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64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165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66
〈부표 9〉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167

〈부표 10〉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68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169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70
〈부표 1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액	171
〈부표 1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72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173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74
〈부표 17〉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75
〈부표 18〉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78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80
〈부표 2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82
〈부표 2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84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86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188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91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93
〈부표 2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195
〈부표 27〉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196
〈부표 28〉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04
〈부표 29〉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05
〈부표 30〉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06
〈부표 31〉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07
〈부표 32〉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08
〈부표 33〉 OECD 국가의 순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1993 GDP 대비 비율)	209
〈부표 34〉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비율(SNA1993 GDP 대비 비율)	210
〈부표 35〉 공공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211
〈부표 3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214
〈부표 37〉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217
〈부표 3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220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	25
[그림 2-2] OECD Education database 자료예시 (6세)	46
[그림 2-3] 유아교육전달체계	48
[그림 2-4] 보육전달체계	49
[그림 2-5] 보육자원 구성	50
[그림 2-6] 유아교육자원 구성	51
[그림 2-7] 종전 제도와 누리과정 비교	53
[그림 2-8]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기능 강화	67
[그림 3-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109
[그림 3-2] Health database 기본자료	119
[그림 5-1] OECD 사회복지지출의 평균을 넘어선 국가들	144
[그림 5-2] OECD 사회복지지출 평균에 못 미친 국가들	145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 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데 있음.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가간 사회보장수준을 비교하는 기본통계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수립에도 핵심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의 의무사항(OECD협정문 제3조에 따른 ‘권고의 무’에 해당)임.

2. 작성기준 등의 변화

-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작성기준의 변경, 추계 범위의 변화가 있음.
- 타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기준 변경에 따라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의 추계에 변화가 있음.
 - 보건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 매뉴얼 변경에 따라 국민의료비 중 의료고정자본형성 제외(1990부터 소급 적용, 약 1.2조원)
 - 교육데이터베이스(Education Database)의 매뉴얼 업데이트(2011)에 따

라 교육부의 학생급식비, 저소득층 학비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지원,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등(3.6조원) 제외

○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 생산의 추계범위 확대 및 정교화에 따른 변화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국고사업에 대한 매칭 펀드 반영 확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와 법무부 포함
- 공공임대주택지원 추계범위 변경으로 용자금 소급 삭제(2008-2012)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대상 추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요금감면과 케이블TV수신료 반영
-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에서 조세감면사업의 추가 또는 제외
 - 추가항목: 부양가족에 대한 조세지원 성격이 높은 부양가족공제
 - 제외항목: 재분배 기능이 약한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소득공제, 교육비·보험료 특별공제 등

○ 데이터베이스 외의 변경

- 한국은행에서 SNA2008을 신규 적용하여 산출한 국민계정(GDP) 자료를 사용

3. 추계결과

□ 2013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33.4조원으로 GDP 대비 9.33%로 나타남.

○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51.0조원으로, 중앙정부 34.2조원(67.0%), 지방자치단체 16.8조원(33.0%)으로 구성됨.

○ 사회보험의 지출규모는 81.6조원으로, 건강보험의 비중(50.1%)과 공적연금의 비중(35.1%)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0.6조원으로 GDP 대비 0.74%로 나타남.
 - 법정퇴직금(39.8%)과 퇴직연금(25.8%)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발민간사회복지지출은 20.8조원으로 GDP 대비 1.46%로 나타남.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사회복지시설, 민간모금기관 등, 사회적 기업, 공동체)로 구성된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부문 90.3%, 제3섹터 9.7%로 나타남.
- 총사회복지지출은 164.8조원으로 GDP 대비 11.53%로 나타남.
 - 공공사회복지지출 8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12.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6.4%) 순으로 나타남.
- 순사회복지지출은 165.2조원으로 요소GDP 대비 12.83%로 나타남.
 -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추계한 순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조세혜택(4.9%)에 조세부담(4.7%)을 공제한 100.2%로 나타남.

4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표 1〉 2013년도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총괄표

(단위: 십억원, GDP 대비 %)

구분		계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통계	제도 및 재원						
공공사회 복지지출 (A)	계	133,393	31,909	3,290	8,700	54,937	16,086
	GDP 대비 비중	9.33	2.23	0.23	0.61	3.84	1.13
	일반정부지출 ¹⁾	51,040	5,568	951	4,959	10,871	15,430
	사회보험	81,610	25,847	2,339	3,506	44,066	655
	교통통신요금감면	742	494	-	235	-	0
법정민간 사회복지 지출(B)	계	10,590	6,964	-	1,659	1,093	701
	GDP 대비 비중	0.74	0.49	-	0.12	0.08	0.05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6,947	6,947	-	-	-	-
	산전후-질병휴가	1,978	-	-	1,277	-	701
	자동차책임보험	1,093	-	-	-	1,093	-
	교통통신요금감면	573	17	-	382	-	0
사회복지지출 (C=A+B)	계	143,983	38,873	3,290	10,359	56,029	16,787
	GDP 대비 비중	10.07	2.72	0.23	0.72	3.92	1.17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 (D)	계	20,806	298	21	134	727	1,318
	GDP 대비 비중	1.46	0.02	0.00	0.01	0.05	0.09
	기업부문	18,791	-	-	-	129	761
	제3섹터 ²⁾	2,015	298	21	134	598	557
총사회복지 지출 (E=C+D)	계	164,789	39,171	3,311	10,493	56,757	18,105
	GDP 대비 비중	11.53	2.74	0.23	0.73	3.97	1.27
순사회복지 지출 ³⁾ (H=E-F+G)	계	165,161					
	요소GDP 대비 비중	12.83					
	조세부담(F)	7,747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946					
	간접세	6,800					
	조세혜택(G)	8,119					
GDP		1,429,445					
요소GDP		1,287,574					

주: 1) 중앙정부지출과 지방자치단체지출을 합한 것임.

2) 이중계산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3) 순사회복지지출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표 1〉 계속

(단위: 십억원, GDP 대비 %)

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구분	
					제도 및 재원	통계
133,393	6,556	3,884	-	8,033	계	공공사회 복지지출 (A)
9.33	0.46	0.27	-	0.56	GDP 대비 비중	
51,040	5,243	-	-	8,019	일반정부 ¹⁾	
81,610	1,313	3,884	-	0	사회보험	
742	-	-	-	13	교통통신요금감면	
10,590	-	-	-	174	계	법정민간 사회복지 지출(B)
0.74	-	-	-	0.01	GDP 대비 비중	
6,947	-	-	-	-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1,978	-	-	-	-	산전후·질병휴가	
1,093	-	-	-	-	자동차책임보험	
573	-	-	-	174	교통통신요금감면	
143,983	6,556	3,884	-	8,206	계	사회복지지출 (C=A+B)
10.07	0.46	0.27	-	0.57	GDP 대비 비중	
20,806	-	-	-	18,307	계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 (D)
1.46	-	-	-	1.28	GDP 대비 비중	
18,791	-	-	-	17,901	기업부문	
2,015	-	-	-	406	제3섹터 ²⁾	
164,789	6,556	3,884	-	26,513	계	총사회복지 지출 (E=C+D)
11.53	0.46	0.27	-	1.85	GDP 대비 비중	
165,161				계		순사회복지 지출 ³⁾ (H=E-F+G)
12.83				요소GDP 대비 비중		
7,747				조세부담(F)		
946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6,800				간접세		
8,119				조세혜택(G)		
1,429,445				GDP		
1,287,574				요소GDP		

주: 1) 중앙정부지출과 지방자치단체지출을 합한 것임.

2) 이중계산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3) 순사회복지지출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세계 대공황 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세계대전 직후에는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제정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70년대부터 사회보험이 공무원 등 특수직업군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보편화된 것은 1990년대 IMF를 경험한 직후이다.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사회복지 제도 도입이 늦었으며, 2000년 이후 본격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매우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다가 복지재정의 부담으로 인해 최근 축소 및 조정 국면에 들어선 데 반해 한국은 지금 한창 팽창기에 있다. 문제는 고령화와 복지수요로 사회보험지출과 정부 재정의 급증이 우려된다.

최근 우리사회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접근하면서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은 복지지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복지지출 통계의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일한 통계 생산 기준과 방법을 통해 통계를 생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수성을 국제통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SOCX)을 추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추계결과를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는 격년으로 제출하고 있다¹⁾.

OECD SOCX의 거시적인 분석틀은 UN 국민계정(SNA)을 따르고 있으나 미시적인

분석틀은 SOCX에서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각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기준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SOCX의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고, 기 공표된 통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있다.

최근 변경된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3년에는 기존의 13가지 기능별 지출 항목을 9가지로 축소하였다. 분류 항목은 축소되었으나 규모는 변함이 없다. 2004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를 노령·장애·기타급여에 포함하였다. 2006년에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의 구성항목을 재구조화하였다²⁾. 2009년에는 법정퇴직금 항목에 ‘법정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의 퇴직금’만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Adema and Ladaique, 2009). 이는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자발적 퇴직자와 해고자의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요인에 의한 해고로 공공재원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해고자의 퇴직금이 실업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한국의 퇴직금 상당 부분을 노령연금에서 배제시키는 결과였다³⁾.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매뉴얼 개정판(2011)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에 대한 통계 생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유아교육비 지출 추계시 입학연기아동과 조기입학아동에 대한 지출을 조정하듯 보육료 지출 추계에서도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OECD, 2011: para 76). 이와 함께 저금리 대출과 금리차이에 따

1) OECD는 2년 단위로 각국의 사회복지지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OECD 요청에 따라 2014년에 2월 21일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1990~2011)을 제출하였으며, OECD는 2014년 11월 28일에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를 2011년까지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공개함. 단, 한국은 정부의 노력으로 이번에 2012년까지 공표함.

2) 2006년까지 ALMP의 세부 항목은 소극적인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노동시장의 훈련, 청소년 관련 사업, 고용보조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고용서비스와 행정으로 구분)으로 구분하였으나 이후 보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경됨. 즉 ALMP의 세부항목은 PES(공공고용서비스, Public Employment Service)와 행정, 직업훈련, 일자리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지원고용 및 재할,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의 7개 영역임. 단, 2014년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음.

3) 한국에서 퇴직금은 노후소득보장측면과 노동시장이유로 인한 해고수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유럽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포함되는 퇴직연금제도와 다르게,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해고수당의 성격과도 상이함.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명명해온 ‘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이에 따른 것임. 즉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노동시장에 이직이 반복되거나 증가하는데, 이 때 해고자에게 제공되는 퇴직금은 법정노령연금에 도달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엄격한 의미의 ‘법정 퇴직금’이 아님.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관례를 통해 결정되고, OECD는 추계 원칙과 배치되는 사례들에 대해 유럽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른 이자지원을 포함(OECD, 2011: para 93)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작성기준에 따라 2013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통계를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다.⁴⁾

이러한 통계들은 복지수준을 총량적 또는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들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을 측정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수준 추이와 복지동향을 파악하는 기초통계로써 또는 복지정책 수립 및 설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지금까지는 국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는 지난 시간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 수준에 합당한 복지제도의 양적 구축과 발달에 몰두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제 복지제도의 성숙과 확충에 따라 복지제도의 질적 성숙을 도모할 때가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많은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추계기준과 추계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추계기준과 함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는 추계기준과 그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

4)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회복지지출’은 OECD SOCX 홈페이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public social expenditure+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으로, OECD SOCX manual(2011)에서는 ‘Publicly Mandated Social Expenditure’로 표기하고 있음. 이를 글자대로 의역하면 ‘공적 법정 사회복지지출’이나, 학자들과 논의를 거쳐 부르기 용이하고 의미전달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통계로 OECD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스와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추계기준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기준의 적용을 제시하였고, 3장에서는 이에 기반을 두고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와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추계방법과 한국의 추계방법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추계기준과 추계방법에 의해 생산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를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OECD SOCX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특히 고령화율과 사회복지지출, 빈곤율과 사회복지지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국내외 문헌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OECD사무국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외부연구진 협업, 관계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국내외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국내 자료와 국외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자료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변화와 지출의 수준을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복지지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와 변화, 흐름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조사에서 탈피하여 민간모금기관과 후원금에 대한 자료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변화에 따른 제도 분석을 위해 다양한 문헌과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자료는 UN의 국민계정(2008 SNA, 1993 SNA)과 OECD의 SOCX 작성기준(OECD, 2011; OECD, 2007; Adema et al., 2009)과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기준(OECD, 2004; Eurostat, 2006 등)과 추계자료를 활용하였고, 간접세의 거시자료로 OECD의 Revenue Statistics(2011)를 활용하였다. 또한 Country note와 Country data를 통해 국제비교의 설명 자료로 이용하였다.

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Bottom-Up방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특성 파악과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기초통계자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부문과 사회복지부문의 세입세출예·결산서(중앙정부는 dBrain System,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시스템과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수집자료)와 각 사회보험공단의 통계연보(결산서), 여러 관련 기관의 전산자료 분석,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조세감면 자료가 수록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을 사용하였다. 이 중 세입세출예·결산서와 통계연보는 공표자료를 이용하여 하위단위의 지출항목을 재분류하였다. 즉 공표자료를 세부 분해하여 전체구성을 파악하는 Bottom-Up방법을 사용하였다.

다. 2차 자료 가공분석

원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일부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기 발간된 자료를 수집하여 가공분석하거나 해당기관에 재분석을 의뢰하였다. 2차 자료를 가공 분석한 것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중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등이다.

급여내용이 수록된 원자료(raw data)의 경우 개인의 정보보호로 원시자료 접근이 곤란한 만큼 사전에 산출방법과 분석형태를 해당기관에 의뢰한 후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관세청의 장애인물품의 관세감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휴가급여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수집된 기초자료는 OECD 추계방법에 따라 기능별, 재원별, 제도별로 분류하였다. 이때 기능별 분류를 더욱 명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등의 급여나 정부의 세출항목, 그리고 전산분석자료를 가능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라. 조사연구(Survey)

조사연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 등 요금 감면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공기업과 대한항공, 코레일공항철도(주), SK텔레콤 등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모금 및 후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기준 지정기부금 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품모집기관 764개소이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부문의 급여인 공제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공제회 성격 중 유사보험과 보증손해공제를 제외한 12개 공제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OECD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작성 기준은 개괄적이며 관념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 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출하는 급여를 국제비교 가능한 형태로 추계 하고자 공통의 기준설정에 따른 한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연구자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OECD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지출이나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통계작성의 기준 및 예시가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참고로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선진국과 다른 사회보장 체계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통계산출 과정에서 우리 제도를 각 기능별로 분류하거나 또는 포함여부를 고심한 내용에 대하여는 OECD관계자들⁵⁾, OECD회원국의 통계생산 연구자들⁶⁾과 Case Study를 병행하였다. 이들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질의와 토의는 OECD 작성기준에 적합한 추계가 달성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 외부연구진 협업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사회복지지출에 반영할 때 이중계산이나 누락 등을 검증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했을 뿐 본 연구에서 생산한 통계와의 중복검증 등을 검토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각 데이터베이스의 OECD 담당자 또는 국내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정책결정자와 독자

5)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 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파트의 David Grubb 등임.

6) 독일 연방보건복지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 Social Security)의 Dr. Roland Berntsen, Dr. Jörg Peschner,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정보조사분석부(情報調査分析部)의 Yukiko M. Katsumata 부장(部長),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회복지계정 통계담당자인 Mr. Arne Kubitzka 등임.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의 확대로 이차보전과 서민우대금융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협의를 하였다. 이는 OECD 작성지침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의에 대한 해석과 우리나라의 제도 적용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과 정확성 등에 대한 검토였다.

사.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본 연구의 방향이나 범위, 추계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추계의 정확성은 결국 통계의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 본 원의 연구진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중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등이다. 또한 본 연구가 필요로 하는 통계의 생산을 위해 통계생산기관의 실무자와 실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제2장

추계기준

-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 제2절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Education database)
- 제3절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
(Health database)
- 제4절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Labor market policies, LMP database)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추계 기준⁷⁾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는 사회정책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OECD, 1996).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 분석들은 국민계정시스템(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사회적 이전(현금과 현물급여)’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 속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짐으로써(Varley, 1986; Oxley et al., 1990)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OECD SOCX는 34개 회원국이 자국 통화로 ‘사회복지지출 프로그램’이라는 상세 수준에서 지출 항목을 기록함으로써 정책영역별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따른 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OECD SOCX는 추상적이지만 확고한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지출을 추계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Adema et al., 2011; 90):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제공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지급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의 정의에 따라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구간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7) Willem Adema, Pauline Fron, and Maxime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중 Part II. Manual 을 요약 정리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둘째, 사회복지지출은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 급여를 포함한다. 먼저, 연금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부조급여와 같은 현금급여(cash benefit)이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사회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in kind benefit)이다. 마지막으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지출, 민간의료보험 각출금에 대한 조세감면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수단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급여형태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조세지출이 현금급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OECD 홈페이지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된다.

셋째, 사회복지지출은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하나는 급여가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급여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개인간 재분배 혹은 의무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야 한다. 즉 수급권은 개인별 직접적인 시장 매매의 결과가 아니고, 그들의 개별적인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그램은 실제로 가구간 재분배와 항상 관련이 있고, 일반조세 혹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인구집단간 혹은 인구집단내 자원을 재분배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민간 복지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위험의 분산을 통한 개인간 재분배가 일어나는 경우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민간보험회사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에 대해 동일한 기여금을 각출하도록 강제하고 아픈 사람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가구간 재분배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교통·통신 요금 감면)와 우호적인 조세를 제공하는 민간 플랜(예, 연금저축) 역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

넷째,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인 행정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급여를 제공할 때 전달체계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은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비용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과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과 같은 서비스제공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합계에 포함된다. 이들 데이터의 원자료는 독립적인 개념과 정의를 가지는 OECD Education database와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그리고 OECD Health Data에서 추출된다. 이들 영역에서 의료진, 고용센터의 직원,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금은 행정비용에 포함되지만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포함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센터의 직원은 구직자에게 응대 및 카운슬링을 직접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다.

다섯째, 자본투자(예: 건설비용)는 발생주의(accruals basis)에 기초하여 포함된다. 즉 장기요양기관(혹은 병원)을 건설하는데 4년간 100만달러(이자를 포함하여)가 지출되었다고 할 때 25만달러를 4년간 자본 투자 지출로 포함해야 한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대출금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지원금을 받았다면 차감된 이자는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개정판에 처음 등장한 기준으로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정의에서 개입은 동시적인 상호간 배열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수급자가 교환적으로 등가의 가치에 대한 어떤 것을 동시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가지는 개입은 사회보장의 범위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에 제공되는 이자가 붙는 대출은 사회보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입자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일시불 지급을 갚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대출이 무이자거나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현재의 시장 비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한다면, 지원된 이자 혹은 차감된 이자는 사회적 급여에 포함될 수 있다(Eurostat, 2008).”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을 일반 정부와 사회보험, 공기업, 민간부문, 조세부담, 조세감면에 대해서 각각 수집하게 된다. 이 때 각 세부사업별 지출항목은 기능코드와 급여코드를 추가로 입력하게 되는데 기능코드는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9개 정책영역을 뜻하고, 급여코드는 현금과 현물급여로 구분한다. 다시 말하면, 세부사업 수준에서 수집되는 지출항목들에 기능코드와 급여코드를 입력한 후 지출통계의 산정식에 따라 더하거나 감하면서 각 지출통계를 생산하게 된다.

OECD SOCX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를 9가지 정책 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리고 기타 사회정책영역으로 구분한다. 9개의 정책 영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노령(Old-age)은 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 포함)로 구성된다. 노령 현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러한 범주는 또한 조기은퇴연금을 포함한다. 조기은퇴연금이란, 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환경 때문에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분류되고 노령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된다.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은 포함한다. 기관에서 시설보호에 이용되는 지출역시 포함한다(예를 들면, 노인 그룹홈 운영 경비). SNA93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SOCX는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 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연금을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한다.

- 유족(Survivors)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급여(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출 프로그램이다. 유족현금급여에는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현금급여가 해당하는데, 유족현물급여에는 장제비와 기타 현물급여가 있다.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는 장애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 때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다.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 등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은 유급질병휴가(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 포함한다.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는 유급질병휴가(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에 포함한다.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 현금 급여에서 기록하므로 이 항목에서는 제외한다.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은 보건영역에 포함한다. 이 항목에는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 보건(Health)정책영역에서 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의 자료를 이용한다. 보건부분의 공공지출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 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 투자 등이다. 보건 항목에는 입원환자요양서비스와 보조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된다. 보건지출에서 공공기관의 용자 상황은 포함되지 않

는다. 질병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상병급여에 포함한다. 자발적 민간 보건지출은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의료플랜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추정(이러한 민간의료보험플랜은 주로 고용에 기반을 두거나 조세혜택이 있음)한다. 최근 보건 부문과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지출되는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지출의 이중계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보건계정(System of Health Accounts)의 개선으로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보다 확보되었으며, 이중계산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

- 가족(Family)은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후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 급여들이 포함된다. 현물급여에는 돌봄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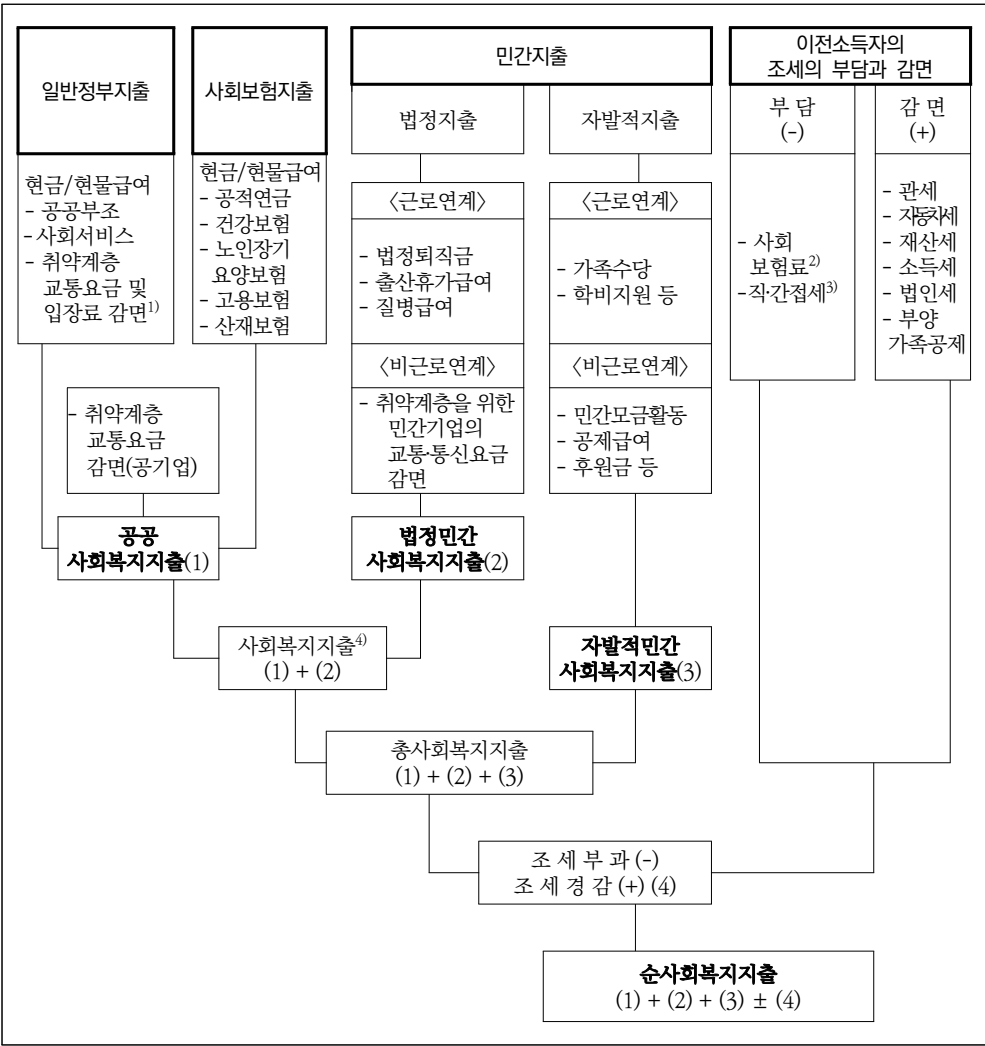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정교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각국 초등학교의 의무취학연령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몇몇 노르딕 국가에서 아동은 7세에 학교에 들어가는 반면 직전 해에 6세 아동은 pre-primary school에 참가한다. 국제 비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해야 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의 수에 대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도출된 추계치 이용). 이와 유사하게 아동이 5세에 학교에 입학(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하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에서 취학전 지출(pre-school expenditure) 데이터는 초등학교에 등록한 5세 아동에 대한 지출을 추가함으로써 조정해야 한다.

-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은 이는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찾는 수급자의 가능성의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모든 사회지출(교육 이외)을 포함한다. 이 항목은 공공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실업자와 기타 사람들(청소년과 장애인 제외)의 고용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 실업(Unemployment)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을 포함한다. 이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도산 및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에게 대해 투입된 정리해고수당과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실직이나 노동시장 정책 때문에 연금 수급자가 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적 자원을 포함한다.
- 주거(Housing)영역에는 임대료 보조와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른 급여들을 포함한다. 이는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게 대해 주거비용 보조로 ‘꼬리표를 붙인’ 직접적인 공공 보조를 포함(노르웨이에서 주택 소유자가 그의 집에 살 때에만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현물급여로 분류되었던(SNA, 1993 - D. 6331 참조) 꼬리표를 붙인 현금급여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SOCX는 또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현물 주거 급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포함한다(1.2.1, 3.2.1, 그리고 9.2.2.에 각각). 주거부문의 추계에 있어서 데이터 이슈는 모기지론, 건설에 대한 자본 보조, 그리고 주거시설 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 등과 같은 주거 지원의 다른 형태들의 포함 여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택의 건설이 직접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때에는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을 추계하는데 있어 방법론과 그러한 지원에 대한 적용과 측정방법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없어 현재는 그러한 주거 지원은 SOCX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을 포함한다. 이민자와 탈북자,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역시 이 항목의 기타에 포함된다.

지출통계를 생산하는 방법은 2011년 개정판 매뉴얼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 다양한 워킹페이퍼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



주: 굵은 글씨체(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는 실제 생산하는 통계임.
1) 국가보훈처(민영교통시설이용보조), 해양수산부(내항여객선운임보조), 문화재청(궁통입장료 감면)
2) 연금수급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예, 지역건강보험료)와 법정민간연금수급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예, 5
대사회보험료).
3) 직접세액은 이전소득자와 법정민간연금수급자의 현금급여를, 간접세액은 이전소득자, 법정민간연금수급자 그
리고 자발적민간연금수급자의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추계함.
4) OECD는 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Public Expenditure+Mandatory Private Expenditure)
로 표기

2. 한국의 추계기준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데이터베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3개의 지출통계(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를 제시하고 있지만 working paper를 통해 순사회복지지출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총 4개의 사회복지지출통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간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public social expenditure+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순사회복지지출의 생산을 위한 과정으로서 총사회복지지출⁸⁾(gross social expenditure)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성격을 갖는 지출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직접 지출과 공기업을 통한 간접지출, 사회보험지출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IMF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복지성격을 갖는 지출은 정부 예산시스템에서 080(사회복지)과 090(보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원칙적으로 이들 항목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080과 090 예산만 집계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성격을 가진 지출이 080과 090 코드를 제외한 다른 코드의 지출에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자료가 수집되는데 첫 번째는 과년도부터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지출통계를 생산하면서 수집되었던 항목들에 대한 검토이다. 본 연구가 지난 십년 넘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면서 다양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분야 코드 중 080과 090으로 명시된 자료들을 수집정리 하였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의 사회복지 지출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성격을 갖는 항목들에 대해서 수차례 자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왔다. 따라서 매년 새롭게 생산되는

8) 총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됨.

정부의 재정자료에서 이들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 가지 기준은 각 년도에 새롭게 수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범 부처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 가지 정책이 하나의 정책목표를 가지기 보다는 3~4개의 정책목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역시 정책성으로 고려될 수 있다. 즉 정책의 첫 번째 목표가 사회복지성격을 갖지 않더라도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는 각 정책의 법적 근거와 정책 자료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다음으로 080과 090에 포함된 지출항목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추계기준에 따라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항목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인건비와 행정비용, 일회성 행사, 세부항목의 미비로 정확한 통계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 이차검증이 요구된다. 실제로 정부와 사회보험 지출 등의 원자료에서 지출목명을 중심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본지출(감가상각비, 공공기금예탁금, 국공채매입 등)과 사회적 성격의 목적이 아닌 지출(배상금, 포상금 등), 인건비(교수보직경비, 기타직보수 등)와 행정비용(국내여비, 복리후생비, 일숙직비,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등), 연구개발비(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연료비, 재료비 등) 등이다.

이렇게 사회복지 성격을 갖는 지출에 대해서 세세항목별 자료를 수집한 후 기능코드와 급여성격코드를 추가하여 일차적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다. 이는 다시 보정작업을 거치는데,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문제가 있다. 먼저 주택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사업이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매뉴얼에 따른 주거부문의 지출에 합당하지 않은 반면 직접적인 주거지원(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출은 사회복지지출로 정책대상별로 분류하여 정책영역별로 포함된다.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용자금과 관련된 지출항목을 제외하고, 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생산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노동부문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과의 중복성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 범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업은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에 대한 조건으로 의무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정책의 추진 중에 부산물로서 일자리가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체적인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중복계상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소관부처별, 제도별 통계를 생산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진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회의와 부처 관계자의 자문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게 된다.

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의무적인 참여로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지출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급여와 민간기업들이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교통통신요금 감면, 시장부문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책임보험이 포함된다.

먼저 민간부문에서 제공하지만 법률로 강제된 기업복지를 살펴보면 법정퇴직금과 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가 있다. 이들 세 급여는 근로기준법(1953)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1999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2001년부터 유급질병휴가급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정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OECD 작성지침에 따르면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법정퇴직금에 대한 퇴직원인별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을 추정하고 있다.

IMF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조기 퇴직과 잦은 입·퇴직이 증가하여 정년 전에 퇴직금을 정산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가 증가하였고,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데(49.7%)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 시행하였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되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산전후휴가급여(동법 제72조)는 기업주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실시한 90일⁹⁾ 동안의 급여이다. 이들 3개월 중 2개월은 기업이,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2개월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한다.

다음 유급질병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사용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휴업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다. 이 급여의 추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유병률, 외병일수)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이어서 민간기업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교통부문과 통신부문에서의 요금감면이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통신요금 감면이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의 ②항¹⁰⁾과 장애인복지법 제22조와 23조¹¹⁾, 기타 개별법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TV수신료 면제는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전화요금 및 휴대폰 요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¹²⁾와 동법 시행령 제2조①항¹³⁾, KT 내부약관에 따른다. 2014년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3년 7월)으로 우선돌봄차상위계층까지 이동전화요금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

9) 2001년 11월부터 90일로 확대됨.

1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11) 제22조의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의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③ 보편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서비스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13)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편적 의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누구에게나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인 만큼 민간회사가 운영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③항과 제5조의 ①항¹⁴⁾에 근거한 자동차책임보험은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I 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대인배상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다. 추계에는 대인배상 중 의료비만 포함한다. 자동차책임보험은 그동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부터 OECD와 협의하여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분류하고 있다.

다.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민간부문에서 행해지는 자발적 사회복지지출은 범위가 넓어 추계범위와 추계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범위는 크게 기업 부문과 제3섹터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먼저 기업은 고용보험에 근거하지 않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정 외 복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용, 식사비용, 가족수당, 보육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란 재정적 지원(현금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시설지원 등) 등 다양한 기업의 자산과 핵심역량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및 투자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문

14) 제2조 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5) 자동차책임보험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대인배상 II(책임보험 초과손해), 대물배상으로 구성됨

제에 대한 책임의식 확대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초기에는 기업들이 단순한 기부 수준에 머무르는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의 참여 방법 및 활동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직접 참여라든지, NGO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와 같이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높이 고자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원 분야 또한 장학 사업에 치중하던 초기와는 달리 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환경보호, 국제교류, 긴급재난 등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미술관, 박물관, 문화 공연 등을 지원하는 메세나(Mecenat) 활동까지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다각화되어 사회공헌을 비롯한 인권, 노동, 환경 등 전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3섹터는 자발적인 모금과 후원금, 공제급여 등을 포함한다. 먼저 연간 혹은 연말에 많은 국민들은 다양한 모금활동에 참여하는데 이들 기관들은 지정기부금 단체이거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품모집등록기관이다. 즉 개인이 모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식으로 등록한 기관만 모금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금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모금활동의 지출내역 중 사회복지성격을 가진 항목들만 추계에 포함한다. 또한 모금기관에서 기관으로 전달하여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복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제공한 급여만을 추계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 등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회복지성격을 가진 지출의 경우 국내 배분된 금액에 한해 추계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복지자원에는 공제급여가 포함된다. 공제회는 특정한 직역집단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직역집단이므로 직업복지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기업복지와 구별되고, 또 개별적 시장계약의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장과 유사하나 가입자의 범위가 특정집단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상이하다. 따라서 공제회는 그 성격상 기업부문이나 시장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과 일정부문 이윤을 추구하여 가입자에게 배당한다는 면에서 제3섹터나 비영리부문의 특성과도 상이하다. 결국 공제회의 급여는 공동체 영역을 제공주체로 보아야 한다(고경환 외, 2011: 131 재인용).

공제회의 급여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급여가 제공된다. 그러나 공제회의 급여가 재분배적 성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시장계약에 근거하는 것인지는 다양한 직역집단 공제회마다, 하나의 공제회 내에서도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계에 포함되는 공제회의 급여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자발적 민간급여로 제한한다.

라. 순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의 합으로 이루어진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는 감하고 조세감면은 더한 것이 순사회복지지출이다. 따라서 추계 기준은 조세부담과 조세감면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세부담

조세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직접세는 이전소득자의 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만 포함한다. 현재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일부 사회보험급여는 비과세하고 있다.

〈표 2-1〉 소득세법에 따른 이전소득자의 비과세 항목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보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이상과 같은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이전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급여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며,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노령연금은 연금소득,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표 2-2〉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구 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 용 례
공적 연금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02.1.1.이후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
사적 연금 소득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로 지급받는 소득	세액공제(기존의 소득공제 포함) 받은 금액 또는 이연퇴직 소득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 을 연금소득으로 과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3.

사회보험 외에 퇴직금과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와 같은 법정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동 재원을 사내적립 또는 사외적립방식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매년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고,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자로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의 수령형태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한다.

퇴직금은 수령하는 형태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형태가 달라진다. 먼저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으로 간주되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각각 소득세법 제22조와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것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연금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반면에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를 감하여 발생하는 과세표준을 근거로 근로연수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간접세를 추계하는 방법은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와 거시자료를 활용한 추계가 있다.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신뢰할만한 미시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OECD는 조세자료와 국민

계정을 통해 간접세율을 추계¹⁶⁾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간접세율이 추계된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전소득자와 일반소득자간의 소비 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 방법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평균간접세율 산출을 위해서 일반소비세와 특정소비세가 활용된다. 먼저 ‘일반소비세’(5110)에는 부가가치세, ‘특정소비세’(5121)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이들에 대한 부가세(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여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2013년)은 Minim 10.23%, Medium 12.58%, 그리고 Maxim 14.66%로 나타났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자의 소비범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Minim방식을 선택하였다.

〈표 2-3〉 평균간접세율 산출산식

$$\begin{aligned}\text{Minim} &= (\text{일반소비세} + \text{국내소비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ediu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axi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최종소비지출}\end{aligned}$$

2) 사회보험료(insurance premium)

사회보험료에는 이전소득자가 연금수령금액에 대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자가 산전후휴가급여와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대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3) 조세감면

정부는 국가재정 확보의 목적 이외에 경제발전 촉진 및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하거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상 유인(incentive)을 주는데, 이를 조세

16) OECD는 간접세율을 보다 쉽게 추계하기 위해 각 회원국별 조세자료(OECD Revenue Statistics)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기초로 목시적 평균 간접세율(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지출¹⁷⁾이라고 부른다. 국가재정법 제27조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를 뜻하며, 조세지출 지원 수단으로는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저율과세·준비금”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

요약하면, 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과할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지출은 복지지출로 간접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사회복지성격을 갖는 조세지출을 OECD에서는 조세혜택(TBSPs)으로 부르고 있다. OECD는 조세지출의 방식을 특정 소득이나 특정 납세자에 대한 감세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조세혜택(TBSPs)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사회복지지출에 계산되는 조세지출은 후자만 포함한다¹⁸⁾. 조세혜택(TBSPs)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세부분의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매년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그 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부분의 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매년 지방세통계연감에 그 감면액을 발표하고 있다.

17) OECD는 1996년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의 개념을 통해 조세지출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기준조세체계란 “조세체계상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정의되며, 조세체계의 구조적인 요소인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됨. 이러한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항목들을 조세지출이라고 정의함(OECD, 2011).

18) OECD(2011), p.34

〈표 2-4〉 우리나라 조세혜택 구조

부 분	관련 개념	근거 법령	제출자료	담당부처
국 세	조세지출 ¹⁹⁾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등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국세청
지방세	지방세 특례 ²⁰⁾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자치단체 조례 등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세지출예산서	행정자치부, 각 지방자치단체

(가) 국세 부분

국세 부분은 정부에서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간하여 항목별로 조세지출 내역을 총 15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을 반영하여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항목(예, 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을 새로 추가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이러한 항목이 추가적으로 추계에 반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내역을 추계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조세지출은 그 유형을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감면의 종류는 비과세(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저율과세(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 적용), 세액감면(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세액공제(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등이 해당한다(대한민국 정부, 2012:3). 간접감면의 종류는 준비금(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준비금을 사내 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연기), 과세이연(자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 연기), 이월과세(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시까지 과세를 연기) 등이다(대한민국 정부, 2012:3).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의 항목으로 나뉘며 세부항목별로 정책목표를 수반한다. 각 제도별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지원은 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보육

19) 「국가재정법」 제27조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가족 및 여성은 보육지원 강화, 가족기능 강화,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을, 노인·청소년은 노인생활안정을, 노동은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증진,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산업재해 예방을, 주택은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사회복지일반은 사회복지기반조성,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수반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공공보건 의료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제도운영을, 식품의약품안전은 의약품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조세지출 항목별 주요 감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분야

○ 취약계층지원 :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골도전화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

○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 소득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4호)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
- 해당연도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한 입양자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5호)
-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2)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소득공제, 본인/장애인은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영유아·취학전·초·중·고)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

- 가족 중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 고용 :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임금삭감 방식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5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사회적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증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시설취득가액의 7%, 10%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 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근로장려금 지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10)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근로소득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

○ 주택 :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 사회복지일반 : 저율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준비금 등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1항)
- 개인연금저축가입 20세 이상 거주자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영농·영여 조합법인 배당소득 저율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 법인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범위 내 손금산입,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내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 개인기부금 중 법정기부금(100%) 지정기부금(소득금액 30%내)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 장애인, 환자수송(병원),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10년 이상시 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²¹⁾(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수도권외 신축주택 취득자,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²²⁾

21)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년,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001년 일몰종료 됐으나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음.

22) 2003년 일몰종료 됐으나 현재까지 큰 규모(2010년 기준 453억)로 운용 중에 있음.

□ 보건 분야

○ 보건의료 : 준비금, 세액면제, 소득공제

- 지방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4항)
- 희귀병환자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10호)
- 보장성보험, 공제회 공제에 대한 연 100만원 한도 근로소득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1항)
-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연 700만원 한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2항)

○ 건강보험 : 저율과세

-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머)

○ 식품의약품안전 :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금액(중고품 투자 제외)의 7%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표 2-5〉 보건복지분야 조세지출 내역과 감면유형

분 야	항 목	조세지출 내역	감면유형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율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공제
	보육가족 및 여성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비과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소득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공제
		출생·입양에 대한 추가공제	소득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소득공제
		교육비 특별공제	소득공제
	노인·청소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공제
	노 동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공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세액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세액감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지급	현금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비과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소득공제
	주 택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본세율
	사회복지일반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준비금 손금산입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저율과세
		영농·영여 조합법인 배당소득 저율과세	저율과세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준비금 손금산입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소득공제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비과세
		장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²³⁾	세액감면
	보 건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준비금 손금산입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비과세
		보험료 특별공제	소득공제
		의료비 특별공제	소득공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식품의약품안전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p.22~92.

23) 일몰종료 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용중이고 비교적 감면액이 커서 포함하였음.

(나) 지방세 부분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통계연감에서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발표된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참고하였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정의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조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 세제혜택(TBSPs)과 부합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비과세, 과세면제 및 특례규정이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거나 특정지역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비과세 감면은 대상별로 감면액이 다음과 같음.²⁴⁾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단체, 관리협회,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근거법에 의거하여 지방세통계연감에 제시된 대상 중 사회복지 관련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영유아보육시설’²⁵⁾ 등이 부합됨.

□ 지방조례를 통한 감면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면권한을 위임받아 조례에 의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음.

-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소유 자동차, 한센정착농원, 종교단체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등이며,
- 지방세통계연감에 제시된 대상 중 사회복지 관련 항목으로 부합되는 것은 ‘국

24) 종교 및 제사단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교육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정당,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영유아보육시설 등임.

25) 해당 항목에 대한 근거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서민생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임.

가유공자에 대한 감면²⁶⁾, ‘장애인소유 자동차²⁷⁾, 한센정착농원지원²⁸⁾, ‘중교단체의료업’²⁹⁾, ‘지방의료원’³⁰⁾, ‘노인복지시설’³¹⁾,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³²⁾ 등임.

제2절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Education database)

1.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추계기준

OECD SOCX에 포함되는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ECEC) 지출 중 유아교육비 지출은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Education database)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는 OECD 국가들의 교육과 관련한 국제 통계 생산과 비교를 위해 구축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A. 학생과 졸업생, B. 교육인력, C. 학교 조직과 교육과정, D. 교육기관, E. 교육지출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04: 37). 본 연구에서는 E.교육지출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뉴얼³³⁾에 따르면 교육지출은 첫째, 교육적인 성격에 관계없이 교육기관에 제공되는 모든 직접적인 공공, 민간 그리고 국제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둘째, 교육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기관 외에서 구매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민간 지출을 포함한다. 셋째, 학생의 생활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교육기관의 연구개발비(R&D)는 포함하지 않으며, 교육기관 외의 민간부문에서 학생에게 제공된 생활비를 제외한다(OECD, 2004: 62).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3조제36조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3) OECD(2004), Handbook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Education Statistics.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교육 통계의 생산을 위해 UNESCO에서 생산한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97)를 따른다. ISCED는 0 유아교육(pre-primary level of education), 1 초등학교(primary level of education), 2 중학교(Lower-secondary level of education), 3 고등학교(Upper-secondary level of education), 4 고졸 후 과정(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5 대학교육(First stage of tertiary education), 6 대학원교육(Second stage of tertiary education)으로 구성된다(OECD, 2004: 79-81). 유아교육은 ISCED-0 level임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ISCED-0)은 기관 혹은 학교에 기반을 두고, 적어도 3세 이상의 아동의 교육과 발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교직원들은 아동에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적합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어도 3세 이상의 아동에서 6세미만이어야 한다는 연령 범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형적인 유치원 시작 연령은 3세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2세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교육적인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6세나 7세에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연령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OECD, 2004:87).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는 교육 프로그램을 7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교육(Education), 인문학과 예술(Humanities and Arts), 사회과학과 경영 및 법(Social Sciences, business, and law), 과학(Science), 공학 및 산업과 건축(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농업(Agriculture), 보건과 복지(Health and welfare), 서비스(Services)이다(OECD, 2004: 84-85).

아래 데이터베이스의 그림에서 첫 번째 줄은 교육수준을 나타내는데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임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은 교육 분야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은 전체(Total)이다. 또한 교육 형태는 전일제와 반일제를 합한 것이며, 데이터의 연령은 6세 아동, 성별 구분을 하지 않은 수치이다.

[그림 2-2] OECD Education database 자료예시 (6세)

Pre-primary education													
Total													
All educational programmes													
Full-time and part-time													
6 years													
Total males+females													
Persons													
1995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931	941	10421	164	132	89	121	94	5570	2846	4655	6570	7337	753

자료: OECD Education database(<http://stats.oecd.org>)

본 연구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SOCX에 포함시키는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교육지출을 추계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제도와 보육서비스를 통해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는 만 3세-5세에게 제공되는 유아교육에 대해서만 추계하였다. 그러나 2014년 개정된 매뉴얼부터는 0~2세 영아의 보육 관련 교육통계자료가 조사매뉴얼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교육통계데이터에서 유아학비지원을 추계하고,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서 보육료지원을 추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2014년부터는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일하게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본 통계의 생산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 한국의 ECEC 추계³⁴⁾

가.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추진 체계

1) 부처 및 법 체계

우리나라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서로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유아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보육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관련법도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고 있다.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2013년 제대 개선 및 통계 업데이트는 연구진이 수정함.

유아교육이 개화기에 부유층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기 교육기관으로 시작된 반면에 보육은 빈곤층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출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새마을 유아원과 같이 두 영역에서 서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1997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V)」에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확립하기 위한 유아교육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있었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제정으로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3~5세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두 영역에서 유사성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 기능이 상당부분 유사해졌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태상과 발전과정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차이는 아직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2) 정책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7조는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고 하여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2005년부터 초등학생 방과후는 교육 담당 부처가 책임지기로 한 이후부터 초등학생 보육은 확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대상은 만5세 미만 취학전 아동이다.

유아교육법 제11조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용어 정의로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전달체계

유아교육과 보육은 담당 부처가 다른 만큼 전달체계도 이원화되어 있다. 유아교육은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며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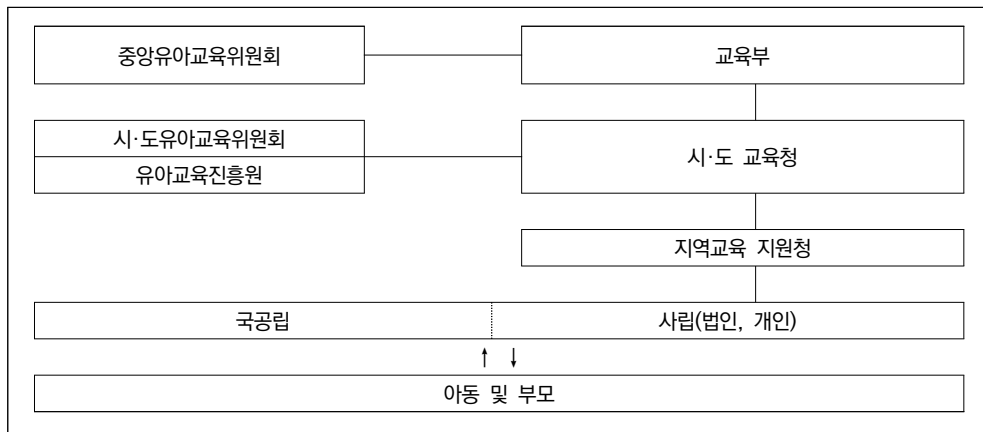
유치원 행정은 교육부-광역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 및 시도 교육청에는 유아교육위원회를 두는데,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뿐 아니라 유치원,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유아교육 정책,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의 심의를 담당하며 실제적인 지도감독 체계와 긴밀한 협조를 담당한다. 한편 지원체계로는 시도 교육청내 유아교육진흥원이 교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아동의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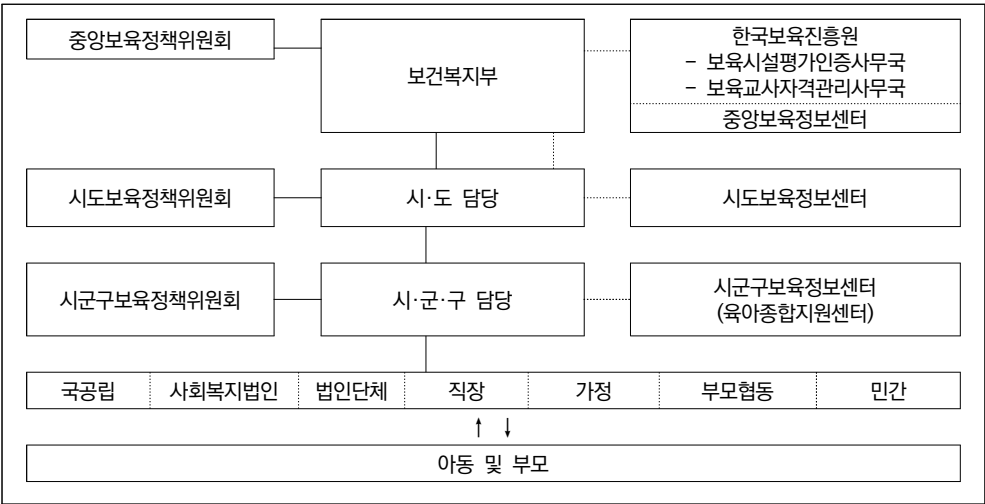
보육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광역시도-시군구-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보육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에서 담당하며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각 행정체계 안에는 보육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원체계로는 보육정보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평가인증사무국, 보육인력자격관리사무국을 운영하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보육정보센터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시군구 육아지원종합센터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2-3] 유아교육전달체계



[그림 2-4] 보육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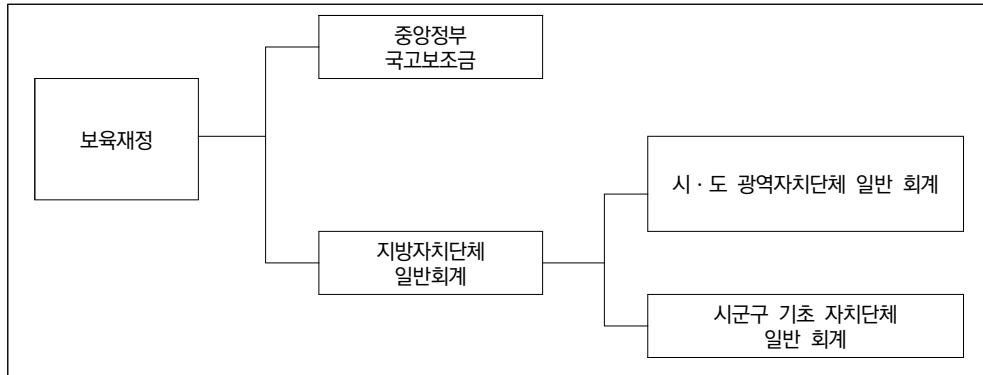


4) 재원

보육재정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보육지원 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확보하여 각 시·도의 신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육국고 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급보조율 내역 중 제89호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을 보면 기준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고로 가감 조건을 두고 있다. 회계연도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를 인상하고,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분담한다. 재정 분담 비율은 사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기준은 서울시 20:80이고 이외 지역은 50:50이다. 이 역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을 준용한다.

〔그림 2-5〕 보육재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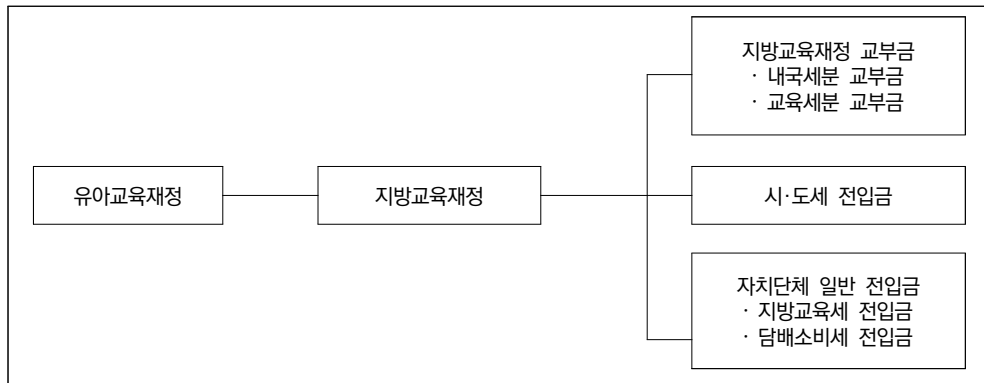


유아교육재정은 2008년 이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어지고 100%에 가까운 예산이 모두 지방교육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도세 전입금,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일반전입금은 담배소비세전입금과 지방교육세전입금으로 이루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³⁵⁾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는데, 보통교부금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입액 전액과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5)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함.

[그림 2-6] 유아교육재원 구성



나. 누리과정의 도입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5세 공통과정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만 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³⁶⁾」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유아들이 양질의 공통과정을 적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99년 하반기에 취학 전 아동의 학업준비와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만 5세 무상보육·교육을 농어촌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³⁷⁾ 2009년 하반기~2011년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이다. 취학 유예된 아동은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이 가능하다. 2011년에는 보육아동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지원하였다. 정부지원 단가는 월 172천원이었다.

2012년부터 전체 만 5세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추진되었다.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36)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만 5세 공통과정의 명칭을 공모한 결과, ‘5세 누리과정’을 정책 명칭으로 정한 바 있음(2011년 7월 14일 보도자료).

37)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 단계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의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9월 5일자로 고시되었다.³⁸⁾(서문희 외, 2011)

비용 지원도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만원으로 올렸으며, 지원단가를 점차 늘려서 2016년 3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있다³⁹⁾. 정부의 지원금 재원은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과 동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5세 누리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3개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⁴⁰⁾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 5세 유아로 확대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 유아로 확대하고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 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누리과정의 확대로 2012년에는 만3~4세 유아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0~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보육료가 지원되

38) 2011년 9월 5일자 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참조

39) 2012년 현재 월 7만원이 기준인데, 이중 일부를 누리과정 교사수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나 보조교사 이용으로 사용할 것은 권고함.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데, 대체로 아동 1인당 45,000원 정도임.

40) 이는 2011년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2011. 9. 30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참조

었다. 지원단가도 만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하여 2012년에는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방과후 비용도 지원한다. 만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3~2014년 2년간은 기존의 국고·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그림 2-7] 종전 제도와 누리과정 비교

구분	2011년	공통과정(누리과정)
지원 대상	- 소득하위 70%	- 전 계층으로 확대(100%)
교육·보육과정	-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	-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 공립유치원(월 5.9만원)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16년 월 30만원) (방과후 비용 별도)
재원 부담	- 유아학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육료 국고 일반회계	-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비용 모두 부담
관리 체제	-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 현행 유지

2012년 5세에 이어서 2013년부터 3,4세로 확대된 유아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2만원이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보육료 22만원을 지원하고, 이외에 방과후 비용을 월 7만원 지원한다. 보육분야에서는 방과후 비용 중 30만원을 교사에게 수당으로 지원하고 그 이외 비용은 아동 1인당으로 4~5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한다. 교재교구 및 보조교사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 재원은 현재로는 국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재정교부금이다. 5세는 2012년부터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며, 2013년에는 3~4세의 소득 상위 30%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4세아 소득하위 7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2015년에는 3세아 소득하위 70% 비용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여 모든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단가도 점차 증액하여 2016년에 30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1.8.).

다.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1) 보육료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만0~5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표 2-6〉 보육료 지원 기준: 2013년

(단위: 만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주: 누리과정 확대 및 보육료 관련 변경 내용은 2013년 3월1일부터 적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 안내.

이 외에도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등이 있다. 2013년 기준 총 147만명이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다.

〈표 2-7〉 보육료 지원 아동 수: 2012~2013년

(단위: 명)

구분	합계	만0~2세 보육료	만3~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2012 ¹⁾	1,351,232	841,143	313,023	13,022	35,224	5,315
2013 ²⁾	1,474,645	847,885	575,704	11,967	35,521	3,568

주: 1) 2012년에는 만0~4세 차등보육료와 만5세 누리과정으로 구분되나 비교를 위해 기준 연령별 합산함.

2) 2013년에는 만0~2세 차등보육료와 만3~5세 누리과정으로 구분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영아 무상보육 지원 단가는 보육료 상한액과 동일하다. 2012년 현재 영아는 기본보육료를 포함하여 1세 미만 보육아동은 월 755천원, 만 1세 월 521천원, 만2세 보육아동은 월 401천원이다. 영아 무상보육의 영향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739,332명에서 2012년 872,284명으로 14만7천여명 정도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갈등을 겪었다. 결국 국고 부족분 2,478억원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금 6,639억원 중 4,351억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다.⁴¹⁾ 또한 정작 취업모 등 보육 실수요자는 마땅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애를 먹었고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전업주부들은 불안정한 입장에 서기도 하였다(서문희·김혜진, 2012). 영아 기본보육료는 바우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간연장 보육은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보육하는 것으로, 2012년에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에게 월 60시간 한도로 시간당 2,700원을 시간연장 보육료로 지원하였다. 정부는 부모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운영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⁴²⁾

정부는 200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였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추가 지원하였다. 점차 소득기준을 늘렸으나 2011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소멸되었다.

보육정책이 보편적 정책이 되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추가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맞벌이 육아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킬 필요에 따라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 완화를 통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맞벌이 가구라도 부부소득을 모두 100% 합산하던 것을 2009년 7월부터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15,000여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0년에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부부 중 낮은 소득이 아니고 맞벌이 가구 부부 소득 합산액의 25%를 감액하여 약 27,000명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보게 되었다. 2011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2012년에도 소득하위 70%까지

41) 2012년부터는 지원하는 0~2세 보육료가 전액 지원 예산은 기존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소득상위 30%를 지원하는 비용만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전액지원으로 창출되는 추가수요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42) 2012. 7. 5. 연합뉴스 보도 및 2012. 7. 6 보건복지부 해명 보도자료 참조

보육료를 지원하는 3, 4세 아동에 적용되었다. 2013년부터 0~5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도입되어 소득기준은 폐지되었다.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으로 농어업 외 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⁴³⁾인 자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특회계에 의한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이었으나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 통합되었다.

2) 유아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은 크게 만 3~5세 유아학비지원과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표 2-8〉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및 금액(2013년)

(단위: 원)

구분	연령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만5세	60,000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220,000
	만4세		
	만3세		
방과후교육	만3~5세	50,000	70,000

주: 국·공립유치원은 2013년 3월부터 입학금, 수업료 면제

자료: 교육부 유치원시스템, 유아학비지원안내(<http://chilschool.moe.go.kr>)

〈표 2-9〉 유치원 원아 수(2013년)

(단위: 원)

구분	계	연령별 원아 수				
		3세 미만	3세	4세	5세	6세 이상
2012	613,748	-	130,986	229,911	251,897	955
2013	658,188	2,709	143,069	233,926	277,826	658

주: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로 인해 만 3~5세 외 아동이 존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4), 보육사업 안내; 교육부(2014), 교육통계연보

43)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미만임.

제3절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⁴⁴⁾

1.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 기준

보건의료서비스는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소비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성격을 갖는 급여이다.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가마다 어떤 부문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차이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 역시 개인의 부담금으로 충족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조세에 의해 지불되거나 사회보험료에 의해 지불되는 형태가 있다. 이렇듯 국가마다 보건의료체계의 재원과 조직이 다르고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정의된 보건의료체계의 공통적인 범위를 만들어내고 이에 근거한 국가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OECD는 Public Expenditure on Health(OECD, 1977) 및 Measuring Health Care 1960-1983(OECD, 1985)에서 출발하여 OECD Health Systems(OECD, 1993)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집대성했고, WHO와 Eurostat 등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제고 해왔다. 그 결실로써 2011년에는 보건의료매뉴얼의 개정을 통해 의료비의 재원별 분류를 보다 상세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료비는 ‘경상보건지출’과 ‘총자본형성’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보건지출은 경상보건지출만 분리하여 국제비교에 사용하고 있다. 즉 보건계정 역시 자본형성에 대한 지출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 때 경상보건지출이란 의료재화나 의료서비스의 생산 또는 그러한 생산을 위한 요소소득의 분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해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의 가치(SNA 93)”를 화폐로 측정하는 지출(expenditure) 개념이다.

이 때 지출은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돈을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중간 비용(자본, 노동 투입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거주민에 대한 지출로 한정한다. 따라서 경상보건지출은 ‘보건의료재화/서비스에 대한 거주자단위의 최종소비지출’로

44) OECD Health System Accounts(SHA, 보건계정)에 대한 연구와 Health database에 제출하는 한국의 지출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추계하고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2011), 「OECD 신보건계정체계(SHA 2011) 적용 위한 국민의료 시범추계」를 간략하게 제시함.

정의할 수 있으며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에서 자본형성만 제외한 것이다. 즉 보건의료 범위 내의 각종 보건의료기능을 위해 사용된 경제자원을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 때 보건의료는 질병의 예방, 보건증진, 치유, 재활, 영양 돌봄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기능은 회계적 관점에서 볼 때 “거래(transaction)를 통해 충족하려고 하는 니드(need)의 유형, 또는 추구하는 목적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국제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계정의 국제적인 기능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Health Accounts, ICHA)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0〉 SHA의 보건의료 기능별 분류

코드	영어 코드명	한글 코드명	세부항목 예시
HC.1	Curative care	치유서비스	입원치유, 당일입퇴원치유, 외래치유, 재가치유
HC.2	Rehabilitative care	재활서비스	입원재활, 당일입퇴원재활, 외래재활, 재가재활
HC.3	Long-term care(health)	장기요양(보건)서비스	입원장기요양, 주간장기요양, 외래장기요양, 재가장기요양
HC.4	Ancillary services	보조서비스	임상검사, 영상진단, 환자이송
HC.5	Medical goods	의료재화	의약품/기타비내구재 치료용구/기타의료재화
HC.6	Preventive care	예방서비스	정보/교육/상담프로그램, 면역, 질병조기발견, 건강모니터링, 역학조사/위험-질병관리, 재해/응급대응
HC.7	Governance, and health system and financing administration	거버넌스/보건체제/재정관리	거버넌스/보건체제관리 보건재정관리
HC.9	Other health care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기타보건의료서비스	-

자료: 정형선 외(2011), p. 23-25 요약정리.

경상보건지출은 개인보건지출(personal health expenditure)과 집합보건지출(collective health expenditure)의 합으로 구성된다. 개인보건지출은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며, 흔히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로 일반적으로 의료비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집합보건지출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지출로 크게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계정체계는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민계정에서 얻어진 총계치, 각종 조직 및 가계의 보건의료 관련 회계자료 등이 그 예이다. 국가경제 내에서 보건의료 재화/서비스의 모든 ‘가능한 사용’에는 보건의료재화/서비스의 최종소비 외에도 중간 소비, 자본형성 및 수출이 포함된다. 한 국가의 가용한 모든 보건의료재화/서비스는 국내 공급자에게 공급될 수도 있고 해외로부터 수입될 수도 있다.

보건계정은 역년(calendar year)나 회계연도(fiscal year) 중 특정 기간이 반드시 선택되어야 하는데 회계연도는 국가별 차이가 있어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역년을 권하고 있다. 보건계정의 작성원칙 및 구축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3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에 제시되어 있다.

제4절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Labor market policies, LMP database)⁴⁵⁾

1. OECD 추계 기준

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개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 ALMPs)의 역사는 국가에 따라 세계 제 1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를 체계화시킨 것은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초반 스웨덴의 노동조합 경제학자인 Gosta Rehn과 Rudolf Meidner이다(장신철, 2011). 그 후 1970년대에 접어들어 오일쇼크로 인해 OECD 국가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화되었다.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ies : LMPs)은 그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 및 기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개입만을 의미하는 등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차적 대상집단은 공공고용알선기관에 등록된 실업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

45) 고경환 외(2014),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서 인용(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 작성).

동시장참여 활성화도 정책의 우선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를 반영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조치”로 정의할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종의 효과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효율적인 기능을 달성하고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공공개입으로 노동시장에서 특정 집단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타 일반적인 고용정책 개입과는 구별된다. 공적자금과 세금을 투입하여 노동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목표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노동시장개혁이 정치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해당 경제의 효율성의 결과물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범위

OECD(1993)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1)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등으로 노동공급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 2) 재교육과 같이 직무 연계 기술을 발전시키는 조치, 3) 고용서비스, 일자리 매칭, 구직 상담처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분야 이렇게 세 범주이다. 이 세 범주 안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일반적으로 나누면, 1) 직접일자리, 2)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 3) 실업자 직업 훈련, 4) 창업지원, 5) 고용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OECD에서는 국가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정책대상집단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 예로 실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비자발적 해고의 위험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 일반적인 경로로 도제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도제프로그램 지원,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재건을 위한 특별조기퇴직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반면에 이 기준에 예외인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성인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근로자훈련, 임계치 미만의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장 내 지원, 특정 연령이나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조건부로 하는 조기퇴직지원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지만,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한 소극적노동시장정책을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SOCX는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7가지 세부 항목, 소극적노동시장정책은 2가지 세부 항목을 포함한다.

1)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급여지급 행정 포함)

OECD의 노동시장 정책 분류에서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은 다시 알선 및 관련 서비스, 급여지급행정,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알선 및 관련 서비스에는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에 대해 시행하는 직접적 급여지원, 온라인 인력은행 운영 등 구직활동 지원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구인구직을 위한 정보제공, 일자리 중개, 개인 구직활동비 지원(인터뷰 참가비용), 개인취업지원계획(IAP) 수립 지원, 취업 상담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알선 및 관련 서비스가 여기 해당한다.

(급여지급)행정은 구직 지원 활동 등 PES와 관련한 모든 행정비용을 말한다. 일반 행정비용의 범위는 사업주 및 근로자와 관계되는 모든 비용, 노동시장 프로그램 집행·관리 비용(계획, 조정, 모니터링 등), PES 산하 직업훈련센터의 일반 운영비 등이고, 급여지급 행정의 범위는 급여 수혜자에 대한 등록 및 구직활동 모니터링, 수급자격의 유효성·적격성에 관한 사항이다. 기타로는 PES 운영비 총액, 기타 활동비 등 다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잔여항목)이 있다.

2) 훈련(Training)

OECD 분류 가운데 훈련은 공적 재정지원을 통해 대상 집단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훈련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세부항목별로 기관(institute)훈련은 대학·훈련센터 등에서 전체 훈련의 75%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작업장(workplace)훈련은 기업 내에서 전체 훈련의 75%이상을 이수해야 한다.⁴⁶⁾ 교대(alternate)훈련은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기관에서 이수한 훈련과 작업장에서 이수한

46) 고용장려금으로 분류되는 것은 외형은 직업훈련이나 실질적으로 일시적 고용의 성격이 강한 경우와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직업훈련 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훈련이 균등 배분된 경우를 말한다. 견습특별지원(special support for apprenticeship)은 견습직원⁴⁷⁾ 채용시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해 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외사항으로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직업훈련 등 고용정책 일반이 있다.

3) 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Job rotation and job sharing)

이 범주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실업자 등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신규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해당된다. 그러나 기존 근로자를 신규인력으로 대체하지 않고 학업 등을 이유로 휴직시키는 경우는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세부항목별로 일자리 순환은 직업훈련·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재직자를 실직 중인 근로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로서, 휴가 기간 중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일자리 나누기는 재직자의 근로시간 일부를 감축하여 실업 중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감소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4년 말부터 고용장려금의 하위영역으로 편입되었다.

4) 고용장려금(employment incentives)

고용장려금은 대상 집단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보조금 범위는 공공·사적부문 및 비영리분야에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을 포함하며, 공적자금으로 노동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고용장려금 중 채용장려금은 장애인 채용장려 제도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대상 집단에 대해 임금 등을 보조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직업훈련과 구별되는 점은 훈련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작업장 실습을 위해 배치하는 경우는 채용장려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장려금은 구조조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유인급여는 여기서 제외된다.

47) 견습직원이란, 참여자는 교대훈련의 형태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업무완료시 확인 증서를 수여받는다.

5) 지원고용 및 재활(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고용 및 재활 지원사업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여기서 지원고용이란 보조공학기기·작업장 도우미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가능케 하여, 이들의 고용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범주의 하위범주 가운데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은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에 장애인들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다. 지원고용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이 계속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평생근로지원은 사회복지의 일부로 이 범주에서는 제외된다. 재활은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장애인·약물중독자·환자 등을 취업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의약적 재활프로그램은 제외된다.

6)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장기실업자 또는 취업애로계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일자리 개념은 사회적 유익성이 내재됨)을 말한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보조금 등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해 창출된 임시적·비시장적 일자리로서(정상적인 시장 수요에 추가된 일자리) 직업능력개발, 취업률 제고 등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사업주의 노동비용 대부분을 공적자금으로 부담한다. 전 생애에 걸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보호 일자리는 사회정책에 해당하고, 정규직 일자리에 임시직을 고용하는 정책도 이 범주에서는 제외한다. 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일자리를 운영하기 위한 노동비용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면 고용장려금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으면 직접 일자리 창출에 해당한다.

7) 창업인센티브(start-up incentives)

대상 집단이 자영업 등 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형태에는 직접 지원(현금지원) 또는 간접 지원(창업자금 대부, 시설제공, 경영 조언 등)이 있다. 창업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대상집단에 국한된 정책이어야 하며, 정책

대상이 일반적인 경우는 이 범주에서 제외한다. 사업주에 대한 경영 조언은 창업 인센티브에 해당(직업훈련이 아님)한다.

8)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⁴⁸⁾

이 범주는 실직자에 대한 임금 보전 정책이다.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직업재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질병·재활 급여를 당해 범주에 포함한다. 세부항목별로 실업급여는 완전/부분/단시간 실업급여로 분류한다. 분류 기준은 정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완전한 실업자인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이다(단시간 근로의 원인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 실업급여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예컨대 직업훈련비 대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경우 이는 직업훈련비로 분류해야 한다.

실업지원은 실업보험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급 가능한 보험금 총액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이다. 해고보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업의 폐업 또는 운영축소 등으로 해고된 사람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채당금인 파산보상이 있다.

분류상 주의할 점은 이 범주에 포함된 대상자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노동시장의 해당사항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9) 조기퇴직(Early retirement)

고령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여 실업자 등 대상 집단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조건부(conditional) 조기퇴직과 무조건부(unconditional) 조기퇴직으로 분류한다. 조건부의 경우는 고령자가 완전히 은퇴한 후 신규 인력을 해당 일자리에 취업시키는 경우이고, 무조건부는 고령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신규 인력을 취업시키는 것이다. 이 범주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법정 정년 이상(국민연금 수급 가능)의 근로자, 광산·어업 등 열악한 근로조건 종사자가 있다.

48)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과 '조기퇴직'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OECD SOCX no. 7 실업(Unemployment)에 해당되지만, 본 매뉴얼이 LMPs(labor market policies)을 기준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독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시함.

지금까지 OECD 노동시장데이터베이스(LMP database)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LMP 데이터베이스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2014년 기준 데이터의 추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현행 데이터베이스 체계에서 ‘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는 ‘지원 고용 및 재활’과 통합되면서 세부 항목 수가 줄어들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관련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향후 연구에서 반영할 것이다.

2. 한국의 추계 기준

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개요

한국에서의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LMP)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보조금, 훈련, 직접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의 고용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들을 2004년부터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발표 및 관리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기존 사업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 기존사업의 소멸, 신규 사업의 발생, 사업간 통폐합 등의 이유로 연도별로 발표하는 사업의 범위가 달라져 왔다. 특히 매년 발표되는 사업의 범주에 입각하여 이전년도의 사업현황을 소급하여 정리하는 경우에 매년 보고되는 사업과 이전사업간의 괴리 현상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범주의 정립 필요성 및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차례에 걸쳐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3년에도 4차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는 일자리 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중복 조정기준 마련 및 조정,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방안, 추진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1차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 분류기

준을 토대로 6개 유형(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매년 정비작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범위 등의 집계 차이 등으로 매년 사업규모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효율화 작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규모 및 사업현황에 대한 정비가 정립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효율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고용정책기본법(제 13조의 2)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2013년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 수(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는 직접일자리 창출 7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70개, 고용서비스 37개, 고용장려금 19개, 창업지원 16개 및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효율화 과정을 거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범위가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포함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내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9년 12월에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서 이에 대한 추진방향이 논의됨에 따라 실무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범주 정립과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여 왔고, 2013년 4차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는 일자리 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중복 조정기준 마련 및 조정,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방안, 추진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실시된 1차 일자리 사업 효율화는 기존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 분류기준을 토대로 6개 유형(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분류문제와 함께 유사·중복·누락 및 자치단체 사업관리 부재 등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이런 가운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2011년 6월 30일)을 통해 ‘분류·평가·조정’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차 효율화 방안(2011년 8월 10일)을 통해 일자리사업 관련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유사·중복 사업간 조정과 연계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매년 정비작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범위 등 집계의 차이 등으로 매년 사업규모나 범위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효율화 작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규모 및 사업현황에 대한 정비가 정립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8]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기능 강화

총괄	구분	주요내용	주관부처	주요 관계부처
고용 노동부	직접 일자리	공공근로 類	행인부	복지부
		학생 안전 보호 類	교과부	행인부, 복지부
		해외(국내)인턴 類	교과(고용)부	문광부, 지경부, 국토부 등
	직업훈련	「현장수요형」 전문인력 양성	고용부	문광부, 지경부, 국토부
	고용서비스	워크넷 공유 등 서비스망 연계	고용부	교과부, 여성부
	창업지원	창업보육지원	중기정	지경부, 농림부, 환경부

한편, 효율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도 정비되었다. 고용정책기본법(제 13조의 2)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세부 범주 역시 6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 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사업과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단순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채용 사업, 특정 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사업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2).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이다. 여기에는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연구비, 기자재, 장학금 등 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나 단순한 지식전달 성격의 교육사업 역시 포함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2).

고용서비스는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등을 말하며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센터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은 고용서비스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2).

고용장려금은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은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소

득 유지 및 지원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용노동부, 2012).

다.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비교

OECD는 매년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예산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기초하여 자료를 집계 및 보고하고 있다. OECD 분류기준과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세부 기준이나 집계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OECD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포함여부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OECD에서 발표한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MP database)의 세부 항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과 노동시장 정책(LMP)는 개념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논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논의에서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표현하며, 이 자료는 OECD에 보고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다.

1) 추계결과 비교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ies : LMPs)은 그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 및 기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개입만을 의미하는 등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차적 대상집단은 공공고용알선기관에 등록된 실업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참여 활성화도 정책의 우선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를 반영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조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종의 효과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효율적인 기능을 달성하고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공공개입으로 노동시장에서 특정 집단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타 일반적인 고용정책 개

입과는 구별된다. 공적자금과 세금을 투입하여 노동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목표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노동시장개혁이 정치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분류가 2011년에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 분류기준을 토대로 6가지 분류로 변경되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먼저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중 일자리 배치전환과 일자리 나누기 항목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소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중 조기퇴직은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배치전환은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예산의 집행이 매우 미약한 수준인 반면, 2012년 기준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부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OECD 기준에 따른 2011년도 추계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OECD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분류기준

노동시장 프로그램(LMP) 분류기준		재정지원 일자리 분류
분 류	내 용	
고용서비스 (employment service)	구직자를 고용주와 연결, 정보제공·안내·집중적인 상담·구직 도움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직 지원 활동 등 관련 모든 행정	고용서비스
직업훈련(Training)	대학·훈련기관, 훈련·사업 내 훈련, 교대제 훈련, 도제 훈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 배치전환과 나누기 (Job rotation and Job sharing)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실업자 등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신규인력 지원(일자리 배치전환, 나누기)	-
고용장려금 (Employment incentives)	채용장려금, 고용유지 장려금(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	고용장려금
장애인 통합 및 재활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고용 및 재활 지원사업 (지원 고용, 보조금, 재활 등)	
직접 일자리 창출 (Direct job creation)	장기실업자 또는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해 창출된 비시장적·임시적 일자리 · 노동비용의 대부분을 공적자금으로 부담 · 비생산적 고용인 보호작업장 유형의 일자리(lifetime sheltered work)는 일반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므로, 노동시장정책 밖에 있는 사회정책으로 간주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Start-up incentives)	대출, 시설임대, 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 또는 직접적인 자금제공 (일반적 지원은 제외)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완전실업급여, 부분실업급여, 단시간실업급여, 해고보상, 파산보상, 임금채불에 대한 보상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조기퇴직 (Early retirement)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여 실업자 등 대상집단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정책	-

주: 실업급여 등과 조기퇴직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며, 그 외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임.

2) 추계결과의 차이에 따른 검토⁴⁹⁾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통계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국내 제도와 국제적인 기준의 차이에 따른 것이거나 세부항목의 포함여부와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데이터베이스는 또 다른 논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하는 노동시장데이터베이스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실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당초 다양한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취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사업의 성격보다는 복지성격의 사업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일자리사업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과 노인일자리,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은 고용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급여의 조건으로써 제공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의 부족분을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고자 제공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일자리사업과 복지사업의 경계에 있거나 양쪽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등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써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취약자에 대한 활동지원이나 돌봄의 복지성격을 가지지만 정책 수단으로써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복지사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범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들 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분류하여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통합관리된 2011년부터 적극적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관계로 중복계상된 항목들이 있다. 즉 ‘동일한 Program’에 대해 노동부는 ALMP로, 복지부는 Old-age(또는 Incapacity-related benefits)로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중복분류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49) 원내 연구진 작성

〈표 2-12〉 동일 Program에 대한 부처간 분류 기준의 차이(예시)

Program	정책(사업)의 목적			급여 분류		비 고
	목 적	주요 목적	2차 목적	고용 노동부	보건 복지부	
노인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보충적 소득 창출 및 건강증진 도모	소득보장	고용창출	ALMP	노령 급여	경제활동인구는 15세에서 64세, 노인(65세+)의 일자리는 경제활동 이후 연령으로 노동정책보다 복지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장애인 활동 지원	고용창출	ALMP	근로 무능력 급여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주된 사업이고, 부수적으로 도우미 일자리 창출

국제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하는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MP database)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하는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X)보다 일정이 앞선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생산할 때 국제통계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LMP 데이터베이스에 제시된 통계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주요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정책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중복적으로 추계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책의 부산물로서 고용창출이 발생할지라도 해당 사업의 본래 목적이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이라면 해당 정책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검토와 추계 범위의 설정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3장

추계방법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1.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계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 사회복지성격의 지출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 부문별로 추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그리고 공기업으로 구성된다.

가. 정부지출

1) 자료원 및 자료수집 방법

최근 중앙정부 재정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함으로써 추계방법의 정교화와 신뢰성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업의 성격과 상세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세입세출예·결산서』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료는 e-호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계한다.

나아가 일반정부의 직접지출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요금과 궁·능 등 입장료 감면 역시 정부 지출에 포함된다. 정부지출의 재정범위는 중앙정부의 직접지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한 지방비(자치단체고유사업), 교통요금과 입장료 감면액을 포함하며, 회계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회계이다.

2) 추계방법

중앙정부지출은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의 예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다.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IMF기준에 따라 정부 예결산 시스템에서 080(사회복지)과 090(보건)으로 분류된다.

〈표 3-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50		교육(3)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3	평생·직업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60		문화 및 관광(5)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1	문화예술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2	관광		088	주택		141	수자원
	063	체육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4	문화재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93	식품의약품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주: 음영부문은 복지재정에 포함되는 항목임.

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원칙적으로 080 사회복지 예결산과 090 보건 예결산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보건부문의 지출을 OECD Health database를 통해 추출된 항목들을 재분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

복지분야를 중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소관부처, 분야와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사업(예산), 세목 등으로 구성되고 세세사업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러나 결산자료는 세부사업까지만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예산자료와 결산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추출한다. 즉 예산서의 세세사업을 기준으로 결산서의 세사업을 정렬한 후 세사업 기준에서 예산서와 결산서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예산서의 세세사업을 기준으로 그대로 결산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예산서와 결산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각 부처별 결산자료를 참조하거나 추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에 대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서의 세세사업별 예산 비율을 토대로 결산서에 적용한다.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를 위하여 정부지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080 사회복지분야를 추출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분야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사업, 예산액, 세목 등을 추출하고 유사하게 예산자료를 참고로 세세사업의 결산액을 추출하여 연계한다.

〈표 3-2〉 d-Brain 결산자료 구조-예시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세세사업명	결산액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아동시설기능보강	아동시설기능보강	34,122,00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3,269,158,80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18,902,00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주거급여	737,754,95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급여	142,147,332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	27,717,879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	양곡할인	26,96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	양곡할인	22,00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	양곡할인	9,100,00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	양곡할인	97,446,986
...

주: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만 추출하여 정리함.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3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그러나 사회복지분야(080)의 예결산만 집계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사회복지분야(080)가 아니더라도 세세사업에 복지사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두 번째 원칙은 사회

복지분야(080) 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과 추출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각 부처의 예·결산서를 바탕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지출항목 들을 추가적으로 추출한다.

〈표 3-3〉 사회복지 분야(080)가 아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분야명	부문명	세부사업명	세세사업명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재해재난긴급구호	재해발생시재해구호장비임대료및유류대 등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어촌보육여건개선	영유아양육
		취약농가인력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문화및관광	관광	취약계층 복지관광	취약계층 복지관광
	체육	체육바우처 지원	체육바우처지원
	문화예술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문화바우처지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및자원개발	저소득층연탄보조	저소득층연탄보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장애인체육관건립(울산), 공립어린이집건립(경기), 경로당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충북), 저소득불량주택개보수(전북), 장애인임대주택건립(전남), 사회복지시설확충(경북, 경남) 공보육시설확충(제주) 등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3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이렇게 추출된 항목들은 소관부처와 회계, 사업별(분야와 부문, 세부사업과 세세사업)로 구분되며, 재정정보와 지출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 추계의 마지막 원칙은 사회복지지출분야에 포함된 지출항목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추계기준에 따라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검토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인건비와 행정비용, 일회성 행사, 세부항목의 미비로 정확한 통계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는 다양한 세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목을 기준으로 항목들을 추출하는 원칙 또한 필요하다. 먼저 2011년 매뉴얼(para. 68, 70, 71)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이전된 급여”로 정의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자본지출⁵⁰⁾이나 해외 이전⁵¹⁾과 사회적 성격의 목적이 아

50) 감가상각비, 공공기금예탁금, 공공기금전출금, 국공채매입, 국내차입금상환, 금융성기금출연금, 기타민간용자금,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특별회계예탁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당기순이익, 민간기금출연금, 민간위탁금, 반환금 기타,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비통화금융기관용자금,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일반출자금, 일반회계예탁금, 일반회계전출금, 자산취

닌 지출⁵²⁾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매뉴얼(para. 90)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행정비⁵³⁾와 연구개발비(R&D)⁵⁴⁾ 역시 포함하지 않는다.

주거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는 기타저소득층에 포함되며, 실제 주거급여가 없는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출통계를 생산하지 않는다. 다만, 매뉴얼(para. 88)에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현물 주거급여는 각 기능영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의 공공임대주택지출을 포함하는데, 융자금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매뉴얼에서는 자본지출 중 이차보전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분야와 비사회복지분야 중 사회적 성격을 가진 지출 항목들을 집적한 후 세목을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세목을 기준으로 배제되는 항목들의 세세사업명을 제시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설비, 보상금, 연구개발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수, 일용직임금, 출연금, 일반출자금 등은 제외하고 있다.

〈표 3-4〉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지출목명	지출세목명	세세사업명
건설비	기본조시설계비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효문화진흥원 설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연구
운영비	일반수용비	자활성공수기당선자상금, 장수노인기념품증정(100세),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임차료	장애인운전교육장, 장애인체험센터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인터넷모니터링 기자재구입
인건비 등	기타직보수	인터넷모니터링관련인건비등
	일용임금	성범죄자우편고지제도시스템운영요원비인건비, 장애인체험센터일용임금
출연금	출연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3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득비, 자치단체교부금, 전대차관원금상환, 전대차관이자상환, 지방자치단체융자금, 차입금이자, 출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 한국은행예치금 등의 세목이 존재함.

51) 국제부담금, 해외경상이전, 해외자본이전, 해외차입금상환 등

52) 무형자산, 배상금, 시설부대비, 시설비, 임차료, 포상금 등

53)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업무비, 교수보직경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기타운영비, 기타직보수, 보험금, 보수, 복리후생비, 사업추진비, 예비비, 일숙직비, 특근매식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차량선택비, 피복비, 학교운영비 등

54) 기본조시설계비, 시설장비유지비, 시험연구비, 실시설계비, 연구개발비, 연료비, 재료비, 저장품매입비 등

이러한 원칙 역시 예외가 있는데 매뉴얼(para. 91)은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과 보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인적자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경우 인건비, 연구비, 기관운영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일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표 3-5〉 사회복지분야 중 예외적으로 행정비용이 포함되는 사업-예시

사업성격	부문명	세세사업명	지출목명
인건비	보육·가족및여성	어린이집종사자인건비지원	자치단체이전
		산모신생아도우미 인건비지원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3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예결산서를 수집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매칭비는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에 대한 결산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3-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기능별)

(단위: 십억원)

분류		자체사업
계		4,156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230
	취약계층	576
	보육·가족 및 여성	530
	보육	250
	가족여성	280
	노인·청소년	1,069
	노인	870
	청소년	199
	노동	224
	보훈	202
	주택	233
	사회복지일반	236
보건의료	보건의료	815
	식품의약품안전	41

주: 1) 해당자치단체담당과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것임.

2) 2013년 시군구 결산기준

자료: 행정자치부(2013), e-호조예산회계시스템; 자치단체 결산서 재구성.

이렇게 일차적인 정부 지출 추계를 마친 후 보정작업을 거치는데,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문제가 있다. 먼저 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사회복지분야 주택부문은 주택환경 개선지원, 임대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추계하였고, 일부 국민임대주택지원 용자금, 매입 임대지원 용자금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이에 반해 세목이 자치단체이전이지만 ‘재정비축진사업비지원’, 주택부문의 ‘재해복구비’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물급여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부 용자금도 제외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실태 자료를 기반으로 장애인 11.1%, 노인 16.9%, 저소득 72.0% 비율로 배분하여 추정한다.

〈표 3-7〉 주택부문 추계범위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목명	세목명
포함항목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자금	일반출자금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자금	일반출자금
	전세임대경상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민임대출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자금	일반출자금
	영구임대출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자금	일반출자금
제외항목	재정비축진사업지원, 재해복구비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주거환경개선, 분양주택(용자), 준주택지원(용자),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용자금	기타민간용자금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3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다음으로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과 중복성 검증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 중 사회복지일자리 사업에서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자료를 집적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들은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국제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중복검증 결과 과년도까지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던 지출내용들이 올해부터 제외된 항목들로 아래와 같다.

〈표 3-8〉 ALMP와 중복계상으로 배제되는 항목 예시

소관명	부문명	세세사업명	비고	현물 +현금	제도명칭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ALMP중복삭제	삭제	삭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성과중심자활	ALMP중복삭제	삭제	삭제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태보호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활동지원급여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단체경 상보조	ALMP중복삭제	삭제	삭제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자치단체경 상보조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청소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청소년	독거노인u-Care시스템운영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청소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청소년	노인돌봄인력등 교육 및 노인 건강관리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청소년	재정지원일자리지(사회공헌형.시 장진입형)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일반	지역사회서비스투자바우처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청소년	노인일자리지원(제주)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청소년	노인일자리지원(제주)--공공분 야.시장진입형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새일센터지정.운영-찾아가는 취업서비스제공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새일센터지정.운영-새일여성 인턴운영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새일센터지정.운영-직업교육 훈련운영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새일센터지정.운영-사후관리 지원서비스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광역새일지원본부지정.운영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민간베이비시터교육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아이돌봄 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노인·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 원단사업비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노인·청소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가족및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ALMP중복삭제	현물	사회복지서비스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3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한편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상대상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교통·통신 등과 관련한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을 법률⁵⁵⁾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일반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은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고궁·능 등 입장료 감면과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버스 및 여객선 교통요금 감면이 해당한다.

〈표 3-9〉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구 분	제 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일반정부	교 통	고궁·능 입장료 감면	문화재청 산하 사업소	실태조사 ¹⁾
		버스, 여객선	국가보훈처	실태조사 ²⁾
		내항여객선	해양수산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 1) 문화재청의 협조

2) 국가보훈처의 협조

3) 정책영역 구분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9개 정책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분야코드(080, 090)와 부문코드(081~093)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일반적인 정책영역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정부 지출 중 고속도로통행료 감면과 같이 장애인과 보훈대상이 함께 묶여 있을 경우에는 상세항목을 기준으로 장애인 대상 감면액은 근로무능력관련급여(No. 3)에, 보훈대상 감면액은 기타사회정책영역(No. 3)으로 구분하고 있다.

55) 관련 법률은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동법시행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방송법(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동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철도법(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 유료도로법(제15조: 통행료납부의 대상 등, 동법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의2: 보편적 의무,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보편적 의무의 내용),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등임.

〈표 3-10〉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d-Brain시스템				SOCX	
분야코드	분야명칭	부문코드	부문명칭	NO.	정책영역명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9	기타사회정책
		082	취약계층지원 ¹⁾	5/3/9	가족/근로무능력관련급여/기타
		084	보육가족 및 여성	5	가족
		085	노인·청소년	1/5	노령 혹은 가족
		086	노동	6	적극적노동시장정책
		087	보훈	3/9	근로무능력관련급여/기타사회정책
		088	주택	1/3/9	노령/근로무능력관련급여/기타사회정책
		089	사회복지일반	9	기타사회정책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	보건
		093	식품의약품안전	4	보건

주: 1) 취약계층지원원은 요보호아동지원, 장애인, 노숙인지원으로 구성됨.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능별 분류가 이루어지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각 기능별 분류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세세사업을 검토하게 된다.

4) 제도 구분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내 정책담당자와 학계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제도적인 추계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정부지출에 대한 추계방법을 기술하는 관례로 사회보험은 제외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다만, 그 동안 공공부조제도에 포함해 오던 사회보상은 별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부지출에 의한 사회복지제도는 공공부조와 사회보상,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이다. 즉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 혹은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대표적으로 1999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만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2008년 도입)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애인연금(2010년 도입)이 포함된다.

사회보상제도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특별보상의 취지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개인의 경제적·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종종 사회 혹은 국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국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일례로 전쟁 중 개인의 희생이나 재산상 손실의 경우 외교적 또는 군사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의 보상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표 3-1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국가보훈, 위안부보호, 사할린동포보호 등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선정된 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선정된 자	애국지사, 순국애국지사유족, 군경유족, 무공수훈자, 4.19 부상자 및 그 유족 등 복지지원대상자
급여내용	- 7종 (긴급복지지원 포함 8종)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 등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훈처, 통일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보훈청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이다. 공공부조제도가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인데 반해 사회서비스는 욕구와 소득기준에 따라 다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요보호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부랑인 등)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도입으로 재가서비스가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사회서비스만 제공한데 반해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기능 등을 수행하는 적극적고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영향으로 가구 내 자녀의 수가 매우 감소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과 교육부의 유치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3-12〉 사회서비스 개관

제 도	소관부처	급여예시
아동 및 가족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보육아동사업
노인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서비스(기본/종합) - 독거노인U-Care 시스템 운영 - 교통요금 및 입장료 감면
장애인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재활치료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 운영지원 - 교통요금 및 입장료 감면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료서비스 - 집합보건의료비(시설장비포함)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림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사업, 뉴스타트 등 -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등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지원금 등 -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 청년인턴제, 사회적기업 등 - 창업점포지원, 청년벤처지원 등

나. 사회보험지출

사회보험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므로 정부의 일반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지출에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 포함된다.

먼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금의 급여종류로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⁵⁶⁾ 등을 공통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 급여는 연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⁵⁷⁾. 이들 연금급여의 성격은 기능구조와 연계된다. 즉 퇴직연금은 노령(Old-age) 영역에, 유족연금은 유족(Survivors) 영역에, 장해연금은 근로무능력(Incapability-related) 영역에, 재해부조금은 기타사회정책영역(Other policy areas)에 각각 포함한다.

2013년 통계부터 그 동안 공란으로 두었던 조기퇴직연금(Early retirement pension, Category No 1.1.2)에 우리의 조기노령연금을 분류하게 되었다. 조기퇴직연금은 장기실업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하는 연금 제도이다. 우리의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조기노령연금은 연금(pension, Category No 1.1.1)에 분류하여 왔다. 이러한 분류의 변화는 국제조류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장애, 장기실업, 여성 등의 사유로 지속적 노동시장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례조기노령연금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거나 또는 연금의 조기수급 자체를 어렵게 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OECD 보고자료 역시 연금의 조기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통로들을 ‘조기퇴직연금’에 편입하여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⁵⁸⁾은 기능구조상으로는 보건(Health)영역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은 개인의료비와 집합의료비로 구분된다. 개인의료비의 추계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사업연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집합보건의료비의 추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건강검진결과분석, 고용노동부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산재의료관리원의 산재의료관리원 손익계산서를 활용하고 있다(정형선 외, 2011).

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⁵⁹⁾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

56)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장해연금’, 군인연금은 ‘상이연금’, 국민연금은 ‘장애연금’으로 칭함.

57) 퇴직수당의 경우 각 연금에서 급여(국민연금 제외)를 실시하고 있음.

58) 건강보험은 1989년 전 국민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2000년 보험자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됨.

59)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범위가 최근 1인 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 시간제근로자로부터 그 적용대상이

병보상연금, 그리고 장례비로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의 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모성보호사업⁶⁰⁾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산재보험사업연보와 고용보험통계연보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며, 세부적인 자료의 구분을 위해 각 기관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표 3-13〉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사회보험제도		자료원
공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군인연금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고용노동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자료』, 산재의료관리원 『산재의료관리원 손익계산서』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내부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내부자료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사회보험지출은 대부분 각 사회보험 기관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다. 예시로 고용보험통계연보의 모성보호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중 각 년도 금액을 추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확대됨.

- 60) 모성보호사업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음.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74조)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남녀고용평등법 18조) 지급함.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근로기준법 93조)에게 1년 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의 40%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3-14〉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

(단위: 명, 백만 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원	금액	계		남		여	
			초회 수급자	금액	초회 수급자	금액	초회 수급자	금액
2005년	41,104	46,041	10,700	28,242	208	487	10,492	27,755
2006년	48,972	90,886	13,672	34,521	230	532	13,442	33,989
2007년	58,369	132,412	21,185	60,989	310	740	20,875	60,249
2008년	68,526	166,631	29,145	98,431	355	982	28,790	97,449
2009년	70,560	178,477	35,400	139,724	502	1,503	34,898	138,221
2010년	75,742	192,564	41,733	178,121	819	2,539	40,914	175,582
2011년	90,290	232,915	58,136	276,261	1,402	5,761	56,734	270,499
2012년	93,394	241,900	64,071	357,797	1,790	9,153	62,281	348,644
2013년	90,507	235,105	69,918	420,248	2,293	11,691	67,325	408,557
전년 대비 증감률	-3.1	-2.8	8.7	17.5	28.1	27.7	8.1	17.2

자료: 고용보험통계연보, 자료추출일(2015년 10월 14일)

각 사회보험기관의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데이터구성양식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양식에 사회보험자료를 입력하고 소관기관과 분야 및 부문, 기능 코드 등을 작성한다.

〈표 3-15〉 사회보험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단위: 천 원)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세세사업명	결산액
사회복지	공적연금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국민연금급여지급	노령연금	8,501,990,946
사회복지	공적연금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국민연금급여지급	장애연금	326,167,986
사회복지	공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금급여	퇴직연금	1,360,638,334
사회복지	공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금급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5,687,374
사회복지	공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금급여	퇴직연금일시금	37,135,431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퇴직급여	퇴직급여-퇴직연금	8,371,106,484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퇴직수당	퇴직수당	1,278,783,074
사회복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재해보상급여	유족연금보상금	7,026,885
사회복지	노동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간병급여	55,200,000
보건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진료실적	40,800,562,175
사회복지	노동	고용평등실현	모성보호육아지원	산전후휴가급여	235,105,000
사회복지	노동	고용평등실현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휴직급여	420,248,000

주: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만 추출하여 정리함.

다. 공기업 지출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상대상자를 위한 교통·통신 등과 관련한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은 공기업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TV 등 통신요금과 철도, 지하철 등 교통요금의 할인 또는 면제이다.

본 추계의 범위로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 국한하며 재원이 공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였다.

〈표 3-16〉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구분	제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공기업	교통	철도요금	한국철도공사	실태조사
		지하철요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고속도로통행료	한국도로공사	
	통신	TV수신료	한국방송공사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은 TV 시청료만, 노인은 고속철도와 지하철 요금 감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폭넓은 교통통신 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

〈표 3-17〉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

대상기관	감면대상				
	생활 보호 대상자	장애인	노인	국가 유공자	군인
TV시청료	○	○	×	○	×
고속철도(KTX)요금할인, 한국철도공사	×	○	○	○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	○	○	○	×
고속도로통행료	×	○	×	○	×

이러한 추계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항목과 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된다. 사회보험지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양식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공기업 조사결과를 입력하고 부문과 기능 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게 된다.

〈표 3-18〉 공기업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단위: 천원)

분야명	부문명	세부사업명	세세사업명	결산액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노인	5,564,400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부산교통공사 교통요금할인	노인	75,655,000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서울메트로 교통요금할인	노인	130,630,000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노인	82,631,995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고속철도(KTX)요금할인	노인	14,454,100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한국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노인 - 일반철도	14,215,652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대전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노인 - 지하철	7,858,800
사회복지	보훈	한국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보훈 - 전철	2,295,380
사회복지	보훈	대구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보훈대상자	401,917
사회복지	보훈	부산교통공사 교통요금할인	보훈대상자	1,369,000
사회복지	보훈	서울메트로 교통요금할인	보훈대상자	2,633,000
사회복지	보훈	인천교통공사 교통요금할인	보훈대상자	133,508
사회복지	보훈	고속철도(KTX)요금할인	보훈대상자	6,567,438
사회복지	보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보훈면제	2,232,238
사회복지	보훈	의정부경전철(주) 교통요금할인	보훈대상자	36,10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TV시청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13,380,000
사회복지	취약계층	TV시청료 감면	시청각장애자	6,180,000
사회복지	취약계층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장애인	1,361,800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구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장애인	6,754,301
사회복지	취약계층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장애인	25,438,034
사회복지	취약계층	인천교통공사 교통요금할인	장애인	2,803,254
사회복지	취약계층	고속철도(KTX)요금할인	장애인	19,330,141
사회복지	취약계층	한국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장애인 - 일반철도	13,123,056
사회복지	취약계층	한국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장애인 - 전철	35,819,961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전도시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장애인 - 지하철	1,998,000
사회복지	취약계층	부산김해경전철(주) 교통요금할인	장애인	1,109,279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한국철도공사 교통요금할인	군인 - 일반철도	185,404

주: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만 추출하여 정리함.

디지털예산시스템의 양식을 준용하여 본 제도는 연구진이 작성.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고용주의 법정급여, 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과 시장부문의 자동차책임보험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용주의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으로써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 휴가급여 중 고용주 지급분(휴가실시 앞의 두 달 해당), 질병휴가 기간의 법정임금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교통통신요금 감면은 크게 교통부문과 통신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교통부문은 항공회사의 요금 감면을 의미하며, 통신부문은 시내·시외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등의 요금감면을 의미한다.

가. 고용주의 법정급여

민간복지 중 법률로 강제된 기업복지에 한하여 살펴보면 법정퇴직금, 퇴직연금과 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가 있다. 이들 세 급여는 근로기준법(1953)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1999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2001년부터 유급질병휴가급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정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법정퇴직금의 추계는 2005년도 자료까지는 퇴직자의 전체 기초자료가 수록된 국세청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국세연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OECD 작성지침에 따르면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법정퇴직금은 국세연보와 노동부의 노동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전체 법정퇴직금의 약 20%를 추계에 포함하였다.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산전후휴가급여(동법 제72조)는 기업주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실시한 90일⁶¹⁾ 동안의 급여이다. 이들 3개월 중 2개월은 기업이, 나머지 1개월은 고

61) 2001년 11월부터 90일로 확대됨.

용보험이 부담한다. 먼저 기업부담은 건강보험 급여화일에서 분만급여를 수령한 자와 자격화일에서 보수월액⁶²⁾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개월)를 곱하여 추계하였다. 다음 고용보험 부담은 고용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분만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월평균소득을 수령한다는 조건에 따라 실시하였다.

$$Maternity\ Bene\ Private = \sum W_{ij} \times 2$$

W_{ij} = i 연도 직장여성 중 분만한 j 취업자의 월평균소득

그리고 근로자의 유급질병휴가급여(동법 제8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사용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휴업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다. 이 급여의 추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유병률, 외병일수)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휴가 동안 월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였다.

$$Sickness\ Bene = \sum M_{ij} \times B_{ij} \times 26.0714^{\text{상수}1)} \times E_{ij} \times W_{ij} \times 0.02^{\text{상수}2)}$$

이 때, $Sickness\ Bene$ = 질병휴가기간 동안 법정임금

M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유병률(%)

B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외병일수

E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취업자수

W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월평균임금

상수¹⁾ = 표본집단의 14일간 유병률 및 외병일수의 연간화

상수²⁾ = 법정임금(60%)의 일할 환산치임.

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범위는 사업자에 따라 서비스별 구

62)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출을 위한 분만급여 수령시점의 월보수액을 의미함.

체적인 감면율과 적용범위가 다르다. 즉 교통요금은 10%~무료, 통신요금은 30%~무료, 그리고 관람요금은 50%~무료이다. 이와 같이 교통·통신요금의 경우 일정한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적거나 1회 이용의 단가가 낮을수록 감액범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19〉 교통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제도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교통 요금	철도요금	· KTX · 무궁화호(30%) · 통일호(50%) · 전철(무료)	· KTX ·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50%) · 전철(무료)	1년 6매 무료제공 (무궁화호 이하 이용)
	도시철도 (지하철·전철)	무료	무료	무료
	국내선 항공료	10%	- 등록 장애인, 동행보호자 1인 50%(1~3급)	일반유공자 30% 상이군경, 동행보호자 1인 50%(1~4급)
	고속도로 통행료	-	50%	1~5급: 면제 6급: 50% 승합, 화물차: 50%
통신 요금	시내외 전화요금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통화료(50%) · 시외통화료(월 3만원 사용 한도에서 50%) · 114안내요금(100%) · 전화회선으로 PC통신 이용시 동일 할인율 적용	· 시내외 통화료 50%
	이동통신 요금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이동전화(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및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기본요금의 20%)	· 이동전화(기본요금의 30%)

주: '-'표는 제도 없음.

취약계층 교통·입장요금 감면의 추계방법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철도청, 문화재청 등의 협조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각 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추계하였다.

〈표 3-20〉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구분	제 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민간기업	교 통	국내선항공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실태조사
		지하철	코레일공항철도, 서울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경전철	용인경전철	
	통 신	시내·외 전화요금	KT, 하나로, 데이콤, 온세통신	실태조사 ¹⁾
		이동통신	SK텔레콤, KT, LG텔레콤	실태조사 ¹⁾
		케이블방송수신료	씨엔엠, 제주방송, 남인천방송, CJ헬로비전, 현대HCN, 금강방송, 서경방송, 제이씨엔을산, 푸른방송, 충북방송	실태조사

주: 1)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

다. 시장부문의 자동차책임보험

시장부문 사회복지자원에는 개별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한 사보험을 통해 이전된 보험금 총액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시장부문의 사보험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것 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었고, 가구간 재분배적 성격을 갖기 보다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비사회적인 지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불의의 사망·상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Adema, 2001),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금 지출과 만기도래에 의한 저축성 보험금 지출의 성격을 분리해 내면 사회복지 자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⁶³⁾.

시장부문의 법정민간지출로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치료비로 제한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누구에게나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민간회사가 운영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계는 보험개발원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과실상계 전 결정금액으로 집계한다. 다만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치료비와 보험회사가 향후의 의료비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불하는 ‘향

63) OECD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사망, 장애, 의료 서비스, 은퇴와 같은 지급금에서 사회적인 성격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자발적인 민간부문에서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정책이 대부분 모기지에 포함되며, 국가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SOCX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Adema and Ladaique, 2009).

후치료비'는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비용이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보상제도를 벗어나거나 민사상 조기 합의수단으로 이용되며 실제 향후 치료비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기업부문은 법정외복리비와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제3섹터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기업, 공동체, 민간모금기관 및 기부금품모집기관의 후원금 및 모금의 배분액으로 구성된다.

가. 기업의 비법정복지

기업의 법정 외 복리비는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용, 식사비용, 보육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이의 추계를 위해서 먼저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1인당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법정외복리비의 전체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

기업의 비법정복지는 사업내용에 따라 가족과 보건의료, 기타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부문에 포함되는 기업의 비법정복지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외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용구산업현황을 활용하고 있다(정형선 외, 2011).

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현금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시설지원 등) 등 다양한 기업의 자산과 핵심역량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및 투자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확대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

회공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초기에는 기업들이 단순한 기부의 수준에 머무르는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의 참여 방법 및 활동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직접 참여라든지, NGO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와 같이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높이 고자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원 분야 또한 장학사업에 치중하던 초기와는 달리 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환경보호, 국제교류, 긴급재난 등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미술관, 박물관, 문화 공연 등을 지원하는 메세나(Mecenat) 활동까지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다각화되어 사회공헌을 비롯한 인권, 노동, 환경 등 전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단순히 시혜적 차원으로 사회공헌에 접근하기 보다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이 증가추세에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의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에도 반영되어 사회공헌 평가지표 개발 및 환경적, 사회적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NGO 등에 대한 사회복지목적성의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건영역과 기타 영역에 포함된다.

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회복지시설⁶⁴⁾은 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정부 재원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주된 재원부담주체는 정

64)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사회복지시설과 종교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부지만 최근 민간후원금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정부재원은 이미 정부의 일반지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만 추계 대상에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2010년도까지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지자체의 보고자료 등 행정자료가 잘 정비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해 추계하였다.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수는 총 10,648개로 시설종류별 분포를 보면 아동시설이 38.7%, 노인시설 29.1%, 장애인시설 20.4%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2%, 서울 10.2%, 전남 8.7%의 순을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품 총 모금액은 4,529억 원, 배분액은 4,367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21〉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3년)

(단위: 개소)

지역	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가족	일반 사회	자활	노숙인	저소득
강원	555	216	95	182	21	10	12	2	6	11
경기	1,934	470	452	784	51	43	77	24	15	18
경남	713	247	122	261	27	18	18	10	4	6
경북	701	245	151	241	10	16	20	6	2	10
광주	505	79	70	304	13	13	17	6	1	2
대구	491	139	89	204	12	10	25	2	6	4
대전	391	85	99	152	13	11	19	4	8	-
부산	638	161	117	241	22	16	54	7	12	8
서울	1,084	218	396	344	14	28	33	-	42	9
세종	37	16	6	10	-	1	2	1	1	-
울산	215	63	64	66	6	6	4	1	1	4
인천	520	164	106	163	15	19	19	5	7	22
전남	923	335	79	413	32	18	18	5	7	16
전북	758	278	95	326	10	16	25	5	2	1
제주	244	76	54	79	8	11	9	2	3	2
충남	465	128	70	210	20	5	23	6	1	2
충북	474	176	106	143	8	15	9	5	5	7
계	10,648	3,096	2,171	4,123	282	256	384	91	123	122

주: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등은 저소득에 포함되었고 '보건영역'은 OECD Health Database의 수치를 원용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에 해당하는 정신보건시설(275개소)과 결핵한센시설(5개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표 3-22〉 사회복지시설 모금액 및 배분액(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모금액	배분액
계	452,927	436,66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 대상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등장은 IMF 이후 지속된 경제침체 속에서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적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사회복지재단과 민간기부금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다양한 재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의 일반지출로 분류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의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조달되는 경우는 자발적민간부문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추계는 해마다 발간되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마. 공동체부문의 공제회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복지자원은 특정집단의 공제급여가 포함된다. 공제회는 특정한 지역집단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지역집단이므로 직업복지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복지와 구별되고, 또 개별적 시장계약의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장과 유사하나 가입자의 범위가 특정집단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따라서 공제회는 그 성격상 기업부문이나 시장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특정 지역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과 일정부분 이윤을 추구하여 가입자에게 배당한다는 면에서 제3섹터나 비영리부문의 특성과도 상이하다. 결국 공제회의 급여는 공동체 영역을 제공주체로 보아야 한다(고경환 외, 2011: 131).

공제회의 급여는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급여가 제공된다. 그러나 공제회의 급여가 재분배적 성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시장계약에 근거하는 것인지는 다양한 지역집단 공제회마다, 또한 하나의 공제회 내에서의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계에 포함하는 공제회의 급여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공제회 불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급여수령시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자발적 민간급여로 제한한다. 다만, 공제회의 성격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공제회의 성격이 회원의 상호부조에 중점이 있는 경우와 정부가 특정업종 및 업체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정책성인 것과 분류했다. 이에 따라 추계에 포함되는 공제회 목록과 추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3〉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성 격	공 제 회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 내용
상호 부조 (8)	군인공제회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대한소방공제회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경찰공제회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POBA행정공제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경기도 사회복지직 종사자에 대한 상호부조, 후생복지관련 급여
	교정공제회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호공제사업 관련 급여
정책성 (4)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에 대한 상호부조, 복지증진, 노후생활안정 급여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예방

주: 1) 공제회 성격 중 유사보험(새마을공제, 수협공제, 신협공제 등)과 보증·손해공제(의료배상공제,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제외함.

2) 지난 1981년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협공제회는 2011년 4월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제회를 설립하고, 상호공제사업과 의료배상공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2013.11월 보건복지부 법인설립인가.

자료: 매일경제(2013.6.20); 각 공제회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조사결과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24〉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단위: 백만원)

성 격	공제회	합 계
계		263,088
상호부조	대한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7)	184,839
정책성	노란우산공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3)	78,249

〈표 3-25〉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단위: 백만원)

성 격	공제회	계	SOCX분류
계		263,088	-
노령퇴직급여	대한소방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177,384	노령
유족급여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정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5,730	유족
상해, 상병급여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교정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709	근로무능력
결혼·출산보조금, 보육시설 내 사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5,757	가족
주택재해부조금, 종사자후생복지, 재해	한국교직원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63,508	기타

바. 모금기관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기관

자발적 민간모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책 영역별 지출금액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모금기관과 기부금품 모집등록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본 조사의 대상은 정부가 승인한 전국의 모금기관과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모금기관과 기부금 단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그리고 기부금품모집등록기관이다. 각 민간모금단체(기관)의 개념과 관련법은 〈표 3-26〉과 같다.

〈표 3-26〉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기관유형	개 념	근 거 법	관리주체	기관 예시
전문/법정/특례 지정기부금 단체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 하며 주무관청(기획재정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영리법인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 기 획재정부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여성재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 정요건을 갖춘 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5호	행 정 자 치 부, 기 획재정부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등
기부금품 모집기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 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하는 기관	기부금품모집법	행정자치부	월드비전,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 어린이재단, 전국재 해구조협회, 한국여성재단 등

자료: 행정자치부(2012. 1),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조사대상 기관(모집단) 764개소의 모금기관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가 592개(77.5%)로 가장 많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126개(16.5%)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기관이 46개(6.0%) 로 나타났다. 이상의 민간 모금기관 및 기부금모집등록단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27〉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2013년말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유 형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품모집기관
계	764	592	126	46
비율	100.0	77.5	16.5	6.0

주: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전국민간모금기관이 838개소였으나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기부금 단체 50개소, 미등록기관 7개소, 실제 모금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 6개소, 중복 5개소, 기타 전화불통 4개소, 폐쇄 2개소가 조사에서 제외됨.

자료: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2) 조사내용

민간모금기관(단체)실태조사를 위해 개발된 조사표는 크게 일반사항과 수입조사, 그 리고 지출조사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사항(I. 일반사 항)에서는 민간모금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인 기관명과

설립일자, 모집등록기간, 기부금모집 내용, 종사자수, 전담부서와 인력 수, 후원자관리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민간모금기관(단체) 세입조사(Ⅱ. 세입조사표)는 크게 정부지원금과 법인 전입금, 모금 및 후원금 내역, 잡수익 그리고 이월금 등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재원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금은 국비, 지방비, 복권기금 등으로 구분되며, 법인전입금은 법인지원금, (기독교)예당의 지원금과 (천주교 등)교구의 지원금, (불교 등)종단본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었다. 모금 및 후원금은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잡수익은 불용품의 매각대나 예금이자의 수입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모금기관(단체)의 지출(지출조사표, Ⅲ)은 시설 운영비와 복지프로그램 사업비, 타기관 후원, 적립금, 그리고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기타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사업비는 노인, 유족, 장애, 보건의료, 가족, 주거,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지출되는 금액이다.

3) 조사방법

본 조사는 우편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였으며, 사전 훈련된 전화조사원에 의해 3차로 조사되었다. 먼저 1차는 조사대상기관에 조사표를 배포하고 전화조사원이 각 민간모금기관(단체)에 조사표 도착확인 및 조사표 작성독려와 회송요청을 하였다. 다음으로 2차 조사는 조사표가 각 기관(단체)에 도착한 이후 작성시작부터 실시하였으며 조사표 작성독려와 작성의 질의와 응답, 그리고 회송요청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조사는 조사표 미회송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과 회송요청을 실시하였다. 응답 조사표의 회송은 대부분 전자메일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팩스와 우편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2014년 5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62일간 조사가 실시되었다.

4)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기관 764개소 중 응답완료 548개소, 부분조사 완료 75개소, 무응답 기관은 141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단의 조사응답율은 71.7%이다.

〈표 3-28〉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유 형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기관
조사기관(A)	764	592	126	46
응답기관(B)	548	434	78	36
조사표회수 (B/A*100)	71.7	73.3	61.9	78.3

주: 완료조사 548개소, 부분완료조사 75개소

5) 추계방법

민간모금기관(단체)의 배분금액에 대한 추계는 조사완료 된 모금단체를 기준으로 다 음과 같이 산출한다. 조사 완료기관의 모금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를 선행연구 고찰과 본 조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후 회귀대체를 통해 조사미완 및 거부기관의 값 들을 산출한다. 회귀모형은 완료응답기관 자료로부터 도출하였다. 이때 안정된 회귀모 형을 도출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Y = \beta_0 + \beta_1 X_1 + \cdots + \beta_r X_r + e$$

Y : 모금 및 후원 금액(천원)

X_i : r개의 설명변수

β_i : 회귀계수

e : 오차항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귀모델의 이분산성을 Breusch-Pagan test를 통해서 검증 한 결과, 회귀모델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회귀모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추정된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ln \hat{Y} = 11.16 + 0.39 \times \ln X_1 + 1.09 \times \ln X_2$$

\hat{Y} = 모금 및 후원 추정금액(천원)

X_1 = 종사자 수

X_2 = 모금 전담인력 수

$$R^2 = 0.314$$

6) 분석결과

응답기관과 부분응답 기관의 회귀대체, 무응답기관의 비례대체를 반영한 민간모금액의 합계는 2조 820억원으로 나타났다.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재원 활용을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 기관후원으로 지출된 비중이 71.1%로 나타나고 있어 1조 4,803억원이 배분된 것으로 추계된다.

〈표 3-29〉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재원 배분 구성 비중

(단위: %)

전체	운영비	사업비	기관후원	적립금	이월금	예비비	기타
100.0	4.2	66.3	0.6	3.6	19.8	0.1	5.4

주: 분석대상은 521개의 민간모금기관으로서, 조사된 548개 민간모금기관 중 2013.1.1.~12.31. 동안 모금 및 후원금내역과 개인회비가 0인 27개의 기관이 제외되었다.

민간모금액이 배분되는 전체 7개 영역 중 '비해당'을 제외한 6개 영역별 구성비중으로 배분하면 8,914억원으로 분석된다.

〈표 3-30〉 민간모금기관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단위: %)

전체	노인	유족	장애	가족 ¹⁾	주거	기타	비해당 ²⁾
100.0	5.5	1.3	3.3	28.8	1.3	23.8	36.0

주: 1) 청소년·아동·한부모 포함

2) 비해당은 보건 4.1%, 해외 26.9%, 북한 0.7%, 홍보·연구 등 4.2%로 구성됨.

〈표 3-31〉 민간모금단체(기관)의 복지영역 후원금 규모추계

(단위: 백만원)

전체	노인	유족	장애	가족	주거	기타
947,366	81,414	19,243	48,849	426,315	19,243	352,302

주: 참고로 민간모금단체(기관) 후원금 중 보건의로 60,691백만원, 해외 398,190백만원, 북한 10,362백만원, 홍보·연구 등 63,638

4. 순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 조세부담과 조세감면에 대한 데이터를 집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세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 사회보험료로 구성되어 다소 체계화된 반면에 조세혜택은 관세감면, 자동차세 면세, 재산세 등 감면, 근로소득 공제, 법인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표 3-32〉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분 류	종 류	대 상	자 료 원
조세 부담	1. 직접세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 ¹⁾ /기업) 질병휴가급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통계청, 고용노동부
	2. 간접세	이전소득자의 가계지출	통계청
	3. 사회보험료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법정민간급여수급자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조세 혜택	1. 관세감면	장애인용 의료용구 등의 수입물품 감면	관세청
	2. 자동차세면세	장애인용 자동차	국세청
		· 구입단계 · 등록 및 보유단계	행정자치부
	3. 재산세 등감면	비영리법인	행정자치부
	4. 근로소득공제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기부금 등 공제	국세청 기획재정부
	5. 법인세감면	사회복지 관련 기부 기업	국세청 기획재정부
	6. 근로장려세제 ²⁾ (EITC)	저소득층	국세청

주: 1) 2007년도까지는 과세, 2008년부터 비과세

2) EITC는 제도측면에서 TBSPs로 분류 하지만 재원의 특성이 일반 세출과 같아 통계를 공공복지지출에 포함.

가. 조세부담

조세부담 추계는 세수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아래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접세(direct tax)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이전소득에 부과된 직접세액 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선택으로 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항목별세율’(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구별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사용한다. 이 때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⁶⁵⁾’은 ‘결정세액’을 공제 전의 ‘근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text{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 = \text{이전소득금액} \times \text{실효세율}^*$$

$$* \text{ 실효세율} = \frac{\text{결정세액}}{\text{근로자연간소득(공제전)}}$$

현재 소득세법(제12조)에서 이전소득 중 일부 연금 소득과 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급여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며,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노령연금은 연금소득,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65) OECD Taxing Wage(2008-2009)에서는 가구유형별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있음. 4가지 가구유형은 미혼가구, 홀벌이-무자녀, 홀벌이-두 자녀, 맞벌이-두 자녀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구형태별 자료가 없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함.

〈표 3-33〉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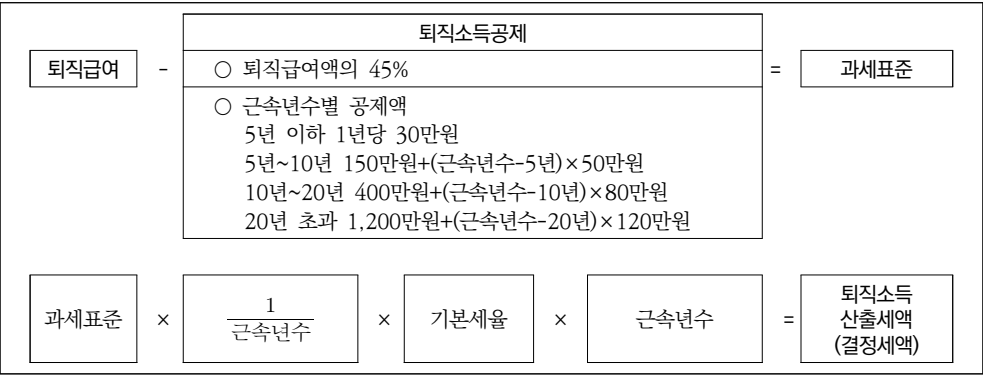
구 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 용 례
공적 연금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02.1.1.이후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
사적 연금 소득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로 지급받는 소득	세액공제(기존의 소득공제 포함) 받은 금액 또는 이연퇴직 소득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 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3.

한편 법정퇴직금과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4조)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산전후휴가급여는 2008년부터 비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 법정퇴직금 과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2009년 기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로 곱한 세액으로 과세
 - 산전후휴가급여 및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2010년 기준)의 세율 적용

〔그림 3-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2) 간접세(Indirect Tax)

간접세를 추계하는 방법은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와 거시자료를 활용한 추계가 있다. 먼저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가구(농가 및 어가가구는 제외), 1인가구의 지출항목이 비

교적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어 간접세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전소득자⁶⁶⁾의 사례수는 비교적 높지만 (전체조사가구의 47.6%, 2010) 간접세율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소비품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미시자료의 수집 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OECD는 조세자료와 국민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간접세율을 추계⁶⁷⁾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간접세율이 추계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전소득자와 일반소득자간의 소비 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권하고 있다.

평균간접세율 산출을 위해서 본 연구는 일반소비세와 특정소비세를 활용하였다. 먼저 ‘일반소비세’(5110)에는 부가가치세, ‘특정소비세’(5121)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이들에 대한 부가세(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여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2013)은 Minim 10.23%, Medium 12.58%, 그리고 Maxim 14.66%로 나타났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자의 소비범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Minim방식을 선택하였다.

$$\begin{aligned}\text{Minim} &= (\text{일반소비세} + \text{국내소비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ediu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axi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최종소비지출}\end{aligned}$$

본 연구에서 실제로 추계하고자 하는 간접세액의 세율은 <표 3-34>와 같이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세율은 정부부문(서비스부문 비포함⁶⁸⁾)의 현금급여, 사회보험 현금급여, 법정민간부문의 현금급여, 자발적민간부문의 현금급여 그리고 조세감면이다. 이 때 간접세액을 추계함에 있어 현금급여는 포함하고 현물급여는 제외하였다.

66) 이전소득자는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사회수혜금·사회적현물이전·세금환급금의 수급자를 포함

67) OECD는 간접세율을 보다 쉽게 추계하기 위해 각 회원국별 조세자료(OECD Revenue Statistics)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기초로 목시적 평균 간접세율(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68)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종교 및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의료보건의 용역은 면세하고 있음.

〈표 3-34〉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부 문	추 계 범 위
정부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생계보호, 국가보훈의 보상금 등): 포함 · 공공부조의 현물급여(의료급여, 교육보호): 제외 · 국가공급의 사회서비스: 제외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액: 제외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급여(공적연금,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포함 · 현물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제외
법정민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급여(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유급질병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포함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감면액: 제외
자발적민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급여(기업의 고용연계급여 등): 포함 · 현물급여(종교 및 자선단체의 이전지출(현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및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민간의료비 등): 제외
조세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지방세 및 지방조례),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금액(구입단가), 근로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포함

3) 사회보험료(insurance premium)

사회보험료는 연금수령금액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근로소득자의 산전후휴가급여와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먼저 연금수령자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은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소득 등의 반영으로 과대 추계되어 본 연구에서 이 보험료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이를 포함한 경우 과대추계가 제외하였을 때 과소추계보다 참값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수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와 질병휴가기간 동안 유급급여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를 부담한다. 이의 추계는 근로자부담의 3대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평균), 고용보험료율)의 합을 반영하였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3-35〉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3)

(단위: %)

종 류		근로자	사업주	합 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2.95	2.95	5.89
고용 보험	실업급여	0.65	0.65	1.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¹⁾	-	0.25~0.85	0.25~0.85
산재보험		-	평균 1.7 - 최고 34(석탄광업) - 최저 0.6(금융 및 보험업 등)	0.6~34

주: 1) 사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연도별_보험료율_및_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_변동현황』, 2013,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14

나. 조세감면

국세 부문의 조세감면은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추계한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2). 지방세 부문의 조세감면은 지방세통계연감에서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발표된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참고하였다. 각각의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계에 적용된 내역은 〈표 3-36〉과 같다. 참고로 2012년도 OECD와 검토에 의해 조세감면의 일부 항목들을 제외 또는 추가하였다. 먼저 제외 내역을 보면 재분배 기능이 약한 개인연금저축비과세·소득공제⁶⁹⁾, 사회적 목적이 약하고 SOCX 범주와 거리가 다소 있는 교육비·보험료 특별공제, 그리고 법인세 산출에 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였다. 반면 부양가족에 대한 조세지원 성격이 높은 부양가족공제가 추가되었다.

69) OECD는 Country Tables에서 각 국가의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나 소득공제’에 대해 Memorandum item에 기록, 추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표 3-36〉 추계를 위한 조세지출과 비과세감면 내역

자원	분야	항 목	조세지출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
국세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2,4,5호 물품)
		보육가족 및 여성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정곤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출생·입양에 대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부양가족공제 감면
			한부모 추가공제(2013년 신설)
		노인·청소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정곤란)
		노 동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지급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산재보험)
		사회복지일반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보 건	보건의료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회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정곤란)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의료비 특별공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득세, 자동차세)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휴먼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조례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취득세, 자동차세)
			장애인 소유자동차(취득세, 자동차세)
			음성나환자집단촌지원
			종교단체의료업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4),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p.28~137.

행정자치부, 2014 지방세통계연감.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 OECD Education database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을 통해 한국의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가 생산되고 이를 재원별로, 학교급별로 분류한 통계가 OECD에 제출되고 있다.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는 유아교육비 지원만 추출하여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Family(가족, Category No. 5)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OECD는 최근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매뉴얼 개정판(2011)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료의 지출 추계의 정교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para. 76. 유아교육 및 보육(ECEC)서비스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국의 통계와 Eurostat, 그리고 (OECD/Eurostat)에서 (미취학)교육에 대한 연간 자료수집으로 이루어져있다. 보육 지원에 대한 비교의 수준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의무취학연령에 국가간 차이가 있어 ECEC의 연령기준을 5세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국가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7세에 이루어지는 반면 미취학학교교육(pre-primary schooling)의 참석은 그 전년에 이루어진다. 이 때 이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 수의 유용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추출된 추정치(estimate)를 이용). 이와 유사하게 아이들이 5세에 학교에 들어가는(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의 미취학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primary school(초등학교)에 등록된 5세 아동의 지출을 더함으로써 산정된다.

para.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종 보육서비스의 재원조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데이터의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캐나다처럼 꼬리표가 붙지 않는 일반적인 정액교부금(non-earmarked block-grant)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서로 다른 자금흐름(funding stream)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스위스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지출하는 내역이 정부 당국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 OECD(201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아교육비 지출을 조정할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본 연구의 추계에서 사용된 방법은 OECD 교육데이터베이스의 Child care(pre-primary education ISCED-0) 항목을 ‘조정전 교육비’라고 할 때 조정금액을 감한 ‘조정 후 교육비’를 추계에 활용하였다. 이는 당초 OECD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국제비교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령 구분을 만 5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무취학연령 역시 8세(만6세)로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하다. 문제는 의무취학연령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지출을 국제비교의 수행을 위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만 6세와 만 7세가 유치원에 다니고 유치원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해당 부분은 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의 pre-primary education(ISCED-0)에서 6세와 7세분을 감한 부분을 ‘조정 후 교육비(SOCX adjusted Child care(pre-primary education))’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조정후교육비} = \text{조정전 교육비} - \text{조정금액}$$

* 조정전 교육비는 Education database의 pre-primary education(ISCED-0)

* 조정금액은 만 6세와 만 7세의 교육비

만 6세의 교육비는 6세/전체*100

만 7세의 교육비는 7세/전체*100

그러나 최근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이러한 조정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 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출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또 다른 방식을 통해 추계를 실시한다. 이는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출통계를 활용하여 추계하는 방식으로 OECD 작성기준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출을 일관된 방식으로 추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나타난 예산과 결산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비 학비 지원사업과 보육료지원사업의 예결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정전 유아교육비 지원액 및 보육료 지원액의 합계에 해당한다. 그런 다음 만 5세 초과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액과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해야 한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조정금액에 해당한다.

조정금액은 원칙적으로 만 6세와 만 7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과 유아교육비 지원액 자체를 제외해야 하지만, 실제로 해당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관계로 1인당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출액과 만 6세이상 아동 수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의무취학연령이 아니지만 조기입학한 아동만큼 지출에 포함해야 하는 관계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5세 아동에 대한 지출을 더할 필요가 있다.

〈표 3-37〉 2013년 기준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출

(단위: 천원)

코드 및 사업	예결산	재 원	금 액
5.2.1.2.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계		5,248,085,370
		국비	2,592,974,163
		지방비	2,655,111,207
	결산계		6,064,277,020
		국비	3,409,165,813
		지방비	2,655,111,207
5.2.1.3.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계		4,108,996,691
		국비	4,108,996,691
		지방비	
	결산계		4,108,996,691
		국비	4,108,996,691
		지방비	-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부자료

조정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만 6세 이상 아동수는 영유아보육료지원과 유아교육비 지원에서 모두 배제되는 반면 조기입학 아동 수는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표 3-38〉 조정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변수

(단위: 명)

코드 및 사업	적용배제(-)	추가적용(+)
5.2.1.2. 영유아보육료지원	만 6세이상 12,030명	
5.2.1.3. 유아교육비 지원	만 6세이상 955명	조기입학 3,194명

주: 2013년 데이터미공개.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1)과 같이 보육료 지원금액에서 만 6세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금액을 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데이터수집의 한계로 (2)와 같이 1인당 보육료지출액을 구하여 만 6세이상 보육료지원아동수를 곱한 부분을 제하는 것이 차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자료의 한계로 (3)과 1인당 보육료지출액과 만 6세이상 아동수의 곱을 제하여 추정하였다.

- | | |
|---------------------------------|-----|
| 보육료지원금액-만6세이상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금액 | (1) |
| 보육료지원금액-1인당보육료지출액*만6세이상보육료지원아동수 | (2) |
| 보육료지원금액-1인당보육료지출액*만6세이상아동수 | (3) |

이 때, 1인당보육료 지출액은 보육료지원액(총계)을 보육료지원 아동수(전체)로 나눈 것임.

다음으로 유아교육비 역시 유치원 학비지원금액 중 만 6세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액을 제외하고 조기입학아동에 대한 지출을 추가해야 한다. 데이터의 한계로 유치원학비지원금액에서 1인당 지원액과 만6세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액(추정)의 곱을 빼고, 1인당지원액과 조기입학아동수의 곱을 더하는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방법은 유치원학비지원금액에서 1인당 지원액과 만 6세 이상 아동 수를 제외하고 1인당 지원액에 조기입학아동수의 곱을 더하는 것이다.

- | | |
|---|-----|
| 유치원학비지원금액-만6세이상아동지원액+조기입학아동에 대한 지출액(추정) | (1) |
| 유치원학비지원금액 - 1인당지원액*만6세이상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1인당지원액*조기입학아동수 | (2) |
| 유치원학비지원금액-1인당지원액*만6세이상아동수
+1인당지원액*조기입학아동수 | (3) |

이 때, 1인당 지원액은 유치원학비지원액을 유치원학비지원 아동 수로 나눈 것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생산된 지출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615억원으로 실제 영유아보육료지출액 2,639억원보다 0.89% 낮아진 수치이다. 또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지출액 5.0억원보다 0.36% 증가한 5.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추계결과에서는 OECD 매뉴얼에 따라 전자에서 보여준 OECD 통계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추계방법을 통해 유아교육비 지출을 추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잠정치임을 밝힌다.

2. OECD Health database

한국의 보건지출은 다음과 같은 자료원을 통해 보건지출을 추계한다. 정부지출 중 개인의료비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통계연보와 보건복지백서 등 보충자료를 이용하고, 집합보건의료비는 보건복지부 예·결산자료와 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자료, 보건소 집행내역조사를 통해 추계하며, 자본형성은 정부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용구산업현황 자료를 참조한다(정형선 외, 2011).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추계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예산을 토대로 분야(보건), 부문(보건의료), 프로그램(건강보험제도 운영, 공공보건의료확충, 구강보건사업지원, 국민건강생활실천, 보건산업육성,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소록도병원, 암 및 희귀질환지원)의 해당항목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예방/공중보건부문의 추계를 위해서 보건소에 대한 지출내역을 조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에 기반을 둔 예방/공중보건 계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자료와 연계하여 학생건강검진 규모를 추산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추계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조사하고,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역을 추출한다. 이 외에 기타 민간유료요양 및 유료전문요양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필요한 항목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에 지출되는 개인의료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보훈처, 국방부와 경찰, 법무부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재원(공공/민간)별로, 부문별로(정부, 사회보험, 민간보험, 가계, 비영리 및 기업체, 해외부문), 대상별로(개인/집합), 기능별로(입원·외래·장기요양·보조의료·의료재화, 예방/공보, 보건행정, 해외부문, 자본형성) OECD의 보건계정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된다. 다만 재원부문 중 해외부문과 기능분류 중 자본형성은 보건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2] Health database 기본자료

		공공재원			민간재원		해외 부문
		재원별 공급자별	정부재원	사회보장기금	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비영리 및 기업체	
개인보건 의료비	입원 외래 장기요양 보조의료 의료재화		의료급여통계	-건강보험통계연보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산재보험통계연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실손형 민영보험	경제총조사 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근로자실태 조사보고서
	예방/공보		보건소집행내역 조사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검진결과분석			근로자건강진 단결과
집합보건 의료비	보건행정		보건복지부예산 결산자료	공단 및 심공형 경영공시 -산재의료원 손익계산서			
	해외부문					서비스무역세분류 통계	
자본형성			건설업통계 등				의료용구 산업 현황통계
			←→	←→	←→	←→	←→
			공급자별 (HP.1 to HP.9)	공급자별 (HP.1 to HP.9)	공급자별 (HP.1 to HP.9)	공급자별 (HP.1 to HP.9)	공급자별 (HP.1 to HP.9)

자료: 정형선(2013)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OECD Health database를 통해 공개 되고, 본 연구는 OECD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No. 4 Health(보건)영역에 반영하고 있다.

3. OECD LMP databas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에 국내 통계생산을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2011. 6. 30)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동법 제 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이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①항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의 운영을 규정하고, ②항에서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

전산망과 연계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의 집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3-3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p>제13조의 2(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p>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집적된 자료는 앞서 추계기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의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노동부는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의 분류체계에 맞게 재분류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한 자료를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적극적노동시장정책(No. 6, ALMP)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실업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통계와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고용보험통계를 참고하여 추계하였다.



제4장

추계결과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지출과 사회보험지출, 공기업지출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지출은 공공부조와 사회보상,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지출은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하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상위정부에서 하위정부로 전달할 때 발생하는 중복계상을 제외한 순지출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성된다.

2013년 정부부문 지출은 51조 400억 원이다. 이 중 공공부조와 사회보상의 소계는 21조 9,670억 원이며 전체 정부지출의 43.0%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소계는 29조 750억 원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57.0%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서 정부지출은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분야 지출과 가족 분야 지출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추계범위 변경에 따라 지출의 감소도 소폭 나타났다.

사회서비스는 대상과 기능별로 구분되는데 가족은 15조 4,300억 원으로 30.2%, 적극적노동시장정책 5조 2,430억 원으로 10.3%, 보건 4조 9,460억 원으로 9.7%, 주거 1조 411억 원으로 2.8%, 노령은 1조 1,000억 원으로 2.2%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장기요양서비스가 보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34조 2,040억 원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67.0%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16조 8,380억 원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3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 일반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제도		항 목		2012	2013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운영지원 및 복지급여지원, 보육시설운영, 보육 및 행사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15,174	15,876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저소득, 기초생활보장, 노숙인, 재해구호 등)		618	453
		중앙정부 매칭사업(생계급여, 주거급여 [※] ,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 등)		3,244	3,434
		교육재정 매칭사업비(장애아교육지원, 방과후학교운영 등)		2,401	2,204
사회 서비스	노령	중앙정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보호지원, 장사시설설치 등	204	108
		지방자치단체	경로당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장사시설설치 등	885	992
	근로 무능력	중앙정부	장애수당,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등	297	242
		지방자치단체	장애수당,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인자녀학비 등	490	488
	가족	중앙정부	가정양육수당지원, 방과후돌봄, 보육돌봄서비스 등	6,541	9,625
		지방자치단체	아동시설기능보강, 가정위탁지원운영, 어린이집기능보강 등	4,237	5,805
	주택	중앙정부	공공임대주택건설비	1,022	1,178
		지방자치단체	공공임대주택지원 자체사업	208	233
	보건	중앙정부	복지부 등 관련 국비(집합보건의료)	2,936	2,918
		지방자치단체	복지부 등 관련 지방비(집합보건의료)	2,040	2,028
	ALMP	중앙정부	ALMP(공공고용서비스, 일자리 지원 및 창출, 고용 및 창업인센티브 등)	3,206	4,132
		지방자치단체	공공고용서비스, 일자리 지원 및 창출, 고용 및 창업인센티브 등	1,058	1,111
	기타	중앙정부	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문화바우처, 취약농가인력지원 등	81	125
		지방자치단체	여행, 체육, 문화바우처 등	72	90
계				44,715	51,040

주: 지방자치단체지출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와 자체재원을 포함한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타 사회정책영역(socx no. 9)'에 포함

〈표 4-2〉 분야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단위: 십억원)

분야	부문	사업 예시	2012	2013	%
일반공공행정 (010)	지방행정·재정지원	장애인체육관건립, 공립어린이집건립 등	125	90	0.2
공공질서 및 안전 (020)	법무 및 검찰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63	0.2
	재난관리	재해재난 긴급구호	0	0	
	소방방재청 연보	이재민 재해구호, 주택피해복구비	492	15	
외교·통일 (030)	통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등	91	90	0.2
문화 및 관광 (060)	문화예술	문화바우처 지원	34	50	0.1
	관광	취약계층복지관광(여행바우처)	7	10	
	체육	체육바우처 지원	11	15	
사회복지 (080)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등	4,691	4,768	77.8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아동시설기능보강, 장애인 지원 등	2,312	2,370	
	보육가족 및 여성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12,339	16,508	
	노인·청소년	기초노령연금, 노인관련기관지원, 청소년사회안전 망구축 등	5,382	5,668	
	노동	ALMP	4,264	5,243	
	보훈	보훈보상금, 수당 등	2,881	3,519	
	주택	임대주택지원 등	1,230	1,402	
	사회복지일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등	72	232	
보건 (090)	보건	의료급여, 집단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10,733	10,871	21.3
농림수산 (100)	농업·농촌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촌보육여건개선	34	56	0.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저소득층연탄보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4	50	0.1
교통 및 물류 (120)	해운·항만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18	0.0
미분류 ¹⁾	내부자료	고궁통입장료 감면	3	3	0.0
계			44,715	51,040	100.0

주: ()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분야코드임.

1) 현재 정부가 분류하지 않고 있어 추후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사회보험의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출규모는 2013년 28조 6,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증가율이 1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 공적연금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

연금구분	자료원	2012	2013		'12-'13 증감률
			구성비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1,551	13,113	45.8	13.5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10,399	10,807	37.8	3.9
사학연금	사학연금공단	1,914	2,091	7.3	9.3
군인연금	국방부	2,474	2,576	9.0	4.1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30	34	0.1	11.9
계		26,368	28,621	100.0	8.5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13;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13;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2013;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2013.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은 5조 8,510억 원, 산재보험은 3조 8,2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2012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93,394 명에서 2013년 90,507명으로 감소(2013년 고용통계연보 기준)하였고 산재보험은 2012년에 비해 장해급여의 연금과 일시금 지출이 감소하였다.

〈표 4-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

구분	관련 부처	프로그램	2012	2013		'12-'13 증감률
					구성비	
고용보험 ¹⁾	고용 노동부	구직급여, 상병급여, 재취업, 기타(미지급급여, 광 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3,677	3,884	66.4	5.6
		산전후휴가급여	242	235	4.0	-2.8
		육아휴직급여	358	420	7.2	17.5
		고용안정, 직업능력 ²⁾	1,133	1,313	22.4	3.0
		고용보험 계	5,409	5,851	100.0	8.2
산재보험		요양급여(약국자료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재활급여	3,884	3,822	100.0	-1.6

주: 1) 대부사업과 유사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임.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은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 실적(고용보험기금)의 합계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1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통계, 2013.

보건복지부 소관 건강보험은 40조 8,810억 원, 장기요양보험은 2조 4,350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보장성강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였고, 장기요양보험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대상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다.

〈표 4-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

보험구분	관련부처	프로그램	2012	2013	'12-'13 증감률
건강보험	국민건강 보험공단	입원, 외래, 의약품, 건강검진 등	38,300	40,881	6.7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전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2,126	2,435	14.6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공기업에 대한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을 조사한 결과 2013년 기준 7,42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하철의 교통통신요금 감면이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 수와 이용자의 증가, 지하철노선의 연장 등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감면제도가 보편적 복지로 제공되면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손실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⁷⁰⁾도 있다.

〈표 4-6〉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단위: 백만원, %)

제도구분		2012	2013		'12-'13 증감률
			구성비		
교통	철도('91.1)	230,418	240,102	32.3	4.2
	지하철('91.1), 경전철('11.9,'12.7)	413,781	435,499	58.7	5.2
	고속도로통행료('97.8)	45,072	44,845	6.0	-0.5
통신	TV 수신료('97.1)	22,410	21,900	3.0	-2.3
계		711,681	742,346	100.0	4.3

주: ()안은 최초 도입된 연도임.

공사형 공기업⁷¹⁾으로 의정부경전철(2012.7월), 부산-김해경전철(2011.9월) 개통됨.

자료: 내부자료, 각 년도.

70) 머니투데이, 부자노인전직 장관도 무임승차, '공짜 지하철'(2013/9/5)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그 기업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의 공기업이다. 공사형 공기업은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임.

71)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그 기업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의 공기업이다. 공사형 공기업은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임.

이러한 부문별 지출의 합으로 이루어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3년 기준 133조 3,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이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이 6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일반지출이 38.3%, 공기업 교통통신요금 감면이 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유형별로는 중앙정부가 25.6%, 지방자치단체가 12.6%로 중앙정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정부일반지출이 전년대비 14.1%, 사회보험이 전년대비 7.3%, 공기업이 전년 대비 4.3%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는 전년 대비 16.1%, 지방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연도	공공 사회복지지출(A) (A=a+b+c)	정부일반지출(a)			사회보험(b)	공기업(c) (교통·통신비 등 요금감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¹⁾		
2012	121,513	44,715	29,462	15,253	76,086	712
2013	133,393	51,040	34,203	16,837	81,610	742
	구성비	(100.0)	(38.3)	(25.6)	(61.2)	(0.6)
'12-'13 증감률	9.8	14.1	16.1	10.4	7.3	4.3

주: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분야 국고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와 법무부 포함)와 자체사업비(광역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포함

2013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33%로 전년 보다 0.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보건 41.2%로 가장 높고 노령 23.9%, 가족 12.1%, 근로무능력관련급여 6.5%, 기타사회정책영역 6.0%,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4.9%, 실업 2.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가족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적극적노동시장관련급여 21.5%, 노령 7.9%, 보건의 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공공사회복지지출¹⁾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2	구성비	2013	구성비	'12-'13 증감률
1. 노령	29,584	24.3	31,909	23.9	7.9
2. 유족	3,576	2.9	3,290	2.5	-8.0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8,461	7.0	8,700	6.5	2.8
4. 보건 ²⁾	51,909	42.7	54,937	41.2	5.8
5. 가족	11,680	9.6	16,086	12.1	37.7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397	4.4	6,556	4.9	21.5
7. 실업	3,677	3.0	3,884	2.9	5.6
8. 주거	-	-	-	-	-
9. 기타	7,229	5.9	8,033	6.0	11.1
계	121,513	100.0	133,393	100.0	9.8
GDP	1,377,457		1,429,445		3.8
GDP 대비 비율	8.82		9.33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한편 정부유형별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가족(28.1%), 보건(22.2%), 기타(18.4%), 적극적노동시장정책(12.1%), 노령(10.2%)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가족(34.5%), 보건(19.5%), 근로무능력(17.0%), 노령(1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계		일반정부			
		구성비	중앙정부(구성비)		지방자치단체(구성비)	
1. 노령	5,568	10.9	3,504	(10.2)	2,064	(12.3)
2. 유족	951	1.9	951	(2.8)	-	-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4,959	9.7	2,098	(6.1)	2,860	(17.0)
4. 보건	10,871	21.3	7,590	(22.2)	3,281	(19.5)
5. 가족	15,430	30.2	9,625	(28.1)	5,805	(34.5)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243	10.3	4,132	(12.1)	1,111	(6.6)
7. 실업	-	-	-	-	-	-
8. 주거	-	-	-	-	-	-
9. 기타	8,019	15.7	6,303	(18.4)	1,716	(10.2)
계	51,040	100.0	34,203	(100.0)	16,837	(100.0)
구성비		100.0		67.0		33.0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보험별 특성이 기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적연금에는 노령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건의, 고용보험은 가족, ALMP, 실업에, 산재보험은 근로무능력관련급여와 보건에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은 주로 노령과 근로무능력관련급여, 기타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정부지출을 제외한 사회보험지출과 공기업 지출을 중심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는 보건 53.5%, 노령 32.0%, 실업 4.7%, 근로무능력급여 4.5%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계		사회보험					공기업 (교통 통신 등 감면)
		구성비	공적 연금	건강 보험	장기 요양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노령	26,341	32.0	25,847	-	-	-	-	494
2. 유족	2,339	2.8	2,339	-	-	-	-	-
3. 근로무능력급여	3,741	4.5	434	-	-	-	3,072	235
4. 보건	44,066	53.5	-	40,881	2,435	-	750	-
5. 가족	656	0.8	-	-	-	655	-	0
6. ALMP	1,313	1.6	-	-	-	1,313	-	-
7. 실업	3,884	4.7	-	-	-	3,884	-	-
8. 주거	-	-	-	-	-	-	-	-
9. 기타	14	0.0	0	-	-	-	-	13
계	82,353	100.0	28,621	40,881	2,435	5,851	3,822	742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제도별로 살펴본 결과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은 기타 사회정책 영역(30.6%)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보건(27.0%), 노령(19.4%), 근로무능력 관련급여(1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가 대부분 기타 사회정책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사회서비스는 가족(51.8%), ALMP(17.6%), 보건(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 보건의료, 고용안정서비스 등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은 보건(54.0%)과 노령(31.7%)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공적연금 등 특수한 정책목적들을 가진 사회보험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1〉 제도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기능구분	계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지출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1. 노령	31,909	4,270	19.4	1,791	6.0	25,847	31.7
2. 유족	3,290	951	4.3	-	0.0	2,339	2.9
3. 근로무능력급여	8,700	4,092	18.6	1,101	3.7	3,506	4.3
4. 보건	54,937	5,925	27.0	4,946	16.6	44,066	54.0
5. 가족	16,086	0	0.0	15,430	51.8	655	0.8
6. ALMP	6,556	-	-	5,243	17.6	1,313	1.6
7. 실업	3,884	-	-	-	0.0	3,884	4.8
8. 주거	-	-	-	-	-	-	-
9. 기타	8,033	6,728	30.6	1,305	4.4	0	0.0
계	133,393	21,967	100.0	29,816	100.0	81,610	100.0
구성비	100.0	16.5		22.4		61.2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재원은 민간부문에서 조달되나 법에 근거한 의무지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자동차책임보험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비 요금 감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법정퇴직금의 추계결과 2012년 5.0조원, 2013년 4.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퇴직금은 전체 지출액(2012년 24.8조원, 2013년 21.1조원) 중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들(20%)의 금액만 추계에 포함된다.

〈표 4-12〉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

제도구분	연 도	금 액	법정퇴직자가 수령하는 금액 ¹⁾
법정퇴직금	2012	24,772	4,954
	2013	21,069	4,214
	증감률	-14.9	-14.9

주: 1) SOCX에 포함되는 법정퇴직금은 정년퇴직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전체 금액의 약 20%로 추계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2015/9/11/다운로드).

다음으로 퇴직연금의 추계결과 2012년 1.4조원, 2013년 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퇴직보험과 신탁의 효력 만료와 퇴직금제도의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것이다.

〈표 4-13〉 퇴직연금 지출규모

(단위: 개소, 천명, 십억원, %)

연도	전 사업장 수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	퇴직연금 가입자 수	금액(55세 이상 퇴직자)		
					연금	일시금
2012	1,519,850	203,488	4,377	1,419	4	1,415
2013	1,687,476	254,138	4,852	2,733	11	2,722
증감률	11.0	24.9	10.9	92.6	151.1	92.4

주: 퇴직연금 지출규모는 연도별 적립금 누계에서 전년도 적립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계됨.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퇴직연금통계(2014/10/1/ 다운로드)

자동차책임보험금의 추계결과 2012년 1.3조원, 2013년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책임보험금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형선 외, 2013).

기업이 부담하는 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산전후휴직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경향도 있지만 고용불안정에 따른 휴가 미사용의 이유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2013년 산전후휴가 급여는 701십억원으로 전년(718십억원)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단위: 명, 십억원, %)

연도	수급자수	금액
2012	146,321	718
2013	135,211	701
'12-'13 증감률	-7.6	-2.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에서 재가공(2014.5.20.공문)

유급질병휴가급여의 추계결과 2012년 1.2조원에서 2013년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의 월평균정액급여는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상용근로자 수도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일, 원, 천명)

연도	유급질병휴가급여 (십억원)	연평균 외병일수 (일)	전산업 월평균 정액급여(원)	상용근로자수 (천명)
2012	1,212	3.2	2,104,762	8,145
2013	1,277	3.4	2,173,189	8,212
'12-'13 증감률(%)	5.4	6.3	3.3	0.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고서(보건부문)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 민간부문의 교통·통신비 감면에 대한 추계결과 2013년 기준 0.6조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통부문의 지하철과 공항철도에서 금액의 규모는 작지만 전년대비 10.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항철도의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 개통(2010.12.29)과 도시철도 9호선의 증편 운행(2011.10)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국내항공요금은 1.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통신요금도 전년대비 4.8% 감소하였다.

〈표 4-16〉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단위: 십억원, %)

제도구분		2012	2013	'12-'13 증감률
교통	국내항공요금('91.8)	13	13	1.8
	지하철('09.7, '11.10), 공항철도('07.3), 경전철('13.4)	19	21	10.4
통신	전화('89.7), 이동통신('96.6)	557	530	-4.8
	케이블TV 수신료('04.)	4	9	126.9
계		593	573	-3.2

주: () 는 최초 제도가 도입된 시기임.

이상과 같은 추계를 바탕으로 하여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결과 2013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0.6조원으로 전년(10.2조원)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능별·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4-17〉과 같다. 먼저 제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퇴직연금(2.7조원)과 법정퇴직금(4.2조원), 자동차책임보험금(1.1조원), 유급질병휴가급여(1.3조원), 산전후휴가급여(0.7조원), 교통통신요금 감면(0.6조원)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교통통신요금감면으로 구성된 노령부문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유급질병휴가급여와 교통통신

감면으로 구성된 근로무능력관련급여는 15.7%, 자동차책임보험금으로 구성된 보건부문이 10.3%로 나타나고, 산전후휴가급여로 구성된 가족부문이 6.6%, 저소득층 교통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된 기타 정책영역이 1.6% 순으로 나타난다.

〈표 4-17〉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2-2013년)

(단위: 십억원, %)

연도	정책영역구분	구성비	계	법정퇴직금 ¹⁾	퇴직연금	자동차 책임보험금	산전후 휴가급여	유급질병 휴가급여 ²⁾	교통통신 감면 ³⁾
2012			10,184	4,954	1,419	1,288	718	1,212	593
2013	노령	65.8	6,964	4,214	2,733	-	-	-	17
	근로무능력급여	15.7	1,659	-	-	-	-	1,277	382
	보건	10.3	1,093	-	-	1,093	-	-	-
	가족	6.6	701	-	-	-	701	-	0
	기타	1.6	174	-	-	-	-	-	174
	계	100.0	10,590	4,214	2,733	1,093	701	1,277	573
'12-'13 증감률			4.0	-14.9	92.6	-15.2	-2.4	5.4	-3.2

주: 1) 법정퇴직금 전체 금액(21,069십억원) 중 법정퇴직연령 비율(약 20%)을 적용한 수치임.

2) 산식: $Sickness\ Bene = \sum M_{ij} \times B_{ij} \times 26.0714^{\text{상수1)}} \times E_{ij} \times W_{ij} \times 0.02^{\text{상수2)}} \times 100$

이 때, $Sickness\ Bene$ = 질병휴가기간 동안 법정임금

M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유병률(%)

B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외병일수

E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수

W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월평균임금

상수1) 표본집단의 14일간 유병률 및 외병일수의 연간화

상수2) 법정임금(60%)의 일할 환산치임.

3) 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항공요금, 지하철, 공항철도, 전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2013 국세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건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 결과는 〈표 4-18〉과 같다. 2013년 사회복지지출은 144.0조원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133.4조원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0.6조원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131.7조원)대비 9.3%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3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07%(공공사회복지지출 9.33%,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0.74%의 합)로 전년(9.56%)대비 0.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 각각 92.3%, 7.7%에서 2013년 92.6%, 7.4%로 변화하였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연도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12	금 액	131,697	121,513	10,184
	GDP %	9.56	8.82	0.74
	구성비	100.0	92.3	7.7
2013	금 액	143,983	133,393	10,590
	GDP %	10.07	9.33	0.74
	구성비	100.0	92.6	7.4
'12-'13 증감률		9.3	9.8	4.0

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마찬가지로 보건영역(2012년 40.4%, 2013년 38.9%)과 노령영역(2012년 27.3%, 2013년 27.0%)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전년대비(2012~2013년간) 증감률을 살펴보면, 가족부문(35.4%), ALMP부문(21.5%), 기타부문(10.8%), 노령부문(8.1%)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반면, 유족부문(8.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사회복지지출¹⁾의 기능별 추계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2		2013		'12-'13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35,974	27.3	38,873	27.0	8.1
2. 유족	3,576	2.7	3,290	2.3	-8.0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10,068	7.6	10,359	7.2	2.9
4. 보건 ²⁾	53,197	40.4	56,029	38.9	5.3
5. 가족	12,399	9.4	16,787	11.7	35.4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397	4.1	6,556	4.6	21.5
7. 실업	3,677	2.8	3,884	2.7	5.6
8. 주거	-	-	-	-	-
9. 기타	7,410	5.6	8,206	5.7	10.8
계	131,697	100.0	143,983	100.0	9.3
GDP	1,377,457		1,429,445		3.8
GDP 대비 %	9.56		10.07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사회복지시설, 민간모금기관 등, 사회적 기업, 공동체)로 구성된다. 2013년 기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20.8조원으로 전년(20.5조원) 보다 1.4% 증가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부문 90.3%, 제3섹터 9.7%로 나타난다.

기업부문의 자발적민간부문 지출은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86.8%)와 사회공헌활동(2.9%), 기업의 법정 외 보건비(0.6%)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3섹터는 민간모금기관(4.6%), 비영리단체(2.9%), 사회복지시설(2.1%), 공동체(1.3%), 사회적기업(0.2%) 순으로 나타난다. 민간모금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13년도 민간모금기관이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한 금액은 전년(1,439십억원)에 비해 34.2% 감소한 947십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소 이유는 민간모금기관들이 모금재원을 전년도에 비해 차기이월금이나 적립금 등에 더 배분하거나(6%p), 국내복지 보다는 해외복지(10%p)에, 복지와 다소 거리가 먼 홍보·연구 등(3.2%p)에 더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부문과 제3섹터의 모금 및 후원금 전달로 인한 이중계산은 2013년 기준 266십억원으로 1.3%를 차지한다.

〈표 4-20〉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단위: 십억원, %)

부 문	구 분	2012		2013		'12-'13 증감률
			비율		비율	
계		20,523	100.0	20,806	100.0	1.4
제3섹터	소 계	2,474	12.1	2,015	9.7	-18.6
	민간모금기관	1,439	7.0	947	4.6	-34.2
	사회복지시설	384	1.9	437	2.1	13.6
	사회적 기업	23	0.1	35	0.2	55.5
	비영리단체	567	2.8	598	2.9	5.5
	공동체	299	1.5	263	1.3	-12.0
	이중계산 ¹⁾	- 239	-1.2	- 266	-1.3	11.6
기업	소 계	18,049	87.9	18,791	90.3	4.1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	17,246	84.0	18,064	86.8	4.7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682	3.3	598	2.9	-12.4
	기업의 법정외 보건비	120	0.6	129	0.6	7.7

주: 1) 민간모금기관 배분금액 중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지원된 부분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는 <표 4-21>과 같다. 2013년 기준 총사회복지지출은 164.8조원으로 전년(152.2조원)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 역시 11.53%로 전년(11.05%)대비 0.48%p가 증가하였다. 2013년 총사회복지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 8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2.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연도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지출	자발적민간지출
2012	금 액	152,219	121,513	10,184	20,523
	GDP 대비	11.05	8.82	0.74	1.49
	구성비	100.0	79.8	6.7	13.5
2013	금 액	164,789	133,393	10,590	20,806
	GDP 대비	11.53	9.33	0.74	1.46
	구성비	100.0	80.9	6.4	12.6
'12-'13 증감률		8.3	9.8	4.0	1.4

총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과 유사하게 노령영역(2013년, 23.8%)과 보건영역(2013년, 34.4%)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성항목별 사회복지지출을 보면 보건영역은 공공사회복지지출(2013년, 41.2%)에서, 노령영역은 사회복지지출(2013년, 27.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사회정책영역은 주로 정부의 일반지출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2013년, 6.0%)과 사회복지지출 비중(2013년, 5.7%)에 비해 총사회복지지출의 비중(2013년, 16.1%)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사회정책영역의 지출규모는 일반정부지출을 포함하는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자발적민간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총사회복지지출의 2012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노령영역에서 높은 증가율(가족 31.2%,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21.5%, 노령 7.1%)이 나타나는 반면, 유족(7.5%)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총사회복지지출¹⁾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2		2013		'12-'13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36,571	24.0	39,171	23.8	7.1
2. 유족	3,580	2.4	3,311	2.0	-7.5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10,211	6.7	10,493	6.4	2.8
4. 보건 ²⁾	53,884	35.4	56,757	34.4	5.3
5. 가족	13,796	9.1	18,105	11.0	31.2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397	3.5	6,556	4.0	21.5
7. 실업	3,677	2.4	3,884	2.4	5.6
8. 주거	-	-	-	-	-
9. 기타	25,104	16.5	26,513	16.1	5.6
총사회복지지출(십억)	152,219	100.0	164,789	100.0	8.3
GDP	1,377,457		1,429,445		3.8
GDP 대비 %	11.05		11.53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를 위해서는 이전소득자의 부담세율이 필요하다. 세율은 매크로 데이터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 할 수 있다. 먼저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은 2012년 4.73%, 2013년 4.90%로 추계되었다. 반면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은 201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추계는 매크로데이터와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직접세율이든 간접세율이든 마이크로 데이터분석 결과는 실제 조세부담 보다 낮아 참고로만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실효세율)을 활용하였다.

〈표 4-23〉 직접세율 추계결과

(단위: %)

구분	매크로데이터 ¹⁾			마이크로데이터 ²⁾
	2011	2012	2013	2010
직접세율	4.58	4.73	4.90	2.2

주: 1) 근로소득결정세액÷과세대상근로소득(급여총계에서 비과세소득, 과세미달자 제외)×100=직접세율

2) 이전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사업소득세와 경상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하여 추정

자료: 2013 국세통계연보.

다음으로 매크로데이터(국민계정, 2010년 기준)를 이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은 2012년 기준 최소 10.58%에서 최대 15.04%, 2013년 기준 최소 10.23%에서 최대 14.66%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 5.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자의 간접세 부담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매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최소세율을 활용하였다.

〈표 4-24〉 간접세율 추계결과

(단위: %)

구분	매크로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2011	2012	2013	2010
간접세율	Minim	10.17	10.58	10.23	5.1
	Maxim	14.81	15.04	14.66	

주: Minim=(5110 일반소비세 + 5121 국내소비세)/(민간소비+정부소비-공무원임금)×100

Maxim=(5000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국민계정의 민간최종소비지출×100

자료: OECD 조세통계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 Revenue Statistics(2015.6.30.다운로드); 한국은행 홈페이지(2015.6.30. 다운로드), 국민계정.

사회적 목적을 위한 조세혜택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세감면제도이다. 조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과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세 그리고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조세감면 지출규모는 8.1조원으로 2012년(7.9조원)에 비해 3.3% 증가하였다.

〈표 4-25〉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구분	2012	2013
계	7,863	8,119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489	488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¹⁾	137	142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단계 면세금액	388	312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세금액	17	15
근로소득 특별공제 등	6,831	7,162

주: 1) 감면대상의 일부제도가 지방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장애인소유자동차, 노인복지시설 등)

자료: 행정자치부, 『2014 지방세통계연감』; 국세청 내부자료, 2013; 관세청 내부자료, 2013;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각년도.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추계한 순사회복지지출 결과는 아래의 〈표 4-26〉과 같다. 2013년 순사회복지지출은 165.2조원으로 전년(152.6조원)대비 8.2% 증가하였다. 2013년 요소 G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은 12.83%로 전년(12.35%)대비 0.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구분	2012		2013		'12-'13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1. 총사회복지지출	152,219	100.0	164,789	100.0	8.3
2. 조세부담 ¹⁾	7,433	4.9	7,747	4.7	4.2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866	0.6	946	0.6	9.3
간접세	6,567	4.3	6,800	4.1	3.5
3. 조세혜택 ²⁾	7,863	5.2	8,119	4.9	3.3
순사회복지지출	152,649	100.3	165,161	100.2	8.2
(요소GDP 대비 비율)	12.35		12.83		

주: 1) 직접세는 기업복지의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부과된 소득세임(참고로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에는 소득세가 면세임). 간접세 추계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현금급여, 기업복지 중 현금급여(법정 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TBSPs의 평균간접세율로 추계함.

2) 근로소득 공제제도에 따른 감세,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액,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임. 단,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함.



제5장

국제비교

본 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고령화율, 빈곤율과 지니계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성과 등을 국제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OECD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전후 경제성장의 발전과 더불어 복지국가를 성립하였으나 1990년대 석유파동과 주가폭락, 2000년 들어 지속된 저성장·경기침체의 늪 속에서 일부 국가는 복지의 축소 혹은 조정을 맞이하였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장과 쇠퇴를 경험한 것이다.

각국은 대내외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어떤 국가에서는 3차 교육의 강화를 통해 고용수준과 소득을 높이는 전략을 수행하는 가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이원화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다차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을 앞두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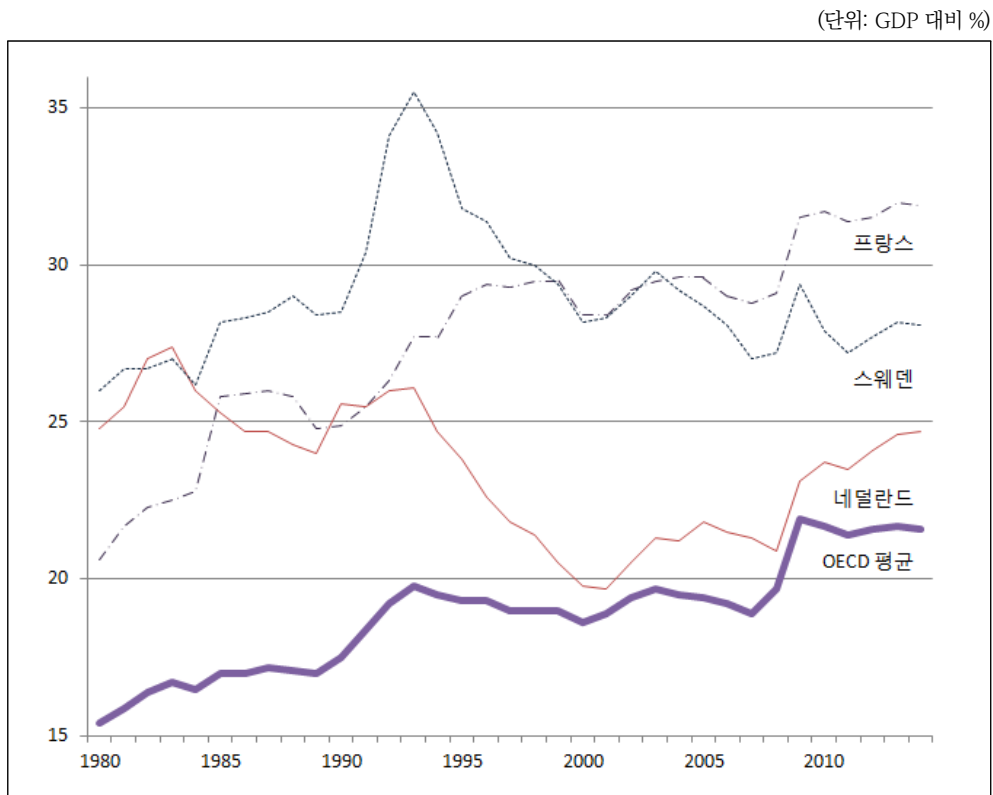
이러한 투자가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네 개의 시간적 포인트(1980년, 1990년, 2000년, 2011년)를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는 경제성장 시기였다면, 1990년대는 오일쇼크 등 경제 위기가 있었고, 2000년대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된 시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은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로 각국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1980~2010년 사이에 사회복지지출이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12개 국가들은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대륙국가들, 그리고 남유럽인 스페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OECD 평균과 유사한 발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가 발생한 시점에 실업급여 등의 증가로 증가세를 보이는 형태이다.

다만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3년을 전후한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매우 큰 폭의 증가와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1

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스웨덴을 제치고 프랑스가 독보적인 1위로 올라간 점이다. 스웨덴은 오히려 1993년, 2003년, 그리고 2009년에 조정기를 거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1] OECD 사회복지지출의 평균을 넘어선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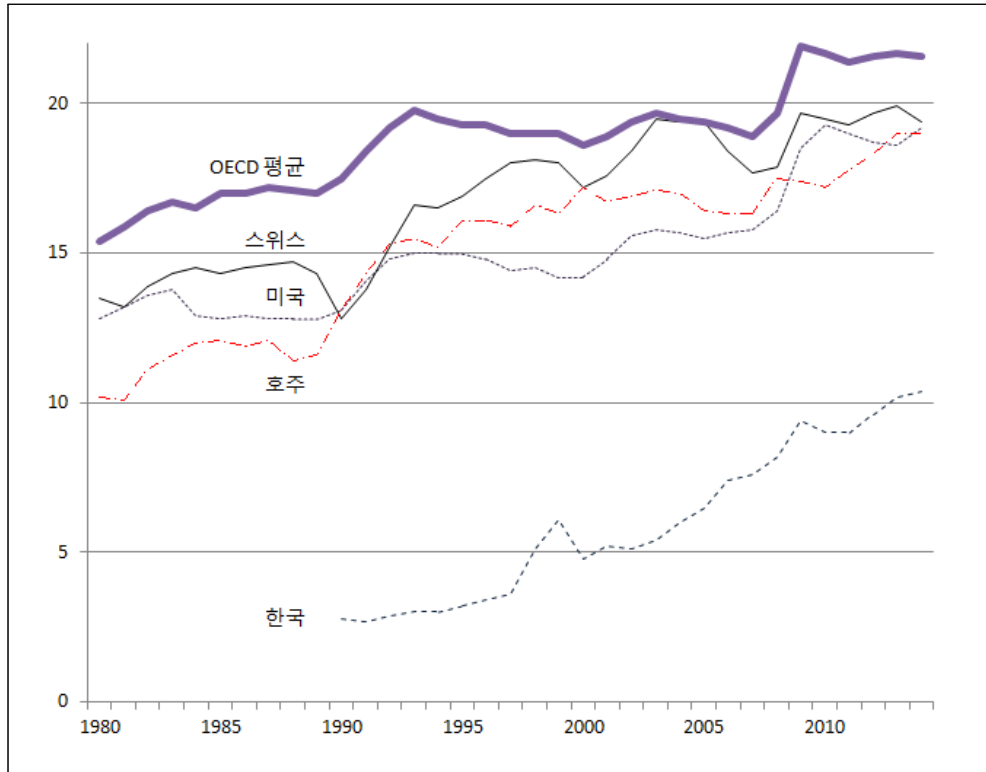


주: 2011년까지는 실적치, 2012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최근 30년 동안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출을 나타낸 국가들은 호주와 스위스, 미국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 역시 OECD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스위스의 경우 경기 여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990년과 2000년 2008년).

[그림 5-2] OECD 사회복지지출 평균에 못 미친 국가들

(단위: GDP 대비 %)



주: 2011년까지는 실적치, 2012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다음으로 고령화는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요인이다. 사회보험이 있는 국가에서도 조세재정으로 복지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고령층의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증가하면 노인의료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및 요양서비스의 증가가 수반된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다층적으로 구축된 국가를 제외하면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증가가 요구된다. 즉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잘 구축된 국가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및 요양비 증가만 문제일 수 있으나 한국처럼 노후소득보장체계조차 미비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의료비 및 요양비,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 증가가 요구된다.

더구나 한국은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2008년 첫 배출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가하면(임금근로자의 68.4% 국민연금 가입), 노후소득보장체계 역시 다층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노인빈곤을 조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와 요양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높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국은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명을 베이비붐세대라고 부른다. 전후에 태어난 이들이 65세 이상이 되는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국 사회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1>은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 추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노인부양비는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2035년 사이에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부양비 순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31위에서 26위, 6위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표 5-2>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5년과 2035년의 노인부양비의 절대적인 변화 또는 상대적인 변화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을 잘 흡수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1〉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 추계치

순위 (높은 순)	2015년		2025년		2035년	
1	일본	44.2	일본	51.6	일본	59.0
2	이탈리아	33.3	핀란드	40.4	독일	51.5
3	독일	32.2	포르투갈	39.4	포르투갈	50.7
4	핀란드	32.0	독일	38.9	이탈리아	48.8
5	포르투갈	31.3	이탈리아	37.9	스페인	48.6
6	스웨덴	31.3	프랑스	36.5	한국	47.8
7	그리스	30.6	슬로베니아	36.4	네덜란드	45.3
8	프랑스	29.9	에스토니아	36.1	핀란드	45.2
9	덴마크	29.0	그리스	36.0	그리스	44.9
10	에스토니아	28.8	네덜란드	35.6	슬로베니아	44.4
11	스위스	28.6	체코	35.4	스위스	44.1
12	벨기에	28.2	스위스	35.4	오스트리아	43.6
13	스페인	28.1	스페인	35.2	프랑스	42.6
14	영국	28.0	스웨덴	34.6	에스토니아	41.9
15	오스트리아	27.9	덴마크	34.2	체코	41.1
16	네덜란드	27.5	오스트리아	33.6	덴마크	40.5
17	체코	27.2	헝가리	33.5	벨기에	39.3
18	헝가리	26.6	벨기에	33.5	캐나다	38.8
19	슬로베니아	26.5	폴란드	32.7	스웨덴	38.7
20	노르웨이	25.5	영국	32.5	영국	38.5
21	캐나다	23.6	캐나다	32.3	뉴질랜드	37.7
22	룩셈부르크	23.0	노르웨이	30.6	헝가리	36.3
23	폴란드	22.5	미국	30.2	폴란드	36.1
24	미국	22.5	뉴질랜드	29.9	노르웨이	36.1
25	뉴질랜드	22.5	한국	29.6	슬로바키아	35.5
26	호주	22.5	슬로바키아	28.9	룩셈부르크	35.4
27	아이슬란드	20.6	룩셈부르크	28.0	미국	34.4
28	아일랜드	20.2	아이슬란드	27.4	아이슬란드	33.5
29	슬로바키아	19.6	호주	27.2	아일랜드	32.0
30	이스라엘	18.4	아일랜드	25.5	호주	30.7
31	한국	17.9	이스라엘	22.3	칠레	28.9
32	칠레	15.0	칠레	21.2	이스라엘	24.6
33	터키	11.9	터키	15.8	터키	21.4
34	멕시코	10.4	멕시코	13.4	멕시코	18.1
	OECD 평균	24.9	OECD 평균	31.0	OECD 평균	37.3

자료: OECD Stats, 홈페이지

〈표 5-2〉 OECD 국가의 2035년 노인부양비와 2015년 노인부양비의 차이

순위 (높은 순)	2035년 노인부양비 ÷ 2015년 노인부양비		2035년 노인부양비 - 2015년 노인부양비	
1	한국	2.66	한국	29.8
2	칠레	1.93	스페인	13.9
3	슬로바키아	1.81	포르투갈	15.9
4	터키	1.79	독일	9.5
5	멕시코	1.73	슬로베니아	7.6
6	스페인	1.73	네덜란드	20.4
7	뉴질랜드	1.68	슬로바키아	15.2
8	슬로베니아	1.67	오스트리아	17.8
9	네덜란드	1.65	이탈리아	17.8
10	캐나다	1.65	스위스	15.3
11	아이슬란드	1.63	캐나다	12.9
12	포르투갈	1.62	뉴질랜드	19.4
13	폴란드	1.60	일본	13.6
14	독일	1.60	그리스	19.3
15	아일랜드	1.58	칠레	11.8
16	오스트리아	1.57	체코	15.8
17	룩셈부르크	1.54	폴란드	12.4
18	스위스	1.54	핀란드	15.4
19	미국	1.53	에스토니아	11.9
20	체코	1.51	아이슬란드	13.9
21	그리스	1.47	프랑스	14.4
22	이탈리아	1.47	룩셈부르크	15.6
23	에스토니아	1.46	미국	13.1
24	프랑스	1.42	아일랜드	12.7
25	노르웨이	1.42	덴마크	10.6
26	핀란드	1.42	벨기에	13.3
27	덴마크	1.40	노르웨이	11.6
28	벨기에	1.40	영국	11.2
29	영국	1.38	헝가리	10.5
30	호주	1.36	터키	8.2
31	헝가리	1.36	호주	9.6
32	이스라엘	1.34	멕시코	6.2
33	일본	1.33	스웨덴	14.8
34	스웨덴	1.24	이스라엘	7.4
	OECD 평균	1.50	OECD 평균	12.4

끝으로 <표 5-3>은 2012년 기준 중위균등화가구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한 OECD 국가의 조세 및 이전지출 전후(before taxes and transfers; after taxes and transfers)의 빈곤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5-3> 2012년 중위균등화가구소득 50%의 빈곤선 기준 빈곤율

국가	순위 (빈곤율 낮은 순)	빈곤율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순위 (빈곤율 낮은 순)	빈곤율 (조세 및 이전지출 전)
체코	1	0.053	14	0.279
덴마크	2	0.054	9	0.247
아이슬란드	3	0.063	4	0.209
핀란드	4	0.065	23	0.323
네덜란드	5	0.077	6	0.232
노르웨이	6	0.081	8	0.24
프랑스	7	0.081	27	0.356
슬로바키아	8	0.084	13	0.271
독일	9	0.084	20	0.319
룩셈부르크	10	0.084	21	0.319
아일랜드	11	0.084	31	0.421
스웨덴	12	0.09	11	0.261
스위스	13	0.091	1	0.139
슬로베니아	14	0.094	17	0.298
오스트리아	15	0.096	22	0.321
뉴질랜드	16	0.099	7	0.238
폴란드	17	0.102	15	0.283
벨기에	18	0.102	25	0.331
헝가리	19	0.103	30	0.398
영국	20	0.105	19	0.307
에스토니아	21	0.123	18	0.304
이탈리아	22	0.127	24	0.327
포르투갈	23	0.13	26	0.348
호주	24	0.14	12	0.263
스페인	25	0.14	28	0.357
한국	26	0.146	2	0.165
그리스	27	0.151	29	0.379
터키	28	0.178	3	0.199
미국	29	0.179	16	0.292

자료: OECD Stats.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세금 및 이전지출 전 빈곤율은 29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반면 조세 및 이전지출 후 빈곤율은 29개 국가 중 26위로 높았다. 이는 중위균등화가구소득 50% 빈곤선 기준의 빈곤율에서, 우리의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을 완화하는데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및 정부이전 후 빈곤율은 대체적으로 북유럽, 대륙 유럽, 남유럽 및 영미 국가들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2012년 OECD 국가의 조세 및 이전지출 전 후의 지니계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소득 분포가 불평등할수록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조세 및 이전지출 전 지니계수는 30개 국가 중 가장 낮은 반면,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지니계수는 30개 국가 중 19위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빈곤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을 측정한 지니계수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단순히 순위의 변동만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보다는 빈곤율이 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니계수의 경우도 빈곤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북유럽, 대륙 유럽, 남유럽 및 영미 국가들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빈곤율과 불평등 완화에 아직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표 5-4〉 OECD 국가의 2012년 균등화가구소득의 지니계수

국가	순위 (지니계수 낮은 순)	지니계수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순위 (지니계수 낮은 순)	지니계수 (조세 및 이전지출 전)
덴마크	1	0.249	9	0.436
슬로바키아	2	0.25	6	0.412
슬로베니아	3	0.25	14	0.466
노르웨이	4	0.253	5	0.41
체코	5	0.256	10	0.455
아이슬란드	6	0.257	3	0.399
핀란드	7	0.26	18	0.488
벨기에	8	0.268	19	0.488
스웨덴	9	0.274	8	0.431
오스트리아	10	0.276	21	0.495
네덜란드	11	0.281	4	0.402
스위스	12	0.285	2	0.368
독일	13	0.289	22	0.501
헝가리	14	0.289	17	0.485
폴란드	15	0.298	13	0.465
룩셈부르크	16	0.302	23	0.502
아일랜드	17	0.304	30	0.582
프랑스	18	0.306	27	0.518
한국	19	0.307	1	0.338
호주	20	0.326	12	0.463
이탈리아	21	0.327	24	0.509
뉴질랜드	22	0.333	11	0.461
스페인	23	0.335	25	0.511
에스토니아	24	0.338	20	0.489
포르투갈	25	0.338	28	0.536
그리스	26	0.34	29	0.569
이스라엘	27	0.371	16	0.481
미국	28	0.39	26	0.513
터키	29	0.402	7	0.424
멕시코	30	0.457	15	0.472

자료: OECD Stats. 홈페이지

1. 자료원 및 자료수집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노동통계연감; 내부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관세청. 내부자료
국가보훈처. 교통통신요금 감면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내부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내부자료
기획재정부. 기부금 및 모금관련 내부자료
_____ (2013). 2013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문화재청. 취약계층궁능입장료 감면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 실태조사
별정우체국관리단. 공적연금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기부금 및 모금관련 내부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정형선(2011).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보건부문 지출자료)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건, 가족부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은행홈페이지. 국민계정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자치단체예산참고자료; 기부금 및 모금관련 내부자료
국가보훈처(2011). 보훈연감.
대한민국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_____ (2014).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2011). OECD 신보건계정체계(SHA 2011) 적용 위한 국민의료 시범추계.

- _____(2013). 한국의 보건계정 생산방법. 보건복지부·사회보장재정추계위원회 발표자료.
- 행정자치부(2014). 2014 지방세통계연감.
- _____(2012a). 지방자치단체예산참고자료.
- _____(2012b).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Adema, W., Fron, P., & Ladaique, M. (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 Eurostat(2006). *Labour market policy database Methodology*.
- _____(2008). *ESSPROS Manual*.
- OECD(2004). *Handbook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Education Statistics*.
- _____(2006). *Start Strong 2*.
- _____(2011). *Revenue Statistics 1965-2011*.
- UN(2008). *2008 SNA*.

2. 웹페이지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Index.aspx>)

OECD Education database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Eurostat 홈페이지 (http://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index.php/Glossary:ESSPROS)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3. 법령 정보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동법시행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방송법(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동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철도법(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
 유료도로법(제15조: 통행료납부의 대상 등, 동법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의2: 보편적 의무,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보편적 의무의 내용)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근로기준법(제60조: 유급질병휴가, 제74조: 산전후휴가, 제93조: 육아휴직)
 법인세법(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동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제4조: 법정퇴직금, 제12조: 비과세소득, 제80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제51조-제52조: 소득공제)
 기부금품모집법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 의약품품질관리, 제30조의3-4: 중소기업, 제66-67조: 영농·영어로합법인, 제74조: 비영리의료법인 손금산입, 제85조: 사회적기업, 제85조의6: 장애인표준사업장,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88조의2: 생계형저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 제97조의2: 국민주택, 제97조의3: 신축임대주택, 제99조의3: 수도권 외 신축주택, 제100조의2~13: 근로장려금, 제105조: 장애인용보장구, 제106조: 희귀병환자)
 개별소비세법(제18조: 조건부면세)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정의, 제4조: 지방세감면, 제17조: 장애인용자동차,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제19조: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제20조: 노인복지시설,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 제29조: 국가유공자, 제31조: 임대주택 등, 제33조: 주택공급확대,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제38조: 지방의료원 및 종교단체)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부표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단위: 십억원, %)

구 분	총사회복지지출(C+D)					SNA2008 GDP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6,022	5,893	5,302	591	129 ¹⁾	197,712
1991	7,018	6,884	6,176	708	134 ¹⁾	238,877
1992	8,662	8,528	7,678	850	134 ¹⁾	273,267
1993	10,180	10,007	8,932	1,075	172 ¹⁾	310,074
1994	12,111	11,921	10,540	1,380	190 ¹⁾	366,054
1995	22,546	14,847	13,171	1,676	7,699	428,927
1996	26,436	17,455	15,523	1,932	8,981	481,141
1997	31,238	21,443	18,444	2,999	9,795	530,347
1998	39,012	30,792	25,351	5,441	8,220	524,477
1999	47,987	37,201	33,272	3,929	10,786	576,873
2000	45,152	33,967	28,742	5,225	11,185	635,185
2001	50,378	38,360	33,891	4,469	12,018	688,165
2002	54,303	40,818	36,517	4,301	13,485	761,939
2003	61,603	46,112	41,053	5,058	15,491	810,915
2004	67,923	55,706	50,124	5,581	12,218	876,033
2005	75,564	61,823	56,247	5,576	13,741	919,797
2006	89,662	73,594	67,683	5,911	16,068	966,055
2007	98,611	80,642	74,335	6,307	17,969	1,043,258
2008	106,762	91,202	84,491	6,711	15,560	1,104,492
2009	122,628	106,251	98,204	8,047	16,377	1,151,708
2010	128,892	112,828	104,800	8,028	16,064	1,265,308
2011	137,506	118,502	109,809	8,693	19,004	1,332,681
2012	152,219	131,697	121,513	10,184	20,523	1,377,457
2013	164,789	143,983	133,393	10,590	20,806	1,429,445
1990-2013 평균증가율	15.5	14.9	15.1	13.4	24.7	9.0
2000-2013 평균증가율	10.5	11.8	12.5	5.6	4.9	6.4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단위: %)

구 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100.0	97.9	88.0	9.8	2.1 ¹⁾
1991	100.0	98.1	88.0	10.1	1.9 ¹⁾
1992	100.0	98.4	88.6	9.8	1.6 ¹⁾
1993	100.0	98.3	87.7	10.6	1.7 ¹⁾
1994	100.0	98.4	87.0	11.4	1.6 ¹⁾
1995	100.0	65.9	58.4	7.4	34.1
1996	100.0	66.0	58.7	7.3	34.0
1997	100.0	68.6	59.0	9.6	31.4
1998	100.0	78.9	65.0	13.9	21.1
1999	100.0	77.5	69.3	8.2	22.5
2000	100.0	75.2	63.7	11.6	24.8
2001	100.0	76.1	67.3	8.9	23.9
2002	100.0	75.2	67.2	7.9	24.8
2003	100.0	74.9	66.6	8.2	25.1
2004	100.0	82.0	73.8	8.2	18.0
2005	100.0	81.8	74.4	7.4	18.2
2006	100.0	82.1	75.5	6.6	17.9
2007	100.0	81.8	75.4	6.4	18.2
2008	100.0	85.4	79.1	6.3	14.6
2009	100.0	86.6	80.1	6.6	13.4
2010	100.0	87.5	81.3	6.2	12.5
2011	100.0	86.2	79.9	6.3	13.8
2012	100.0	86.5	79.8	6.7	13.5
2013	100.0	87.4	80.9	6.4	12.6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단위: GDP 대비 %)

구 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3.05	2.98	2.68	0.30	0.07
1991	2.94	2.88	2.59	0.30	0.06
1992	3.17	3.12	2.81	0.31	0.05
1993	3.28	3.23	2.88	0.35	0.06
1994	3.31	3.26	2.88	0.38	0.05
1995	5.26	3.46	3.07	0.39	1.79
1996	5.49	3.63	3.23	0.40	1.87
1997	5.89	4.04	3.48	0.57	1.85
1998	7.44	5.87	4.83	1.04	1.57
1999	8.32	6.45	5.77	0.68	1.87
2000	7.11	5.35	4.52	0.82	1.76
2001	7.32	5.57	4.92	0.65	1.75
2002	7.13	5.36	4.79	0.56	1.77
2003	7.60	5.69	5.06	0.62	1.91
2004	7.75	6.36	5.72	0.64	1.39
2005	8.22	6.72	6.12	0.61	1.49
2006	9.28	7.62	7.01	0.61	1.66
2007	9.45	7.73	7.13	0.60	1.72
2008	9.67	8.26	7.65	0.61	1.41
2009	10.65	9.23	8.53	0.70	1.42
2010	10.19	8.92	8.28	0.63	1.27
2011	10.32	8.89	8.24	0.65	1.43
2012	11.05	9.56	8.82	0.74	1.49
2013	11.53	10.07	9.33	0.74	1.46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1	16.5	16.8	16.5	19.9	3.6
1992	23.4	23.9	24.3	20.0	0.6
1993	17.5	17.3	16.3	26.5	28.3
1994	19.0	19.1	18.0	28.4	10.3
1995	86.2	24.5	25.0	21.4	3,948.6
1996	17.3	17.6	17.9	15.2	16.7
1997	18.2	22.8	18.8	55.2	9.1
1998	24.9	43.6	37.5	81.4	- 16.1
1999	23.0	20.8	31.2	- 27.8	31.2
2000	- 5.9	- 8.7	- 13.6	33.0	3.7
2001	11.6	12.9	17.9	- 14.5	7.4
2002	7.8	6.4	7.7	- 3.8	12.2
2003	13.4	13.0	12.4	17.6	14.9
2004	10.3	20.8	22.1	10.3	- 21.1
2005	11.2	11.0	12.2	- 0.1	12.5
2006	18.7	19.0	20.3	6.0	16.9
2007	10.0	9.6	9.8	6.7	11.8
2008	8.3	13.1	13.7	6.4	- 13.4
2009	14.9	16.5	16.2	19.9	5.3
2010	5.1	6.2	6.7	- 0.2	- 1.9
2011	6.7	5.0	4.8	8.3	18.3
2012	10.7	11.1	10.7	17.2	8.0
2013	8.3	9.3	9.8	4.0	1.4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단위: 십억원)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 적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퇴직금	퇴직금									
1990	5,302	1,166	-	-	298	563	2,830	60	51	-	-	-	335
1991	6,176	1,471	-	-	409	778	3,050	89	44	-	-	-	336
1992	7,678	2,028	-	-	452	988	3,668	111	103	-	-	-	328
1993	8,932	2,661	-	-	494	977	4,144	154	144	-	-	-	359
1994	10,540	3,317	-	-	569	1,275	4,718	185	114	-	-	-	363
1995	13,171	4,373	-	-	637	1,499	5,777	262	168	-	-	-	455
1996	15,523	4,651	-	-	720	1,746	7,296	337	184	10	10	-	580
1997	18,444	5,458	-	-	819	2,079	8,487	429	360	79	79	-	734
1998	25,351	8,931	-	-	874	2,071	9,623	549	1,627	799	799	-	876
1999	33,272	13,005	-	-	900	1,929	11,249	530	3,266	936	936	-	1,458
2000	28,742	7,570	-	-	1,040	2,272	12,804	665	2,313	471	471	-	1,607
2001	33,891	6,715	-	-	1,172	2,663	17,586	941	1,429	845	845	-	2,540
2002	36,517	7,324	-	-	1,364	3,160	18,502	1,018	1,342	835	835	-	2,971
2003	41,053	8,785	-	-	1,597	3,799	20,450	1,268	932	1,030	1,030	-	3,192
2004	50,124	11,241	-	-	1,825	5,070	22,452	1,654	939	1,448	1,448	-	5,496
2005	56,247	12,653	-	-	2,013	5,492	25,474	1,823	1,023	1,752	1,752	-	6,017
2006	67,683	14,182	-	-	2,235	6,214	29,649	4,753	1,074	2,074	2,074	-	7,501
2007	74,335	16,060	-	-	2,471	6,680	33,287	4,540	1,256	2,434	2,434	-	7,606
2008	84,491	19,813	-	-	2,667	7,255	36,218	6,241	2,706	2,865	2,865	-	6,725
2009	98,204	21,545	-	-	2,927	7,588	42,009	7,824	5,138	4,116	4,116	-	7,056
2010	104,800	24,139	-	-	3,035	7,188	47,368	8,553	4,030	3,687	3,687	-	6,801
2011	109,809	25,770	-	-	3,326	7,770	49,795	8,962	4,058	3,561	3,561	-	6,568
2012	121,513	29,584	-	-	3,576	8,461	51,909	11,680	5,397	3,677	3,677	-	7,229
2013	133,393	31,909	-	-	3,290	8,700	54,937	16,086	6,556	3,884	3,884	-	8,033

〈부표 6〉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단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2.68	0.59	-	-	0.15	0.28	1.43	0.03	0.03	-	-	-	0.17
1991	2.59	0.62	-	-	0.17	0.33	1.28	0.04	0.02	-	-	-	0.14
1992	2.81	0.74	-	-	0.17	0.36	1.34	0.04	0.04	-	-	-	0.12
1993	2.88	0.86	-	-	0.16	0.32	1.34	0.05	0.05	-	-	-	0.12
1994	2.88	0.91	-	-	0.16	0.35	1.29	0.05	0.03	-	-	-	0.10
1995	3.07	1.02	-	-	0.15	0.35	1.35	0.06	0.04	-	-	-	0.11
1996	3.23	0.97	-	-	0.15	0.36	1.52	0.07	0.04	0.00	0.00	-	0.12
1997	3.48	1.03	-	-	0.15	0.39	1.60	0.08	0.07	0.01	0.01	-	0.14
1998	4.83	1.70	-	-	0.17	0.39	1.83	0.10	0.31	0.15	0.15	-	0.17
1999	5.77	2.25	-	-	0.16	0.33	1.95	0.09	0.57	0.16	0.16	-	0.25
2000	4.52	1.19	-	-	0.16	0.36	2.02	0.10	0.36	0.07	0.07	-	0.25
2001	4.92	0.98	-	-	0.17	0.39	2.56	0.14	0.21	0.12	0.12	-	0.37
2002	4.79	0.96	-	-	0.18	0.41	2.43	0.13	0.18	0.11	0.11	-	0.39
2003	5.06	1.08	-	-	0.20	0.47	2.52	0.16	0.11	0.13	0.13	-	0.39
2004	5.72	1.28	-	-	0.21	0.58	2.56	0.19	0.11	0.17	0.17	-	0.63
2005	6.12	1.38	-	-	0.22	0.60	2.77	0.20	0.11	0.19	0.19	-	0.65
2006	7.01	1.47	-	-	0.23	0.64	3.07	0.49	0.11	0.21	0.21	-	0.78
2007	7.13	1.54	-	-	0.24	0.64	3.19	0.44	0.12	0.23	0.23	-	0.73
2008	7.65	1.79	-	-	0.24	0.66	3.28	0.57	0.25	0.26	0.26	-	0.61
2009	8.53	1.87	-	-	0.25	0.66	3.65	0.68	0.45	0.36	0.36	-	0.61
2010	8.28	1.91	-	-	0.24	0.57	3.74	0.68	0.32	0.29	0.29	-	0.54
2011	8.24	1.93	-	-	0.25	0.58	3.74	0.67	0.30	0.27	0.27	-	0.49
2012	8.82	2.15	-	-	0.26	0.61	3.77	0.85	0.39	0.27	0.27	-	0.52
2013	9.33	2.23	-	-	0.23	0.61	3.84	1.13	0.46	0.27	0.27	-	0.56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 적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100.0	22.0	-	-	5.6	10.6	53.4	1.1	1.0	-	-	-	6.3
1991	100.0	23.8	-	-	6.6	12.6	49.4	1.4	0.7	-	-	-	5.4
1992	100.0	26.4	-	-	5.9	12.9	47.8	1.4	1.3	-	-	-	4.3
1993	100.0	29.8	-	-	5.5	10.9	46.4	1.7	1.6	-	-	-	4.0
1994	100.0	31.5	-	-	5.4	12.1	44.8	1.8	1.1	-	-	-	3.4
1995	100.0	33.2	-	-	4.8	11.4	43.9	2.0	1.3	-	-	-	3.5
1996	100.0	30.0	-	-	4.6	11.2	47.0	2.2	1.2	0.1	0.1	-	3.7
1997	100.0	29.6	-	-	4.4	11.3	46.0	2.3	1.9	0.4	0.4	-	4.0
1998	100.0	35.2	-	-	3.4	8.2	38.0	2.2	6.4	3.2	3.2	-	3.5
1999	100.0	39.1	-	-	2.7	5.8	33.8	1.6	9.8	2.8	2.8	-	4.4
2000	100.0	26.3	-	-	3.6	7.9	44.5	2.3	8.0	1.6	1.6	-	5.6
2001	100.0	19.8	-	-	3.5	7.9	51.9	2.8	4.2	2.5	2.5	-	7.5
2002	100.0	20.1	-	-	3.7	8.7	50.7	2.8	3.7	2.3	2.3	-	8.1
2003	100.0	21.4	-	-	3.9	9.3	49.8	3.1	2.3	2.5	2.5	-	7.8
2004	100.0	22.4	-	-	3.6	10.1	44.8	3.3	1.9	2.9	2.9	-	11.0
2005	100.0	22.5	-	-	3.6	9.8	45.3	3.2	1.8	3.1	3.1	-	10.7
2006	100.0	21.0	-	-	3.3	9.2	43.8	7.0	1.6	3.1	3.1	-	11.1
2007	100.0	21.6	-	-	3.3	9.0	44.8	6.1	1.7	3.3	3.3	-	10.2
2008	100.0	23.5	-	-	3.2	8.6	42.9	7.4	3.2	3.4	3.4	-	8.0
2009	100.0	21.9	-	-	3.0	7.7	42.8	8.0	5.2	4.2	4.2	-	7.2
2010	100.0	23.0	-	-	2.9	6.9	45.2	8.2	3.8	3.5	3.5	-	6.5
2011	100.0	23.5	-	-	3.0	7.1	45.3	8.2	3.7	3.2	3.2	-	6.0
2012	100.0	24.3	-	-	2.9	7.0	42.7	9.6	4.4	3.0	3.0	-	5.9
2013	100.0	23.9	-	-	2.5	6.5	41.2	12.1	4.9	2.9	2.9	-	6.0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 적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	-	-	-	-	-	-	-	-	-	-	-	-
1991	16.5	26.1	-	-	37.2	38.3	7.8	48.2	-14.0	-	-	-	0.2
1992	24.3	37.9	-	-	10.3	27.0	20.3	24.9	136.5	-	-	-	-2.3
1993	16.3	31.2	-	-	9.3	-1.1	13.0	38.7	39.6	-	-	-	9.3
1994	18.0	24.7	-	-	15.2	30.5	13.8	20.2	-20.6	-	-	-	1.1
1995	25.0	31.8	-	-	12.0	17.6	22.5	41.6	46.9	-	-	-	25.4
1996	17.9	6.4	-	-	13.0	16.5	26.3	28.9	9.2	-	-	-	27.5
1997	18.8	17.4	-	-	13.8	19.1	16.3	27.1	95.8	652.8	652.8	-	26.5
1998	37.5	63.6	-	-	6.7	-0.4	13.4	28.1	352.6	915.3	915.3	-	19.3
1999	31.2	45.6	-	-	3.0	-6.9	16.9	-3.5	100.7	17.1	17.1	-	66.4
2000	-13.6	-41.8	-	-	15.5	17.8	13.8	25.5	-29.2	-49.7	-49.7	-	10.2
2001	17.9	-11.3	-	-	12.7	17.2	37.3	41.6	-38.2	79.5	79.5	-	58.1
2002	7.7	9.1	-	-	16.4	18.7	5.2	8.1	-6.0	-1.2	-1.2	-	16.9
2003	12.4	19.9	-	-	17.1	20.2	10.5	24.6	-30.6	23.4	23.4	-	7.4
2004	22.1	28.0	-	-	14.3	33.4	9.8	30.4	0.7	40.6	40.6	-	72.2
2005	12.2	12.6	-	-	10.3	8.3	13.5	10.2	8.9	21.0	21.0	-	9.5
2006	20.3	12.1	-	-	11.0	13.1	16.4	160.8	5.1	18.4	18.4	-	24.7
2007	9.8	13.2	-	-	10.6	7.5	12.3	-4.5	16.9	17.4	17.4	-	1.4
2008	13.7	23.4	-	-	7.9	8.6	8.8	37.5	115.5	17.7	17.7	-	-11.6
2009	16.2	8.7	-	-	9.7	4.6	16.0	25.4	89.9	43.7	43.7	-	4.9
2010	6.7	12.0	-	-	3.7	-5.3	12.8	9.3	-21.6	-10.4	-10.4	-	-3.6
2011	4.8	6.8	-	-	9.6	8.1	5.1	4.8	0.7	-3.4	-3.4	-	-3.4
2012	10.7	14.8	-	-	7.5	8.9	4.2	30.3	33.0	3.2	3.2	-	10.1
2013	9.8	7.9	-	-	-8.0	2.8	5.8	37.7	21.5	5.6	5.6	-	11.1

〈부표 9〉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단위: 십억원)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591	359	359	-	-	143	89	-	-	-	-	-
1991	708	424	424	-	-	166	118	-	-	-	-	-
1992	850	521	521	-	-	190	139	-	-	-	-	-
1993	1,075	597	597	-	-	205	273	-	-	-	-	-
1994	1,380	797	797	-	-	220	363	-	-	-	-	-
1995	1,676	984	984	-	0	244	441	-	-	-	-	6
1996	1,932	1,091	1,091	-	0	302	530	-	-	-	-	9
1997	2,999	1,872	1,872	-	0	365	666	85	-	-	-	11
1998	5,441	4,227	4,226	-	0	433	676	94	-	-	-	12
1999	3,929	2,607	2,606	-	0	504	653	153	-	-	-	11
2000	5,225	3,475	3,474	-	-	621	905	212	-	-	-	12
2001	4,469	2,600	2,599	-	-	714	835	309	-	-	-	11
2002	4,301	2,340	2,330	-	-	868	817	260	-	-	-	14
2003	5,058	2,873	2,863	-	-	871	972	321	-	-	-	21
2004	5,581	3,268	3,266	-	-	975	963	362	-	-	-	13
2005	5,576	3,183	3,182	-	-	1,041	1,031	307	-	-	-	14
2006	5,911	3,331	3,330	-	-	1,077	1,119	367	-	-	-	17
2007	6,307	3,665	3,663	-	-	1,036	1,117	459	-	-	-	30
2008	6,711	3,961	3,959	-	-	1,073	1,116	507	-	-	-	54
2009	8,047	5,086	5,082	-	-	1,098	1,192	526	-	-	-	145
2010	8,028	4,933	4,925	-	-	1,120	1,235	563	-	-	-	176
2011	8,693	5,355	5,344	-	-	1,325	1,223	604	-	-	-	186
2012	10,184	6,389	4,954	1,419	-	1,607	1,288	718	-	-	-	181
2013	10,590	6,964	4,214	2,733	-	1,659	1,093	701	-	-	-	174

〈부표 10〉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단위: GDP 대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0.30	0.18	0.18	-	-	0.07	0.04	-	-	-	-	-
1991	0.30	0.18	0.18	-	-	0.07	0.05	-	-	-	-	-
1992	0.31	0.19	0.19	-	-	0.07	0.05	-	-	-	-	-
1993	0.35	0.19	0.19	-	-	0.07	0.09	-	-	-	-	-
1994	0.38	0.22	0.22	-	-	0.06	0.10	-	-	-	-	-
1995	0.39	0.23	0.23	-	0.00	0.06	0.10	-	-	-	-	0.00
1996	0.40	0.23	0.23	-	0.00	0.06	0.11	-	-	-	-	0.00
1997	0.57	0.35	0.35	-	0.00	0.07	0.13	0.02	-	-	-	0.00
1998	1.04	0.81	0.81	-	0.00	0.08	0.13	0.02	-	-	-	0.00
1999	0.68	0.45	0.45	-	0.00	0.09	0.11	0.03	-	-	-	0.00
2000	0.82	0.55	0.55	-	-	0.10	0.14	0.03	-	-	-	0.00
2001	0.65	0.38	0.38	-	-	0.10	0.12	0.04	-	-	-	0.00
2002	0.56	0.31	0.31	-	-	0.11	0.11	0.03	-	-	-	0.00
2003	0.62	0.35	0.35	-	-	0.11	0.12	0.04	-	-	-	0.00
2004	0.64	0.37	0.37	-	-	0.11	0.11	0.04	-	-	-	0.00
2005	0.61	0.35	0.35	-	-	0.11	0.11	0.03	-	-	-	0.00
2006	0.61	0.34	0.34	-	-	0.11	0.12	0.04	-	-	-	0.00
2007	0.60	0.35	0.35	-	-	0.10	0.11	0.04	-	-	-	0.00
2008	0.61	0.36	0.36	-	-	0.10	0.10	0.05	-	-	-	0.00
2009	0.70	0.44	0.44	-	-	0.10	0.10	0.05	-	-	-	0.01
2010	0.63	0.39	0.39	-	-	0.09	0.10	0.04	-	-	-	0.01
2011	0.65	0.40	0.40	-	-	0.10	0.09	0.05	-	-	-	0.01
2012	0.74	0.46	0.36	0.10	-	0.12	0.09	0.05	-	-	-	0.01
2013	0.74	0.49	0.29	0.19	-	0.12	0.08	0.05	-	-	-	0.01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100.0	60.9	60.9	-	-	24.1	15.0	-	-	-	-	-
1991	100.0	59.9	59.9	-	-	23.5	16.6	-	-	-	-	-
1992	100.0	61.3	61.3	-	-	22.4	16.3	-	-	-	-	-
1993	100.0	55.6	55.6	-	-	19.1	25.4	-	-	-	-	-
1994	100.0	57.7	57.7	-	-	15.9	26.3	-	-	-	-	-
1995	100.0	58.7	58.7	-	0.0	14.6	26.3	-	-	-	-	0.4
1996	100.0	56.5	56.5	-	0.0	15.6	27.4	-	-	-	-	0.5
1997	100.0	62.4	62.4	-	0.0	12.2	22.2	2.8	-	-	-	0.4
1998	100.0	77.7	77.7	-	0.0	8.0	12.4	1.7	-	-	-	0.2
1999	100.0	66.4	66.3	-	0.0	12.8	16.6	3.9	-	-	-	0.3
2000	100.0	66.5	66.5	-	-	11.9	17.3	4.1	-	-	-	0.2
2001	100.0	58.2	58.1	-	-	16.0	18.7	6.9	-	-	-	0.2
2002	100.0	54.4	54.2	-	-	20.2	19.0	6.1	-	-	-	0.3
2003	100.0	56.8	56.6	-	-	17.2	19.2	6.3	-	-	-	0.4
2004	100.0	58.6	58.5	-	-	17.5	17.2	6.5	-	-	-	0.2
2005	100.0	57.1	57.1	-	-	18.7	18.5	5.5	-	-	-	0.2
2006	100.0	56.4	56.3	-	-	18.2	18.9	6.2	-	-	-	0.3
2007	100.0	58.1	58.1	-	-	16.4	17.7	7.3	-	-	-	0.5
2008	100.0	59.0	59.0	-	-	16.0	16.6	7.5	-	-	-	0.8
2009	100.0	63.2	63.2	-	-	13.6	14.8	6.5	-	-	-	1.8
2010	100.0	61.4	61.3	-	-	14.0	15.4	7.0	-	-	-	2.2
2011	100.0	61.6	61.5	-	-	15.2	14.1	6.9	-	-	-	2.1
2012	100.0	62.7	48.6	13.9	-	15.8	12.7	7.1	-	-	-	1.8
2013	100.0	65.8	39.8	25.8	-	15.7	10.3	6.6	-	-	-	1.6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	-	-	-	-	-	-	-	-	-	-	-
1991	19.9	18.0	18.0	-	-	16.7	32.7	-	-	-	-	-
1992	20.0	22.9	22.9	-	-	14.3	17.8	-	-	-	-	-
1993	26.5	14.6	14.6	-	-	7.9	96.9	-	-	-	-	-
1994	28.4	33.4	33.4	-	-	7.3	33.3	-	-	-	-	-
1995	21.4	23.5	23.5	-	-	11.0	21.4	-	-	-	-	-
1996	15.2	10.8	10.8	-	39.1	23.7	20.1	-	-	-	-	39.1
1997	55.2	71.6	71.6	-	26.2	20.8	25.7	-	-	-	-	26.2
1998	81.4	125.8	125.8	-	68.6	18.7	1.4	10.6	-	-	-	7.1
1999	-27.8	-38.3	-38.3	-	5.7	16.4	-3.4	63.2	-	-	-	-3.6
2000	33.0	33.3	33.3	-	-100.0	23.1	38.7	38.8	-	-	-	2.4
2001	-14.5	-25.2	-25.2	-	-	15.0	-7.7	45.7	-	-	-	-6.5
2002	-3.8	-10.0	-10.3	-	-	21.6	-2.1	-15.8	-	-	-	32.0
2003	17.6	22.8	22.8	-	-	0.3	18.9	23.2	-	-	-	46.7
2004	10.3	13.7	14.1	-	-	11.9	-0.9	12.7	-	-	-	-36.6
2005	-0.1	-2.6	-2.6	-	-	6.7	7.1	-15.1	-	-	-	2.7
2006	6.0	4.6	4.6	-	-	3.5	8.6	19.4	-	-	-	21.8
2007	6.7	10.0	10.0	-	-	-3.9	-0.3	25.3	-	-	-	82.3
2008	6.4	8.1	8.1	-	-	3.6	-0.0	10.3	-	-	-	77.9
2009	19.9	28.4	28.4	-	-	2.3	6.8	3.9	-	-	-	167.6
2010	-0.2	-3.0	-3.1	-	-	2.1	3.6	7.0	-	-	-	21.9
2011	8.3	8.6	8.5	-	-	18.3	-0.9	7.2	-	-	-	5.4
2012	17.2	19.3	-7.3	-	-	21.3	5.3	19.0	-	-	-	-2.5
2013	4.0	9.0	-14.9	92.6	-	3.2	-15.2	-2.4	-	-	-	-4.2

〈부표 1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액

(단위: 십억원)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5,893	1,525	359	-	298	705	2,918	60	51	-	-	-	335
1991	6,884	1,895	424	-	409	944	3,168	89	44	-	-	-	336
1992	8,528	2,549	521	-	452	1,178	3,807	111	103	-	-	-	328
1993	10,007	3,258	597	-	494	1,182	4,417	154	144	-	-	-	359
1994	11,921	4,114	797	-	569	1,495	5,081	185	114	-	-	-	363
1995	14,847	5,357	984	-	637	1,743	6,218	262	168	-	-	-	461
1996	17,455	5,742	1,091	-	720	2,048	7,826	337	184	10	10	-	589
1997	21,443	7,330	1,872	-	819	2,444	9,153	514	360	79	79	-	745
1998	30,792	13,157	4,226	-	874	2,505	10,299	643	1,627	799	799	-	888
1999	37,201	15,612	2,606	-	900	2,433	11,901	683	3,266	936	936	-	1,469
2000	33,967	11,046	3,474	-	1,040	2,892	13,709	877	2,313	471	471	-	1,619
2001	38,360	9,314	2,599	-	1,172	3,377	18,421	1,251	1,429	845	845	-	2,551
2002	40,818	9,665	2,330	-	1,364	4,029	19,320	1,278	1,342	835	835	-	2,985
2003	46,112	11,658	2,863	-	1,597	4,671	21,422	1,589	932	1,030	1,030	-	3,213
2004	55,706	14,509	3,266	-	1,825	6,045	23,415	2,016	939	1,448	1,448	-	5,509
2005	61,823	15,836	3,182	-	2,013	6,533	26,506	2,130	1,023	1,752	1,752	-	6,031
2006	73,594	17,514	3,330	-	2,235	7,292	30,769	5,120	1,074	2,074	2,074	-	7,517
2007	80,642	19,725	3,663	-	2,471	7,716	34,404	5,000	1,256	2,434	2,434	-	7,636
2008	91,202	23,774	3,959	-	2,667	8,328	37,334	6,748	2,706	2,865	2,865	-	6,779
2009	106,251	26,631	5,082	-	2,927	8,686	43,201	8,350	5,138	4,116	4,116	-	7,200
2010	112,828	29,072	4,925	-	3,035	8,308	48,603	9,117	4,030	3,687	3,687	-	6,978
2011	118,502	31,125	5,344	-	3,326	9,095	51,018	9,566	4,058	3,561	3,561	-	6,754
2012	131,697	35,974	4,954	1,419	3,576	10,068	53,197	12,399	5,397	3,677	3,677	-	7,410
2013	143,983	38,873	4,214	2,733	3,290	10,359	56,029	16,787	6,556	3,884	3,884	-	8,206

〈부표 1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단위: GDP 대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 적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2.98	0.77	0.18	-	0.15	0.36	1.48	0.03	0.03	-	-	-	0.17
1991	2.88	0.79	0.18	-	0.17	0.40	1.33	0.04	0.02	-	-	-	0.14
1992	3.12	0.93	0.19	-	0.17	0.43	1.39	0.04	0.04	-	-	-	0.12
1993	3.23	1.05	0.19	-	0.16	0.38	1.42	0.05	0.05	-	-	-	0.12
1994	3.26	1.12	0.22	-	0.16	0.41	1.39	0.05	0.03	-	-	-	0.10
1995	3.46	1.25	0.23	-	0.15	0.41	1.45	0.06	0.04	-	-	-	0.11
1996	3.63	1.19	0.23	-	0.15	0.43	1.63	0.07	0.04	0.00	0.00	-	0.12
1997	4.04	1.38	0.35	-	0.15	0.46	1.73	0.10	0.07	0.01	0.01	-	0.14
1998	5.87	2.51	0.81	-	0.17	0.48	1.96	0.12	0.31	0.15	0.15	-	0.17
1999	6.45	2.71	0.45	-	0.16	0.42	2.06	0.12	0.57	0.16	0.16	-	0.25
2000	5.35	1.74	0.55	-	0.16	0.46	2.16	0.14	0.36	0.07	0.07	-	0.25
2001	5.57	1.35	0.38	-	0.17	0.49	2.68	0.18	0.21	0.12	0.12	-	0.37
2002	5.36	1.27	0.31	-	0.18	0.53	2.54	0.17	0.18	0.11	0.11	-	0.39
2003	5.69	1.44	0.35	-	0.20	0.58	2.64	0.20	0.11	0.13	0.13	-	0.40
2004	6.36	1.66	0.37	-	0.21	0.69	2.67	0.23	0.11	0.17	0.17	-	0.63
2005	6.72	1.72	0.35	-	0.22	0.71	2.88	0.23	0.11	0.19	0.19	-	0.66
2006	7.62	1.81	0.34	-	0.23	0.75	3.19	0.53	0.11	0.21	0.21	-	0.78
2007	7.73	1.89	0.35	-	0.24	0.74	3.30	0.48	0.12	0.23	0.23	-	0.73
2008	8.26	2.15	0.36	-	0.24	0.75	3.38	0.61	0.25	0.26	0.26	-	0.61
2009	9.23	2.31	0.44	-	0.25	0.75	3.75	0.73	0.45	0.36	0.36	-	0.63
2010	8.92	2.30	0.39	-	0.24	0.66	3.84	0.72	0.32	0.29	0.29	-	0.55
2011	8.89	2.34	0.40	-	0.25	0.68	3.83	0.72	0.30	0.27	0.27	-	0.51
2012	9.56	2.61	0.36	0.10	0.26	0.73	3.86	0.90	0.39	0.27	0.27	-	0.54
2013	10.07	2.72	0.29	0.19	0.23	0.72	3.92	1.17	0.46	0.27	0.27	-	0.57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 적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100.0	25.9	6.1	-	5.1	12.0	49.5	1.0	0.9	-	-	-	5.7
1991	100.0	27.5	6.2	-	5.9	13.7	46.0	1.3	0.6	-	-	-	4.9
1992	100.0	29.9	6.1	-	5.3	13.8	44.6	1.3	1.2	-	-	-	3.8
1993	100.0	32.6	6.0	-	4.9	11.8	44.1	1.5	1.4	-	-	-	3.6
1994	100.0	34.5	6.7	-	4.8	12.5	42.6	1.6	1.0	-	-	-	3.0
1995	100.0	36.1	6.6	-	4.3	11.7	41.9	1.8	1.1	-	-	-	3.1
1996	100.0	32.9	6.2	-	4.1	11.7	44.8	1.9	1.1	0.1	0.1	-	3.4
1997	100.0	34.2	8.7	-	3.8	11.4	42.7	2.4	1.7	0.4	0.4	-	3.5
1998	100.0	42.7	13.7	-	2.8	8.1	33.4	2.1	5.3	2.6	2.6	-	2.9
1999	100.0	42.0	7.0	-	2.4	6.5	32.0	1.8	8.8	2.5	2.5	-	3.9
2000	100.0	32.5	10.2	-	3.1	8.5	40.4	2.6	6.8	1.4	1.4	-	4.8
2001	100.0	24.3	6.8	-	3.1	8.8	48.0	3.3	3.7	2.2	2.2	-	6.7
2002	100.0	23.7	5.7	-	3.3	9.9	47.3	3.1	3.3	2.0	2.0	-	7.3
2003	100.0	25.3	6.2	-	3.5	10.1	46.5	3.4	2.0	2.2	2.2	-	7.0
2004	100.0	26.0	5.9	-	3.3	10.9	42.0	3.6	1.7	2.6	2.6	-	9.9
2005	100.0	25.6	5.1	-	3.3	10.6	42.9	3.4	1.7	2.8	2.8	-	9.8
2006	100.0	23.8	4.5	-	3.0	9.9	41.8	7.0	1.5	2.8	2.8	-	10.2
2007	100.0	24.5	4.5	-	3.1	9.6	42.7	6.2	1.6	3.0	3.0	-	9.5
2008	100.0	26.1	4.3	-	2.9	9.1	40.9	7.4	3.0	3.1	3.1	-	7.4
2009	100.0	25.1	4.8	-	2.8	8.2	40.7	7.9	4.8	3.9	3.9	-	6.8
2010	100.0	25.8	4.4	-	2.7	7.4	43.1	8.1	3.6	3.3	3.3	-	6.2
2011	100.0	26.3	4.5	-	2.8	7.7	43.1	8.1	3.4	3.0	3.0	-	5.7
2012	100.0	27.3	3.8	1.1	2.7	7.6	40.4	9.4	4.1	2.8	2.8	-	5.6
2013	100.0	27.0	2.9	1.9	2.3	7.2	38.9	11.7	4.6	2.7	2.7	-	5.7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 적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	-	-	-	-	-	-	-	-	-	-	-	-
1991	16.8	24.2	18.0	-	37.2	33.9	8.5	48.2	-14.0	-	-	-	0.2
1992	23.9	34.6	22.9	-	10.3	24.8	20.2	24.9	136.5	-	-	-	-2.3
1993	17.3	27.8	14.6	-	9.3	0.3	16.0	38.7	39.6	-	-	-	9.3
1994	19.1	26.3	33.4	-	15.2	26.5	15.0	20.2	-20.6	-	-	-	1.1
1995	24.5	30.2	23.5	-	12.1	16.6	22.4	41.6	46.9	-	-	-	27.1
1996	17.6	7.2	10.8	-	13.0	17.5	25.9	28.9	9.2	-	-	-	27.7
1997	22.8	27.7	71.6	-	13.8	19.4	17.0	52.2	95.8	652.8	652.8	-	26.5
1998	43.6	79.5	125.8	-	6.7	2.5	12.5	25.2	352.6	915.3	915.3	-	19.2
1999	20.8	18.7	-38.3	-	3.0	-2.8	15.6	6.3	100.7	17.1	17.1	-	65.5
2000	-8.7	-29.2	33.3	-	15.5	18.9	15.2	28.4	-29.2	-49.7	-49.7	-	10.2
2001	12.9	-15.7	-25.2	-	12.7	16.8	34.4	42.6	-38.2	79.5	79.5	-	57.6
2002	6.4	3.8	-10.3	-	16.4	19.3	4.9	2.2	-6.0	-1.2	-1.2	-	17.0
2003	13.0	20.6	22.8	-	17.1	15.9	10.9	24.3	-30.6	23.4	23.4	-	7.6
2004	20.8	24.4	14.1	-	14.3	29.4	9.3	26.9	0.7	40.6	40.6	-	71.5
2005	11.0	9.1	-2.6	-	10.3	8.1	13.2	5.6	8.9	21.0	21.0	-	9.5
2006	19.0	10.6	4.6	-	11.0	11.6	16.1	140.4	5.1	18.4	18.4	-	24.7
2007	9.6	12.6	10.0	-	10.6	5.8	11.8	-2.3	16.9	17.4	17.4	-	1.6
2008	13.1	20.5	8.1	-	7.9	7.9	8.5	35.0	115.5	17.7	17.7	-	-11.2
2009	16.5	12.0	28.4	-	9.7	4.3	15.7	23.7	89.9	43.7	43.7	-	6.2
2010	6.2	9.2	-3.1	-	3.7	-4.4	12.5	9.2	-21.6	-10.4	-10.4	-	-3.1
2011	5.0	7.1	8.5	-	9.6	9.5	5.0	4.9	0.7	-3.4	-3.4	-	-3.2
2012	11.1	15.6	-7.3	-	7.5	10.7	4.3	29.6	33.0	3.2	3.2	-	9.7
2013	9.3	8.1	-14.9	92.6	-8.0	2.9	5.3	35.4	21.5	5.6	5.6	-	10.8

〈부표 17〉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합계		5,893	6,884	8,528	10,007	11,921	14,847	17,455	21,443
공공 부문	소계	5,302	6,176	7,678	8,932	10,540	13,171	15,523	18,444
	정부 ^{주)}	1,405	1,639	1,925	2,190	2,558	3,066	3,683	4,561
	사회보험	3,896	4,539	5,752	6,744	7,985	10,068	11,798	13,825
	공적연금	1,233	1,569	2,139	2,783	3,450	4,478	4,724	5,506
	건강보험	2,124	2,266	2,679	3,106	3,553	4,452	5,692	6,609
	산업재해 보상보험	540	703	934	855	981	1,137	1,358	1,560
	고용보험	-	-	-	-	-	2	24	150
	장기요양보험	-	-	-	-	-	-	-	-
	공기업사회서비스	-	-	-	-	-	37	43	59
민간 부문	소계	591	708	850	1,075	1,380	1,676	1,932	2,999
	법정퇴직금	359	424	521	597	797	984	1,091	1,872
	퇴직연금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85
	유급질병 휴가급여	143	166	190	205	220	235	289	343
	민간사회서비스	-	-	-	-	-	16	22	34
	자동차 책임보험금	89	118	139	273	363	441	530	666

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표 17〉 계속

(단위: 십억원)

재원	세부재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30,792	37,201	33,967	38,360	40,818	46,112	55,706	61,823
공공 부문	소계	25,351	33,272	28,742	33,891	36,517	41,053	50,124	56,247
	정부	6,232	8,659	8,728	10,012	11,264	12,028	17,594	19,183
	사회보험	19,037	24,513	19,875	23,694	25,042	28,779	32,213	36,658
	공적연금	8,939	13,049	7,650	6,708	7,319	8,899	10,293	12,094
	건강보험	7,489	8,649	9,776	13,875	14,353	15,743	17,222	19,227
	산업재해 보상보험	1,454	1,277	1,460	1,751	2,027	2,495	2,877	3,048
	고용보험	1,155	1,539	989	1,361	1,343	1,642	1,821	2,288
	장기요양보험	-	-	-	-	-	-	-	-
	공기업사회서비스	81	100	139	185	210	246	317	406
민간 부문	소계	5,441	3,929	5,225	4,469	4,301	5,058	5,581	5,576
	법정퇴직금	4,226	2,606	3,474	2,599	2,330	2,863	3,266	3,182
	퇴직연금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94	153	212	309	260	321	362	307
	유급질병 휴가급여	397	451	506	571	679	633	701	751
	민간사회서비스	49	66	127	155	214	271	289	305
	자동차 책임보험금	676	653	905	835	817	972	963	1,031

〈부표 17〉 계속

(단위: 십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부재원	재원
73,594	80,642	91,202	106,251	112,828	118,502	131,697	143,983	합계	
67,683	74,335	84,491	98,204	104,800	109,809	121,513	133,393	소계	공공 부문
25,454	26,496	31,064	37,194	37,751	38,404	44,715	51,040	정부	
41,767	47,301	52,856	60,424	66,435	70,767	76,086	81,610	사회보험	
13,330	15,098	17,382	18,649	20,911	22,855	26,368	28,621	공적연금	
22,327	25,426	27,306	30,916	34,781	36,990	38,300	40,881	건강보험	
3,196	3,288	3,446	3,494	3,549	3,650	3,884	3,822	산업재해 보상보험	
2,914	3,489	4,436	6,141	5,364	5,270	5,409	5,851	고용보험	
-	-	285	1,224	1,830	2,002	2,126	2,435	장기요양보험	
462	537	570	585	614	638	712	742	공기업 사회서비스	
5,911	6,307	6,711	8,047	8,028	8,693	10,184	10,590	소계	민간 부문
3,330	3,663	3,959	5,082	4,925	5,344	4,954	4,214	법정퇴직금	
-	-	-	-	-	-	1,419	2,733	퇴직연금	
366	459	506	526	563	603	718	701	산전후 휴가급여	
757	695	697	694	714	927	1,212	1,277	유급질병 휴가급여	
338	374	433	553	591	595	593	573	민간사회서비스	
1,119	1,117	1,116	1,192	1,235	1,223	1,288	1,093	자동차 책임보험금	

〈부표 18〉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	16.8	23.9	17.3	19.1	24.5	17.6	22.8	43.6	20.8	- 8.7	12.9
공공 부문	소계	-	16.5	24.3	16.3	18.0	25.0	17.9	18.8	37.5	31.2	-13.6	17.9
	정부 ^{주)}	-	16.6	17.4	13.8	16.8	19.8	20.1	23.8	36.6	39.0	0.8	14.7
	사회보험	-	16.5	26.7	17.2	18.4	26.1	17.2	17.2	37.7	28.8	-18.9	19.2
	공적연금	-	27.3	36.3	30.1	24.0	29.8	5.5	16.6	62.3	46.0	- 41.4	-12.3
	건강보험	-	6.7	18.2	15.9	14.4	25.3	27.9	16.1	13.3	15.5	13.0	41.9
	산업재해 보상보험	-	30.2	32.8	-8.4	14.7	15.8	19.5	14.8	-6.8	- 12.2	14.3	19.9
	고용보험	-	-	-	-	-	-	1,100.0	523.3	671.9	33.3	- 35.7	37.6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	-
	공기업 사회서비스	-	-	-	-	-	-	17.4	37.2	37.3	23.5	38.0	33.8
민간 부문	소계	-	19.9	20.0	26.5	28.4	21.4	15.2	55.2	81.4	-27.8	33.0	- 14.5
	법정퇴직금	-	18.0	22.9	14.6	33.4	23.5	10.8	71.6	125.8	- 38.3	33.3	-25.2
	퇴직연금	-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10.6	63.2	38.7	45.7
	유급질병 휴가급여	-	16.7	14.3	7.9	7.3	6.8	23.0	18.7	15.7	13.6	12.2	12.9
	민간사회서비스	-	-	-	-	-	-	41.6	51.9	44.8	35.1	93.9	21.6
	자동차 책임보험금	-	32.7	17.8	96.9	33.3	21.4	20.1	25.7	1.4	-3.4	38.7	-7.7

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의 교통·통신 요금 감면 포함

〈부표 18〉 계속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부재원	재원
6.4	13.0	20.8	11.0	19.0	9.6	13.1	16.5	6.2	5.0	11.1	9.3	합계	
7.7	12.4	22.1	12.2	20.3	9.8	13.7	16.2	6.7	4.8	10.7	9.8	소계	공공 부문
12.5	6.8	46.3	9.0	32.7	4.1	17.2	19.7	1.5	1.7	16.4	14.1	정부	
5.7	14.9	11.9	13.8	13.9	13.2	11.7	14.3	9.9	6.5	7.5	7.3	사회보험	
9.1	21.6	15.7	17.5	10.2	13.3	15.1	7.3	12.1	9.3	15.4	8.5	공적연금	
3.4	9.7	9.4	11.6	16.1	13.9	7.4	13.2	12.5	6.4	3.5	6.7	건강보험	
15.8	23.1	15.3	5.9	4.8	2.9	4.8	1.4	1.6	2.8	6.4	-1.6	산업재해 보상보험	
-1.3	22.3	10.9	25.7	27.3	19.7	27.1	38.4	-12.7	-1.8	2.6	8.2	고용보험	
-	-	-	-	-	-	-	328.9	49.6	9.4	6.2	14.6	장기요양 보험	
13.2	17.4	28.7	28.2	13.7	16.3	6.2	2.6	5.0	3.9	11.5	4.3	공기업 사회서비스	민간 부문
- 3.8	17.6	10.3	-0.1	6.0	6.7	6.4	19.9	-0.2	8.3	17.2	4.0	소계	
- 10.3	22.8	14.1	-2.6	4.6	10.0	8.1	28.4	-3.1	8.5	- 7.3	- 14.9	법정퇴직금	
-	-	-	-	-	-	-	-	-	-	-	92.6	퇴직연금	
- 15.8	23.2	12.7	-15.1	19.4	25.3	10.3	3.9	7.0	7.2	19.0	- 2.4	산전후 휴가급여	
18.8	-6.8	10.8	7.1	0.9	-8.2	0.3	-0.5	2.9	29.9	30.7	5.4	유급질병 휴가급여	
38.3	26.5	6.9	5.4	10.9	10.4	16.0	27.7	6.8	0.6	- 0.4	- 3.2	민간사회 서비스	
-2.1	18.9	-0.9	7.1	8.6	-0.3	-0.0	6.8	3.6	-0.9	5.3	-15.2	자동차 책임보험금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부문	소계	90.0	89.7	90.0	89.3	88.4	88.7	88.9	86.0	82.3	89.4	84.6	88.4
	정부 ^{주)}	23.8	23.8	22.6	21.9	21.5	20.6	21.1	21.3	20.2	23.3	25.7	26.1
	사회보험	66.1	65.9	67.5	67.4	67.0	67.8	67.6	64.5	61.8	65.9	58.5	61.8
	공적연금	20.9	22.8	25.1	27.8	28.9	30.2	27.1	25.7	29.0	35.1	22.5	17.5
	건강보험	36.0	32.9	31.4	31.0	29.8	30.0	32.6	30.8	24.3	23.2	28.8	36.2
	산업재해 보상보험	9.2	10.2	11.0	8.5	8.2	7.7	7.8	7.3	4.7	3.4	4.3	4.6
	고용보험	-	-	-	-	-	0.0	0.1	0.7	3.8	4.1	2.9	3.5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	-
	공기업 사회서비스	-	-	-	-	-	0.2	0.2	0.3	0.3	0.3	0.4	0.5
민간 부문	소계	10.0	10.3	10.0	10.7	11.6	11.3	11.1	14.0	17.7	10.6	15.4	11.6
	법정퇴직금	6.1	6.2	6.1	6.0	6.7	6.6	6.2	8.7	13.7	7.0	10.2	6.8
	퇴직연금	-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0.4	0.3	0.4	0.6	0.8
	유급질병 휴가급여	2.4	2.4	2.2	2.0	1.8	1.6	1.7	1.6	1.3	1.2	1.5	1.5
	민간사회 서비스	-	-	-	-	-	0.1	0.1	0.2	0.2	0.2	0.4	0.4
	자동차 책임보험금	1.5	1.7	1.6	2.7	3.0	3.0	3.0	3.1	2.2	1.8	2.7	2.2

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부표 19〉 계속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부재원	재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89.5	89.0	90.0	91.0	92.0	92.2	92.6	92.4	92.9	92.7	92.3	92.6	소계	공공 부문
27.6	26.1	31.6	31.0	34.6	32.9	34.1	35.0	33.5	32.4	34.0	35.4	정부	
61.4	62.4	57.8	59.3	56.8	58.7	58.0	56.9	58.9	59.7	57.8	56.7	사회보험	
17.9	19.3	18.5	19.6	18.1	18.7	19.1	17.6	18.5	19.3	20.0	19.9	공적연금	
35.2	34.1	30.9	31.1	30.3	31.5	29.9	29.1	30.8	31.2	29.1	28.4	건강보험	
5.0	5.4	5.2	4.9	4.3	4.1	3.8	3.3	3.1	3.1	2.9	2.7	산업재해 보상보험	
3.3	3.6	3.3	3.7	4.0	4.3	4.9	5.8	4.8	4.4	4.1	4.1	고용보험	
-	-	-	-	-	-	0.3	1.2	1.6	1.7	1.6	1.7	장기요양보험	
0.5	0.5	0.6	0.7	0.6	0.7	0.6	0.6	0.5	0.5	0.5	0.5	공기업 사회서비스	
10.5	11.0	10.0	9.0	8.0	7.8	7.4	7.6	7.1	7.3	7.7	7.4	소계	민간 부문
5.7	6.2	5.9	5.1	4.5	4.5	4.3	4.8	4.4	4.5	3.8	2.9	법정 퇴직금	
-	-	-	-	-	-	-	-	-	-	1.1	1.9	퇴직연금	
0.6	0.7	0.6	0.5	0.5	0.6	0.6	0.5	0.5	0.5	0.5	0.5	산전후 휴가급여	
1.7	1.4	1.3	1.2	1.0	0.9	0.8	0.7	0.6	0.8	0.9	0.9	유급질병 휴가급여	
0.5	0.6	0.5	0.5	0.5	0.5	0.5	0.5	0.5	0.5	0.4	0.4	민간사회 서비스	
2.0	2.1	1.7	1.7	1.5	1.4	1.2	1.1	1.1	1.0	1.0	0.8	자동차 책임보험금	

〈부표 2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공공 부조	합계	5,893	6,884	8,528	10,007	11,921	14,847	17,455	21,443	30,792	37,201	33,967	38,360	40,818
	소계	511	552	604	707	706	817	995	1,223	1,550	2,375	2,765	4,101	4,248
	기초생활보장	511	552	604	707	706	817	995	1,223	1,550	2,375	2,765	4,101	4,248
	기초노령연금	-	-	-	-	-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	-	-	-	-
사회 보상	근로장려금	-	-	-	-	-	-	-	-	-	-	-	-	-
	소계	355	485	524	555	621	711	790	859	968	980	1,051	1,169	1,613
	국가보훈	315	464	523	543	617	677	760	851	905	914	1,025	1,140	1,286
	재해구호	40	21	1	12	4	33	29	7	62	65	19	10	299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1	1	1	1	1	7	16	25
	사할린동포	-	-	-	-	-	-	-	-	-	-	-	-	-
	고엽제, 위생부보호	-	-	-	-	-	-	-	-	-	-	-	-	-
	의사상자예우 긴급지원	-	-	-	-	-	-	-	-	-	-	-	3	3
사회 서비스	소계	539	602	796	928	1,228	1,575	1,941	2,538	3,795	5,404	5,051	4,928	5,613
	시설보호	39	50	61	48	246	291	348	497	415	448	545	715	446
	재가복지	104	128	174	239	297	424	580	797	840	915	1,152	1,357	2,138
	근로복지 ²⁾	51	44	103	144	114	166	170	288	1,272	2,663	1,795	913	860
	보건의료	345	380	458	497	571	654	797	894	999	1,106	1,211	1,377	1,599
	주택보급	-	-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185	169	206	377	357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39	46	62	84	103	141	189	213
	아동발달계좌	-	-	-	-	-	-	-	-	-	-	-	-	-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	-	-	-	-	-	-	-	-	-	-	-
사회 보험	소계	3,896	4,539	5,752	6,744	7,985	10,068	11,798	13,825	19,037	24,513	19,875	23,694	25,042
	공적연금	1,233	1,569	2,139	2,783	3,450	4,478	4,724	5,506	8,939	13,049	7,650	6,708	7,319
	건강보험	2,124	2,266	2,679	3,106	3,553	4,452	5,692	6,609	7,489	8,649	9,776	13,875	14,353
	산업재해 보상보험	540	703	934	855	981	1,137	1,358	1,560	1,454	1,277	1,460	1,751	2,027
	고용보험 ³⁾	-	-	-	-	-	2	24	150	1,155	1,539	989	1,361	1,343
	장기요양 보험	-	-	-	-	-	-	-	-	-	-	-	-	-
민간 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16	22	34	49	66	127	155	214
기업 복지	소계	502	591	711	802	1,017	1,220	1,380	2,299	4,717	3,210	4,193	3,479	3,269
	법정퇴직금	359	424	521	597	797	984	1,091	1,872	4,226	2,606	3,474	2,599	2,330
	퇴직연금	-	-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85	94	153	212	309	260
	유급질병 휴가급여	143	166	190	205	220	235	289	343	397	451	506	571	679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89	118	139	273	363	441	530	666	676	653	905	835	817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부표 20〉 계속

(단위: 십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부제도	제도
46,112	55,706	61,823	73,594	80,642	91,202	106,251	112,828	118,502	131,697	143,983	합계	공공 ¹⁾ 부조
4,701	6,294	7,922	9,513	10,129	12,916	15,914	17,030	17,156	17,909	18,254	소계	
4,701	6,294	7,922	9,513	10,129	10,276	11,495	11,934	11,887	12,228	12,211	기초생활보장	
-	-	-	-	-	2,243	3,412	3,823	3,804	4,014	4,270	기초노령연금	
-	-	-	-	-	-	-	221	428	426	506	장애인연금	
-	-	-	-	-	397	554	618	635	645	704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454	434	402	597	562	근로장려금	
1,682	1,631	1,747	2,125	2,173	2,279	2,499	2,830	2,966	3,528	3,713	소계	사회 보상
1,442	1,550	1,672	1,826	1,988	2,133	2,265	2,498	2,658	2,874	3,501	국가보훈	
200	35	28	168	79	11	41	168	132	495	18	재해구호	
36	42	41	42	51	65	62	74	86	91	91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9	8	6	5	5	5	사할린동포	
-	-	1	2	2	2	1	1	1	2	2	고엽제, 위생부호	
4	3	5	6	7	8	7	6	5	3	4	의사상자예우	
-	-	-	82	46	51	114	77	78	58	92	긴급지원	사회 서비스
5,891	9,987	9,921	14,278	14,731	16,440	19,366	18,505	18,920	23,989	29,816	소계	
458	752	161	1,268	1,082	3,706	4,316	6,506	7,281	9,348	11,016	시설보호	
2,548	2,743	3,114	4,887	5,551	4,651	4,848	762	625	700	2,232	재가복지	
365	628	560	359	394	1,401	3,432	2,723	2,859	4,264	5,243	근로복지 ²⁾	
1,869	1,910	2,328	2,683	2,970	3,038	3,829	4,482	4,327	4,977	4,946	보건의료	
-	3,161	2,776	3,763	3,159	2,168	1,162	1,697	1,225	1,230	1,410	주택보급	
401	470	573	851	1,031	888	1,176	1,694	1,910	2,684	4,109	교육복지	민간 사회 서비스
249	323	409	466	543	578	594	622	647	722	772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10	10	10	11	13	14	아동발달계좌	
-	-	-	-	-	-	-	9	36	51	75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28,779	32,213	36,658	41,767	47,301	52,856	60,424	66,435	70,767	76,086	81,610	소계	
8,899	10,293	12,094	13,330	15,098	17,382	18,649	20,911	22,855	26,368	28,621	공적연금	
15,743	17,222	19,227	22,327	25,426	27,306	30,916	34,781	36,990	38,300	40,881	건강보험	
2,495	2,877	3,048	3,196	3,288	3,446	3,494	3,549	3,650	3,884	3,822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회 보험
1,642	1,821	2,288	2,914	3,489	4,436	6,141	5,364	5,270	5,409	5,851	고용보험 ³⁾	
-	-	-	-	-	285	1,224	1,830	2,002	2,126	2,435	장기요양보험	
271	289	305	338	374	433	553	591	595	593	573	교통통신 감면	
3,816	4,329	4,240	4,453	4,817	5,162	6,302	6,201	6,874	8,303	8,924	소계	
2,863	3,266	3,182	3,330	3,663	3,959	5,082	4,925	5,344	4,954	4,214	법정퇴직금	
-	-	-	-	-	-	-	-	-	1,419	2,733	퇴직연금	
321	362	307	366	459	506	526	563	603	718	701	산전후 휴가급여	기업 복지
633	701	751	757	695	697	694	714	927	1,212	1,277	유급질병 휴가급여	
972	963	1,031	1,119	1,117	1,116	1,192	1,235	1,223	1,288	1,093	자동차 책임보험금	시장

〈부표 2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	16.8	23.9	17.3	19.1	24.5	17.6	22.8	43.6	20.8	- 8.7	12.9	6.4
공공부조	소계	-	8.1	9.5	17.0	- 0.1	15.7	21.8	23.0	26.7	53.3	16.4	48.3	3.6
	기초생활보장	-	8.1	9.5	17.0	- 0.1	15.7	21.8	23.0	26.7	53.3	16.4	48.3	3.6
	기초노령연금	-	-	-	-	-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	-	-	-	-	-	-	-	-	-	-	-	-
사회보상	소계	-	36.6	8.0	5.9	11.9	14.5	11.1	8.7	12.7	1.2	7.2	11.2	38.0
	국가보훈	-	47.3	12.7	3.8	13.6	9.7	12.3	12.0	6.3	1.0	12.1	11.2	12.8
	재해구호	-	-47.5	-95.2	1,100.0	- 66.7	725.0	- 12.1	- 75.9	785.7	4.8	- 70.8	- 47.4	2,890.0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	-	600.0	128.6	56.3
	사할린동포	-	-	-	-	-	-	-	-	-	-	-	-	-
	고엽제, 위생부보호	-	-	-	-	-	-	-	-	-	-	-	-	-
	의사상자에우	-	-	-	-	-	-	-	-	-	-	-	-	14.2
	긴급지원	-	-	-	-	-	-	-	-	-	-	-	-	-
사회서비스	소계	-	11.6	32.3	16.5	32.4	28.2	23.3	30.7	49.5	42.4	- 6.5	- 2.4	13.9
	시설보호	-	28.2	22.0	- 21.3	412.5	18.3	19.6	42.8	- 16.5	8.0	21.7	31.2	- 37.6
	재가복지	-	23.1	35.9	37.4	24.3	42.8	36.8	37.4	5.4	8.9	25.9	17.8	57.6
	근로복지 ²⁾	-	-13.7	134.1	39.8	- 20.8	45.6	2.4	69.7	341.1	109.3	- 32.6	- 49.1	- 5.8
	보건의료	-	10.1	20.6	8.3	15.0	14.5	21.9	12.1	11.8	10.7	9.5	13.7	16.1
	주택보급	-	-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	- 8.6	21.9	83.0	- 5.3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16.3	35.1	35.8	23.5	36.5	33.6	12.8
	아동발달계좌	-	-	-	-	-	-	-	-	-	-	-	-	-
사회보험	소계	-	16.5	26.7	17.2	18.4	26.1	17.2	17.2	37.7	28.8	- 18.9	19.2	5.7
	공적연금	-	27.3	36.3	30.1	24.0	29.8	5.5	16.6	62.3	46.0	- 41.4	- 12.3	9.1
	건강보험	-	6.7	18.2	15.9	14.4	25.3	27.9	16.1	13.3	15.5	13.0	41.9	3.4
	산업재해 보상보험	-	30.2	32.8	- 8.4	14.7	15.8	19.5	14.8	- 6.8	- 12.2	14.3	19.9	15.8
	고용보험 ³⁾	-	-	-	-	-	-	1,100.0	523.3	671.9	33.3	- 35.7	37.6	- 1.3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	-	-
민간 사회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	41.6	51.9	44.8	35.1	93.9	21.6	38.3
기업 복지	소계	-	17.6	20.4	12.8	26.7	19.9	13.1	66.7	105.1	- 31.9	30.6	- 17.0	- 6.0
	법정퇴직금	-	18.0	22.9	14.6	33.4	23.5	10.8	71.6	125.8	- 38.3	33.3	- 25.2	- 10.3
	퇴직연금	-	-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10.6	63.2	38.7	45.7	- 15.8
	유급질병 휴가급여	-	16.7	14.3	7.9	7.3	6.8	23.0	18.7	15.7	13.6	12.2	12.9	18.8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	32.7	17.8	96.9	33.3	21.4	20.1	25.7	1.4	- 3.4	38.7	- 7.7	- 2.1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부표 21〉 계속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부제도	제도
13.0	20.8	11.0	19.0	9.6	13.1	16.5	6.2	5.0	11.1	9.3	합계	공공 부조
10.7	33.9	25.9	20.1	6.5	27.5	23.2	7.0	0.7	4.4	1.9	소계	
10.7	33.9	25.9	20.1	6.5	1.4	11.9	3.8	- 0.4	2.9	-0.1	기초생활보장	
-	-	-	-	-	-	52.1	12.1	- 0.5	5.5	6.4	기초노령연금	
-	-	-	-	-	-	-	-	93.9	-0.5	18.8	장애인연금	
-	-	-	-	-	-	39.5	11.4	2.8	1.5	9.2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4.3	- 7.5	48.5	-5.9	근로장려금	
4.2	- 3.0	7.1	21.7	2.3	4.9	9.7	13.2	4.8	18.9	5.2	소계	사회 보상
12.1	7.5	7.9	9.2	8.9	7.3	6.2	10.3	6.4	8.1	21.8	국가보훈	
- 33.1	- 82.4	- 21.0	504.7	- 53.0	- 86.4	284.7	304.4	- 21.3	275.0	- 96.3	재해구호	
44.0	17.6	- 3.9	2.0	22.9	27.4	- 4.6	19.7	16.2	5.8	-0.7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9.3	- 25.2	- 13.8	- 10.6	6.4	사할린동포	
-	-	-	12.3	6.6	25.8	- 31.4	- 8.4	- 7.1	38.6	9.3	고엽제, 위반부호	
6.2	- 10.3	47.1	25.5	25.4	4.1	- 16.5	- 7.4	- 10.0	- 37.6	29.4	의사상자예우	
-	-	-	-	- 44.7	11.0	126.0	- 32.5	1.2	- 25.6	57.6	긴급지원	사회 서비스
5.0	69.5	- 0.7	43.9	3.2	11.6	17.8	- 4.4	2.2	26.8	24.3	소계	
2.7	64.1	- 78.6	689.6	- 14.6	242.3	16.5	50.7	11.9	28.4	17.8	시설보호	
19.2	7.6	13.5	57.0	13.6	- 16.2	4.2	- 84.3	- 18.0	12.1	218.7	재가복지	
- 57.5	72.0	- 10.8	- 35.9	9.7	255.2	145.0	- 20.6	5.0	49.2	23.0	근로복지 ²⁾	
16.9	2.2	21.9	15.2	10.7	2.3	26.0	17.0	- 3.5	15.0	-0.6	보건의료	
-	-	- 12.2	35.6	- 16.1	- 31.4	- 46.4	46.1	- 27.9	0.5	14.6	주택보급	
12.3	17.2	21.9	48.6	21.1	- 13.9	32.4	44.1	12.7	40.6	53.1	교육복지	민간 사회 서비스
17.1	29.4	26.9	13.8	16.6	6.4	2.8	4.8	4.0	11.5	7.0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 0.3	- 0.0	15.5	15.2	4.8	아동발달계좌	
-	-	-	-	-	-	-	-	303.6	44.3	45.8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14.9	11.9	13.8	13.9	13.2	11.7	14.3	9.9	6.5	7.5	7.3	소계	
21.6	15.7	17.5	10.2	13.3	15.1	7.3	12.1	9.3	15.4	8.5	공적연금	
9.7	9.4	11.6	16.1	13.9	7.4	13.2	12.5	6.4	3.5	6.7	건강보험	사회 보험
23.1	15.3	5.9	4.8	2.9	4.8	1.4	1.6	2.8	6.4	-1.6	산업재해 보상보험	
22.3	10.9	25.7	27.3	19.7	27.1	38.4	- 12.7	- 1.8	2.6	8.2	고용보험 ³⁾	
-	-	-	-	-	-	328.9	49.6	9.4	6.2	14.6	장기요양보험	기업 복지
26.5	6.9	5.4	10.9	10.4	16.0	27.7	6.8	0.6	-0.4	-3.2	교통통신 등 감면	
16.7	13.4	- 2.1	5.0	8.2	7.1	22.1	- 1.6	10.9	20.8	7.5	소계	
22.8	14.1	- 2.6	4.6	10.0	8.1	28.4	- 3.1	8.5	-7.3	- 14.9	법정퇴직금	
-	-	-	-	-	-	-	-	-	-	92.6	퇴직연금	
23.2	12.7	- 15.1	19.4	25.3	10.3	3.9	7.0	7.2	19.0	-2.4	산전후 휴가급여	
- 6.8	10.8	7.1	0.9	- 8.2	0.3	- 0.5	2.9	29.9	30.7	5.4	유급질병 휴가급여	
18.9	- 0.9	7.1	8.6	- 0.3	- 0.0	6.8	3.6	- 0.9	5.3	-15.2	자동차 책임보험금	시장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¹⁾ 부조	소계	8.7	8.0	7.1	7.1	5.9	5.5	5.7	5.7	5.0	6.4	8.1	10.7	10.4
	기초생활보장	8.7	8.0	7.1	7.1	5.9	5.5	5.7	5.7	5.0	6.4	8.1	10.7	10.4
	기초노령연금	-	-	-	-	-	-	-	-	-	-	-	-	-
	장애연금	-	-	-	-	-	-	-	-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	-	-	-	-	-	-	-	-	-	-	-	-
사회 보상	소계	6.0	7.0	6.1	5.5	5.2	4.8	4.5	4.0	3.1	2.6	3.1	3.0	4.0
	국가보훈	5.3	6.7	6.1	5.4	5.2	4.6	4.4	4.0	2.9	2.5	3.0	3.0	3.2
	재해구호	0.7	0.3	0.0	0.1	0.0	0.2	0.2	0.0	0.2	0.2	0.1	0.0	0.7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0.0	0.0	0.0	0.0	0.0	0.0	0.0	0.1
	사할린동포	-	-	-	-	-	-	-	-	-	-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	-	-
	의사상자예우	-	-	-	-	-	-	-	-	-	-	-	0.0	0.0
	긴급지원	-	-	-	-	-	-	-	-	-	-	-	-	-
사회 서비스	소계	9.2	8.7	9.3	9.3	10.3	10.6	11.1	11.8	12.3	14.5	14.9	12.8	13.8
	시설보호	0.7	0.7	0.7	0.5	2.1	2.0	2.0	2.3	1.3	1.2	1.6	1.9	1.1
	재가복지	1.8	1.9	2.0	2.4	2.5	2.9	3.3	3.7	2.7	2.5	3.4	3.5	5.2
	근로복지 ²⁾	0.9	0.6	1.2	1.4	1.0	1.1	1.0	1.3	4.1	7.2	5.3	2.4	2.1
	보건의료	5.9	5.5	5.4	5.0	4.8	4.4	4.6	4.2	3.2	3.0	3.6	3.6	3.9
	주택보급	-	-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0.6	0.5	0.6	1.0	0.9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0.3	0.3	0.3	0.3	0.3	0.4	0.5	0.5
	아동발달계좌	-	-	-	-	-	-	-	-	-	-	-	-	-
사회 보험	소계	66.1	65.9	67.5	67.4	67.0	67.8	67.6	64.5	61.8	65.9	58.5	61.8	61.4
	공적연금	20.9	22.8	25.1	27.8	28.9	30.2	27.1	25.7	29.0	35.1	22.5	17.5	17.9
	건강보험	36.0	32.9	31.4	31.0	29.8	30.0	32.6	30.8	24.3	23.2	28.8	36.2	35.2
	산업재해 보상보험	9.2	10.2	11.0	8.5	8.2	7.7	7.8	7.3	4.7	3.4	4.3	4.6	5.0
	고용보험 ³⁾	-	-	-	-	-	0.0	0.1	0.7	3.8	4.1	2.9	3.5	3.3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	-	-
	민간 사회 서비스	교통통신 등 감면	-	-	-	-	0.1	0.1	0.2	0.2	0.2	0.4	0.4	0.5
기업 복지	소계	8.5	8.6	8.3	8.0	8.5	8.2	7.9	10.7	15.3	8.6	12.3	9.1	8.0
	법정퇴직금	6.1	6.2	6.1	6.0	6.7	6.6	6.2	8.7	13.7	7.0	10.2	6.8	5.7
	퇴직연금	-	-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0.4	0.3	0.4	0.6	0.8	0.6
	유급질병 휴가급여	2.4	2.4	2.2	2.0	1.8	1.6	1.7	1.6	1.3	1.2	1.5	1.5	1.7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1.5	1.7	1.6	2.7	3.0	3.0	3.0	3.1	2.2	1.8	2.7	2.2	2.0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부표 22〉 계속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부제도	제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10.2	11.3	12.8	12.9	12.6	14.2	15.0	15.1	14.5	13.6	12.7	소계	공공 ¹⁾ 부조
10.2	11.3	12.8	12.9	12.6	11.3	10.8	10.6	10.0	9.3	8.5	기초생활보장	
-	-	-	-	-	2.5	3.2	3.4	3.2	3.0	3.0	기초노령연금	
-	-	-	-	-	-	-	0.2	0.4	0.3	0.4	장애연금	
-	-	-	-	-	0.4	0.5	0.5	0.5	0.5	0.5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0.4	0.4	0.3	0.5	0.4	근로장려금	
3.6	2.9	2.8	2.9	2.7	2.5	2.4	2.5	2.5	2.7	2.6	소계	사회 보상
3.1	2.8	2.7	2.5	2.5	2.3	2.1	2.2	2.2	2.2	2.4	국가보훈	
0.4	0.1	0.0	0.2	0.1	0.0	0.0	0.1	0.1	0.4	0.0	재해구호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0.0	0.0	0.0	0.0	0.0	0.0	사할린동포	
-	-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고엽제, 우안부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의사상자예우	
-	-	-	0.1	0.1	0.1	0.1	0.1	0.1	0.0	0.1	긴급지원	
12.8	17.9	16.0	19.4	18.3	18.0	18.2	16.4	16.0	18.2	20.7	소계	사회 서비스
1.0	1.3	0.3	1.7	1.3	4.1	4.1	5.8	6.1	7.1	7.7	시설보호	
5.5	4.9	5.0	6.6	6.9	5.1	4.6	0.7	0.5	0.5	1.6	재가복지	
0.8	1.1	0.9	0.5	0.5	1.5	3.2	2.4	2.4	3.2	3.6	근로복지 ²⁾	
4.1	3.4	3.8	3.6	3.7	3.3	3.6	4.0	3.7	3.8	3.4	보건의료	
-	5.7	4.5	5.1	3.9	2.4	1.1	1.5	1.0	0.9	1.0	주택보급	
0.9	0.8	0.9	1.2	1.3	1.0	1.1	1.5	1.6	2.0	2.9	교육복지	
0.5	0.6	0.7	0.6	0.7	0.6	0.6	0.6	0.5	0.5	0.5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0.0	0.0	0.0	0.0	0.0	0.0	아동발달계좌	
-	-	-	-	-	-	-	0.0	0.0	0.0	0.1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62.4	57.8	59.3	56.8	58.7	58.0	56.9	58.9	59.7	57.8	56.7	소계	사회 보험
19.3	18.5	19.6	18.1	18.7	19.1	17.6	18.5	19.3	20.0	19.9	공적연금	
34.1	30.9	31.1	30.3	31.5	29.9	29.1	30.8	31.2	29.1	28.4	건강보험	
5.4	5.2	4.9	4.3	4.1	3.8	3.3	3.1	3.1	2.9	2.7	산업재해 보상보험	
3.6	3.3	3.7	4.0	4.3	4.9	5.8	4.8	4.4	4.1	4.1	고용보험 ³⁾	
-	-	-	-	-	0.3	1.2	1.6	1.7	1.6	1.7	장기요양보험	
0.6	0.5	0.5	0.5	0.5	0.5	0.5	0.5	0.5	0.4	0.4	교통통신 감면	민간 사회 서비스
8.3	7.8	6.9	6.1	6.0	5.7	5.9	5.5	5.8	6.3	6.2	소계	기업 복지
6.2	5.9	5.1	4.5	4.5	4.3	4.8	4.4	4.5	3.8	2.9	법정퇴직금	
-	-	-	-	-	-	-	-	-	1.1	1.9	퇴직연금	
0.7	0.6	0.5	0.5	0.6	0.6	0.5	0.5	0.5	0.5	0.5	산전후 휴가급여	
1.4	1.3	1.2	1.0	0.9	0.8	0.7	0.6	0.8	0.9	0.9	유급질병 휴가급여	
2.1	1.7	1.7	1.5	1.4	1.2	1.1	1.1	1.0	1.0	0.8	자동차 책임보험금	시장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사회복지지출	6,022	7,018	8,662	10,180	12,111	22,546	26,436	31,238
요소 GDP 대비%	3.41	3.27	3.54	3.66	3.69	5.87	6.17	6.62
총공공지출	5,302	6,176	7,678	8,932	10,540	13,171	15,523	18,444
총법정민간지출	591	708	850	1,075	1,380	1,676	1,932	2,999
총자발적민간지출	129 ¹⁾	134 ¹⁾	134 ¹⁾	172 ¹⁾	190 ¹⁾	7,699	8,981	9,795
조세부담(-)	-	-	-	-	-	867	1,026	1,334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44	43	66
간접세	-	-	-	-	-	823	983	1,267
조세혜택(+)	-	-	-	-	-	230	568	627
T1 ²⁾	-	-	-	-	-	230	568	627
T2 ³⁾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21,908	25,978	30,531
요소 GDP 대비%	-	-	-	-	-	5.71	6.06	6.48
SNA2008 요소GDP(1~3)	176,687	214,429	244,910	278,275	327,911	383,881	428,810	471,516
1.피용자보수	86,291	107,422	122,094	138,499	162,396	193,564	221,868	234,807
2.영업잉여	66,339	79,036	88,486	99,935	119,511	129,969	136,107	154,922
3.고정자본소모	24,057	27,972	34,329	39,841	46,004	60,348	70,836	81,787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2)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 감면임.

3)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임.

〈부표 23〉 계속

(단위: 십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항목
39,012	47,987	45,152	50,378	54,303	61,603	67,923	75,564	총사회복지지출
8.25	9.33	8.00	8.26	8.06	8.57	8.68	9.19	요소 GDP 대비%
25,351	33,272	28,742	33,891	36,517	41,053	50,124	56,247	총공공지출
5,441	3,929	5,225	4,469	4,301	5,058	5,581	5,576	총법정민간지출
8,220	10,786	11,185	12,018	13,485	15,491	12,218	13,741	총자발적민간지출
2,015	2,554	2,215	2,507	2,630	3,180	3,381	3,701	조세부담(-)
109	119	131	244	239	267	374	392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1,906	2,435	2,084	2,264	2,391	2,913	3,007	3,309	간접세
576	712	1,890	2,335	2,446	2,867	3,160	3,934	조세혜택(+)
576	712	1,890	2,335	2,446	2,867	3,160	3,934	T1
-	-	-	-	-	-	-	-	T2
37,573	46,145	44,827	50,206	54,119	61,289	67,702	75,797	순사회복지지출
7.94	8.97	7.94	8.23	8.04	8.52	8.65	9.22	요소 GDP 대비%
472,976	514,232	564,490	609,793	673,354	719,126	782,970	822,467	SNA2008 요소GDP(1~3)
223,394	237,609	260,585	285,670	315,334	343,476	372,208	401,450	1.피용자보수
155,285	177,193	195,248	204,469	229,847	236,815	259,928	262,053	2.영업잉여
94,298	99,429	108,657	119,654	128,174	138,836	150,834	158,964	3.고정자본소모

〈부표 23〉 계속

(단위: 십억원)

구성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사회복지지출	89,662	98,611	106,762	122,628	128,892	137,506	152,219	164,789
요소 GDP 대비%	10.41	10.61	10.86	11.88	11.39	11.50	12.31	12.80
총공공지출	67,683	74,335	84,491	98,204	104,800	109,809	121,513	133,393
총법정민간지출	5,911	6,307	6,711	8,047	8,028	8,693	10,184	10,590
총자발적민간지출	16,068	17,969	15,560	16,377	16,064	19,004	20,523	20,806
조세부담(-)	3,981	4,598	5,238	5,787	6,453	6,363	7,433	7,747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449	534	585	589	654	728	866	946
간접세	3,532	4,064	4,652	5,197	5,800	5,636	6,567	6,800
조세혜택(+)	4,383	5,361	6,336	7,144	6,603	7,237	7,863	8,119
T1	4,383	5,361	6,336	7,144	6,603	7,237	7,863	8,119
T2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90,065	99,374	107,860	123,986	129,042	138,380	152,649	165,161
요소 GDP 대비%	10.46	10.69	10.98	12.01	11.40	11.58	12.35	12.83
SNA2008 요소GDP(1~3)	861,211	929,544	982,768	1,032,113	1,131,470	1,195,433	1,236,224	1,287,574
1.피용자보수	426,142	457,914	483,001	500,935	536,350	570,367	599,309	629,400
2.영업잉여	267,705	293,609	296,733	309,430	362,987	372,685	369,525	379,072
3.고정자본소모	167,364	178,020	203,034	221,748	232,133	252,382	267,390	279,102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사회복지지출	-	16.5	23.4	17.5	19.0	86.2	17.3	18.2	24.9	23.0	- 5.9	11.6
요소 GDP 대비%	-	- 4.0	8.1	3.4	1.0	59.0	5.0	7.5	24.5	13.1	- 14.3	3.3
총공공지출	-	16.5	24.3	16.3	18.0	25.0	17.9	18.8	37.5	31.2	- 13.6	17.9
총법정 민간지출	-	19.9	20.0	26.5	28.4	21.4	15.2	55.2	81.4	- 27.8	33.0	- 14.5
총자발적 민간지출	-	3.6	0.6	28.3	10.3	3,948.6	16.7	9.1	- 16.1	31.2	3.7	7.4
조세부담(-)	-	-	-	-	-	-	18.3	30.0	51.1	26.7	- 13.3	13.2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	-3.2	54.8	64.3	8.9	10.1	86.4
간접세	-	-	-	-	-	-	19.5	28.9	50.4	27.8	- 14.4	8.6
조세혜택(+)	-	-	-	-	-	-	147.2	10.4	- 8.1	23.6	165.5	23.6
T1	-	-	-	-	-	-	147.2	10.4	- 8.1	23.6	165.5	23.6
T2	-	-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	18.6	17.5	23.1	22.8	- 2.9	12.0
SNA2008 요소 GDP 대비 %	-	-	-	-	-	-	6.2	6.9	22.7	13.0	- 11.5	3.7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24〉 계속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성항목
7.8	13.4	10.3	11.2	18.7	10.0	8.3	14.9	5.1	6.7	10.7	8.3	총사회복지지출
- 2.4	6.2	1.3	5.9	13.3	1.9	2.4	9.4	-4.1	1.0	7.0	3.9	요소 GDP 대비%
7.7	12.4	22.1	12.2	20.3	9.8	13.7	16.2	6.7	4.8	10.7	9.8	총공공지출
- 3.8	17.6	10.3	-0.1	6.0	6.7	6.4	19.9	- 0.2	8.3	17.2	4.0	총법정 민간지출
12.2	14.9	- 21.1	12.5	16.9	11.8	- 13.4	5.3	- 1.9	18.3	8.0	1.4	총자발적 민간지출
4.9	20.9	6.3	9.5	7.6	15.5	13.9	10.5	11.5	- 1.4	16.8	4.2	조세부담(-)
- 1.9	11.8	40.0	4.9	14.4	18.9	9.7	0.7	10.9	11.3	19.0	9.3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5.6	21.9	3.2	10.0	6.8	15.0	14.5	11.7	11.6	-2.8	16.5	3.5	간접세
4.7	17.2	10.2	24.5	11.4	22.3	18.2	12.8	- 7.6	9.6	8.6	3.3	조세혜택(+)
4.7	17.2	10.2	24.5	11.4	22.3	18.2	12.8	- 7.6	9.6	8.6	3.3	T1
-	-	-	-	-	-	-	-	-	-	-	-	T2
7.8	13.2	10.5	12.0	18.8	10.3	8.5	15.0	4.1	7.2	10.3	8.2	순사회복지지출
- 2.4	6.0	1.5	6.6	13.5	2.2	2.7	9.5	-5.1	1.5	6.7	3.9	SNA2008 요소 GDP 대비 %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사회복지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공공지출	88.0	88.0	88.6	87.7	87.0	58.4	58.7	59.0	65.0	69.3	63.7	67.3
총법정 민간지출	9.8	10.1	9.8	10.6	11.4	7.4	7.3	9.6	13.9	8.2	11.6	8.9
총자발적 민간지출	2.1	1.9	1.6	1.7	1.6	34.1	34.0	31.4	21.1	22.5	24.8	23.9
조세부담(-)	-	-	-	-	-	3.8	3.9	4.3	5.2	5.3	4.9	5.0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0.2	0.2	0.2	0.3	0.2	0.3	0.5
간접세	-	-	-	-	-	3.6	3.7	4.1	4.9	5.1	4.6	4.5
조세혜택(+)	-	-	-	-	-	1.0	2.1	2.0	1.5	1.5	4.2	4.6
T1	-	-	-	-	-	1.0	2.1	2.0	1.5	1.5	4.2	4.6
T2	-	-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97.2	98.3	97.7	96.3	96.2	99.3	99.7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25〉 계속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성항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사회복지지출
67.2	66.6	73.8	74.4	75.5	75.4	79.1	80.1	81.3	79.9	79.8	80.9	총공공지출
7.9	8.2	8.2	7.4	6.6	6.4	6.3	6.6	6.2	6.3	6.7	6.4	총법정민간지출
24.8	25.1	18.0	18.2	17.9	18.2	14.6	13.4	12.5	13.8	13.5	12.6	총자발적민간지출
4.8	5.2	5.0	4.9	4.4	4.7	4.9	4.7	5.0	4.6	4.9	4.7	조세부담(-)
0.4	0.4	0.6	0.5	0.5	0.5	0.5	0.5	0.5	0.5	0.6	0.6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4.4	4.7	4.4	4.4	3.9	4.1	4.4	4.2	4.5	4.1	4.3	4.1	간접세
4.5	4.7	4.7	5.2	4.9	5.4	5.9	5.8	5.1	5.3	5.2	4.9	조세혜택(+)
4.5	4.7	4.7	5.2	4.9	5.4	5.9	5.8	5.1	5.3	5.2	4.9	T1
-	-	-	-	-	-	-	-	-	-	-	-	T2
99.7	99.5	99.7	100.3	100.4	100.8	101.0	101.1	100.1	100.6	100.3	100.2	순사회복지지출

〈부표 2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GDP 대비 %)

연도	SNA2008 GDP	사회복지지출액			GDP 대비 비율		
		사회복지	공공	민간	사회복지	공공	민간
1990	197,712	5,893	5,302	591	2.98	2.68	0.30
1991	238,877	6,884	6,176	708	2.88	2.59	0.30
1992	273,267	8,528	7,678	850	3.12	2.81	0.31
1993	310,074	10,007	8,932	1,075	3.23	2.88	0.35
1994	366,054	11,921	10,540	1,380	3.26	2.88	0.38
1995	428,927	14,847	13,171	1,676	3.46	3.07	0.39
1996	481,141	17,455	15,523	1,932	3.63	3.23	0.40
1997	530,347	21,443	18,444	2,999	4.04	3.48	0.57
1998	524,477	30,792	25,351	5,441	5.87	4.83	1.04
1999	576,873	37,201	33,272	3,929	6.45	5.77	0.68
2000	635,185	33,967	28,742	5,225	5.35	4.52	0.82
2001	688,165	38,360	33,891	4,469	5.57	4.92	0.65
2002	761,939	40,818	36,517	4,301	5.36	4.79	0.56
2003	810,915	46,112	41,053	5,058	5.69	5.06	0.62
2004	876,033	55,706	50,124	5,581	6.36	5.72	0.64
2005	919,797	61,823	56,247	5,576	6.72	6.12	0.61
2006	966,055	73,594	67,683	5,911	7.62	7.01	0.61
2007	1,043,258	80,642	74,335	6,307	7.73	7.13	0.60
2008	1,104,492	91,202	84,491	6,711	8.26	7.65	0.61
2009	1,151,708	106,251	98,204	8,047	9.23	8.53	0.70
2010	1,265,308	112,828	104,800	8,028	8.92	8.28	0.63
2011	1,332,681	118,502	109,809	8,693	8.89	8.24	0.65
2012	1,377,457	131,697	121,513	10,184	9.56	8.82	0.74
2013	1,429,445	143,983	133,393	10,590	10.07	9.33	0.74

〈부표 27〉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단위: 십억원,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Minim[3/2]	10.83	11.20	11.30	10.52	11.09	11.04	11.60	11.55	11.87	11.70
Medium[5/2]	14.07	14.48	14.57	13.39	13.89	13.95	14.22	13.83	14.09	13.78
Maxim[5/1]	15.18	15.68	15.73	14.78	15.27	15.31	15.76	15.31	15.68	15.47
1. 민간최종 소비지출 (국민계정)	219,890	252,658	279,564	261,382	299,760	341,442	376,803	423,157	434,864	449,981
2. 민간소비 +정부소비 -공무원임금	237,219	273,506	301,920	288,434	329,616	374,579	417,683	468,370	484,067	505,064
민간최종소비지출	219,890	252,658	279,564	261,382	299,760	341,442	376,803	423,157	434,864	449,981
정부최종소비지출	44,609	51,988	56,289	62,071	66,379	72,019	83,865	92,460	101,103	112,039
공무원임금	27,280	31,141	33,933	35,019	36,524	38,882	42,985	47,246	51,901	56,957
3. (5110+5121)	25,692	30,631	34,104	30,356	36,560	41,367	48,448	54,083	57,438	59,082
5110 General taxes	14,637	16,790	19,488	15,707	20,369	23,212	25,835	31,609	33,447	34,572
5121 Excises	11,055	13,841	14,616	14,650	16,191	18,155	22,613	22,474	23,991	24,510
5.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33,388	39,609	43,978	38,622	45,785	52,271	59,377	64,773	68,197	69,618

자료: <http://stats.oecd.org>(Revenue statistics, 2015.6.30. 다운로드)

〈부표 27〉 계속

(단위: 십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분
11.30	10.93	11.09	10.86	10.49	11.25	10.17	10.58	10.23	Minim[3/2]
13.16	12.83	13.03	12.96	12.63	13.51	12.74	12.93	12.58	Medium[5/2]
14.79	14.52	14.80	14.87	14.63	15.67	14.81	15.04	14.66	Maxim[5/1]
480,170	509,907	546,429	579,053	594,883	636,713	679,142	707,614	727,800	1. 민간최종 소비지출 (국민계정)
539,883	577,176	620,791	664,554	689,266	738,715	788,959	823,169	848,062	2. 민간소비 +정부소비 -공무원임금
480,170	509,907	546,429	579,053	594,883	636,713	679,142	707,614	727,800	민간최종소비지출
122,175	133,501	145,311	161,751	174,706	183,109	194,381	204,324	214,467	정부최종소비지출
62,463	66,232	70,949	76,251	80,323	81,106	84,564	88,769	94,205	공무원임금
61,006	63,076	68,822	72,164	72,333	83,140	80,269	87,112	86,766	3. (5110+5121)
36,118	38,093	40,942	43,820	46,992	51,800	54,868	58,702	59,105	5110 General taxes
24,888	24,983	27,880	28,344	25,341	31,340	25,401	28,410	27,661	5121 Excises
71,041	74,041	80,861	86,096	87,043	99,769	100,551	106,402	106,717	5.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제11777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조사표 (자발적민간부문 실질조사)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인 사 말 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따른 복지관련 통계들을 생산하여 국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OECD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을 파악하고자 모금기관 및 기부금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국의 사회복지통계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고 경 환 배상

※ 본 조사표는 도착 후 7일 이내에 작성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 **홍영희, 이진경** 연구원

- 전화: 02-380-8170, 8193

- 팩스: 02-382-4581, 02-354-4835 / 이메일: socx@kihasa.re.kr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관 주소 :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면) _____ 번지

※ 조사표 작성자 성명 : _____ (전화: - -)

※ 조사표는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요.

I. 일반사항

1. 귀 법인/기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 _____

2. 지난 1년간(1.1~12.31) 귀 법인/기관은 법정기부금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문 2-1번으로)

② 아니오(☐ 문 3번으로)

※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 (일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2-1. 귀 법인/기관에서 법정기부금을 모집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② 무료 또는 실비 이용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③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④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민법 제 32조의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⑦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3. 지난 1년간(1.1~12.31) 귀 법인/기관은 지정기부금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문 3-1번으로)

② 아니오(☐ 문 4번으로)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3-1. 귀 법인/기관에서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③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지정)

④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⑥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⑦ 사회복지자문화예술교육종교자산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4. 귀 법인/기관의 설립 일자 는 언제입니까? : _____ 년 _____ 분기

5. 귀 법인/기관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 _____ 년 _____ 분기

6. 귀 법인/기관의 모집 등록기간은 언제입니까? ()년 ()월 ~ ()년 ()월

⑧ 기타(구체적으로 :)

14. 귀 법인/단체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중복체크 가능)

- ① 당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지출
 ② 당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속 기관 및 사업체에 지출(☐ 문 14-1번으로)
 ③ 당 법인/단체와 관련 없는 타 기관 및 사업체에 지출
 ④ 기타()

14-1. 귀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다면 모두 고르고, 시설명을 적어주세요.

구 분		시 설 유 형		
1	노인복지	① 양로시설 ^{주)} ④ 노인요양시설 ^{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 ⑥ 기타
2	아동복지	① 아동양육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⑦ 공동생활가정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⑧ 종합아동복지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⑨ 기타
3	장애인복지	① 지체장애인시설 ④ 지적장애인시설 ⑦ 기타	② 시각장애인시설 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시설 ⑥ 장애영유아생활시설
4	청소년복지	① 청소년쉼터	② 기타	
5	여성·가족복지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④ 모(부)자보호시설 ⑦ 공동생활가정	②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⑤ 모(부)자자립시설 ⑧ 일시보호시설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⑥ 미혼모(자)시설 ⑨ 기타
6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	① 부랑인시설	② 기타	
7	정신보건	① 정신요양시설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지귀시설	③ 기타
8	결핵한센	① 결핵시설	② 한센시설	

주: '08.4.4일 이전 설치 신고되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양로시설과 노인요양 시설 중 무료 및 실비 시설 포함

※ 시설명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Ⅱ. 수 입 조 사 표 (2013년 1.1~12.31)

재 원 유 형		예 시	2013년 (단위: 천원)
합 계		수입조사표(5쪽)합계와 지출조사표(6쪽)의 총지출금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정부 지원금		국비, 지방비, 복권기금 등에 의한 시설운영비 지원	
법인 유입금		법인, 예당, 교구, 종단 등 법인에서 유입된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모금 및 후원금 내역	계		
	개 인	개인 후원금	
	종교기관	종교기관 후원금	
	기업, 재단	기업이나 기업재단 후원금	
	공공기관 (시·군·구, 학교 등)	공공기관 자발적 후원금	
	민간모금 단 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등 민간모금단체의 후원금 (해당기관은 입력하지 마세요)	
	기 타		
개 인 회 비			
잡 수 익		- 불용품 매각대 - 기타 예금이자수입 등	
이 월 금		전년도이월금	

주: 1) 보조금은 그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법인유입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모금 및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한 내역을 작성함.

Ⅲ. 지출조사표

(2013년 1.1~12.31)

지출비목		예시	2013년 (단위: 천원)
총 지출금			
기관 운영비	직원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전기·수도 및 시설운영비 등	
	기타		
사업비	계		
	노인	경로교실 운영사업, 노인결연후원사업, 무의탁 및 독거노인지원	
	유족	소방공무원, 경찰, 군인 및 군무원의 유족지원	
	장애	지적장애인 긴급지원사업, 장애인행사 지원	
	보건의료	소아암환우치료지원사업, 건강증진지원사업	
	가족, 청소년, 아동, 한부모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지원, 한부모 여성가장지원금, 청소년 방과후공부방지원	
	주거	주택개보수지원, 주택임차보증금지원사업비	
	해외	해외구호개발사업	
	북한	북한지원	
	기타	자립 자활사업, 부랑인지원, 긴급구호	
타기관 후원(기부금 등)			
적립금			
이월금			
예비비			
기타			

- 감사합니다 -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부표 28〉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11	1.93	0.25	0.58	3.74	0.67	0.30	0.27		0.49	8.24
	2013	2.23	0.23	0.61	3.84	1.13	0.46	0.27		0.56	9.33
호주		5.0	0.2	2.6	5.8	2.8	0.3	0.5	0.3	0.3	17.8
오스트리아		12.0	1.9	2.4	6.7	2.7	0.8	0.9	0.1	0.3	27.7
벨기에		8.3	2.0	2.8	8.0	2.9	0.9	3.6	0.2	0.7	29.4
캐나다		4.0	0.3	0.8	7.2	1.2	0.2	0.7	0.3	2.6	17.4
칠레		2.6	0.7	0.8	3.2	1.3	0.3	0.0	1.0	0.3	10.1
체코공화국		8.4	0.7	2.0	6.2	1.6	0.3	0.7	0.1	0.1	20.1
덴마크		8.4	0.0	4.7	6.7	4.0	2.2	2.2	0.7	1.0	30.1
에스토니아		6.9	0.1	2.2	4.5	2.3	0.2	0.3	0.1	0.1	16.8
핀란드		10.6	0.9	4.0	5.7	3.2	1.0	1.7	0.5	0.8	28.3
프랑스		12.5	1.7	1.7	8.6	2.9	0.9	1.6	0.8	0.6	31.4
독일		8.6	2.0	2.0	8.0	2.2	0.8	1.2	0.6	0.2	25.5
그리스		12.3	2.3	1.0	6.6	1.4	0.3	1.1	0.3	0.5	25.7
헝가리		9.3	1.3	2.1	4.9	3.3	0.4	0.8	0.4	0.1	22.6
아이슬란드		2.6	0.0	2.8	5.6	3.5	0.1	1.5	1.5	0.6	18.1
아일랜드		4.7	1.1	2.3	5.8	3.9	0.9	2.7	0.4	0.6	22.3
이스라엘		4.3	0.7	3.0	4.4	2.2	0.1	0.3	0.0	0.6	15.6
이탈리아		13.4	2.6	1.8	7.0	1.5	0.4	0.8	0.0	0.0	27.5
일본		10.4	1.4	1.0	7.7	1.4	0.2	0.3	0.1	0.5	23.1
룩셈부르크		5.9	1.8	2.7	5.8	3.6	0.6	1.1	0.3	0.5	22.5
멕시코		1.6	0.3	0.1	2.8	1.1	0.0		1.1	0.8	7.7
네덜란드		6.2	0.2	3.3	7.9	1.6	1.1	1.5	0.4	1.3	23.5
뉴질랜드		4.7	0.1	2.5	8.3	3.3	0.3	0.4	0.9	0.2	20.7
노르웨이		7.1	0.3	3.9	5.6	3.1	0.6	0.4	0.2	0.7	21.8
폴란드		9.0	1.9	2.5	4.5	1.3	0.4	0.2	0.1	0.2	20.1
포르투갈		11.3	1.8	2.0	6.3	1.2	0.6	1.2	0.0	0.3	24.8
슬로바키아공화국		6.4	0.9	1.9	5.6	2.1	0.3	0.6	0.0	0.4	18.1
슬로베니아		9.8	1.7	2.2	6.4	2.2	0.4	0.7	0.0	0.6	24.0
스페인		8.9	2.3	2.6	6.8	1.4	0.9	3.5	0.2	0.2	26.8
스웨덴		9.4	0.4	4.3	6.7	3.6	1.2	0.4	0.4	0.7	27.2
스위스		6.5	0.3	2.6	6.5	1.4	0.6	0.6	0.1	0.7	19.3
터키		6.2	1.4	0.3	4.2	0.0	0.0	0.1	0.0	0.0	12.2
영국		6.1	0.1	2.5	7.7	4.0	0.4	0.4	1.5	0.2	22.7
미국		6.0	0.7	1.4	8.0	0.7	0.1	0.8	0.3	0.9	19.0
OECD평균		7.4	1.0	2.2	6.2	2.2	0.5	1.0	0.4	0.5	21.4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2) 한국은 SNA2008 GDP 대비 %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5.10.2. 다운로드)

〈부표 29〉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11	0.40		0.10	0.09	0.05				0.01	0.65
	2013	0.49		0.12	0.08	0.05				0.01	0.74
호주		0.4		..							0.4
오스트리아				0.9							0.9
벨기에		0.0	0.0	0.0		0.0				0.0	0.0
캐나다											
칠레		1.1	0.2	0.2	1.1	0.0	0.0	0.2	0.0	0.0	2.8
체코공화국		0.5	0.0	0.0						0.1	0.6
덴마크				0.2							0.2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0.1	0.1	0.2		..				0.0	0.3
독일				1.2		0.1					1.2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0.0	1.4							1.4
아일랜드											
이스라엘				0.0				0.2			0.2
이탈리아		1.1		0.3							1.4
일본		0.6	0.0	0.0		0.0				0.0	0.7
룩셈부르크				0.8							0.8
멕시코											
네덜란드		0.0	0.0	0.6							0.7
뉴질랜드											
노르웨이				1.3							1.3
폴란드											
포르투갈				0.3							0.3
슬로바키아공화국		0.1		0.0		0.0					0.2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0.4							0.4
스위스		4.3	0.7	1.0		..					6.0
터키											
영국		0.7		0.1				0.1			1.0
미국				0.2	0.2						0.3
OECD 평균		0.8	0.1	0.4	0.4	0.0	0.0	0.2	0.0	0.0	1.0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2) 한국은 SNA2008 GDP 대비 %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5.10.2. 다운로드)

〈부표 30〉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11	2.34	0.25	0.68	3.83	0.72	0.30	0.27		0.51	8.89
	2013	2.72	0.23	0.72	3.92	1.17	0.46	0.27		0.57	10.07
호주		5.4	0.2	2.6	5.8	2.8	0.3	0.5	0.3	0.3	18.1
오스트리아		12.0	1.9	3.2	6.7	2.7	0.8	0.9	0.1	0.3	28.6
벨기에		8.3	2.0	2.8	8.0	2.9	0.9	3.6	0.2	0.7	29.4
캐나다		4.0	0.3	0.8	7.2	1.2	0.2	0.7	0.3	2.6	17.4
칠레		3.7	0.9	1.0	4.3	1.3	0.3	0.2	1.0	0.3	12.9
체코공화국		8.9	0.7	2.0	6.2	1.6	0.3	0.7	0.1	0.2	20.7
덴마크		8.4	0.0	4.9	6.7	4.0	2.2	2.2	0.7	1.0	30.3
에스토니아		6.9	0.1	2.2	4.5	2.3	0.2	0.3	0.1	0.1	16.8
핀란드		10.6	0.9	4.0	5.7	3.2	1.0	1.7	0.5	0.8	28.3
프랑스		12.5	1.8	1.5	8.6	2.9	0.9	1.6	0.8	0.6	31.4
독일		8.6	2.0	3.2	8.0	2.2	0.8	1.2	0.6	0.2	26.8
그리스		12.3	2.3	1.0	6.6	1.4	0.3	1.1	0.3	0.5	25.7
헝가리		9.3	1.3	2.1	4.9	3.3	0.4	0.8	0.4	0.1	22.6
아이슬란드		2.6	0.0	4.1	5.6	3.5	0.1	1.5	1.5	0.6	19.5
아일랜드		4.7	1.1	2.3	5.8	3.9	0.9	2.7	0.4	0.6	22.3
이스라엘		4.3	0.7	3.0	4.4	2.2	0.1	0.5	0.0	0.6	15.8
이탈리아		14.5	2.6	2.2	7.0	1.5	0.4	0.8	0.0	0.0	29.0
일본		11.0	1.4	1.0	7.7	1.4	0.2	0.3	0.1	0.6	23.7
룩셈부르크		5.9	1.8	3.6	5.8	3.6	0.6	1.1	0.3	0.5	23.3
멕시코		1.6	0.3	0.1	2.8	1.1	0.0		1.1	0.8	7.7
네덜란드		6.2	0.2	3.9	7.9	1.6	1.1	1.5	0.4	1.3	24.1
뉴질랜드		4.7	0.1	2.5	8.3	3.3	0.3	0.4	0.9	0.2	20.7
노르웨이		7.1	0.3	5.1	5.6	3.1	0.6	0.4	0.2	0.7	23.1
폴란드		9.0	1.9	2.5	4.5	1.3	0.4	0.2	0.1	0.2	20.1
포르투갈		11.3	1.8	2.3	6.3	1.2	0.6	1.2	0.0	0.3	25.1
슬로바키아공화국		6.5	0.9	1.9	5.6	2.1	0.3	0.6	0.0	0.4	18.2
슬로베니아		9.8	1.7	2.2	6.4	2.2	0.4	0.7	0.0	0.6	24.0
스페인		8.9	2.3	2.6	6.8	1.4	0.9	3.5	0.2	0.2	26.8
스웨덴		9.4	0.4	4.7	6.7	3.6	1.2	0.4	0.4	0.7	27.6
스위스		10.8	1.0	3.6	6.5	1.4	0.6	0.6	0.1	0.7	25.3
터키		6.2	1.4	0.3	4.2	0.0	0.0	0.1	0.0	0.0	12.2
영국		6.8	0.1	2.6	7.7	4.0	0.4	0.5	1.5	0.2	23.7
미국		6.0	0.7	1.6	8.1	0.7	0.1	0.8	0.3	0.9	19.3
OECD평균		7.7	1.0	2.5	6.2	2.2	0.5	1.0	0.4	0.5	22.1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2) 한국은 SNA2008 GDP 대비 %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5.10.2. 다운로드)

〈부표 31〉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11	0.06		0.00	0.05				1.31	1.43
	2013	0.02		0.01	0.05				1.37	1.46
호주	2.1			0.8					0.0	2.9
오스트리아	0.7			0.5					0.0	1.1
벨기에	1.1		0.4	0.4					0.1	2.1
캐나다	3.3			1.3					0.0	4.6
칠레				1.3						1.3
체코공화국			0.0	0.0					0.1	0.2
덴마크	4.7		0.0	0.2					0.0	4.9
에스토니아				0.0						0.0
핀란드	0.2		0.7	0.2					0.1	1.2
프랑스	0.1		0.8	1.5					0.9	3.3
독일	0.8		0.1	1.1					0.0	2.0
그리스	0.3		0.5	0.3					0.8	1.9
헝가리			0.0	0.2					0.0	0.2
아이슬란드	3.1		0.8						0.6	4.6
아일랜드	0.8			1.1					0.0	1.9
이스라엘				0.8						2.1
이탈리아	0.3		0.0	0.1					0.4	0.8
일본	2.7		..	0.2					0.0	3.0
룩셈부르크	0.4		0.1	0.2					0.2	0.9
멕시코				0.2						0.2
네덜란드	4.3		0.4	0.6					1.4	6.8
뉴질랜드				0.5						0.5
노르웨이	0.7		0.2						..	0.9
폴란드				0.0						0.0
포르투갈	0.3		0.1	0.5					0.8	1.6
슬로바키아공화국	0.3		0.2	1.2					0.3	0.8
슬로베니아	0.5					..	1.2
스페인	0.0		..	0.0					..	0.5
스웨덴	2.6		0.2	0.9					0.0	2.8
스위스	0.0		0.0	0.0					0.1	1.0
터키										
영국	4.5		0.4	0.3					0.0	5.3
미국	4.5		0.3	5.8					0.0	10.5
OECD평균	1.6		0.3	0.7					1.0	2.2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2) 한국은 SNA2008 GDP 대비 %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5.10.2. 다운로드)

〈부표 32〉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11	2.40	0.25	0.69	3.88	0.72	0.30	0.27	-	1.82	10.32
	2013	2.74	0.23	0.73	3.97	1.17	0.46	0.27	-	1.95	11.53
호주		7.5	0.2	2.6	6.6	2.8	0.3	0.5	0.3	0.3	21.0
오스트리아		12.7	1.9	3.2	7.2	2.7	0.8	0.9	0.1	0.3	29.7
벨기에		9.4	2.0	3.2	8.4	2.9	0.9	3.6	0.2	0.8	31.5
캐나다		7.3	0.3	0.8	8.5	1.2	0.2	0.7	0.3	2.6	22.0
칠레		3.7	0.9	1.0	5.6	1.3	0.3	0.2	1.0	0.3	14.2
체코공화국		8.9	0.7	2.0	6.2	1.6	0.3	0.7	0.1	0.3	20.9
덴마크		13.1	0.0	4.9	6.9	4.0	2.2	2.2	0.7	1.0	35.2
에스토니아		6.9	0.1	2.2	4.5	2.3	0.2	0.3	0.1	0.1	16.8
핀란드		10.8	0.9	4.7	5.9	3.2	1.0	1.7	0.5	0.9	29.5
프랑스		12.6	1.8	2.3	10.1	2.9	0.9	1.6	0.8	1.5	34.7
독일		9.4	2.0	3.3	9.1	2.2	0.8	1.2	0.6	0.2	28.8
그리스		12.6	2.3	1.5	6.9	1.4	0.3	1.1	0.3	1.3	27.6
헝가리		9.3	1.3	2.1	5.1	3.3	0.4	0.8	0.4	0.1	22.8
아이슬란드		5.7	0.0	4.9	5.6	3.5	0.1	1.5	1.5	1.2	24.1
아일랜드		5.5	1.1	2.3	6.9	3.9	0.9	2.7	0.4	0.6	24.2
이스라엘		4.3	0.7	3.0	5.2	2.2	0.1	0.5	0.0	0.6	17.9
이탈리아		14.8	2.6	2.2	7.1	1.5	0.4	0.8	0.0	0.4	29.8
일본		13.7	1.4	1.0	7.9	1.4	0.2	0.3	0.1	0.6	26.7
룩셈부르크		6.3	1.8	3.7	6.0	3.6	0.6	1.1	0.3	0.7	24.2
멕시코		1.6	0.3	0.1	3.0	1.1	0.0	0.0	1.1	0.8	7.9
네덜란드		10.5	0.2	4.3	8.5	1.6	1.1	1.5	0.4	2.7	30.9
뉴질랜드		4.7	0.1	2.5	8.8	3.3	0.3	0.4	0.9	0.2	21.2
노르웨이		7.8	0.3	5.3	5.6	3.1	0.6	0.4	0.2	0.7	24.0
폴란드		9.0	1.9	2.5	4.5	1.3	0.4	0.2	0.1	0.2	20.1
포르투갈		11.6	1.8	2.4	6.8	1.2	0.6	1.2	0.0	1.1	26.7
슬로바키아공화국		6.8	0.9	2.1	6.8	2.1	0.3	0.6	0.0	0.7	19.0
슬로베니아		9.8	1.7	2.2	6.9	2.2	0.4	0.7	0.0	0.6	25.2
스페인		8.9	2.3	2.6	6.8	1.4	0.9	3.5	0.2	0.2	27.3
스웨덴		12.0	0.4	4.9	7.6	3.6	1.2	0.4	0.4	0.7	30.4
스위스		10.8	1.0	3.6	6.5	1.4	0.6	0.6	0.1	0.8	26.3
터키		6.2	1.4	0.3	4.2	0.0	0.0	0.1	0.0	0.0	12.2
영국		11.3	0.1	3.0	8.0	4.0	0.4	0.5	1.5	0.2	29.0
미국		10.5	0.7	1.9	13.9	0.7	0.1	0.8	0.3	0.9	29.8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2) 한국은 SNA2008 GDP 대비 %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5.10.2. 다운로드)

〈부표 33〉 OECD 국가의 순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1993 GDP 대비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호주	16.1	16.5	15.9	16.0	17.1	17.4
오스트리아	21.1	22.0	21.8	21.3	23.6	22.8
벨기에	21.6	22.4	22.2	22.1	25.4	25.7
캐나다	15.5	15.6	15.5	15.9	18.1	17.1
칠레	10.8	9.7
체코공화국	17.7	18.4	17.1	16.5	19.0	18.7
덴마크	19.9	21.0	20.7	20.1	23.4	23.4
에스토니아	16.6	14.2
핀란드	18.0	19.2	19.5	18.7	22.7	22.6
프랑스	25.5	26.6	26.6	25.8	28.5	27.9
독일	24.8	25.9	25.2	23.0	25.2	23.7
그리스	22.5	22.0
헝가리	20.9	20.5
아일랜드	13.6	15.8	14.6	13.6	16.5	16.2
아일랜드	12.9	14.0	14.2	15.0	21.5	20.7
이스라엘	13.9	13.7
이탈리아	20.0	20.9	21.2	21.0	24.0	23.6
일본	16.9	17.4	17.9	18.1	21.2	22.3
한국	5.3	5.4	6.5	7.7	9.6	9.1
룩셈부르크	..	18.3	17.7	15.6	19.6	18.0
멕시코	6.7	7.1	7.3	7.5	7.7	7.5
네덜란드	17.1	18.1	18.6	18.8	20.4	20.7
뉴질랜드	15.4	15.2	15.5	16.1	18.7	18.4
노르웨이	17.4	19.6	17.3	16.4	18.9	18.1
폴란드	16.9	16.1	17.5	16.8
포르투갈	..	19.8	20.5	20.2	23.2	22.2
슬로바키아	16.2	15.9	14.5	14.6	17.5	16.8
슬로베니아	20.1	20.6
스페인	16.9	18.1	18.5	19.1	24.5	24.5
스웨덴	22.6	23.4	22.6	21.7	23.8	22.5
터키	8.9	9.8	12.2	11.1
영국	17.8	18.5	19.1	19.0	22.8	21.4
미국	15.8	17.0	16.7	16.9	19.7	20.1
OECD평균	17.5	17.3	20.1	19.6

주: 데이터 추출일 2015년 10월 2일

자료: OECD.Stat

〈부표 34〉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비율(SNA1993 GDP 대비 비율)

(단위: GDP 대비%)

국가명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호주	19.9	19.3	18.2	18.5	19.2	19.8
오스트리아	22.5	23.4	23.2	22.7	25.1	24.3
벨기에	23.1	24.4	24.2	23.9	27.3	27.4
캐나다	19.5	19.6	19.6	19.9	22.1	20.7
칠레	14.3	13.1
체코공화국	17.7	18.6	17.3	16.8	19.5	19.3
덴마크	21.1	22.3	22.0	22.4	26.0	26.1
에스토니아	16.6	14.2
핀란드	18.7	20.0	20.3	19.4	23.6	23.4
프랑스	28.0	29.1	29.4	28.9	31.6	31.3
독일	26.6	27.7	27.1	24.7	27.2	25.3
그리스	24.2	23.7
헝가리	21.1	20.6
아일랜드	16.7	19.3	17.9	17.1	20.8	20.4
아일랜드	13.8	15.1	15.2	16.0	22.8	21.9
이스라엘	16.0	15.7
이탈리아	21.4	22.4	22.7	22.6	25.8	25.4
일본	20.5	20.4	20.5	21.1	24.6	25.6
한국	7.3	7.6	8.4	10.1	11.8	11.6
룩셈부르크	..	19.1	18.5	16.4	20.7	19.1
멕시코	6.7	7.1	7.4	7.6	7.9	7.7
네덜란드	22.0	23.4	24.2	23.5	25.4	25.8
뉴질랜드	15.8	15.6	15.9	16.5	19.1	18.8
노르웨이	18.6	21.1	18.5	17.5	20.3	19.3
폴란드	17.0	16.1	17.5	16.8
포르투갈	..	21.4	22.2	21.9	25.0	24.0
슬로바키아	16.9	16.8	15.4	15.4	18.3	17.6
슬로베니아	21.2	21.6
스페인	17.2	18.2	18.7	19.3	24.8	24.8
스웨덴	24.3	25.2	24.4	23.4	25.9	24.6
터키	8.9	9.8	12.2	11.1
영국	23.3	23.5	23.8	23.2	27.6	26.1
미국	23.0	24.8	24.5	25.0	27.8	28.8
OECD평균	19.5	19.3	22.2	21.7

주: 데이터 추출일 2015년 10월 2일

자료: OECD.Stat

〈부표 35〉 공공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호주	10.2	10.1	11.1	11.6	12	12.1	11.9	12.1	11.4	11.6
오스트리아	22.1	23.4
벨기에	23.5	25.1	25.7	26	25.2	26	25.8	25.6	25.4	24.6
캐나다	13.2	13.7	16	16.2	15.9	16.4	16.4	16.1	15.9	16.2
칠레	11.9	10.6	10
체코
덴마크	24.4	24.4	24.5	24.7	23.5	22.9	22.8	23.6	24.8	25.1
에스토니아
핀란드	18	18.1	19.1	20.1	20.9	22	22.5	23.1	22.5	22.2
프랑스	20.6	21.7	22.3	22.5	22.8	25.8	25.9	26	25.8	24.8
독일	21.8	22.4	22.4	22.1	21.9	22.2	22.2	22.7	22.7	21.6
그리스	10.3	12.4	14.6	15.2	15.5	16.1	16	15.9	14.6	15.5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16	16.1	16.9	17	16.5	20.8	20.9	20.2	18.9	17.5
이스라엘
이탈리아	18	19.4	19.9	20.9	20.5	20.8	20.8	21	20.9	21.1
일본	10.3	10.7	11.1	11.3	11.2	11.1	11.5	11.5	11.2	11
한국
룩셈부르크	20.3	21.7	21	21.2	19.9	19.8	19.1	19.8	19.6	18.9
멕시코	1.7	1.6	1.7	1.9	2.5
네덜란드	24.8	25.5	27	27.4	26	25.3	24.7	24.7	24.3	24
뉴질랜드	16.9	17.1	17.9	17.7	17	17.5	17.4	18.1	19.4	20.8
노르웨이	16.3	17.5	20.3	21.3
폴란드
포르투갈	9.6	10.3	9.7	9.9	9.8	10	10.6	10.8	11	10.6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15.4	16.5	16.6	17.3	17.1	17.6	17.4	17.2	17.7	17.9
스웨덴	26	26.7	26.7	27	26.2	28.2	28.3	28.5	29	28.4
스위스	13.5	13.2	13.9	14.3	14.5	14.3	14.5	14.6	14.7	14.3
터키	3.1	2.7	2.8	3	3.4	3.1	3.2	3.3	3.9	4.6
영국	16.3	17.7	18.2	19.1	19	19.2	19.2	18.5	17.3	16.6
미국	12.8	13.2	13.6	13.8	12.9	12.8	12.9	12.8	12.8	12.8
OECD평균	15.4	15.9	16.4	16.7	16.5	17	17	17.2	17.1	17

주: 데이터 추출일 2015년 10월 2일

자료: OECD.Stat

〈부표 35〉 계속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호주	13.1	14.3	15.3	15.5	15.2	16.1	16.1	15.9	16.6	16.3
오스트리아	23.4	23.7	24.3	25.6	26.5	26.1	26.3	26.2	26	26.4
벨기에	24.9	25.6	24.6	25.7	25.1	25.6	26.3	25.2	25.2	25.1
캐나다	17.6	19.8	20.5	20.4	19.3	18.4	17.6	17	17	16.1
칠레	9.8	9.8	9.4	9.5	9.2	11	11.9	11.6	11.9	12.7
체코	14.6	15.7	16	16.3	16.3	16.6	16.6	17.5	17.8	18.6
덴마크	25	25.8	26.2	27.9	29.2	28.7	28	26.9	26.2	26.8
에스토니아	15.2
핀란드	23.8	28.8	32.9	33	32.4	29.7	29.6	27.5	25.3	24.7
프랑스	24.9	25.5	26.3	27.7	27.7	29	29.4	29.3	29.5	29.5
독일	21.4	23.1	24.8	25.5	25.6	25.9	26.5	26.1	26.1	26.3
그리스	16.5	15.9	16.1	17	17.1	17.4	18	18	18.6	19.2
헝가리	21.2
아이슬란드	13.5	13.9	14.5	14.8	14.7	15	14.7	14.4	14.5	14.8
아일랜드	17.2	18.1	18.9	18.8	18.4	17.9	16.9	15.8	14.9	14
이스라엘	16.7	17.0	17.4	17.0	17.0
이탈리아	21.4	21.7	22.5	22.8	22.6	21.7	22.2	22.9	23	23.4
일본	11.1	11.3	11.9	12.6	13.2	14.1	14.3	14.5	15.2	16
한국	2.8	2.7	2.9	3	3	3.2	3.4	3.6	5.1	6.1
룩셈부르크	19.1	19.5	19.8	20.1	20	20.8	20.9	21.2	21	20.5
멕시코	3.2	3.6	3.9	4.2	4.6	4.2	4	4	4.5	5
네덜란드	25.6	25.5	26	26.1	24.7	23.8	22.6	21.8	21.4	20.5
뉴질랜드	21.2	21.5	21.4	19.7	18.9	18.4	18.3	19.3	19.8	19.1
노르웨이	21.9	22.9	23.8	23.7	23.6	22.9	22.1	21.6	23.1	23
폴란드	14.9	21	24.6	24.1	23	22.3	22.5	21.8	21	21.4
포르투갈	12.4	13.3	13.9	15.3	15.4	16.2	16.8	16.6	17	17.4
슬로바키아	18.8	18.4	18	18.1	18.5
슬로베니아	0	0	0	0	0	5.8	22.3	22.6	22.8	22.7
스페인	19.7	20.5	21.7	22.9	21.9	21.3	21.2	20.6	20.5	20.3
스웨덴	28.5	30.4	34.1	35.5	34.2	31.8	31.4	30.2	30	29.4
스위스	12.8	13.8	15.2	16.6	16.5	16.9	17.5	18	18.1	18
터키	5.5	6.1	6.3	6.2	5.9	5.6	7.2	8	8.3	9.6
영국	16.3	17.7	19.3	19.9	19.4	19.2	19	18.3	18.6	18.3
미국	13.1	14.1	14.8	15	15	15	14.8	14.4	14.5	14.2
OECD평균	17.5	18.4	19.2	19.8	19.5	19.3	19.3	19	19	19

〈부표 35〉 계속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17.2	16.7	16.9	17.1	17	16.4	16.3	16.3	17.5	17.4	17.2	17.8
오스트리아	26.1	26.4	26.7	27.3	27.1	26.8	26.5	25.9	26.4	28.6	28.6	27.7
벨기에	24.5	25	25.4	25.9	25.6	25.6	25.5	25.4	26.7	29.1	28.8	29.4
캐나다	15.8	16.3	16.3	16.3	16.3	16.2	16.3	16.2	16.9	18.5	17.9	17.4
칠레	12.7	12.9	12.9	9.8	9.1	8.7	8.2	8.3	9.6	11.2	10.5	10.1
체코	18.8	18.8	19.4	19.6	18.8	18.5	18.1	17.9	17.9	20.3	19.9	20.1
덴마크	26	26.5	27	27.9	27.7	27.3	26.6	26	26.2	29.7	29.9	30.1
에스토니아	13.8	13	12.8	12.9	13.4	13.1	12.7	12.7	15.7	19.8	18.8	16.8
핀란드	23.3	23.3	23.9	24.8	24.9	25	24.7	23.7	24.3	28.3	28.7	28.3
프랑스	28.4	28.4	29.2	29.5	29.6	29.6	29.0	28.8	29.1	31.5	31.7	31.4
독일	26.2	26.3	26.9	27.4	26.8	27	25.8	24.8	25	27.6	26.8	25.5
그리스	19.2	20.6	20.2	19.9	20	21.1	21.3	21.5	22.2	24.4	24.2	25.7
헝가리	20.5	20.2	21.2	22.2	21.4	22.3	22.6	22.9	23.1	24.7	23.5	22.6
아이슬란드	15	15.1	16.6	17.7	17.4	16.3	15.9	15.3	15.8	18.5	17.9	18.1
아일랜드	13.1	14.1	15	15.4	15.8	15.8	15.9	16.6	19.5	23.4	23.3	22.3
이스라엘	16.8	18.2	18.3	17.8	16.6	16.0	15.7	15.3	15.2	15.8	15.7	15.6
이탈리아	23.3	23.5	24	24.4	24.7	24.9	25	24.8	25.8	27.8	27.8	27.5
일본	16.3	17.1	17.5	17.7	17.9	18.4	18.3	18.6	19.7	22	22.1	23.1
한국	4.8	5.2	5.1	5.4	6	6.5	7.4	7.6	8.2	9.4	9	9
룩셈부르크	19.6	20.7	21.7	22.4	22.8	22	20.7	19.5	21.8	24.3	23	22.5
멕시코	5	5.7	6	6.5	6.4	6.5	6.6	6.7	7.2	7.7	7.8	7.7
네덜란드	19.8	19.7	20.5	21.3	21.2	21.8	21.5	21.3	20.9	23.1	23.7	23.5
뉴질랜드	18.9	18.2	18.3	17.8	17.5	17.9	18.8	18.4	19.9	21	21	20.7
노르웨이	20.8	21.6	23.1	24.1	22.7	21.1	19.8	20	19.5	22.8	22.4	21.8
폴란드	20.3	21.8	22.1	22.1	21.2	20.7	20.5	19.4	19.9	20.7	20.7	20.1
포르투갈	18.6	19.1	20.5	21.7	22	22.8	22.6	22.4	22.8	25.3	25.2	24.8
슬로바키아	17.8	17.5	17.6	17	16.3	16.1	15.9	15.6	15.7	18.5	18.4	18.1
슬로베니아	22.8	22.9	22.7	22.3	21.9	21.8	21.4	20	20.2	23	23.9	24
스페인	20	19.6	19.9	20.4	20.6	20.9	20.9	21.3	22.8	26.1	26.7	26.8
스웨덴	28.2	28.3	29	29.8	29.2	28.7	28.1	27	27.2	29.4	27.9	27.2
스위스	17.2	17.6	18.4	19.5	19.4	19.4	18.4	17.7	17.9	19.7	19.5	19.3
터키	9.7	9.8	10.7	11.1	13.2	12.6	12.2
영국	18.4	19.1	19.2	19.6	20.2	20.2	20	20.1	21.6	23.9	22.8	22.7
미국	14.2	14.8	15.6	15.8	15.7	15.5	15.7	15.8	16.4	18.5	19.3	19
OECD평균	18.6	18.9	19.4	19.7	19.5	19.4	19.2	18.9	19.7	21.9	21.7	21.4

[illegible]

[illegible]

〈부표 37〉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호주	10.2	10.1	11.1	11.6	12	12.1	11.9	12.1	11.4	11.6
오스트리아	23.5	24.6
벨기에	23.6	25.2	25.8	26.1	25.2	26.1	25.9	25.7	25.5	24.7
캐나다	13.2	13.7	16	16.2	15.9	16.4	16.4	16.1	15.9	16.2
칠레	12.2	10.9	10.4
체코
덴마크	24.4	24.4	24.5	24.7	23.5	22.9	22.8	23.6	24.8	25.1
에스토니아
핀란드	18	18.1	19.1	20.1	20.9	22	22.5	23.1	22.5	22.2
프랑스	20.6	21.7	22.3	22.5	22.8	25.8	25.9	26	25.8	24.8
독일	23.6	24.2	24	23.6	23.3	23.7	23.8	24.3	24.2	23.2
그리스	10.3	12.4	14.6	15.2	15.5	16.1	16	15.9	14.6	15.5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16	16.1	16.9	17	16.5	20.8	20.9	20.2	18.9	17.5
이스라엘
이탈리아	18.8	20.2	20.8	22	21.4	21.7	21.7	22.1	22	22.1
일본	10.3	10.8	11.1	11.4	11.3	11.2	11.6	11.7	11.3	11.1
한국
룩셈부르크	20.3	21.7	21	21.2	19.9	19.8	19.1	19.8	19.6	18.9
멕시코	1.7	1.6	1.7	1.9	2.5
네덜란드	25.2	25.9	27.4	27.8	26.3	25.7	25.2	25.1	24.8	24.5
뉴질랜드	16.9	17.1	17.9	17.7	17	17.5	17.4	18.1	19.4	20.8
노르웨이	16.5	17.9	20.8	21.7
폴란드
포르투갈	9.9	10.6	10	10.1	10.1	10.2	10.8	11.1	11.3	10.9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15.4	16.5	16.6	17.3	17.1	17.6	17.4	17.2	17.7	17.9
스웨덴	26	26.7	26.7	27	26.2	28.2	28.3	28.5	29	28.4
스위스	15.3	15	15.8	16.7	16.5	16.5	16.7	17.2	17.3	17.1
터키	3.1	2.7	2.8	3	3.4	3.1	3.2	3.3	3.9	4.6
영국	16.5	17.9	18.4	19.3	19.2	19.4	19.5	18.8	17.6	16.9
미국	13.2	13.5	13.9	14.1	13.2	13.2	13.3	13.3	13.2	13.3
OECD평균	15.6	16.2	16.7	17	16.8	17.3	17.4	17.5	17.5	17.4

〈부표 37〉 계속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호주	13.1	14.4	15.4	15.8	15.5	17.1	17.2	17	17.8	17.4
오스트리아	24.5	24.8	25.5	26.8	27.6	27.2	27.3	27.2	26.9	27.4
벨기에	24.9	25.7	24.7	25.7	25.1	25.7	26.3	25.2	25.2	25.1
캐나다	17.6	19.8	20.5	20.4	19.3	18.4	17.6	17	17	16.1
칠레	10.4	10.5	10.1	10.4	10.3	12.2	13.2	12.9	13.3	14.2
체코	14.6	15.7	16	16.3	16.3	16.6	16.6	17.6	18	18.8
덴마크	25.4	26.2	26.6	28.3	29.6	29.2	28.4	27.3	26.5	27.1
에스토니아	15.2
핀란드	23.8	28.8	32.9	33	32.4	29.7	29.6	27.5	25.3	24.7
프랑스	25.1	25.8	26.6	28	27.9	29.2	29.6	29.5	29.7	29.7
독일	22.9	24.6	26.4	27.1	27	27.4	27.9	27.3	27.2	27.5
그리스	16.5	15.9	16.1	17	17.1	17.4	18	18	18.6	19.2
헝가리	21.2
아이슬란드	14.9	15.4	16	16.3	16	16.3	15.9	15.7	15.8	16.1
아일랜드	17.2	18.1	18.9	18.8	18.4	17.9	16.9	15.8	14.9	14
이스라엘	16.7	17.0	17.4	17.0	17.0
이탈리아	22.9	23.5	24.5	24.5	24.2	23.4	23.7	24.4	24.5	24.8
일본	11.3	11.5	12.1	12.8	13.4	14.3	14.6	14.8	15.6	16.5
한국	3.1	3	3.2	3.4	3.4	3.6	3.8	4.2	6.1	6.8
룩셈부르크	19.1	19.5	19.8	20.1	20	20.8	20.9	21.2	21	20.5
멕시코	3.2	3.6	3.9	4.2	4.6	4.2	4	4	4.5	5
네덜란드	26	25.9	26.4	26.5	25.3	24.5	23.4	22.6	22.3	21.3
뉴질랜드	21.2	21.5	21.4	19.7	18.9	18.4	18.3	19.3	19.8	19.1
노르웨이	23.1	24.1	24.9	24.7	24.5	23.9	23.3	22.7	24.3	24.2
폴란드	14.9	21	24.6	24.1	23	22.3	22.5	21.8	21	21.4
포르투갈	12.6	13.5	14.1	15.6	15.8	16.6	17.1	17	17.3	17.7
슬로바키아	19	18.5	18.2	18.2	18.7
슬로베니아	0	0	0	0	0	5.8	22.3	22.6	22.8	22.7
스페인	19.7	20.5	21.7	22.9	21.9	21.3	21.2	20.6	20.5	20.3
스웨덴	28.5	30.4	34.1	36	34.6	32.1	31.6	30.5	30.5	29.9
스위스	16.2	17.4	19.1	20.8	21	21.6	22.4	22.9	23.3	23.2
터키	5.5	6.1	6.3	6.2	5.9	5.6	7.2	8	8.3	9.6
영국	16.7	18.2	19.8	20.5	20	19.8	19.6	19	19.2	19
미국	13.7	14.7	15.3	15.5	15.5	15.5	15.2	14.8	14.8	14.6
OECD평균	17.9	18.8	19.7	20.3	20.1	19.9	19.9	19.6	19.6	19.6

〈부표 37〉 계속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18.1	17.4	17.4	17.6	17.4	16.7	16.6	16.8	17.9	17.8	17.6	18.1
오스트리아	27.1	27.4	27.6	28.2	28	27.7	27.3	26.8	27.3	29.5	29.4	28.6
벨기에	24.5	25	25.4	25.9	25.6	25.6	25.5	25.4	26.7	29.1	28.8	29.4
캐나다	15.8	16.3	16.3	16.3	16.3	16.2	16.3	16.2	16.9	18.5	17.9	17.4
칠레	13.9	14.2	14.1	11.1	10.5	11.1	10.5	10.7	12.2	14.1	13.3	12.9
체코	19	18.9	19.6	19.8	19	18.7	18.4	18.2	18.3	20.9	20.4	20.7
덴마크	26.3	26.7	27.3	28.1	27.9	27.5	26.8	26.3	26.5	30	30.1	30.3
에스토니아	13.8	13	12.8	12.9	13.4	13.1	12.7	12.7	15.7	19.8	18.8	16.8
핀란드	23.3	23.3	23.9	24.8	24.9	25	24.7	23.7	24.3	28.3	28.7	28.3
프랑스	28.7	28.7	29.5	29.9	30	29.9	29.1	28.9	29.2	31.5	31.7	31.4
독일	27.5	27.6	28.2	28.6	28	28.1	26.9	25.9	26.2	28.8	28	26.8
그리스	19.2	20.6	20.2	19.9	20	21.1	21.3	21.5	22.2	24.4	24.2	25.7
헝가리	20.5	20.2	21.2	22.2	21.4	22.3	22.6	22.9	23.1	24.7	23.5	22.6
아이슬란드	16.4	16.5	18.1	19.2	18.8	17.8	17.4	16.8	17.3	19.9	19.3	19.5
아일랜드	13.1	14.1	15	15.4	15.8	15.8	15.9	16.6	19.5	23.4	23.3	22.3
이스라엘	18.0	18.7	18.9	18.2	16.9	16.3	15.9	15.5	15.8	16.1	15.9	15.8
이탈리아	24.5	24.7	25.2	25.7	25.9	26.1	26.3	26.1	27.1	29.2	29.2	29
일본	16.8	17.7	18.1	18.2	18.3	18.8	18.8	19.1	20.3	22.6	22.7	23.7
한국	5.6	5.9	5.7	6	6.7	7.1	8	8.2	9	10.3	10	10.2
룩셈부르크	19.6	20.9	21.9	22.6	23.1	22.2	21	19.8	22.1	25.2	23.9	23.3
멕시코	5	5.7	6	6.5	6.4	6.5	6.6	6.7	7.2	7.7	7.8	7.7
네덜란드	20.5	20.5	21.2	22	21.9	22.5	22.2	21.9	21.6	23.8	24.3	24.1
뉴질랜드	18.9	18.2	18.3	17.8	17.5	17.9	18.8	18.4	19.9	21	21	20.7
노르웨이	22	22.9	24.7	25.7	24.2	22.3	21	21.2	20.8	24.3	23.6	23.1
폴란드	20.3	21.8	22.1	22.1	21.2	20.7	20.5	19.4	19.9	20.7	20.7	20.1
포르투갈	19	19.5	20.9	22.1	22.3	23.2	23	22.7	23.2	25.6	25.5	25.1
슬로바키아	18	17.7	17.8	17.2	16.4	16.3	16	15.8	15.8	18.7	18.5	18.2
슬로베니아	22.8	22.9	22.7	22.3	21.9	21.8	21.4	20	20.2	23	23.9	24
스페인	20	19.6	19.9	20.4	20.6	20.9	20.9	21.3	22.8	26.1	26.7	26.8
스웨덴	28.7	28.9	29.5	30.3	29.7	29.2	28.6	27.4	27.6	29.8	28.2	27.6
스위스	22.7	23.3	24.2	25.3	25.4	25.3	24.3	23.6	23.6	26	25.4	25.3
터키	9.7	9.8	10.7	11.1	13.2	12.6	12.2
영국	19.1	19.9	20	20.4	21	21	20.8	21	22.5	24.9	23.8	23.7
미국	14.5	15.1	16	16.2	16.1	15.9	16	16.1	16.8	18.8	19.6	19.3
OECD평균	19.2	19.5	20	20.2	20.1	20	19.7	19.5	20.3	22.6	22.3	22.1

<부

(단

[illegible]

〈부표 38〉 계속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3.5	3.8	3.7	3.2	2.4	2.5	2.6	3.3	2.8	2.7	2.7	2.9
오스트리아	1	1	1.1	1.1	1.1	1	1	1.1	1.1	1.2	1.1	1.1
벨기에	1.7	1.9	2	2.5	2.5	2.5	2.4	2.2	2.1	2.3	2	2.1
캐나다	4.9	5.2	5.3	5.2	5.3	5.4	5.3	5.2	4.7	5	4.7	4.6
칠레	1.5	1.4	1.3	1.2	1.3	1.4	1.4	1.3	1.3
체코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0.2
덴마크	2.1	2.2	2.2	2.3	2.4	2.4	2.3	4.3	4.1	4.6	4.6	4.9
에스토니아	0	0	0	0	0	0	0	0
핀란드	1.2	1.1	1.2	1.2	1.2	1.1	1.1	1.1	1.1	1.2	1.2	1.2
프랑스	2.4	2.4	2.4	2.4	2.5	2.6	3	3	3	3.2	3.3	3.3
독일	1.7	1.8	1.8	1.9	1.9	1.9	1.9	1.8	1.9	2	2	2
그리스	2.1	2	2.1	1.9	1.8	1.7	1.6	1.5	1.7	1.8	1.9	1.9
헝가리	0	0	0	0.1	0.1	0.1	0.2	0.2	0.2	0.2	0.3	0.2
아이슬란드	2.8	2.9	3.2	3.4	3.4	3.4	3.4	3.6	3.8	4.6	4.4	4.6
아일랜드	1.3	1.3	1.3	1.5	1.4	1.4	1.5	1.5	1.7	1.8	1.9	1.9
이스라엘	1.1	1.8	1.8	2	2	2.1	2.1	2.1	2.1	2.1	2.1	2.1
이탈리아	0.6	0.6	0.6	0.7	0.7	0.6	0.7	0.7	0.8	0.8	0.8	0.8
일본	3.1	3.4	3.4	2.8	2.8	2.4	2.3	2.8	2.8	3.1	2.9	3
한국	1.9	1.8	1.9	2.0	1.5	1.6	1.8	1.8	1.5	1.5	1.4	1.5
룩셈부르크	0.1	0.9	0.9	0.9	0.9	0.9	0.8	0.8	0.8	0.9	0.9	0.9
멕시코	0.1	0.1	0.2	0.2	0.2	0.2	0.2	0.2	0.2	0.3	0.2	0.2
네덜란드	6.6	6.7	7.1	7.2	7.5	7.5	6.3	6.3	6.2	6.6	6.7	6.8
뉴질랜드	0.5	0.5	0.5	0.4	0.4	0.4	0.4	0.4	0.5	0.5	0.5	0.5
노르웨이	0.8	0.8	0.9	1	0.8	0.8	0.8	0.8	0.7	0.8	0.9	0.9
폴란드	0	0	0	0	0	0	0	0	0	0
포르투갈	1.1	1.2	1.3	1.4	1.5	1.6	1.6	1.5	1.6	1.6	1.5	1.6
슬로바키아	0.6	0.6	0.7	1	1.2	0.9	0.8	0.8	0.9	0.9	0.8	0.8
슬로베니아	0	0	0	1.2	1.1	1	1.1	1.1	1.1	1.2	1.1	1.2
스페인	0.3	0.3	0.3	0.5	0.5	0.5	0.5	0.5	0.5	0.5	0.5	0.5
스웨덴	2.1	2.2	2.3	2.4	2.3	2.5	2.4	2.5	2.6	2.8	2.9	2.8
스위스	1.2	1.2	1.1	1.1	1.1	1.1	1	1	1	1.1	1	1
터키												
영국	6.9	6.3	5.6	5.5	5.3	5.4	5.4	4.6	4.8	5.3	5.2	5.3
미국	8.4	8.6	9.1	9.3	9.3	9.4	9.6	9.9	9.8	9.8	10.5	10.5
OECD평균	2	2.1	2.1	2.1	2	2	2	2.1	2.1	2.2	2.2	2.2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⁷²⁾

※ 아래의 목차, 단락, 표·그림의 번호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원문을 준용함.

II.1. Introduction

6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사회정책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OECD, 1996). 원칙적으로 국민계정시스템(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이 사회지출과 재원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SNA, 1993). 그러나 SNA에서 ‘사회적 이전(현금과 현물급여)’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 총합의 속성은 공공 사회정책프로그램과 경향의 분석에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사무국은 공공지출에 작용하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국민계정의 기능별 구분에서 어떤 항목이 정부로 기록되는 (하위)총합지출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세우고자 했으나 실패했다(Varley, 1986; Oxley et al., 1990). 그 결과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가 199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의 자국 통화로 ‘사회지출 프로그램’이라는 상세 수준에서 지출 항목을 기록함으로써 명료화 하도록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SOCX는 캐나다 50개, 네덜란드와 미국 65개, 프랑스 300개 등의 분리된 사회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SOCX에 포함된 지출 데이터의 구체적인 속성은 SOCX 지출 항목에서 부적절한 기록(이중 계산)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양질의 수준에서 명료성과 연관되는 질적 통제의 중요한 양식을 따른다.

64. SOCX에 포함된 사회지출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수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노력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SOCX의 상세 수준은 OECD 경제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국가 내 심도 깊은 연구와 국가간 사회보장정책의 비교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서로 다른 정의를 이용하거

72) 본 절은 Willem Adema, Pauline Fron, and Maxime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에 제시된 OECD SOCX Manual을 번역한 것임.

나 모든 장애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서 평가 관련 지출만 그룹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떤 그룹의 지출이 이용자의 욕구와 부합하는지 연구할 수 있게 한다. OECD 분석자들과 외부 연구자들은 광범위한 정보를 사용하여 SOCX 사회지출 구성의 경향과 변화에 관한 연구한다. 예를 들어 Caminada and Goudszwarrrd(2005), Castles(2004, 2008), Castles and Obringer(2007), Darby and Melitz(2007), Pearson and Martin(2005), Siegel(2005), Townsend(2007), Whiteford and Adema(2007), Kirkegaard(2009), Fishback(2010), Adema & Whiteford(2010), OECD(2011a) 등이 있다.

65. SOCX는 또한 총합의 공공과 민간 사회지출을 9개의 사회정책 영역에 따라 그룹화하여 제공하고 국내총생산(GDP), 총국민소득(GNI), 정부총지출(total government expenditure), 그리고 1인당 구매력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의 국제 비교를 촉진한다. SOCX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회지출 프로그램의 재원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66. OECD는 회원국의 사회정책에 헌신하는 서로 다른 자원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왔다; 순 총사회지출(net=after tax, total=public and private). 이러한 작업은 6개 국가들에 대한 순 공공사회지출의 최초 추정을 통해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고(Adema et al, 1996), 수년 동안 방법적인 분석들과 유용한 데이터가 27개 국가를 포함하면서 확장되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웨덴, 스페인, 터키, 영국과 미국. 이러한 작업은 OECD의 조세정책센터(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와 긴밀한 협동 작업을 통해 수행되었고, 이러한 지표들은 이제 SOCX에 통합된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2년마다 업데이트된다. 다음 협동 작업은 2011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67.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는 국민계정시스템과 보건계정시스템(OECD, 2000b, and SNA, 1993)과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유럽

의 사회보장통계시스템(Eurostat's European System of Social Protection Statistics-ESSPROS)과 ILO 사회보장통계(SSI)와도 광범위하게 연계된다(Box II. 1; Eurostat, 2008, and ILO, 2005). 사회지출과 사회적 지원의 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광범위하게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지표의 일부로써 Asian Development Bank에 의해 수집된다(ADB, 2006 and 2008).

Box II. 1: OECD와 Eurostat and ILO social accounting systems의 관계

SOCX와 비교하여 유럽사회보장통계시스템(ESSPROS)⁷³⁾인 Eurostat의 범위와 ILO의 사회보장조사(SSI)⁷⁴⁾의 범위는 사회지출의 재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SOCX 보다 더 넓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가 OECD 조세통계(OECD, 2008b)와 일관되도록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면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자원 별로 요구하는 것은 정책 분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행해질 수 있는 성과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출 측면에서 OECD는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수단의 포괄적인 회계(comprehensive accounting)를 촉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논쟁적이지만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다(아래 참조). 총지출 항목에서 SSI는 상대적으로 큰 범주를 가진다.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지출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재에 대한 지출과 같은(SOCX는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각서항(memorandum item)으로 보고함.). ESSPROS의 범위는 개인에게 '할당'될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SOCX와 SSI보다 더 협소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지출이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ILO와 OECD 모두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OECD 정의는 실업자의 고용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까지 포함하는 등 가장 덜 엄격하다.

기능별 분류에서 ESSPROS(Eurostat, 2008)와 사회보장조사(ILO, 2005)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ESSPROS는 7개의 기능으로 구분하고, SSI는 11개의 기능으로, SOCX는 현재 9개의 사회정책 영역으로 구분한다.

II.2. Defining the social domain

68. 사회지출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지출이 ‘사회적’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OECD는 사회지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제공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지급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69. 사회지출의 정의에서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구간 이전은 사회적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70. 사회적 급여는 현금급여(예, 연금, 산전후휴가의 소득보장, 사회부조급여), 사회 서비스(예, 보육,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수단(예,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지출, 민간의료플랜에 대한 기여금의 조세취급)을 포함한다.

71.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지출 항목을 두 가지 주요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급여가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주장하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급여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a) 개인간 재분배 혹은 b) 의무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야 한다.

II.2.1. Towards a social purpose

7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를 9가지 정책 영역으로 그룹화한다:

73)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living_condition_and_social_protection/databse

74) <http://www.ilo.org/dyn/ilossi/ssimain.home> 참조

- 노령 - 연금들(Box II. 2), 조기퇴직연금, 노인층에 대한 가사보조 및 생활보조서비스
- 유족- 연금과 장제비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 돌봄서비스, 장애급여, 산업 재해 및 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피고용인 상병급여
- 보건 - 입원 및 외래 환자간호 지출, 의료상품, 예방
- 가족 - 아동 수당과 크레딧, 보육지원,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조, 한부모가족급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서비스, 훈련, 고용인센티브, 장애인 통합,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취업촉진(start-up) 인센티브
- 실업 - 실업보상, 노동시장 이유에 따른 조기 퇴직
- 주거 - 주택수당과 임대보조
- 기타 사회정책영역 - 범주 구분이 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 대상 현금급여, 기타 사회서비스; 예를 들면 비OECD 회원국에 주로 나타나는 음식 보조 등

Box II. 2. Earnings and deferred wages; the treatment of pensions and severance payments in SOCX

사회지출의 정의에 따라서 근로에 대한 보수는 엄격하게 배제하므로 휴일수당, 교통비와 보너스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지출액에서 현재 노동에 대한 보수가 배제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과거 근로에 대한 보수나 후불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상 공공과 민간의 연금 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의 중요한 부분(예, 고용주 기여로 재원이 조달되는)은 후불임금이라는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다. 만약 사회지출이 그런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모든 연금 지급액은 SOCX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Eurostat, ILO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관습적으로 연금(은퇴 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급하는)은 과거 고용주 기여에 의해 공동으로 재원이 조달된 때 사회지출의 일부로 고려된다.

만약 연금이 사회지출로 고려된다면 다른 유사한 지급액도 데이터베이스에 포

함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보통 저축은 종종 은퇴를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유사하게 OECD 국가들에서 생명 보험 저축 수단은 동일한 이유로 사용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특히 은퇴를 위해 저축되는지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상세 데이터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그런 자료는 SOCX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은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은퇴할 때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SOCX의 연금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은 은퇴 목적이 아닐 때 배제되어야 한다. 퇴직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고용 관계가 중지될 때 지급되는데 고용 관계의 중지는 자발적 퇴직일 수도 있고 해고일 수도 있다.

방법론적인 선택에 있어 SOCX는 은퇴에 대한 퇴직금을 연금과 유사한 은퇴수당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은퇴 연령 미만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법정 퇴직금은 분리된 지급액으로 고려하고 보수로 취급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OECD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와 SOCX는 공적 재원으로 조달되고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에 의해 그들의 경제활동이 중지되거나 감원되어 해고당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일시해고수당(redundancy compensation)”은 포함한다. 이는 전체 “법정 퇴직금” 중 소수의 특정 그룹만을 실업 수당 항목 아래에 포함한다.⁷⁵⁾

이론적으로 SOCX는 은퇴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법정 퇴직금은 지출의 일부로 포함해야 하며, 그 나머지는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상세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법정 퇴직금을 지출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가별 사례에 기초해야 한다.

고용주 지급의 법정 퇴직금 중 소수(약 10%-최대 30%)만이 은퇴하는 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SOCX는 의무적인 법정 민간 노령 지출아래에 법정 퇴직금의 20%만을 포함하고 있다.

75) 한국에서 법정 퇴직금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SOCX no. 7(실업)에 포함되어왔음. 그러나 한국의 법정 퇴직금은 사실 공적으로 조성된 일시해고수당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실업 항목에 더 이상 포함할 수 없음.

Box II. 2. 계속

대체로 이러한 이슈는 아래의 세 국가와 가장 연관이 깊다.

i) 이탈리아에서는 GDP 대비 1%가 퇴직금에 지출되는데, 이 중 공사영역 피고용인에게 지불된 금액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이전에) 공무원들에게 은퇴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데이터는 유용한(INPDAP, 2008) 반면에 민간 영역의 피고용인에 대한 퇴직금에서 연령에 관한 통계는 없다. 그러므로 유럽통계(Eurostat)는 이탈리아의 퇴직금 중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급여액의 총합 중 명확한 부분만...” 노령연금 기능에 분류시킨다.⁷⁶⁾ ii) 일본에서 2005년 자발적인 민간 퇴직금은 GDP 대비 2.2%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퇴직금/은퇴소득에 관한 통계는 일본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국세 연보에서 출판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퇴직금 수급자의 대다수가 은퇴시에 이 급여액을 받는다고 말한다.⁷⁷⁾

iii) 퇴직금의 대부분은 근로자가 의무적인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직업을 퇴사할 때(해고 포함) 제공된다. 한국에서 법정 퇴직금은 기업 연금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적이지 않다; 기업연금에 포함된 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낮다(Grubb et al., 2007)⁷⁸⁾.

요약하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법정 퇴직금에 대한 대부분의 지출은 은퇴시에 지급되므로 이는 SOCX에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법정 퇴직금에 대한 지출 중 일부만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그런 지출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보다는 노령 지출 미만의 모든 법정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에러를 더 크게 할 것이다. SOCX의 에러를 더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이슈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가 유용할 때까지는 전체 법정 퇴직금 중 20%만을 포함시킨다.

76) 본 고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한 법정 퇴직금만 데이터가 유용하다고 했으므로, 일반적인 퇴직 연령에 도달해서 퇴사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만을 노령연금에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해석됨.

77) 한국 역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연보에서 법정 퇴직금에 대한 조세 감면을 통해 지출을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낮은 종신고용제에 가까운 반면 한국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화”라는 보고서(OECD)에서 논의하듯이 노동 유연화가 높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화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금의 비율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음.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정년퇴직자 비율(2.5%)인데 반해 계약기간만료(16.1%),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54.4%)로 높아 정년퇴직으로 인한

73. 정책의 목적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영역의 경계선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아동빈곤의 퇴치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 목적이고, 아동에 대한 지원(현금 급여와 서비스를 통해서든지, 혹은 조세시스템을 통해서든지)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임신상태에 대한 우호적인 조세 처치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서 사회적인 지원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한 지원이 사회적 정책의 목적을 추구하는지 여부는 합의된 바가 없다(국가별로 과세에 적합한 근거인 기본적인 경제 단위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

74. 실제로 데이터 이슈는 어떤 항목이 사회적인지 혹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저축 프로그램이 은퇴 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배정되었을 때 (혹은 기타 사회정책 영역에 포함되는 준비금), 그것은 '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75. 임대보조는 노인, 장애인, 그리고 다른 인구집단에 대한 시설 보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으로 고려된다(노령, 근로무능력 급여 등에 기록됨).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모기지정책은 그런 프로그램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어느 수준까지 혹은 자산 가치의 어느 수준까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지는 불명확하다. 관련한 임계값이 국가마다 다르고, 그러한 국가별 포괄적인 데이터도 유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건설에 대한 모기지 보조(mortgage relief)와 자본 보조(capital subsidies)는 여기서 고려되지 않는다.

76. 이러한 SOCX의 이슈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ECEC)서비스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국의 통계와 Eurostat, 그리고 (OECD/Eurostat)에서 (미취학)교육에 대한 연간 자료수집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아동보육지원의 더 나은 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의무취학연령에 관한 지표들이 국가간 차이 비교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북유럽)국가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7세에 이루어지는 반면 미취학학교교육(pre-primary schooling)의 참석은 그 전년에 이루어진다. 비교를 개선하기 위해 이

퇴직금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78) 한국의 법정 퇴직금의 가입사업장 수는 467,714개소(2008)이고 가입자 수는 6,506,470명(2008)인 반면에 퇴직연금의 가입사업장 수는 50,462개소(2008)이고 가입자 수는 1,119,552명(2008)으로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는 법정 퇴직금 가입장 수의 10%, 가입자 수는 17%에 불과함(자료는 노동부 임금복지과).

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 수의 유용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추출된 추정치(estimate)를 이용함). 유사하게 아이들이 5세에 학교에 들어가는(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의 미취학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primary school(초등학교)에 등록한 5세 아동의 지출을 더함으로써 산정된다.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종 보육서비스의 재원조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데이터의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유럽국가에서는 기록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지만 다른 국가(종종 연방)에서는 국가간 보육에 대한 공적지원에 대한 견고한 견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는 캐나다처럼 꼬리표가 붙지 않는 일반적인 정액교부금(non-earmarked block-grant)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육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서로 다른 자금흐름(funding stream)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스위스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지출하는 내역이 정부 당국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연방 국가로 제한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inhabitants)에 대해 아동보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일반적인 정액교부금으로 재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소득보장수급자에 대한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금흐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부조신청자에 대한 보육 지원을 재정 보조의 경우이다.

II.2.2. Inter-personal redistribution or compulsion

78. 지출프로그램은 참여가 의무적일 때, 또한 수급권이 프로그램 참여자간 자원의 재분배와 연루될 때만 ‘사회적’으로 간주된다. 즉 수급권은 개인별 직접적인 시장 매매의 결과가 아니고 그들의 개별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급(공적 정부 그리고/혹은 비정부조직에 의해)과 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가구간 재분배와 항상 관련 있다.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조세 혹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인구집단간 혹은 인구집단내 자원의 재분배를 유도한다(예, 실업보험기금의 모든 구성원).

79. 민간 프로그램에서 개인간 재분배는 종종 정부의 규제나 조세 개입에 의해 도입된다. 정부는 개인들 그리고/혹은 고용주들이 그들의 위험 프로파일이나 만연한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예를 들어 위험분산(예, 보험회사 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을 통해)을 통해 공공정책은 아픈 사람들을 보조할 수 있고 가구간 재분배를 보장할 수 있다. 집합적인 혹은 개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공공 조세 개입은 또한 개별적인 위험 프로파일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세한 시장 가격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같은 것은 집합적인 동의에 따라 파생된 혹은 집합적인 근거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수행된 사회적 급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민간 제도와 우호적인 조세를 제공하는 민간 플랜 사이에 상당히 높은 유사점이 있다.

80. 사회적 급여는 또한 이론적으로 가구간 자원의 재분배에 반드시 연루되지 않는 몇몇 (공공과 민간) 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의 저축 체계를 정부가 강제로 관리한다(Ramesh, 2005). 이는 조세경감의 제공과 함께 이러한 플랜의 의무 가입 범위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 판단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II.2.3. Public, private social and exclusively private expenditure

81. 공공과 민간 사회보장의 구분은 관련 재정 흐름을 공공 기관 혹은 사적 기관 중 누가 컨트롤하는가에 달려있다. 공공 사회지출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통해 일반 정부(각기 다른 정부수준과 사회보장기금)에 의해 통제되는 재정 흐름을 가지는 사회지출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의무가입에 따른 기여금의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상병급여는 관습적으로 공공으로 고려된다. SNA93에 따라 SOCX는 자율적인 기금을 통해 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민간지출항목으로 포함한다(호주는 부분적으로,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영국). 일반 정부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모든 사회적 급여는 '민간'으로 고려된다.

82. 민간부문의 사회적 급여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무적인 민간사회지출: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영역을 통해 작동되는 사회적 지원으로 예를 들어 공적으로 입법화된 이유로 고용주가 부재중인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상병급여나, 민간보험기금에 의무적인 기여금을 통해 누적된 급여
- 자발적인 민간사회지출: 가구간 자원의 재분배와 관련되고, NGO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사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급여

83. SOCX는 OECD 국가의 민간사회지출의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이들 데이터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재정 할당 정보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84. 사회적 목적을 가졌을지라도 개인보험의 가입은 관련된 사람에 관한 문제이고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위험 프로파일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합당한 민간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렵짐작하면 가구간 재분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개인이 그 혹은 그녀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보상금을 제공하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 지출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민간에서 배제’로 간주된다. <표 II.1>은 그러한 지출이 사회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반면에 박스 II.3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에 대한 이슈들을 보다 상세하게 제공한다.

<표 II.1>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⁷⁹⁾⁸⁰⁾

	공공		민간	
	의무적인	자발적인	의무적인	자발적인
재분배	자산조사 급여, 사회보험급여	공공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자영자의 선택참여(opt in)	고용주 제공의 상병 급여, 강제적인 기여로부터 누적된 급여, 예를 들어 연금 혹은 장애보험	조세이익의 급여, 예를 들어 개인 은퇴 계좌, 직업연금, 고용주 제공 의료플랜
재분배 없음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 저축체계로부터 제공되는 급여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비조세이익의 연금 급여	민간에서 배제: 개인의 선호에 따른 시장 가격으로 야기된 보험 플랜에서 누적된 급여

79) 정의에 따라 개인간 이전은 사회적 속성을 가지더라도 사회적 영역으로 고려되지 않음.

80) 어두운 부분은 사회적인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급여를 반영함.

85. 생명보험저축플랜은 생명보험급여의 일부가 사회적 목적을 따르더라도 포괄적인 정보가 유용하지 않아서 사회적인 영역 외로 분류된다. 사실상 생명보험급여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없다. 비록 재보험이 실제로 생명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갖기 어렵다고 해도 생명보험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생명보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OECD, 2006b). 상당한 정도의 생명보험정책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 모기지 제도도 포함하지만, 사망, 장애, 의료개입과 은퇴 급여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가진 민간 생명보험급여는 중요할 수 있고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포함된다.

86. 국가별로 조세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민간 급여의 역할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목적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시스템의 재분배적 속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적한다. 몇몇 민간 사회프로그램은 공공프로그램보다는 더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를 야기하고, 민간 연금과 의료플랜에 대한 조세감면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급여가 아닌 경향이 있다. 민간 고용 관련 사회적 급여는 (이전에) 고용된 인구집단 사이에 소득을 재할당하는 하는 동시에 재정상 유리한 개인 혹은 집단의 연금 플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재분배에서 국가간 차이는 개별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지출의 수준과도 연관이 없다. 덴마크와 같은 공공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소득재분배는 더 큰 경향이 있다. 민간 사회지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같은 국가이다(Förster and Mira d'Ecole, 2005, and Whiteford and Adema, 2007).

II.3. Social expenditure programme data in SOCX

II.3.1. Categorisation of programmes across policy areas

87.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를 9가지 정책 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리고 기타 사회정책영역-으로 구분한다. <표 II.2> Panel A는 SOCX 데이터베이스

의 공공과 의무적인 민간 프로그램 구조를 보여주고, <표 II.2>의 Panel B는 정보의 질이 재정 할당만큼 높지 않고 프로그램별 상세한 지출은 포괄적인 기초에 유용하지 않지만 SOCX 데이터베이스의 자발적인 민간지출의 단순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88. 9개의 정책 영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프로그램의 예를 포함한다:

1. 노령(Old-age)은 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 포함)로 구성된다. 노령연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러한 범주는 또한 조기은퇴연금을 포함한다. 조기은퇴연금이란, 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환경 때문에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분류되고 노령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된다.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금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은 포함한다. 기관에서 시설보호에 이용되는 지출역시 포함한다(예를 들면, 노인 그룹홈 운영 경비). SNA93의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SOCX는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 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연금을 민간 지출로 기록한다.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250.10.1.1.1.1 기초 체계: CNAV”는 프랑스의 “Régime général”이라고 부르는 공공기초연금체계임.
- “208.10.1.2.1.2 노인층에 대한 일상생활 수행 보조”는 덴마크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임.
- “392.20.1.1.1.1 피고용인 연금 기금”은 일본의 의무적인 민간직업연금체계임.
- “826.30.1.0.0.2 전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영국의 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연금 급여프로그램임.

2. 유족(Survivors)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급여(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유족현금급여에는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현금급여가 해당하는데, 유족현물 급여에는 장제비와 기타 현물급여가 있다.

- “124.10.2.1.1.2 CPP and QPP: 생존한 배우자 연금”은 캐나다의 연금 플랜이고 퀘벡 연금 플랜 프로그램은 생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
- “348.10.2.2.1.1 장제비(자산조사)”는 헝가리의 자산조사 프로그램으로 장제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다) 장애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 때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다. 유급질병휴가, 특별수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 등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은 유급질병휴가(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 포함한다.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는 유급질병휴가(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에 포함한다.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 현금 급여에서 기록하므로 이 항목에서는 제외한다.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은 보건영역에 포함한다. 이 항목에는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756.10.3.1.1.1 장애연금: 질병보험(비자산조사)”는 스위스의 공적 비자산조사형 장애보험연금이다.
- “442.10.3.1.4.4 유급상병휴가”는 질환이 발생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질환 발생 첫째 날부터 3개월까지,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에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임금의 100%를 배상(상한선까지)하는 룩셈부르크의 공공 프로그램이다.
- “578.20.3.1.4.1 질환과 급여 대기 기간”은 노르웨이에서 질환의 발생시 첫 2주간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는 의무적인 급여에 대한 추정이다.
- “752.30.3.0.0.0 근로무능력-관련 급여”는 스웨덴의 자발적인 민간 계약 장애 연금에 포함된다.

4. 보건(Health)- 보건정책영역에서 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의 자료를 이용한다. 보건부문의 공공지출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 서비스와 집합보건 의료서비스, 투자 등이다. 보건 항목에는 입원환자요양서비스와 보조의료서비스와 제 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된다. 보건지출에서 공공기관의 용자 상환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상병급여에 포함한다. 자발적 민간 보건지출은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의료플랜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추정(이러한 민간의료보험플랜은 주로 고용에 기반을 두거나 조세혜택이 있음)한다.

SOCX의 이번 그리고 이전의 자료에서 보건과 사회정책당국에 의해 보고되는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출의 이중계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최근 보건계정(System of Health Accounts)의 개선으로 투명성이 보다 확보되었으며, 이 영역의 기록이 개선되었다(OECD, 2010d, 2000b and www.oecd.org/health/sha).

5. 가족(Family)은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과 연관된다.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후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 급여들이 포함된다. 현물급여에는 돌봄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이 포함된다.

- “56.10.5.1.1.1 가족수당: 피고용인의 가족수당에 대한 국가사무소(national office)”는 벨기에에서 가족에게 아동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프로그램이다.
- “246.10.5.1.2.2 모성 및 부모수당”은 핀란드에서 자녀 출생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이다.
- “203.10.5.2.1.6 아동보육(취학전 교육)”은 체코공화국에서 아직 6세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시설보육(day-care)과 취학전 교육서비스(pre-school services)에 대한 공적 지출이다.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day-care, pre-school, 혹은 어떤 국가에서는 학교 환경에 속해있음)에 대한 지원을 더 잘 비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의무취학연령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몇몇 노르딕 국가에서 아동은 7세에 학교

에 들어가는 반면 직전 해에 6세 아동은 pre-primary school에 참가한다. 비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의 수에 대한 이용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도출된 추계치를 이용하여). 유사하게 아동이 5세에 학교에 입학(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하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에서 취학전 지출(pre-school expenditure) 데이터는 초등학교에 등록한 5세 아동에 대한 지출을 추가함으로써 조정된다(이와 관련해서는 OECD Family database- PF3.1 참조).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은 이는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찾는 수급자의 가능성의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모든 사회지출(교육 이외)을 포함한다. 이 항목은 공공 고용 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실업자와 기타 사람들(청소년과 장애인 제외)의 고용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484.10.6.0.1.1 정부고용서비스(Servicio nacional de empleo, SNE)”는 멕시코의 항목임.
- “40.10.6.0.2.5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은 오스트리아의 항목임.
- “620.10.6.0.4.17 고용-훈련 직무순환 프로그램”은 포르투갈 항목임.
- “300.10.6.0.4.17 특별한 사회적 그룹의 고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은 그리스 항목임.
- “554.10.6.0.5.9 직업활동/지역 참여”는 뉴질랜드의 항목임.

7. 실업(Unemployment)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을 포함한다. 이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도산 및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에게 대해 투입된 정리해고수당과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실직이나 노동시장정책 때문에 연금 수급자가 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적 자원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다.

- “36.10.7.1.1.2 뉴스타트 수당”은 호주에서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등록된 실업자에게 주는 항목임.
- “380.10.7.1.2.1 노동시장 이유로 인한 조기 퇴직”은 이탈리아의 국가사회 보장제도에 따른 것임.

8. 주거(Housing)는 이 영역에는 임대료 보조와 개인에게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다른 급여들을 포함한다. 이는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게 대해 주거비용 보조로 ‘꼬리표를 붙인’ 직접적인 공공 보조를 포함(노르웨이에서 주택 소유자가 그의 집에 살 때에만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현물급여로 분류되었던(SNA, 1993 - D. 6331을 보라) 꼬리표를 붙인 현금급여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SOCX는 또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현물 주거 급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포함한다(1.2.1, 3.2.1, 그리고 9.2.2., 각각).

모기지론, 건설에 대한 자본 보조, 그리고 주거시설 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 등 주거 지원의 다른 형태들은 특히 그러한 시설이 직접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때 사회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을 추적하는데 있어 방법론과 그러한 지원에 대한 적용과 측정방법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없어 현재는 그러한 주거 지원은 SOCX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원은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이자비용과 기타 모기지 비용에 대한 우호적인 조세 수단(favourable tax treatment)에 대한 예산 비용은 2006년에 대략 120억 EUR로 계산된다. 프라이빗 에쿼티(private equity)⁸¹⁾에 따른 과세 경감으로 주

81) 증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이 아닌, 기업 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지분을 인수한 후 3~5년에 걸쳐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지분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자금을 말한다. 어려운 회사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거친 뒤 비싼 값에 되판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벌처펀드(vulture fund) 같기도 하고 워렌 버핏식 ‘가치투자’ 같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다. 또 헤지펀드(hedge fund)들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편이다.

거(75억EUR)와 소득 및 취득세(5억EUR), 기초자치세율(22.5억EUR)이 계산되며, 네덜란드에서 민간 가구 소유자에게 제공한 순 예산보조는 2006년에 GDP 대비 약 2.3%인 것으로 나타났다(Koning et al., 2006). SOCX는 또한 주거 지원의 건설비에 대한 (자본-)보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03년에 저소득가구 투자에 대한 CREDIT이 GDP 대비 0.06%인 6.2십억 미국달러에 달했다(OMB, 2009). SOCX는 또한 주거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민간 임대 영역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시설보다는 더 적게 받는 공공 주거비용은 대략 500만 가구이다(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rables de la France, 2007). 가구당 암묵적인 지원의 가치(예를 들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거주시설에 대해 낮은 임대료를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시장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의 차이)는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암묵적인 주거 보조의 총 가치에 대한 추계는 유용하지 않다.

9.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을 포함한다. 이민자와 탈북자,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역시 이 항목의 기타에 포함된다.

- “276.10.9.1.1.1 소득지원(사회부조)”은 독일의 항목임.
- “840.10.9.1.1.1 근로소득세제지원: 환급가능한 부분(EITC)”은 미국의 항목임.

〈표 II.2〉 SOCX 공공부문과 의무적인 민간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Panel A: 사회정책영역에 따른 프로그램과 지출 유형

1. 노령(OLD AGE)	5. 가족(FAMILY)
현금급여	현금급여
연금	가족수당
조기퇴직연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타 현금 급여들	기타 현금 급여들
현물급여	현물급여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보육/재가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들	기타 현물 급여들
2. 유족(SURVIVORS)	6. 적극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현금급여	고용서비스와 행정
연금	노동시장훈련
기타 현금 급여들	청년에 대한 지원
현물급여	고용보호지원
장제비	장애인 고용 지원
기타 현물 급여들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INCAPACITY-RELATED BENEFITS)	7. 실업(UNEMPLOYMENT)
현금급여	현금급여
장애연금	실업보상/해고수당
연금(산업재해)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유급상병휴가(산업재해)	현물급여
유급상병휴가(기타 상병수당)	8. 주거(HOUSING)
기타 현금 급여들	현물급여
현물급여	주거보조
생활시설/재가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
직업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들	
4. 보건(HEALTH)	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현물급여	현금급여
	소득보조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급여
	공공부조
	기타 현물급여들

주: 통계항목 수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58개, OECD 홈페이지 iLibrary에는 62개를 제시하고 있어 4개의 항목 차이 발생(Category No.4의 현금급여, Category No. 6의 2개, Category No. 8의 현금급여).

Panel B: 자발적 민간 지출의 범주

1. 노령(OLD AGE)
이전 민간영역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
4. 보건(HEALTH)
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II.3.2. Accounting conventions and practices

Reference, fiscal and tax years

89.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기록기간은 국가마다 같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역년(calendar year, 1월 1일-12월31일)에 따라 데이터를 기록하지만,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과 미국 등 예외적인 국가는 역년(calendar year)과 다른 회계연도(financial year)가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 데이터가 보고된다. 국가회계에 따른 동일한 관습을 적용하고자 할 때 “n” year는 그것이 1월 1일이든, 4월 1일이든, 6월 1일이든, 10월 1일이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회계연도가 역년(calendar year)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기간은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할 때 prorata temporis 기초에서 수행된다.

- 캐나다, 일본, 영국에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회계연도(n)는 4월 1일(n)부터 3월 31일까지(n+1) 이므로,

$$GDP(n)=0.75*GDP(n)+0.25*GDP(n+1)$$
 에 대해 조정된다.
- 미국은 회계연도(n)가 10월 1일(n-1) 부터 9월 30일까지(n) 이므로,

$$GDP(n)=0.25*GDP(n-1)+0.75*GDP(n)$$
 으로 조정된다.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참조연도는 역년에 따르지 않고 6월부터 7월로 정의되지만, GDP에 대한 계산 기간은 역년을 따른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시되는 모든 데이터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6월 1일과 함께 시작한다.

SOCX does not include administrative costs

90. SOCX는 일반적으로 행정비용을 배제한다. 예를 들면, 급여를 제공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지출은 수급자에게 직접 가지는 않는다. 행정 비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간접비(overheads)에 대한 지출만 포함된다: 수급자 등록, 급여 행정, 기여의 수집, 통제(컨트롤), 조사, 평가, 재보험

91. 그러나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과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과 같은 서비스제공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합계에 포함된다. 이들 데이터 소스에는 자체적인 개념과 정의를 가지는 OECD Education database와 the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그리고 OECD Health Data를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지출에서 의료직원, 고용서비스 직원과 보육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마찬가지로 행정 비용의 포함은 수급자-예를 들어 구직자에 대한 응대 및 카운슬링,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 환자에 대한 응대와 병원서비스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통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SOCX includes capital transfers and records transactions on an accrual basis

92. SNA 93에 따라 자본투자(예: 건설비용)는 발생주의(accruals basis)에 기초하여 포함된다. 즉 장기요양기관(혹은 병원)에 대한 건설비용이 1백만 미국달러(이자를 포함하여)라고 할 때, 건설된 지 4년 이상이라면 연간 배상비용은 25만 미국달러가 투자 지출로 매년 포함되어야 한다.

SOCX generally excludes loans

93.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정의는 개입은 동시적인 상호간 배열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수급자가 교환적으로 등가의 가치에 대한 어떤 것을 동시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가지는 개입은 사회보장의 범위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에 제공되는 이자가 붙는 대출은 사회보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입자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일시불 지급을 갚는 것을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대출이 무이자거나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현재의 시장 비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한다면, 이자금액의 포기는 사회적 급여로 자격을 갖는다.”(Eurostat, 2008)

II.3.3. Data sources

94. SOCX 데이터 프로세스의 속성은 하나의 총 망라된 조사표에서 모든 데이터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간단하지 않고, 각기 다른 자료로부터 각기 다른 포맷으로 추출된다:

-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에 관한 데이터가 OECD Health Data와 OECD database on Labour Market Programmes에서 각각 제공된다(OECD, 2010d, 그리고 2011b, Statistica Annex). 3,4,5세(ISCED 0)의 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OECD Educational database의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의 시리즈에서 제공된다.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업보상(현금 이전)에 관한 데이터는 EU에 속해있지 않고 EU국가들에 대한 ESSPROS로부터 제공되는 ALMP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된다.
- 10개 비유럽 OECD 회원국에 대해서는 SOCX 조사표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고용, 노동,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대표의 서비스를 통해 생산된다.
- 24개 유럽국가들(EU 21개국, 노르웨이와 스위스)에 대해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데이터는 ESSPROS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근거하여 EUROSTAT에 의해 제공된다(EUROSTAT, 2010).

95.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유럽 OECD 국가들에서 데이터 생산자와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선택은 거의 없다. 시작부터 OECD 회원국이면서 EU에 속한 국가들은 몇 개의 사회복지지출 조사표를 취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ROSTAT를 통해 OECD에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이해할 만하지만, a) 단지 EUROSTAT로부터 받은 정보가 개별 국가에 대한 '입증된' 데이터이며, b) ESSPROS 형태에서 받은 데이터가 비유럽 OECD 국가들과 정보를 양립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야 한다. 게다가 ESSPROS 데이터는 보건과/혹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모든 공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파일은 필연적으로 다른 자료로 구축되어야 한다.

96. 모든 OECD 국가들에 대한 지출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EUROSTAT 데이터의 제출이 설명되어야 하고, 모든 OECD국가에서 자발적인 민간사회지출 항목이 공공 지출 데이터와 비교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지출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다 일반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부록 II. 1은 데이터의 자료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포함한다.

97. SOCX에 사용된 다른 일련의 참조들은 OECD(2011e)에서 있다:

- Gross Domestic Product (GDP)
- Deflator for GDP
- Gross Domestic Product at 2000 prices (GDPV)
- Gross National Income (GNI)
- Net National Income (NNI)
-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GOV)
- Purchase Power Parities (PPP)
- Exchange rate (EXC)
- Population (POP)

II.4. 순(세후)사회복지지출

98. 공공예산 등에 기록되는 총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는 조세제도가 공공과 민간의 사회 보호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조세제도는 영향력이 크고 그 정도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의 국가 간 비교에도 영향을 미친다.

99. 일반적인 세입은 공공사회지출 자금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세입흐름(사회보장기여금)이 그 목적에 대해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OECD, 2010a). 하지만, 조세제도 또한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⁸²⁾:

1. 급여소득의 직접과세: 정부는 수급자의 현금이전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한다. 총 사회복지지출 지표가 보여주는 만큼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대한 간접과세: 급여소득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위해서 지급된다. 간접세는 주어진 급여소득 이상으로 하는 소비를 억제한다.

82) 재정조정은 급여의 순가치에 대한 '1차효과(first round effects)'를 측정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병원이나 보육원 직원)의 소득에 대한 직접과세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정부는 또한 사회정책목적에 직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이용한다. 사회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재정조치에는 현금급여(아동세제혜택(child tax allowances))를 대체하거나 민간부문의 급여(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제공을 장려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tax breaks for special purposes: TBSPs)은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혜택과 함께 가계에 도움을 주는 고용주나 민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포함된다(가계를 수급자로 하는 고용주 지급 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민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

100. 의약품과 같은 서비스가 간접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혜택의 직접과세와 간접과세의 조정이 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간접과세 대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지출 데이터와 세율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II.4.1. 현금급여의 직접 과세

101. 일부 OECD 국가에서는 급여가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급여가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급여가 직접세를 내고 지급된다. 실업보험급여의 처리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표 II.3). 오스트리아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전에 평균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벌고 배우자와 두 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았다면 2007년에 15,812유로 정도를 받았고 이 중에서 669달러는 세금공제를 받았다. 반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스웨덴 사람은 연간 19,112유로를 소득지원 받지만 소득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5,147유로를 지불해서 순급여소득은 13,966 유로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가정이 받는 총액은 훨씬 높아도 순소득은 오스트리아보다 낮다. 사회복지지출 총액으로 봤을 때 이전소득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이전소득의 상당부분을 국고 재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업급여를 위한 순(세후)공공지출은 스웨덴 총액의 75% 수준이다.

102. 여러 유형의 급여가 과세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표 II.3). 일반적으로 실업보조금, 사회지원금, 주택급여, 가족급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공공 및 민간 퇴직, 장애인 연금은 과세되지만 세율은 낮다(OECD, 2011c). 또한 병가시에 받는 지속적인 임금은 소득으로 과세된다(OECD, 2011d).

〈표 11.3〉 국가 간 다른 급여의 과세 방식

급여의 과세 및 사회보장 조치(2007)

구 분	연금 이전 (노령, 장애인)	아동보조	실업	주택	사회지원
호주	T(경감)	N	T(n)S(n)	N	-
오스트리아	TS(경감)	N	*	N	N
벨기에	T(경감)S(경감)	N	T(n)	-	N
캐나다	T(경감)	-	T	-	N
체코	T(경감)	N	N	N	N
덴마크	T	N	TS(경감)	N	TS(경감)
핀란드	T(경감)S(경감)	N	TS(경감)	N	N
프랑스	TS(경감)	N	TS(경감)	N	N
독일	T(경감)S(경감)	tc	*	N	-
그리스	TS(경감)	N	N	N	-
헝가리	T	N	TS(경감)	N	N
아이슬란드	T	N	TS	N	TS
아일랜드	TS(경감)	N	T(n)	N	N
이탈리아	T(경감)	N	TS(경감)	-	-
일본	TS(경감)	N	N	-	N
한국	T(경감)	-	N	-	N
룩셈부르크	TS(경감)	N	TS(경감)	TS	TS
멕시코	T(n)	N	-	-	-
네덜란드	TS(경감)	N	TS	N	*
뉴질랜드	T	N	-	N	-
노르웨이	T(경감)S(경감)	N	TS	N	N
폴란드	TS(경감)	N	T	N	N
포르투갈	T	N	N	-	N
슬로바키아	T(경감)	N	N	-	N
스페인	T(경감)	N	TS(경감)	-	T(n)
스웨덴	T	N	TS	N	N
스위스	T	T	TS(경감)	-	N
터키	N	-	N	-	-
영국	T	N	T(n)S(n)	N	N
미국	T(경감)	N	T	N	N

주: T: 세금 부과 S: 사회보장기여금(SSC) 부과 N: 세금이나 SSC 둘 중 하나 부과 T(n) 혹은 S(n): (장기간) 수혜자는 보조 수준을 초월하는 범위를 공제, 세금공제 혹은 영세율로써 세금이나 SSC를 납부하지 않음 : 특별한 제도가 없거나 이용가능한 정보가 없음 "(reduced)": 경감률은 수혜자를 위해 지불 *: 보조가 세금 소득후의 비율(그러므로 과세할 수 없음), tc: 납비할 수 없는 세액공제(환급형)

자료: OECD Tax-Benefit models database(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OECD(2011c), Pensions at a Glance.

II.4.1.1. 방법과 데이터 원천: 행정기록, 마이크로 시뮬레이션과 마이크로 데이터

103. 직접과세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총 지출항목(예컨대 실업보상이나 노령연금 급여 지출 등) 조정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각국에서 특정 급여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가장 믿을만한 정보로 세금 당국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사회보험기금에서 나온 데이터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흔하지 않고 독일과 스페인의 급여수급자가 내는 사회보장 부담금 정보가 전부이다. 그 외 일부 국가에서는(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이태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현금급여에 대한 직접과세의 조정은 세금통계 등 행정기록을 통해 급여수급자가 지불한 세금 추정값을 이용해서 산정한다. 벨기에의 경우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각각 국가통계정보와 국민 계정에 기초했다.

104. 그 외 국가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제공한 ‘평균항목별세율 (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 추정값을 이용해 급여수급자가 낸 직접세의 규모를 산정했다. 이는 공공연금급여, 실업보상금, 육아휴직수당 등 특정지출항목에 대한 평균세율(사회보장 부담금 포함) 등이다. AITR은 세금에 관한 행정 데이터 등 각국의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 계산했다(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미국).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이크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항목별 세율을 계산했다. 이러한 방식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직접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어서 이들 AITR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총 사회복지지출 항목에 적용했다.

105. 거의 모든 급여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이크로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AITR을 계산한 국가들은 이러한 정보를 매우 세세하게 보고하고 다양한 이전항목에 대해 가장 많은 수의 평균항목별세율을 다루고 있다. 덴마크는 21개의 이전항목에 대한 AITR을 다루고 있고, 스웨덴은 10건의 이전항목에 대해 이를 다루고 있다. 과세대상 급여가 적고(그래서)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AITR을 계산하는 국가들은 일부 세율만 보고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AITR의 산정

106. AITR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적 급여(보조)에 부과되는 세금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AITR은 특정 급여를 받은 사람이 낸 전체 세금을 해당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전체소득(소득원 무관)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식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AITR_i = \sum_{tu=1, n} TI_i / \sum_{tu=1, n} I_i$$

이 때 I_i 는 과세대상인 “i” 유형의 소득금액, TI_i 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낸 세금, “i”는 소득 유형 또는 카테고리, “tu”는 소득유형이 “i”인 세금 단위, “n”은 “i” 유형의 소득 샘플의 세금단위의 수임. 광범위한 소득카테고리인 “i”에는 노령연금급여, 실업보상금, 임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107.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이크로 데이터 셋에는 가계소득과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 기술은 신뢰할만한 추정 값을 생산하지만 계산과정에서 소득의 배분 방식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동수당처럼 급여가 비과세라고 가정하면 해당 AITR은 선형적으로 0과 같다. 이전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동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사회보장 부담금 포함)을 이용해서 순이전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의 직접세를 계산하는 것이 더 복잡해진다. 가령 1년 동안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았거나, 연간소득이 일정 소득과 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거나, 여러 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득항목별로 납부한 세금을 배정해야 하고 각 소득유형의 가중치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소득별로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급여가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고 소득이 25%라면 소득세의 75%는 급여소득에 과세된 것으로 가정한다(과세대상 중 일부는(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 소득항목과 세금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경우 세금공제는 해당 소득항목에 배정해야 한다.).

108. 급여소득이 누진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다양한 소득의 총액에 적용 가능). 각기 다른 소득에 순서를 매기거나 어떤 소득을 가장 높은 세율 혹은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것인가를 임의로 결정하기 보다는 특정소득(또는 여러 소득)에 대해 가계가 내야 할 세율을 바탕으로 평균항목별세율을 계산한다. 각각의 다른 소득의 상대적인 가중치에 따라 소득세를 분배하고 (상기 설명 참조) 표본에 있는 가계에 대해 총계를 내서 AITR을 계산할 수 있다(Box II.4 참조).

Box II. 4: 평균항목별세율 산정 사례

한군데에서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급여소득에 관한 평균항목별세율(AITR) 계산은 단순하다.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1년에 100단위의 공공연금을 10%의 '표준' 세율로 수령한다면 그의 순연간이전소득은 90단위이다. 여기에서 공공퇴직소득을 받는 모든 가계가 기타 소득이 없다면 공공연금소득에 대한 AITR은 10%이다. 그런데 퇴직자 중 일부가 비과세 아동보조금을 받는다면 이 소득은 이 가계의 소득세율 계산에서 무시되고 아동보조금에 대한 AITR은 0이다.

연금수령자들은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다. 공공연금을 50단위 받고 민간연금을 100단위를 받는 퇴직자가 있다고 하자. 누진세가 없다면 가계의 세율은 10%이고 순이전소득은 135단위이다. 그러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이 중 일부 소득은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Table box 4.1 참조) 그렇게 되면 '평균' 세율은 올라간다. 이 경우 100단위의 이전소득은 10%로 과세되고 50단위는 15%로 과세된다. 총소득세는 17.5단위이고 이는 전체 가계 소득에서 공공과 민간연금소득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가중치에 따라서 각각에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의 소득에 순서를 매겨서 어떤 소득을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어떤 소득을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것인가를 임의로 결정하여 각각의 소득원을 다르게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다. AITR의 차이는 급여수급자가 속한 소득그룹과 관련이 있다.

〈표 II.4〉 소득의 2가지 유형에 대한 AITR 계산

가 계	공공연금	민간연금	총가계소득	소득세율	납세액	연금소득요소별 세금	
						공공	민간
1	50	25	75	10%	7.5	5.0	2.5
2	75	50	125	15%	13.8	8.3	5.5
3	100	0	100	10%	10.0	10.0	0.0
4	50	100	150	15%	17.5	5.8	11.7
5	50	250	300	15%	40.0	6.7	33.3
총 계	325	425	750		88.8	35.8	53

주: AITR 공공연금소득=공공연금/총공공연금소득 을 넘어서는 과세액 11.1%

주: AITR 민간연금소득=민간연금/총민간연금소득 을 넘어서는 과세액 12.5%

가정: 소득이 100단위 미만이면 표준세율은 10%이고 100단위 이상일 때에는 소득의 15%

109.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급여소득이 비과세이면 해당 AITR은 선형적으로 0과 같다. 그러나 비과세 급여소득이 과세대상인 급여소득의 소득테스트에 고려되어 직접세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과세 급여를 수령한 가계는 기타 소득이전 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3개의 사회복지사업(소득보장보조금, (지방의) 사회복지 지원, 노동보상제도)이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의 과세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3개의 급여 모두 비과세이지만 해당 소득이 여타 급여의 소득 테스트에 고려되기 때문에 이들 수급자가 여타 급여제도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캐나다 당국은 평균(한계) 세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이 3개 사업을 소득원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세율을 3개의 사회이전금에 각각 적용하여 암묵세를 산정하고 이를 다시 3개 사업의 이전지출 금액으로 나누어 AITR을 계산했다(부록 I.2 참조).

II.4.2.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대한 간접과세

110. 소비세는 일정한 급여를 이용한 소비의 실질가치를 낮추고 (급여소득의 직접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또 다른 세금수입을 창출한다.⁸³⁾ 급여소득의 직접과세가 국가간 차이가 있듯이 직접세 역시 국가 간 차이가 있어서 복지국가지출의 직접적인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과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가(비유럽권 OECD 국가)에서는 간접세율이 높은 국가의 수급권자가 받는 순소득수준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 사회복지지출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가령 급여수급자에게 100단위의 순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평균 간접세가 5%에 달하는 국가에서는 106단위의 총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평균직접세율이 25%인 덴마크에서는 133단위의 총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과 비유럽권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낮은 간접세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지출의 국가 간 비교의 질이 개선된다.

83) 이 방법은 수급자가 급여소득을 저축하지 않고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비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저축도 어느 시점에서는 소비가 될 것이고 급여소득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1에 가깝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제한적이다.

111.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세가 저소득층 가계(이 중 다수가 이전소득 수급자임)의 자금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호주는 2000년 7월에 10%(식품 제외)의 재화 및 용역세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 수급자를 위한 보상제도를 동시에 도입했다. 캐나다도 저소득층 가계 지원을 위해서 재화 및 서비스 환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I.4.2.1. 방법과 데이터 원천: 국민 계정과 세입통계

112.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관한 자세한 데이터는 없다. 가계 소비조사 결과로 다양한 소득 계층의 소비패턴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국가별로 이러한 데이터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비조사에 따르면 간접세 납부는 적게 신고 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수총계가 실제 세수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Gho et al., (2010)을 참조하기 바란다. 동 매뉴얼에서는 OECD 세입통계와 OECD 국민 계정(OECD, 2010a, and 2010e)에 있는 전 회원국의 데이터 총계를 이용해서 평균 암묵적 간접세율(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구했다. 추정 값이긴 하지만 이 방식이 명확하고 투명하다.

113. <표 II.4>에는 간접세가 3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우선, 3번째 줄에 제시된 것으로 일반소비세와 특정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합한 간접세 수입금액이다. 4번째 줄은 이 외에도 재정독점(fiscal monopolies)에 의한 수입과, 관세, 서비스세, 기타 minor tax가 포함된다. 5번째 줄에는 이 외에도 자동차 면허와 알코올 판매 등 재화의 사용에 부과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간접세 산정에 이 3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표 II.4>의 4번째와 5번째 줄에 제시된 간접세에는 가계가 내지 않는 간접세 항목이 3번째 줄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3번째 줄의 간접세 항목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가계가 내지 않는 일부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3번째 줄에 제시된 간접세가 오차범위가 가장 적으므로 급여소득을 이용한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계산하는 데 가장 적당하다.

114. 국민계정에 있는 민간소비 데이터는 의 1번째 줄에 나와 있다. 그러나 OECD 세입 통계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징수한 세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부처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면 간접세를 내야 한다(이는 다시 정부부문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소비지출이 민간소비지출에 더해지고 직원 봉급에 해당되는 정부소비는 여기에서 빠진다(2번째 줄). 이렇게 해서 일관된 간접세 과세기준 근사치를 마련했다.

115. 평균 암묵적 간접세율은 일반소비세에 특별소비세를 더한 세입과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를 더한 것에 정부 직원 봉급을 뺀 소비세 과세기준 간의 비율이다(6번째 줄 참조). 2007년 평균 암묵적 간접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 (4.1%), 멕시코 (6.0%), 일본 (6.3%)이었고, 호주와 캐나다는 10%대였다. 독일, 한국, 이태리, 스페인은 12~14% 사이였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5%와 23.7% 사이였으며, 덴마크는 26%였다.

II.4.3.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116. 조세제도를 통한 지출, 또는 조세지출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emption(소득이 과세기준에서 제외); allowances(총소득에서 금액 공제); credits(과세채무에서 금액 공제); 세금감면(노인 등 특정그룹을 위한 세율 인하); 그리고 세금 유예이다. 그러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OECD, 1996). 특히 조세지출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benchmark)'이 되는 조세제도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없다. 각국이 조세지출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은 ('정상적인' 조세제도 구조) 매우 다르고, 조세지출의 측정이 어려워 국가 간 비교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호제도 등과 관련된 '조세지출'의 하위항목 간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 매뉴얼에서는 현금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부분과 조세제도를 통해서 급여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기준(benchmark)'이 되는 조세제도에 대한 언급이 따로 필요 없다.

117. 많은 OECD 국가들은 조세제도를 통해서 사회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크게 2가지 조치가 있다. 첫 번째는 가계의 특정소득원이나 소득유형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현금이전은 영세율이나 인하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세금감면은 급여소득에 대한 직접과세와 유사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직접과세(앞의 내용 참조)에 대한 섹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따라서 급여에 대한 세금면제나 세율인하는 급여소득에 징수되는 직접세 산정에 이미 반영했고(예를 들어 아동수당과 관련된 지출은 영세율이 적용됨) 여기에서는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Tax Break with a Social Purpose: TBSP) 항목으로 또다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부양아동을 위한 세금공제(이는 아동 수당의 비과세와는 다름)는 TBSP로 기록했다(아래 참조).

118. 사회적 효과가 수반되는 세제조치의 2번째 유형은 사회적 목적의 세제 혜택(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TBSPs)이다. TBSPs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세금인하, 면제, 공제, 또는 유예로 a) 사회복지지출로 분류되었을 이전수급과 동일한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b)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9. 현금급여를 대체하는 TBSPs에는 부양아동에 대한 세금공제가 포함된다. 민간부문의 지출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진 TBSPs에는 비영리 NGO에 대한 세금감면, 민간의료보험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그리고 민간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된다.

II.4.3.1. 방법과 데이터 원천: 손실세입의 평가

120.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의 규모에 관한 정보는 각 나라의 당국에서 발간한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 정부(2009), 캐나다 재무부(2008), 아일랜드 정부(2008), 미국의 OMB(2009)가 발간한 보고서 등이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세제조치로 인해 손실된 세수, 즉 재정조치로 인해서 축소된 세입 금액의 추정값이 보고된다. 그리고 캐나다, 일본, 미국의 예에서처럼 중앙/연방정부에 의한 세제혜택은 다루지만 하위단계의 정부에 의한 세제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보고되지

않음). 국가별로 종합적인 정보가 (아직) 없지만 캐나다의 경우 sub-national TBSPs의 규모는 GDP의 0.6%에 가까울 것이다.⁸⁴⁾

121. 많은 국가가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의 비중을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의 총계를 낸다. 그러나 조세지출과 TBSPs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한 부모에 대한 세금공제와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이 별도로 존재하는 예를 살펴보자. 이 2개의 재정조치는 보통은 따로 계산(보고)된다. 그러나 두개의 TBSPs 중 하나를 빼면 일부 납세자는 더 높은 한계세율 범주에 들어가게 되어 나머지 TBSP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세제혜택 수혜자가 이미 최대의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한). 두 개 TBSPs의 가치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각각의 조치를 따로 합하는 것보다 금액이 커진다. 각각의 TBSP는 서로가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기 때문이다. 손실된 개별 세입 추정치는 TBSPs의 비용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미래의) 납세액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추정치의 총계는 전체 비용을 과소평가한다.

122. TBSPs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OECD, 1996). 위에서 기술한 ‘세수손실법’은 특정조치에 의해 손실된 세입 금액을 사후에 측정하는 방식이다. 표 II.5를 보면 측정방법에 따라서 세제혜택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현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연기연금 소득이나 미래의 급여에 대해 기납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 세수손실법보다 추정값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의 현재가치가 세수손실법에 다른 추정값보다 훨씬 낮지만 연금부담금을 제외하면 반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개인퇴직상품 가입자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해당 소득이전에 대해 미래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들은 현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미래의 지불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4) 캐나다는 연방세와 지방세에서 지출되는 급여소득의 직접세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2000년대 중반에 지방세가 연방세의 50% 정도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2007년 현금급여와 유사한 TBSPs의 실제가치는 연방 TBSPs의 가치인 GDP의 1.3%가 아니고 요소비용 GDP의 2% 수준이었을 것이다. 동 보고서에는 사회적 목적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데이터가 일부 기록되었다(가족구성원 크기, 자녀의 유무, 부양가족 등).

〈표 II.5〉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가치, 미국, 2007

(단위 : 100만 달러)

	계산 방법	
	세수손실 가치	현재 가치
연금부담금과 소득 제외 -고용주 지원보험	52,470	74,120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부담금과 소득 제외	5,970	4,300
Keogh Plans(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부담금과 소득 제외	10,670	8,600

주: 미 행정부는 지출등가의 추정치가 기본조세지출 추정치와 동일한 경우가 많고, 두 추정치가 다른 경우 이 개념을 적용하는 기준도 판단을 요하며, 모든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세금지출항목에 걸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

자료: US OMB (2009), Analytical Perspectives, 미국 예산, 회계연도 2009.

123. 사회복지지출과 TBSPs 모두 현금주의나 발생주의로 계산할 수 있다. 현금주의는 정부의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며 발생주의는 특정 기간에 정부에 발생할 과세채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연금에 대한 TBSPs를 제외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⁸⁵⁾ 적립형 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현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래의 세금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7년의 연금부담금으로 2007년의 임금과 미래시점의 해당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자, 자본이익 등)에 대한 세금납부가 연기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특정시점에 2007년의 연금부담금과 미수수익이 지급될 것이고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세입을 현재가치로 추정하는 것이다.

124.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에는 민간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금면제와 일시불연금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 일종의 계약성 저축으로써 이에 대한 세금감면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세금감면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셋은 없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Tax Breaks for Pensions)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일부 국가의 추정 값은 동 보고서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memorandum item(비고항목)에만 포함시켰다 (아래 참조).

85)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현금주의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세입통계의 보고방식이 최근에 바뀌면서 발생주의로 추정한 TBSPs를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4.3.2. 계산에 포함된 세제혜택과 포함되지 않은 세제혜택

125. 많은 OECD국가에서(독일과 프랑스 등)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조세제도에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가 각국의 기본 세금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세지출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원은 분명 재정적·사회적인 지원이므로 TBSPs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에 대한 지원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재정조치는 TBSP로 간주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부양자녀가 있으면 사회보호제도를 통해 현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만 혼인계약만으로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혼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래서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러한 조치가 기본조세제도의 일환인지 여부를 떠나서). 프랑스의 경우 'quotient familial(가족비율)'을 통한 아동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07년에 115억 유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⁸⁶⁾

126.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에는 민간연금 부담금의 비과세 등 민간연금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연금급여가 미래에 발생하고 과세나 세금감면이 연금저축 기간 중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다루기는 어렵다. 적립형연금의 세제혜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고용주나 직원이 연금부담금을 내고, 이는 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에서 발생한다.
- 연금 납입자를 대신해서 연금부담금을 투자하는 기금은 과세 혹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

86) 프랑스의 소득세 제도는 가계를 기본단위로 본다. 그래서 가계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세대상 가계소득에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이 적용되는데, 이는 누진적 한계세율표에서 가계소득이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게 해준다. 가족계수는 전체 과세대상가계소득 'R'을 가구 구성원으로 결정되는 'N'이라는 인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N'은 가구구성원의 합이다: 부부는 각각 1개 단위이며, 첫 두 자녀는 각각 0.5 단위, 세번째 자녀부터는 한자녀 당 1개 단위로 계산된다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부양가족을 둔 가정은 좀 더 유리한 규칙이 적용된다). 부부와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가족계수는 3이 되고 3자녀를 둔 경우 4가 된다. 소득수준이 동일하면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족계수는 낮아진다.

- 연금저축 기간이 끝난 후에 받는 연금(pension), 연금보험(annuity), 일괄 지불금은 과세 혹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

위의 고려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계산과 국가마다 상이한 계산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셋은 없다. 당해 사업연도의 조세제도가 공공예산에 미치는 비용(현금주의)에 대한 데이터는 일부 있다. 이들 데이터는 현재의 조세제도가 미래의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보여준다.

II.4.4. 순 사회복지지출의 기본틀: 개요

127. 사회지출지표를 국가 간 비교하기 위해서는 총지출액과 사회정책을 위한 조세 제도의 역할을 하나의 기본 틀에 통합해서 순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표 II.5>는 이러한 기본 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아래에 괄호 안의 숫자/글자는 이 표에서 해당되는 줄을 나타낸 것이다).

- 먼저 총 공공사회지출(1)에서 국고로 귀속된 직접세와 공공급여로 소비된 재화에 대한 간접세를 빼서 순 직접공공사회지출(2)을 계산한다. 그리고 현금급여와 유사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연금 제외)의 가치(T1)가 소비에 사용되므로 이들 항목에 대한 간접세의 귀속가치를 빼서 현금급여와 유사한 순TBSPs(4)를 도출한다. 현행 민간급여(T2)에 대한 TBSPs의 가치를 더 하면 순 현재 공공사회지출(6)이 나온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순 공공사회지출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규모와 급여수급자에게 재분배되는 순 사회복지의 비중을 잘 반영해 준다.
- 정부통제 하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지원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민간급여도 포함해야 하고 이러한 급여가 직접세와 간접세의 과세대상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순 정부통제 사회지출(net government-controlled social expenditure)은 순 공공 법적사회지출 (net publicly mandated social expenditure)이라는 제목 안에 제시했다(9). 마지막으로 총 자발

적 민간급여도 직접세와 간접세를 빼서 순 직접 자발적 민간사회지출을 계산했다(11).

- 순 공공급여, 법적민간급여와 자발적급여를 합하면 순 총사회지출(13)지표가 나온다. 이 지표는 국내생산에서 사회급여수급자에게 할당된 비중을 정량화해 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행 민간사회급여(T3)에 대한 세제혜택은 민간사회급여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TBSPs가 공공지출 항목이지만 민간급여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순 공공사회지출과 순 민간사회지출을 더하는 것은 가계에 지원되는 금액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순 총사회지출(13)은 순 현행 공공사회지출(6)과 순 직접 민간사회지출(12)을 더한 값에서 현행 민간사회급여(T2)를 마이너스한 값이다.⁸⁷⁾ 순 총사회지출은 한 경제의 국내생산 중에서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128. 마지막으로 순 사회지출 지표는 경제규모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 시장가격 GDP가 아닌 요소비용 GDP로 표시했다. 이는 간접세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급여를 조정했기 때문에 분모인 GDP도 동일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소비용 GDP는 간접세나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간 비교에 가장 적절한 지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을 국가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 원문의 부록에는 시장가격 GDP 대비 순 지출지표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원문의 부록에는 국민소득(국내소득이 아닌) 대비 순 지출지표도 포함시켰다.

87) 민간부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가치는 민간부문급여에 부과된 직접세와 간접세를 빼서 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TBSP가 얼마만큼 민간급여의 가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표 II.6〉 총 사회지출부터 순 사회지출까지: 간략한 개요

+/-	출번호#	항목
	1.	총 직접 공공사회지출
-		공공 현금보조로 지불된 직접세와 사회적 기여금
	2.	순 현금 직접 공공사회지출
-		순 현금이전에 의해 재원마련 된 민간소비에 대한 간접세
	3.	순 직접 공공사회지출
+	T1	현금급여를 반영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제혜택
-		현금급여와 유사한 세제혜택에 의해 재원마련 된 민간소비에 대한 간접세
	4	현금급여와 유사한 순TBSPs
+	T2	현행 민간사회급여에 대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5	순 TBSP(연금 제외)
	6.	순 현행 공공 사회지출[3+5]
	7.	총 법적 민간 사회지출
-		직접세와 법적 민간 현금보조로 지불된 사회적 기여금
-		순 법적 민간현금으로 구입된 소비에 대한 간접세
	8.	순 직접 법적 민간 사회지출
	9.	순 정부 법적 사회지출[6+8]
	10.	총 자발적 민간 사회지출
-		직접세와 자발적 민간 현금보조로 지불된 사회적 기여금
-		순 자발적 민간 현금보조로 구입된 소비에 대한 간접세
	11.	순 직접 자발적 민간 사회지출
	12.	순 직접 민간 사회지출[8+11]
	13.1	순 총 사회지출[6+12-T2]

주: 1)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순 총 사회지출은 현행 민간보조를 향한 세금 우대조치를 감한 순 공공 그리고 순 민간 사회지출의 합으로 얻어진다.

2) 음영이 있는 줄은 세금이 조정됨.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⁸⁸⁾

※ 아래의 목차, 단락, 표·그림의 번호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원문을 준용함.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1996년 7개 회원국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2개의 집행 위원회로 소규모 태스크포스(task-force team)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실업문제 타개를 위해 단행하고 있는 노동시장정책(LMP)의 비용과 참여에 관한 비교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럽 연합집행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1997년 11월 유럽이사회가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을 출범하면서 그 타당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노동시장정책(LMP)은 그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 및 기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개입만을 의미하는 등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차 대상 집단은 공공고용알선기관에 등록된 실업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참여 활성화도 정책의 우선과제로 부상하였다.

여러 해에 걸쳐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방법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노동시장정책 방법론의 초판은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유럽연합통계청과 ‘고용 및 사회문제 집행위원회’의 공동프로젝트로 마련되어 정책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참가자의 수, 경비 등 노동시장정책 개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집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 5월 출판된 노동시장정책 방법론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2000년과 2005년 사이 사용된 참고 지침을 담고 있다.

2006년 6월까지 유럽연합통계청은 다음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여 1998-2004년까지의 자료에 관한 7개의 간행물들을 출판하였다:

88)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서 2006년 발간한 “Labour market policy database Methodology”의 내용을 번역·정리함.

(a) 노동시장정책의 총지출, 범주별 지출, 수혜자별 지출, 급여 유형별 지출, 범주별 및 국가별 상세노동시장지출,

(b) 범주별 노동시장정책 전체 참가자, 범주별 참가자의 진입과 탈퇴, 범주별 및 국가별 참가자 관련 상세수치(연령 및 성별 분류 등)

추계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통계업무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처음 추계를 시작한 1998년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견이나 질의, 제안 등을 보내오는 등 지침 개선을 위해 기여하였다. 이러한 개발, 검토 및 개정의 과정은 ‘고용 및 사회문제 집행위원회’와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시장정책 추계방법론은 고용위원회가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의 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표명한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확대되어 왔고, 신규회원국 대부분은 2005년부터 노동시장정책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들은 2006년부터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2005년에는 최초로 노동시장정책 자료를 OECD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두 조직은 유럽연합 통계청의 방법론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고, OECD는 매뉴얼의 개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1. 범위(SCOPE)와 주요 정의(KEY DEFINITIONS)

1.1. 범위

§1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는 제반 노동시장 개입을 포괄한다. 노동시장에서 공적개입(Public intervention)은 효율적인 기능을 달성하고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특정 집단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타 일반적인 고용정책과 구분된다.

§2 일반정부에 의한 공적개입은 실질적인 지출(actual disbursements) 또는 기존 세입의 감소(forgone revenue)(세금, 사회복지 기금 또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분담금 등에서의 수입 축소)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3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광역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것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2 개입유형(TYPES OF INTERVENTION)

§4 모든 노동시장정책의 개입은 몇몇 서비스를 제외하고는(§6 참조) 다음에서 정한 하나 이상의 대상 집단(§17-§19 참조)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비를 발생시킨다. 많은 경우에 공공경비의 직접 수혜자는 사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집행된 활동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노동시장정책의 대상 집단인 참가자(§20 참조)이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개입이 있다:

§5 서비스(services)는 참가자의 주요활동이 구직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참가로 인해 노동시장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노동시장개입을 가리킨다.

§6 서비스에는 참가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의 다른 기능도 포함된다. 이는 사용자를 위한 일자리 알선(placement) 및 기타 서비스, 관리 기능, 일반경비, 공공고용알선기관의 책임에 따른 기타 활동 등이 포함된다.

§7 수단(measures)은 참가자의 주요활동이 구직과 관련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참가로 인해 노동시장상황이 변화하게 되는 노동시장개입을 가리킨다. 노동시장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개입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이 수행되는 활동이지만 감독을 받고 있고, 참여자가 특정 기간 동안 전일제 혹은 중요한 파트타임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 참여자의 직업적인 자격요건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 개입이 take-up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포함한)고용을 제공

§8 노동시장정책수단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개입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13-§15 참조). 대부분의 정책수단은 비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에 처한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업자의 취업 활성화 목표를 갖거나 아니면 실업위기에 놓인 사람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9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수단 중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정책수단은 영구적인 근로능력감소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상시 지원 제공과 관련된다 (§ 84 참조).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용에 대해 생산성의 감소나

기타 간접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공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10 지원(support)은 노동시장적인 이유로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제공하거나 또는 노동시장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개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개입을 뜻한다.

§11 참여자(§20 참조)는 일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없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지만,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직한 사람도 포함된다.

§12 지원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으나 정책수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융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해당 조치의 일부로 간주된다.

1.3 대상 집단(target groups)

§13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단-여기에서는 대상 집단이라고 함-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용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목표가 유사할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 대해 누구에게나 비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보다 일반적인 고용정책이나 사회보호정책 또는 재정정책과 노동시장정책(LMP)에 대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14 3개의 주요 대상 집단은 아래에서 정한 바와 같다(§17-§19 참조). 모든 노동시장 정책수단(§7 참조)과 지원(§10 참조)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이러한 집단 중 적어도 하나를 목표로 하거나 국가별 구체적인 대상설정기준(§15 참조)을 따라야 한다. 노동시장서비스(§5 참조)는 적용이 보다 광범위하고 노동시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개입을 포함한다.

§15 또한 상기의 대상집단 이외의 집단의 고용증진을 위해 정부가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집단(예, 청년)이나 특정지역에서 존재하는 실업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들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사용자가 고용하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개입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집단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

§16 데이터베이스는 3개의 주요 대상 집단 내에서 개입이 특정 집단(§287 참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대상 집단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세

부 대상 집단의 수를 정하고 있다.

§17 실업자-일반적으로 일자리가 없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 각국별 정의에 따라 등록실업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이러한 3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포함된다.

§18 실업위기에 있는 취업자-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경제상황,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실업 위기에 있는 사람.

§19 비경제활동자-현재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상기 정의에 따라 취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실직했다는 의미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며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

1.3.1 참여자(participant)라는 용어의 사용

§20 참여자와 관련한 표현(예. -에 참가하고 있는)은 개입의 유형과 무관하게 각 개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정책 수단에서 개인은 훈련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일자리’(subsidized job) 등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게 되므로 참여자라는 표현은 술어적으로 의미에는 맞는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 지원의 경우 개입은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현금지급만을 가리키므로 수급자(beneficiary)라는 표현이 그 의미상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표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참여자라는 표현이 두 의미를 모두 함축하는 것으로 정한다.

1.4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개입의 사례

§21 노동시장에 집행되나 노동시장정책 대상집단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공공개입은 일반고용 및/또는 재정개입으로 간주하며 본 데이터 수집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상설정 기준에서 유일한 예외가 존재한다면 노동시장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36 참조).

§22 노동시장정책은 대상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집행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개입은 제외된다.

§23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여 보다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개입. 이러한 개입은 직접적인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용자에게 인력 중 일정 비중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개입(장애인 고용 할당제)은 3가지 주요 대상 집단 중 하나에 혜택을 주나 경비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취업장려수당(in work benefit)을 제공하는 개입은 사회복지 급여(수급)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이미 저임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노동시장정책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 종업원을 위해 계속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개입은 인적자본 개발을 목표로 하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실업위기에 처한 취업자(§18 참조)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 신규 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게 제공되며 이 때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에 실직 상태였는지를 특정하지 않는 보조금

2. 통계단위(STATISTICAL UNIT) 및 적용범위(COVERAGE)

2.1 통계단위

§24 본 자료 수집의 통계단위는 상기 정의에 따른 노동시장 개입이다.

§25 각각의 개입에 대해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는 지출과 참여자에 관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개입에 적용되고 이를 설명한다. 본 고에서는 요구되는 데이터의 상세내용을 지출, 참여자, 정성적 데이터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2.2 지리상의 적용범위

§26 데이터베이스는 각국의 전체 영토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자 한다.

§27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기타 하위 자치단체가 국가기관과는 독립적으로 노동시장정책 개입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입을 별개의 개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28 이러한 개입이 사실상 국가차원의 지역별 집행인 경우에는 보고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3 측정기간

§29 각각의 개입에 관한 데이터는 해당 개입이 유효하나 사용되지 않았던 기간(연)을 포함하여 해당 개입이 유효(예: 법률에 의해 적용이 허용)한 각 연도(역년, 曆年)에 따라 수집된다.

§30 개입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예: 법률에 의해 적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등) 더 이상의 경비 지출이 없고 모든 참가가 종료될 때까지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31 노동시장정책 개입 보고의 회계연도가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고 이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역년)와 가장 중복이 많이 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32 각국의 모든 데이터는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 개입에 관한 데이터가 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메타데이터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3. 개입의 분류(CLASSIFICATION OF INTERVENTIONS)

§33 모든 노동시장정책의 개입은 활동의 유형별로 분류되는데, 활동유형이란 개입이 소기의 목적(예: 훈련 또는 고용 인센티브)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노동시장정책 서비스에서는 1개의 범주, 노동시장정책 조치에서는 6개의 범주, 노동시장정책 지원에서는 2개의 범주가 있으며

이러한 범주의 각각은 대부분 2개 이상의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다.

§34 아래 표는 개입의 유형에 따른 범주를 나열하였으며 각 범주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반 세부 사항을 모두 보여주는 분류표는 원문의 별첨A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A〉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서비스(LMP services)
1. 노동시장서비스
노동시장정책 수단(LMP measures)
2. 훈련
3. 직무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4. 고용장려금
5. 보호고용(supported employment)과 재활(rehabilitation)
6.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7. 창업인센티브
노동시장정책 지원(LMP supports)
8. 비근로(out-of-work) 소득유지와 지원
9. 조기퇴직

§35 이 절의 remainder는 활동의 유형에 따른 개입의 분류에 대한 체계를 정의한다. 정의는 개입의 유형-서비스, 정책수단, 그리고 지원(§5에서 §10 참조)에 의해 그룹화된다.

3.1 노동시장정책 서비스

〈표 B〉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서비스

1. 노동시장 서비스
1.1 대인(client) 서비스
1.1.1 정보 서비스
1.1.2 개별 사례 관리
1.2 그 밖의 공공고용알선서비스(PES)의 활동
1.2.1 노동시장정책(LMP) 수단의 집행
1.2.2 노동시장정책 지원의 집행
1.2.3 기타 서비스/활동

§36 노동시장 서비스(범주 1)은 공공고용알선기관이 하는 모든 서비스와 활동 및 기타 공공기관 또는 공공재원으로 계약을 맺은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실업자 및 기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하거나 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선별하는 것을 지원한다.

§37 공공고용알선기관(PES)는 전국적 고용알선기관(그리고 지방/광역의 유사기관) 및 기타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들의 주요 업무는 실업자 및 기타 구직자의 노동시장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38 공공고용알선기관의 서비스/활동을 보고할 때는 본사와 광역/지방 사무실의 서비스/활동을 구별할 것을 권고한다.

§39 범주 1의 범위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의 모든 활동 및 기타 공공재정으로 운용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고객서비스를 포괄한다.

§40 고객서비스(1.1)은 공공고용알선기관 및 기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업자 및 기타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거나 사업주의 직원 채용 및 선별을 지원한다.

§41 고객서비스는 온라인 일자리는행과 같은 셀프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및/또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혜택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한다.

§42 정보서비스(1.1.1)은 구직자에게 일자리, 훈련, 기타 지원의 기회에 대한 소개 및 특별 정보를 제공하는 개방된 서비스와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중개서비스이다.

§43 개별 사례관리 서비스(1.1.2)는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예: 집중 카운셀링 및 지도, 구직지원, 개인별 행동계획)와 항구적인 (재)고용을 위해 계획된 경로의 일부로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사후점검서비스이다. 면접을 위한 여행경비, 기타 구직관련 비용의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 여기에 포함된다(§171 참조).

§44 공공고용알선기관의 기타 활동(1.2)는 상기에서 정한 공공고용알선기관이 하는 제반 기타 서비스와 활동으로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포괄한다. 공공고용알선기관이 아닌 기관이 하는 유사한 서비스와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45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운영(1.2.1)은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공공고용알선기관의 활동을 포괄한다. 범주 2-7에서 경비는 정책조치의 직접적인 비

용만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정한 공공고용알선기관의 간접운영비용은 포괄하지 않는다(§129 참조).

§46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사업주와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개입되어 있는 사업주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조율
- 기획, 조율, 모니터링, 평가, 의사결정 등 노동시장정책 조치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된 기타 활동
- 공공고용알선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훈련센터의 유지비용 등 노동시장정책 조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특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기타 업무

§47 노동시장정책 지원의 운영(1.2.2)는 노동시장정책 지원의 운영과 지급 및/또는 지급/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에 대한 공공고용알선기관의 감독과 관련된 공공고용알선기관의 활동을 포괄한다.

§48 공공고용알선기관이 실업수당 및 기타 노동시장정책 급부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하위범주는 공백이 된다.

§49 노동시장정책 지원 운용 관련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구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않은 경우) 수혜자 등록 및 모니터링
- 수당지급, 청구확인 등
- 공공고용알선기관이 외부 수당자금/사무실, 법률관련사항 등을 감독 또는 모니터링

§50 기타 서비스/활동(1.2.3)은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의 제반 기타 서비스, 활동, 일반비용 등을 포괄한다.

§51 이러한 하위범주의 범위는 공공고용알선기관이 맡고 있는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4.2 노동시장정책 조치

〈표 C〉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수단

2. 훈련
 - 2.1 시설훈련
 - 2.2 직장내훈련
 - 2.3 교대훈련
 - 2.4 도제를 위한 특별지원
3. 직무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 3.1 직무순환
 - 3.2 일자리 나누기
4. 고용장려금
 - 4.1 신규채용장려금
 - 4.1.1. 상시
 - 4.1.2 임시
 - 4.2 고용유지지원금
5. 지원에 의한 고용 및 재활(장애인 통합)
 - 5.1 지원에 의한 고용
 - 5.2 재활
6.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7. 창업 인센티브

§52 훈련(범주 2)는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정책 대상집단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조치를 포괄하며 공공기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53 제반 훈련 조치에는 교실 수업의 증거, 또는 직장내 훈련의 경우 특별히 교육 목
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54 훈련의 범주에는 교실 및/또는 작업장에서 보내는 훈련시간의 비중에 따라 분
류되는 3개의 하위 범주(아래 참조)를 포함한다. 훈련수당만을 제공하는 조치는
수혜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훈련의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아래
하위 범주 참조).

§55 구직신청 방법 또는 면접 기술에 관한 카운셀링 등 일자리를 얻는 개인의 능력
만을 개발하는 단기 과정은 구직 지원(assistance)의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범
주 1).

§56 창업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영 자문은 범주 7의 창업 조치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98 참조)

§57 훈련참가자가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경비는 범주 8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176-§179) 참조).

§58 시설훈련(2.1)은 훈련시간의 대부분(75% 이상)을 훈련기관(학교/전문대학(college), 훈련원 또는 훈련 유사 기관)에서 보내는 조치를 포괄한다.

§59 직장 내 훈련(2.2)은 훈련시간의 대부분(75% 이상)을 작업장에서 보내는 조치를 포괄한다.

§60 전적으로 업무에 기초한 훈련이고, 형식을 갖춘 훈련이라 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 조치는 업무를 통한 학습 또는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간주되며 범주 4의 임시 채용인센티브로 간주되어야 한다(§81 참조).

§61 교대훈련(2.3)은 훈련시간이 훈련기관과 작업장 사이에서 반반씩 할당되는 조치를 포괄한다.

§62 도제를 위한 특별지원(2.4)는 다음을 통해 도제제도를 위한 특별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사용자가 견습공을 채용하도록 제공되는 인센티브, 또는
- 특정 소외계층을 위한 훈련수당

§63 도제(apprenticeship)는 “참가자가 참가에 대해 급여/보상을 받고, 계약(또는 합의)에 의해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고, 과정을 완수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졸업증서를 받게 되는 교대훈련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64 도제제도는 모든 청년에게 열려 있는 일반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제공이나, 일반적인 고용정책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본 자료 수집에서는 제외된다.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집단의 도제제도 선택을 지원하도록 개발된 조치만이 여기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65 직무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범주 3)은 실업자 또는 또 다른 대상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대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한다(참가자 설명을 위해서는 §234 참조).

§66 실업자 또는 다른 대상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고 근로자를 위한 교육 휴가를 촉진하는 제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67 직무순환(3.1)은 일정기간 동안 실업자 또는 다른 대상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근로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68 직무순환 조치에서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직업활동으로부터 완전한 휴가를 준다. 많은 경우 이는 추가적인 훈련을 받기 위함이지만 출산휴가 등 다른 사유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근로자는 휴가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69 일자리 나누기(3.2)는 실업자나 다른 대상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근로자를 일부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70 일자리 나누기 조치에서 기존 근로자는 실업자나 다른 대상집단에 속한 사람이 채우는 근무시간 감소에 대해 (온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71 일자리 나누기는 연령이라는 기준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근로자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분 조기퇴직이나 조건부 조기퇴직(9.1.2-§116 참조)과 구분될 수 있다.

§72 고용장려금(범주 4)는 실업자 및 기타 대상집단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비자발적 실업 위기에 있는 사람의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포괄한다.

§73 고용장려금은 공공보조금없이 존재하거나 창출될 수 있는 개방시장 일자리,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가능할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을 가리킨다.

§74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 있으나 공공 또는 비영리부문의 일자리도 자격이 있으며 따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75 고용장려금과 더불어 공공자금은 고용된 사람의 노동비용이며, 일반적으로 노동비용의 대다수는 여전히 사업주가 부담한다. 하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 공공자금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76 직장내 훈련의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일자리 배치와 관련되고, 훈련 투입이 확인되는 조치는 범주 2에 포함되어야 한다.

§77 신규채용장려금(4.1)은 신규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수용을 위해 장려금을 제공하거나 근무경험을 통해 고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기회를 높이고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지급이 가능한 조치이다.

§78 신규채용장려금에는 노동시장정책 대상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고, 신규일자리 수용이 조건부인 급부(복직 상여금, 직장근무지 이동/재배치 수당

- 등)가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을 위한 다른 형태의 취업장려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 §79 사용자의 신규근로자 채용을 위한 장려금에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예: 보조금 지급 기간 확대 또는 작업장 적응을 위한 추가지원). 하지만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이 신규일자리를 수용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 ‘보호 시스템을 갖춘’(sheltered) 작업장의 제공을 위한 지원(§90 참조)은 범주 5.1의 지원에 의한 고용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89 참조).
- §80 상시채용장려금(4.1.1)은 정규직(개방형 계약)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 §81 임시채용장려금(4.1.2)은 임시직(기한부 계약)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 §82 고용유지지원금(4.2)은 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 위기에 있는 사람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 §83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특정 사례와 관련하여서만 적용 가능하다. 저소득집단을 위한 일반적인 근로장려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 §84 지원에 의한 고용 및 재활(5)는 지원에 의한 고용 및 재활을 통해 근무역량이 감소된 사람의 노동시장통합을 진작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85 근무역량이 감소된 사람은 주로 국가별 정의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가리킨다. 하지만 사고 또는 질병 이후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약물중독에서 회복 중이거나 노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재활을 통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도 포괄한다.
- §86 지원에 의한 고용(5.1)은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근로역량이 감소한 사람의 생산적인 고용을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87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계획된 지원기간이 없다. 다만 평생 보호된 일자리의 제공은 통상적으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주 밖에 있다. 여기에 있는 보호된 일자리 제공은 정규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 §88 장애인이 일반회사에 취업하도록 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 가능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조치는 범주 4에 해당한다(§79 참조).

- §89 특정 개인을 위한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보호된 작업장 제공을 위한 보조금은 범주 4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규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보조금은 작업장에서 근로역량이 감소한 개인을 수용하는 상시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범주 5에 포함된다.
- §90 보호된 작업장제공은 작업장의 물리적 개조(건물 및/또는 장비)와 직장생활의 조력자(mentor) 및 기타 전문화된 지원제공을 포함하여 특별한 조직구성의 시행 등을 모두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91 재활(5.2)은 근로역량이 감소된 사람(영구적 또는 일시적)을 위한 재활을 제공하고 참가자가 본인의 장애 또는 조건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업무(지원에 의한 고용을 포함)나 정규훈련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92 재활은 직업적인 재활만을 가리킨다. 사회 및 의료적인 재활은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벗어나며 포함되지 않는다.
- §93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6)은 장기실업자 또는 그밖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94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공공개입 없이 존재하거나 창출되지 않는 일시적이고 비시장적인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을 가리킨다(즉, 이러한 일자리는 통상적인 시장 수요에 부가적인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개인에게 근로능력 유지, 기술수준의 향상, 일반적인 고용가능성 증대 그리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일자리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출된다.
- §95 이러한 일자리는 대체로 공공 또는 비영리 부문에 존재하나, 민간부문에서도 지역사회의 관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도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차별을 두지 않는다.
- §96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조치와 함께 공공자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 §97 비생산적인 고용에서 평생 보호된 일자리의 제공은 열린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사회정책으로 간주되며,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98 창업 인센티브(7)은 실업자 또는 기타 대상집단이 개인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되도록 장려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진작시키는 조치를 포함한다.

§99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지급이나 또는 대출, 시설제공, 사업자문 등 간접적인 지원 등의 형태를 띌 수 있다.

§100 창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영관리에 대한 자문은 이 범주에만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훈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2).

§101 일반적으로 활용가능한 창업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을 지원하는 대출 또는 장려금은 해당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노동시장정책 대상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만 포함된다.

4.3 노동시장정책 지원

〈표 D〉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지원

<p>8. 비근로 소득보장과 지원</p> <p>8.1 실업보상금부(Unemployment Benefits)</p> <p>8.1.1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p> <p>8.1.2 실업보조(Unemployment Assistance)</p> <p>8.2 부분 실업 급여 (Partial Unemployment Benefits)</p> <p>8.3 시간제 실업 급여 (Part time Unemployment Benefits)</p> <p>8.4 잉여인력 정리해고 보상금</p> <p>8.5 파산 보상금</p>	<p>9. 조기 퇴직</p> <p>9.1 조건부</p> <p>9.1.1 완전</p> <p>9.1.2 부분</p> <p>9.2 무조건부</p> <p>9.2.1 완전</p> <p>9.2.2 부분</p>
--	--

§102 실직 중 소득보전 및 지원(8)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현금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나 임금의 상실에 대해 개인을 보상하고자 하는 지원을 포함한다:

-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
- 일시해고 또는 강제단축근무를 하거나 그밖에 (계절적 효과를 포함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 구조조정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잉여인력 정리해고 보상금)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103 실업보상금부(8.1)은 과거에 취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포함하여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급부이다

- §104 실업보상급부의 수급자격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하지만, 몇몇 경우-예, 고령근로자- 이러한 조건은 완화될 수 있다. 개입 관련 설명에서 언제 이러한 경우가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조건 완화를 통해 수혜를 입은 참가자의 수도 메타데이터에 보고되어야 한다.
- §105 훈련이나 기타 2-7의 노동시장정책 조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실업보상급부는 해당조치의 비용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176- §179 참조)
- §106 실업보험(8.1.1)은 실업보험제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지급가능한 실업급여를 포함한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종종 소정의 기간 동안만 지급된다.
- §107 실업보조(8.1.2)는 실업보험제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지급가능한 급여를 포괄한다. 실업보조는 일반적으로 자산조사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108 부분실업 급여(8.2)는 그 사유(경기 침체 또는 둔화, 장비고장, 기후여건, 사고 등)는 상관없이 공식적인 근로시간 단축조치 및/또는 간헐적인 업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임금 또는 급여상실을 보상하는 급부를 말한다.
- §109 시간제실업 급여(8.3)은 전일제 일자리나 부가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잃고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110 잉여인력 정리해고 보상금(8.4)는 기업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기업활동을 줄일 경우 개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공공기금에서 이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말한다.
- §111 파산 보상금(8.5)는 파산/지급불능으로 인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보상하기 위해 공공기금에서 지급되는 보상을 말한다.
- §112 조기퇴직(9)는 구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퇴직을 함으로써 실업자 또는 다른 대상집단에 속한 사람의 일자리 소개가 촉진되는 고령근로자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지원을 말한다.
- §113 조기퇴직 수당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보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기준연금제도에서 정한 표준 은퇴연령이 지나서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 §114 조건부 조기퇴직(9.1)은 고령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퇴직자를 대신하여 실업자나 다른 대상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고용촉진 지원을 말한다.

§115 완전 조건부 조기퇴직(9.1.1)은 고령근로자가 완전히 퇴직하고 노동시장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는 경우의 조건적 조기퇴직의 사례를 말한다.

§116 부분적 조건부 조기퇴직(9.1.2)은 고령근로자가 근로시간은 축소하지만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조기퇴직의 사례를 말한다.

§117 무조건부 조기퇴직(9.2)은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고 이러한 퇴직자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지 않는 지원을 말한다.

§118 무조건부 조기퇴직 지원은 산업부문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적인 조치로 야기되는 실업 또는 일자리 감소로 인해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119 어려운 근로조건(예: 광산업, 어업)에 처한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부문별 조기퇴직 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120 완전 무조건부 조기퇴직(9.2.1)은 고령자가 완전히 은퇴를 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化)되는 무조건부 조기퇴직의 경우를 말한다.

§121 부분 무조건부 조기퇴직(9.2.2)은 고령근로자가 근로시간은 축소하지만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무조건부 조기퇴직의 경우를 말한다.